서울시복지재단 2022-22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장애인 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2022-22

장애인 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연구진

오문준(정책연구실 연구1팀 연구위원, 연구책임)
김 단(정책연구실 연구1팀 위촉연구원)

연구요약

1. 연구개요

연구목적과 내용

- (연구목적)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정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과제들을 개발하는 것에 있음.
  - 서울지역 장애인들의 실질적으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사자 중심'의 제2기(2023년~2027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하려 함.
  -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서울지역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정책이고, 시간적 범위는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설정함.
- (연구내용) 연구의 단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구방향 및 내용의 체계성,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학계 · 연구계, 전문가 및 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침.
  -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정책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정책을 둘러싼 주요 환경변화 이슈를 파악함
  -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의 이행성과를 분석하고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실태 파악함
  - 표적집단면접조사(FGI), 델파이(Delphi) 조사 등을 활용하여 제1기(2018년~2022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제2기(2023년~2027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인 수요를 파악함
  - 이전 단계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종합하여 제2기(2023년~2027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고 정책우선과제들을 제시함
  - 서울시가 제2기(2023년~2027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아가는

데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주요개념들을 정리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정책 관련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함
  -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법, 조례, 시행규칙, 사업지침 등의 문헌자료, 서울시 복지정책실 업무바인더, 연도별 서울시 예산서, 제1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결과 등의 자료들을 수집 · 검토함
  - 정책분석의 체계성과 논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해외사이트 등을 조사 · 수집함
- 전문가 자문
  - 1차 자문회의에서는 연구방향성, 연구체계, 연구추진절차, 연구방법 등에 관해 논의함
  - 제2차 자문회의에서는 각 파트별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제2기(2023년~2027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에 반영 가능한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함
- 전문가 인식조사 및 표적집단심층면접조사(FGI)
  - 제1차 델파이(Delphi) 조사에서는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이행성과 평가,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과제의 필요성 평가,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등을 파악함
  - 제2차 델파이(Delphi) 조사에서는 일상생활 지원 강화, 이동권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문화 · 체육 · 여가생활 및 가족 지원,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등의 분야별 개선과제 추진 필요성을 파악함
  - 표적집단심층면접조사에서는 정책분석 및 제1차, 제2차 델파이조사에서 도출된 정책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대상자 관점에서의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정책 분야별 신규 개선과제 도출 등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집함
  - 제3차 델파이(Delphi) 조사는 제1~2차 델파이조사 및 표적집단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별 정책중요도와 추진시급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함

2.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현황과 자립생활 실태

1)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정책 운영현황 및 이행성과

운영현황

- 계획 수립과정에서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은 수립과정에서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와 민관합동 TF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실태조사의 대상이 중증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민관합동 TF팀의 장애인 단체 측 대표들도 신체적 장애인으로 구성되어있어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의견수렴 반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통합적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행 점검·성과 평가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 1기 계획에 해당하는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실행계획 제출은 2019년도와 2020년도 두 차례 있었으며, 실적 제출은 2020년도에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의 진행과정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부재로 인해 이행 점검과 성과 평가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 사업내용에 따라 여러 부서가 추진부서로 참여하여, 전반적인 사업 진행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한 협업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됨.

  — 장애인 자립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체육진흥과, 주택정책과, 관광정책과 등 여러 개의 부서가 세부사업의 추진부서로 참여함. 부서별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이행 및 성과를 수렴하는 협업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남.

<표 1>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1기 지원계획 정책과제(2018~2022)

5개 분야	10개 정책과제	세부사업
일상생활 지원 강화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시비추가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 추가 지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운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중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신생아 양육서비스 시간 확대, 만 4세미만 서비스 시간 확대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5개 분야	10개 정책과제	세부사업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이동 · 의사소통 편의 보장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 운영,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신거주모형 개발 및 주거지원	신거주모형 개발, 장애인지원주택 공급, 장애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호수, 전세보증금 지원 확대,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생활안정 지원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이룸통장),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보조금 지원, 발달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취업, 중증장애인의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업종 전환 지원, 발달장애인 취업을 위한 직무지도원 양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아이템 개발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및 가족 지원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활성화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시설 인증제 도입 · 운영,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 도입 · 운영, 무장애 관광 콘텐츠 확충, 무장애 관광 포털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 관광약자 사회적 인식개선,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무장애 리모델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의 전당 '어울림플라자' 조성
	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확대 운영, 광역 · 기초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강화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	미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지원센터 종사 인력 확대,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자립관련 기관 · 인력에 대한 지원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실습기관 지정, 교육기관 확대, IL센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특화강좌 개설 운영

출처: 장애인자립지원과, 2018

이행성과

- 추진실적이 저조하거나 현실적 제약 등으로 계획 수립 시 세웠던 기존 목표치가 변경된 사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계획수립 시 세웠던 기존 목표치를 변경한 세부사업은[1] 전체 51개 중 25개이며, 이 중 기존 목표치를 상향한 사업은 8개, 하향한 사업은 17개임. 기존 목표치 상향은 주로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경우 이루어졌으며, 기존 목표치 하향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한 사업내용 변경, 예산 미확보, 인력부족, 참여 미비, 코로나19의 영향 등 다양한 사유로 이루어짐.

  — 이행완료 사업 중 기존 목표치가 하향된 사업은 7개로 나타나 기존 목표치를 하향하여 이행완료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행 중 사업 중 기존 목표치가 상향된 사업은 6개로 나타나 기존 목표치를 초과달성해 목표치를 상향하여 이행 중인 사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1) 본 연구에서는 제1기(2018~2022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세부사업(26개)를 단위사업으로, 세세부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활용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세부사업은 제1기(2018~2022)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총 26개 세부사업의 하위 세세부사업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 정책과제 내 세부사업의 평균 이행수준이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10개 정책과제의 추진목표치 이행수준을 '이행 중'과 '이행 완료'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을 때, 이행 완료된 세부사업이 가장 많은 정책과제는 '이동 · 의사소통 편의 보장'과 '생활안정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이며, 이행 완료된 세부사업이 가장 적은 정책과제는 '활동지원서비스 강화'였음.

  —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활성화'를 제외하고 5개의 정책과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주거모델 개발 및 주거 지원',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가족 지원', '자립관련 기관 · 인력에 대한 지원'은 이행 완료 세부사업이 절반 이하로 나타나, 세부사업 이행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사업의 평균 이행수준은 5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됨.

<표 2>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 이행성과

	이행 중(%)	이행완료(%)	확인불가(%)	총 세부사업(%)
핵심과제1: 일상생활 지원 강화	10(83.3)	2(16.7)	0(0)	12(100)
핵심과제2: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5(62.5)	3(37.5)	0(0)	8(100)
핵심과제3: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6(54.5)	5(45.5)	0(0)	11(100)
핵심과제4: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및 가족 지원	4(30.8)	8(61.5)	1(7.7)	13(100)
핵심과제5: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강화	4(57.1)	3(42.9)	0(0)	7(100)

2)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정책 환경

▢ 이동권 및 접근성

-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기술변화에 따라 심화되어, 시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출근시간 지하철 시위를 통해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 보장을 명시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와 수가 조정에 대한 장애인 단체와 관련 기관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기요양급여제도 중복수급 방지조항으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삭감에 대해 장애인단체는 시간 보전 및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인 단체는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발달장애인 단체는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체계의 부족함을 비판하고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와 국가책임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이 법 적용을 받게 되자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탈시설 및 주거지원

-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탈시설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내용과 적용 대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중앙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장애인단체 측은 지역 인프라 부족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서울시에서 통과된「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한정된 대상(시설) 적용범위를 비판하며 조례안 적용 범위의 확대를 요구하였음.

고용 · 일자리

- 최중증 장애인의 취업의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무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사업은 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직무개발을 위해 직업훈련 및 공공일자리 확대와 ICT기술을 결합한 직무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소득안정

-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재난상황에 대한 소득지원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

  —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이 축소되면서 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소득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애인의 평균 소득과 임금의 최저임금 적용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최저임금 적용을 판단하는 장애인 생산력 판정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의사소통 및 사회활동

- 최중증장애인 대상 주간활동과 평생교육서비스 확대에 대한 논의와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지원사업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음.

  —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성인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중증장애인이 의사소통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AAC)지원사업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의료 · 건강 · 긴급돌봄

- 재난상황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과 긴급돌봄서비스 보완 ·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전염병 등에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발견되었으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긴급돌봄사업에서는 수요가 늘면서 비전문인력이 매칭되거나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기기와 시설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문화 · 체육 · 관광

- 중앙정부는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무장애 관광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전국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밝혔으며,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

업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달체계

- 장애인 자립생활 및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들이 정책 내용 개선과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요구받고 있음.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책 모델'이 시행되었지만 돌봄 위주, 시설 중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며, 2018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2022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모두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장애인 단체측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발달장애인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

3)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

-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중증장애인의 53.9%가 건강상태가 나쁘며, 61.3%가 질환을 보유하고 있음.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의료비 지원(62.8%)이며, 병의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나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32.5%)'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의료비 지원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확인됨. 또한 응답자 절반(54.9%)이 건강관리를 위한 규칙적 운동을 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일상생활

-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과 가족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범위 및 시간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중증장애인의 67.1%는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며, 도와주는 사람은 주로 가족(배우자+부모 62.6%)으로 확인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불만족하는 응답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간이 부족(67.9%),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름(20.8%), 신청자격이 안 되어서

(16.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나타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지원 대상 및 시간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자립생활

-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정착 및 유지를 위해 경제적 지원과 일상생활 돌봄 인력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증장애인이 탈시설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상생활 수행 돌봄(23.3%)과 생활비(21.8%)로 나타남, 탈시설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주거지원(49.4%)과 생계비 지원(47.4%), 활동지원서비스(38.3%)이며, 서울시에서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지원해야 할 것은 소득(생계비)지원(70.5%)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고용

- 장애인의 구직의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직무개발과 안정적인 근로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 근로소득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18.8%)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출퇴근 이동(23.0%), 건강상태(21.3%)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필요한 지원은 '최저임금 적용(27.0%)'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여, 출퇴근길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환경 조성, 근로소득 향상에 대한 욕구가 확인됨.
  - 미취업상태 중증장애인(81.2%)의 미취업의 주된 이유는 나의 장애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52.1%)이며, 구직의향이 있을 경우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본다는 응답(22.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직무 개발 및 공공취업기관 활성화의 필요성이 발견됨.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됨.
  - 중증장애인의 31.5%가 혼자 외출을 할 수 없으며, 지난 1주일간 전혀 외출하지 않은 경우도 21.3%로 나타남. 코로나 19의 영향을 제외하고 외출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몸이 아파서(53.1%), 이동의 어려움(8.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도보(72.1%), 지하철 및 전철(59.7%), 일반 버스(49.0%)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의

존성이 높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편의성을 고려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사회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확인됨.

- 중증장애인의 문화 · 여가활동 지원과 여행 및 관광관련 서비스 강화에 대한 욕구가 발견됨.
  -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문화 · 여가활동은 운동(61.0%), 여행(52.7%)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참여한 문화 · 여가활동은 운동(42.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문화 · 여가활동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로는 활동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27.4%), 비용 부담(22.7%)이 꼽혀 문화 · 여가활동 지원서비스 강화에 대한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행을 희망하는 비율에 비해 실제 참여한 비율(12.5%)은 낮아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이 발견됨.

주거

-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성에 대한 높은 욕구와 주거환경 편리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발견됨.
  - 중증장애인의 주거 소유형태는 월세 32.0%, 전세 21.8%로 나타났으며,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51.7%)이 가장 높았음. 주거환경 전반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장애와 관련하여 편리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가 44.7%로 낮게 나타났으며,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12.8%로 장애를 고려한 주택의 편의성이 부족하며, 기본적인 구조 및 성능을 갖추지 않은 주거환경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공공 및 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권 강화'(27.9%)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주거환경의 편리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남.

복지서비스

-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복지시설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발견됨.
  -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는 연금/수당 관련 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평균 60%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서비스의 인지도와 이용경험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비례하는 양상으로 확인됨. 또한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경험은 장애인복지관(29.9%)이 가장 높았으며, 특정 복지시설 이용을 희망하지만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기관(프로그램) 정보 모름'(50.2%)을 해당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응답하여, 복지서비스와 복지시설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 강화 및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발견됨.

소득

- 중증장애인의 생계비 및 소득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4.6%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며, 생활비 지출 중 생계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응답으로 '장애인연금 대상 및 지원금 확대'(52.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의 생계비 및 소득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음이 확인됨.

임신, 출산, 양육

- 중증장애인의 자녀 양육과 관련해 임신·출산과정의 의료적 지원, 양육 초기의 가사 부담, 학령기의 학습지도와 부모양육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증장애인이 임신·출산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의료비 지원(58.7%), 산전·산후조리서비스 지원(54.5%)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기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집안일 부담(60.0%)이, 학령기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자녀양육 상담 및 부모 교육(47.8%), 자녀 학습 도우미 지원(47.8%)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임신·출산과정을 포함하여 자녀의 발달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른 것으로 확인됨.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

- 중증장애인의 노후생활 지원 및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중증장애인 중 71.1%가 노후생활에 대해 걱정을 해본 적이 있었으나, 실제로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15.3%로 나타남.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은 '생활자금 마련'(82.7%), '의료비 부담'(67.1%), '신체적 기능 저하'(56.3%) 순이었으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43.5%), '건강한 노후생활(건강관리, 여가·평생교육 활동)지원'(35.6%)이라 응답해 장애인의 고령화에 대비한 돌봄서비스와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서울시 제1기 과제 이행평가 및 정책수요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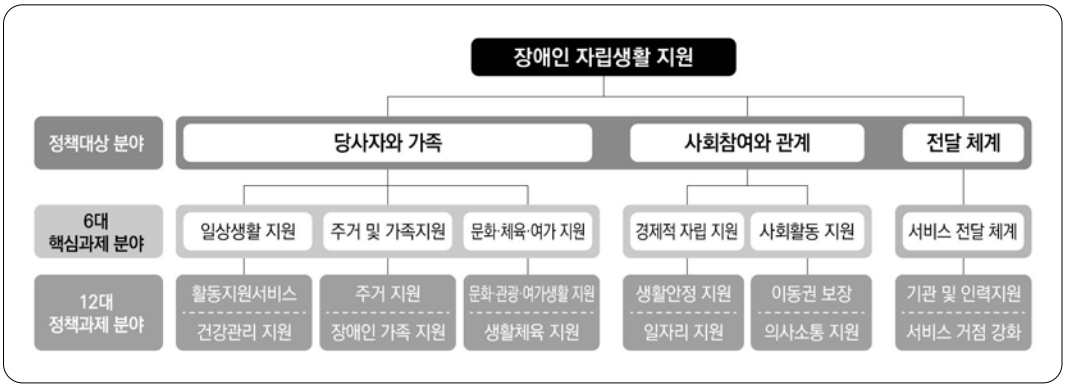
1) 정책개선과제 도출 및 과제 우선순위 평가

정책개선과제의 도출

- 서울시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운영 현황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1,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장애인 단체 주요 관계자 FGI를 통하여 도출된 과제 Pool과 제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평가된 과제 우선순위 결과를 제시함.

  — 제1기의 경우 5개 핵심과제 하위로 10개 정책과제가 구성되었지만, 제안된 안들의 분야와 과제의 내용, 사회 현황 및 환경 요인 등을 고려하여 본 조사의 결과로 도출된 개선과제 정책분야는 6개 핵심과제 하위로 12개 정책과제를 구성함.

<그림 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개선과제의 정책 분야**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 고령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시급히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 외에도 대상 맞춤 활동지원서비스, 사용자 중심 신규 활동지원서비스 도입의 요구 등 장애인 욕구와 장애 유형에 맞는 적합한 활동지원서비스가 다수 제안되어 수요에 맞는 활동지원과 차등적 지원 시간 등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인터뷰에서 아직 수요에 비해 다수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남.

<표 3>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1.1.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	●	●	**■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 만65세 고령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축소되는 지원급여 차이에 대해 급여 부족분을 보조급여 형식으로 지급 ➲ 지원 시간 감소로 당사자들이 느끼는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65세 이후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보상에 대한 체계적 안내 서비스 제공
		●		●	**■ 고령장애인 욕구조사 기반 특화서비스 개발** ➲ 고령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 실시 ➲ 욕구조사 기반 고령인 맞춤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 개발 · 제공
		●	●	●	**■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고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의 확대 ➲ 중증도에 따른 차등적 활동지원서비스 단계를 수립하여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제공 고도화 ➲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지원서비스 제공 현실화를 위하여 현재 360점인 종합조사 X1 점수 기준의 완화
			●	●	**■ 대상 맞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 인구의 고령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증가 및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탈시설 장애인 안착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부족 해소를 위한 기존 시비(120시간)의 추가 및 지원 기간의 확대 ➲ 시각장애인 판정도구 개발을 통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	●	●	**■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고도화** ➲ 주간 활동보조사 부족에 따른 비매칭 문제 해소를 위한 낮활동 지원인력 확대 ➲ 행동준비 전문가 양성 및 권역별 배치 후 단계적 확대 ➲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중장기적 지원 종합계획 수립
			●	●	**■ 사용자 중심의 신규 활동지원 서비스 도입** ➲ 사용자 필요에 따라 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는 선택형 바우처 도입 ➲ 긴급상황(ex. 가족사망, 입원 등) 대처 일시적으로 추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서비스 지원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 편의 앱개발 · 보급
			●	●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 조금의 지원으로도 자립생활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 대상 지원 서비스 개발 · 지원
			●	●	**■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추가 확대** ➲ 현재 2개소 지정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권역별 지정을 통한 추가 확대
		●		●	**■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제1기 과제의 연속)** ➲ 여성장애인의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파견 지원 ➲ 만 4세미만의 양육 지원을 위한 홈펠퍼 파견 지원

▢ 건강관리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 건강관리 지원에 있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었으며, 접근권 강화 방안으로 장애 친화 병원 또는 검진기관의 확대, 의료기관까지 이동권의 보장, 주치의 제도 등 물리적인 접근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며, 진료과로는 치과 치료와 구강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확인됨. 이 외에 사회적 이슈인 팬데믹과 관련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이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은 현실에 장애인의 감염병 대응 핫라인의 중요성이 설문으로 나타남.

<표 4> 건강관리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1.2. 건강관리 지원 강화	●	●	●	**■ 장애인 진료기관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추가 2개소(동부, 서부) 신설 ➲ 장애친화 상급병원 및 첨단 검진시설을 갖춘 병원 확보 ➲ 조례 개정을 통한 의원급 시립 의료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후 공공의원 설립
		●	●		**■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강화** ➲ 장애 친화 의료 검진기관 현 4개소에서 권역별 지정 확대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한 검진 의료비 바우처의 제공
			●	●	**■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권 보장** ➲ 휠체어 탑승 가능한 장애 맞춤형 응급차 확보 및 장애인 구급차 이용비용 지원 ➲ 의료기관 방문 동행서비스와 가정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서비스 제공·확대 ➲ 지역 의원급 기관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대
			●	●	**■ 서울형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 ➲ 정기적 건강관리 지원 및 진료·처방을 위한 주치의 제도의 확대 ➲ 주치의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및 주치의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커리큘럼 제공 지원 및 주치의 가이드라인 제작
			●	●	**■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지원**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외 지역구강진료센터 4개소 설치로 필수 구강진료 공급 확대 ➲ 장애인 구강관리를 위한 활동보조인·보호자 대상 양치질, 잇몸마사지 교육 지속 제공
			●	●	**■ 발달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일상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 프로그램(약물·운동치료·영양관리 등) 지원으로 조기노화·성인병 대응 강화 ➲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의 지정·확대
			●		**■ 장애인 감염병 대응 핫라인 구축** ➲ 서울시-보건소-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간 핫라인 구축을 통하여 집중관리군에 준한 관리와 환자 중증도에 따른 즉각 대응 가능한 대응체계 마련 ➲ 최중증·와상·호흡기 장애인의 PCR·예방접종 등을 위한 이동 시 특수 이동수단의 지원 및 예방접종·PCR 체계 수립과 중증장애인 대상 자가진단키트의 제공 ➲ 장애인 확진 시 긴급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24시간 활동지원 제공

▢ 주거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 장애인의 주거 생활에 있어서 서울의 주거문제와 맞물려 양적인 문제와 주거서비스의 맞춤화가 함께 강조됨. 비장애인에게도 부담이 되는 서울의 주거비용과 주거 환경의 양극화 문제에 있어 장애인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더욱 열위에 있기에 장애유형에 맞는 주거 서비스가 생존권을 위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해결 방안으로 임대주택 등이 양적 확대와 장애맞춤 지원주택 서비스의 고도화가 함께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지원에 있어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수요가 높아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체돌봄,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제시됨.

<표 5> 주거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2. 주거 및 가족 지원 강화	2.1. 주거 지원	●	●	●	**■ 신주거모형 개발 및 장애인 주거 선택권 강화** ➲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신주거모형 제공의 확대 및 이용자 필요에 따라 주거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옵션을 제공
			●	●	**■ 장애 당사자 맞춤형 지원주택 서비스 고도화** ➲ 일괄적 서비스 지원 탈피하여 최중증부터 경증 장애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당사자의 다양한 필요가 반영될 수 있는 맞춤 지원서비스 제공 ➲ 당사자 맞춤 서비스를 위하여 운영사업자 선정과정부터 주거 · 건강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고려하고 최중증 장애인 입주 가능한 의료특화 서비스 마련
		●	●		**■ 장애인 지원주택 제공 확대** ➲ 서울시 탈시설 목표인원에 맞는 지원주택 공급 추가 확대(약 500호)와 접근성이 확보된 지원주택 수량 확보 및 장애인부부, 학대 피해 장애인 등 지원주택 대상의 확대
		●	●	●	**■ 임대주택 확대 및 분양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 확대 및 SH임대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 설계 방안 수립
		●	●	●	**■ 전세자금 지원 비용 현실화 및 지원 강화** ➲ 전세보증금 상승에 맞춰 장애인 전세금 지원 금액 상향 ➲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전세주택 제공사업 강화 및 일자리 마련 시 소득기준의 완화
				●	**■ 장애인 부동산 임차 및 매매를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주택 거래 · 임차 시 행정적 지원 제공 또는 장애인 부동산 거래 지원 중개인 확보 및 장애인을 대리해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지원 체계의 마련
			●		**■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및 주거지원 확대** ➲ 탈시설 후 지역사회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타 광역단체와 같이 탈시설 정착금 지원 대상 기준에서 소득기준을 폐지 ➲ 정신질환 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정착지원사업의 확대와 발달장애인 재가 돌봄주거 서비스 대상 확대

<표 6> **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2. 주거 및 가족 지원 강화	2.2. 장애인 가족 지원	●	●		■ **가족 돌봄 휴식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 돌봄 휴가제도의 조례 제정 ➲ 장애아동의 교육서비스를 통한 가족 돌봄 시간 경감
		●	●	●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역할 강화** ➲ 전 장애유형의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중심 지원에서 대상의 확대 ➲ 사례관리사 배치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현장 중심 지원 강화 및 전문 상담 서비스 강화
			●	●	■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발달장애인 가족의 소진, 자살 등의 예방을 위한 위기가정 사례 발굴 · 지원 및 가족 휴식을 위한 여행바우처 등 여가 · 여행 프로그램의 확대
			●		■ **장애인 돌봄 수당 도입** ➲ 발달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가구 대상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수당 제도 도입
				●	■ **장애인 가족의 취업지원** ➲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을 위한 가족의 취업 지원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생활체육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 문화 · 체육 · 여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의 무장애화가 기본적으로 요구되었으며, 무장애 시설의 정의가 신체적 장애인의 접근권으로 협소하게 접근되기보다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정보의 접근성까지 포함된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문화 · 관광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무장애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표 7>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3. 문화 · 체육 · 여가생활 지원 강화	3.1.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지원	●	●	●	■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 장애인 관점의 무장애 관광 코스의 개발 ➲ 신체 · 정신을 포괄하는 '무장애' 개념으로 확장하여 이동접근성 강화를 위한 편의시설과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편의시설 안내표시 확대 ➲ 이동 접근성 지원을 위한 저상 시티투어 버스 도입 및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 확대
		●	●	●	■ **다양한 장애 관점의 무장애 관광콘텐츠 확충** ➲ 장애의 다양한 유형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도슨트 제공 지원 및 서울지역의 역사 · 관광지에 QR코드를 활용한 수어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 ➲ 시각 · 청각 · 발달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여행 프로그램 지원
				●	■ **장애인 가족 관광 프로그램 지원** ➲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현지 관광 지원 프로그램 마련 및 가족 관광 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 맞춤 프로그램의 개발 · 지원
			●	●	■ **주체적 문화콘텐츠 제작 활동을 위한 지원 강화** ➲ 장애인 예술문화인의 활동 지원(전시, 판매, 저작권 관리 등) ➲ 장애인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서울시 특화 양성 프로그램 개발

<표 8> **생활체육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3. 문화·체육·여가생활 지원 강화	3.2. 생활체육 지원	●	●		■ **실내 체육시설 확보 및 확대** ➲ 전염병 발생에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생활체육 공간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 비장애인 대상 체육시설에 장애인 공간 마련, 일반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지원
		●	●	●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 체육 프로그램 확대** ➲ 중장년 대상 특화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 맞춤 생활체육 동영상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체육 바우처 지원체계 마련
				●	■ **장애인 체육시설 지도자 증원 및 인건비 지원 확대**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시설 지도사 인건비 지원 상향 (20~30% → 50% 이상) ➲ 체육시설의 장애인 대상 체육지도 가능한 지도자 증원
			●	●	■ **장애인 전문체육인·생활체육인 대회 지원 확대** ➲ 서울시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의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창단 ➲ 서울시장배 장애인 체육대회 확대 및 기초자치단체 장애인 체육회 지원·활성화

❑ 생활안정 / 일자리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 장애인 일자리는 보호작업장과 비장애인의 직무를 나누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에 맞는 직무개발,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이 요구되어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접근이 달라져야 함이 강조됨. 장애인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지원 기관 간 사업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근로소득만 볼 것이 아닌 사회급여와 함께 소득 증가를 경험하게 하여야 근로 의욕과 고용유지가 가능함이 제기됨.

<표 9> **생활안정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4.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4.1. 생활안정 지원	●	●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범위의 확대 및 금액 확대를 통한 부가급여 지원 강화 및 중증장애인 대상 서울형 장애인 수당의 도입
		●	●		■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 장애인 자금형성 지원을 위한 이룸통장 대상 확대 및 비과세 통장·매칭펀드 저축 프로그램 확대 및 금융 및 경제 교육의 제공
		●	●	●	■ **가족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 서울시 부동산 시세에 비추어 저소득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표 10> **일자리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4.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4.2. 일자리 지원	●	●	●	■ **장애인 맞춤 직무 개발을 통한 공공일자리 개발·확대** ➲ 서울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직무 개발 및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장애인 대상별 · 직종별 · 직무별 · 업종별 일자리 모델 개발과 재택가능 업종의 취업 지원 강화 ➲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위탁기관 및 전담인력 확대(5명당 전담인력 1명)
		●	●	●	■ **선 배치 후 훈련 방식을 통한 현장 중심 취업 지원 확대** ➲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선배치 후훈련 방식의 현장 중심 취업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권역별 커리어플러스센터, 퍼스트잡과 연계하여 사업 확대 ➲ 장애특성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연계한 현장 훈련 지원 강화와 권역별 현장 중심 직업 훈련 및 일자리 발굴을 지원할 커리어플러스센터의 추가 설치
		●	●		■ **중증장애인의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업종 지원** ➲ 장애인 창업지원(가족창업 또는 소집단 창업 지원 등) ➲ 직업재활시설의 중증장애인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전환 지원
			●	●	■ **장애인 우선고용 및 고용유지 방안 마련**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강화 및 장애인 우선고용 업종을 지정하여 우선고용제도를 조례로써 제도 기반 마련 ➲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 진입과 고용유지 동기부여를 위하여 직업을 가진 이후 기초수급권, 의료수급 유예기간 확대(2~3년) 및 임대주택 자격 유지
			●	●	■ **'서울시 장애인 통합일자리 지원센터' 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 중도 · 중증장애인 직장 복귀 및 직업 전환을 위한 전문상담센터 기능 신설 및 장애인 동료상담가 배치 ➲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의 일자리 사업과 고용공단 사업을 연계, 일자리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
			●	●	■ **장애인 취업지원, 일자리사업 개선**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의 기간 확대(2→4년) 및 일자리사관학교, 각 자치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연계하여 장애인 일자리의 연속성과 연계성 개선 ➲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커리어센터 등 장애인의 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종사자의 안정적 지위 기반 마련
				●	■ **청년 장애인의 일자리 취업 지원**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협약, 직무개발 · 취업연계, 고용유지 상담 지원 등 경증 장애 대학생의 민간기업 취업 지원 ➲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에 장애 대학생 대상 취업 알선 및 연계 추진

4차 산업기술 활용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권 보장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이동권 · 의사소통 지원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위한 급여 관련 정책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교통수단의 양적확대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과 대중교통 종사자의 인식과 서비스 역량 개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의사소통 지원에 있어서는 최근의 AI 기술 등 첨단화된 기술을 활용한 의사소통 보조기기의 수요가 높게 나타남.

<표 11>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5. 사회활동 지원 강화 (이동권 및 의사소통)	5.1. 이동권 보장	●	●	●	**■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 선택권 부여 등 이용자 중심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장애인 콜택시(장애인 콜택시 870대, 임차택시 240대 증차) 및 바우처 택시 지원 확대 ➲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콜 확대
				●	**■ 민간 택시의 장애인 이동권 지원 보조** ➲ 민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콜밴 리프트 장착 운행 지원 및 민간택시 장애인 장치 설치비 지원 ➲ 택시기사의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버스 이용 이동권 보장 강화** ➲ 2025년까지 전노선 저상버스 및 마을저상버스 100%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저상버스 확대 ➲ 저상버스 이용을 위한 대중교통 종사자 및 시민인식 개선 사업 추진
			●	●	**■ 지하철 이동권 보장** ➲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통한 1역사 2동선 마련 ➲ 지하철 승강장, 열차 간격 및 단차 조절, 휠체어 장애인 전용 탑승 구역 설치 등 안전사고 대책 마련 ➲ 발달장애인 친화 시각화된 표시 설치(출구, 환승번호, 역이름 등)
			●		**■ 특별 교통수단 및 서비스 확대** ➲ 단체이동지원을 위한 '서울장애인버스' 5대 증차하여 10대 확보 ➲ 감염병 관련 방역차량, 노약자 셔틀버스 등 지원서비스 확대 ➲ 이동(동행)지원서비스 확대 및 예산 확보
			●		**■ 이동권 지원을 위한 콜센터 확대** ➲ 수도권역 장애인 콜택시 운행 및 장애인 이용 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
				●	**■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시 실종 지역 이탈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신고 협력체계 구축 및 신속한 광역 알림 연계 체계 구축

<표 12> **4차 산업기술 활용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권 보장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5. 사회활동 지원 강화 (이동권 및 의사소통)	5.2. 4차 산업기술 활용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권 보장		●	●	**■ 이동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보조기구 개발·보급 지원** ➲ 상용화된 이동보조 기구의 보급 및 미래 첨단기술을 활용한 이동보조 기구 개발을 위한 R&D 지원
				●	**■ 모바일 장치 활용 시각장애인 이동보조 인프라 구축** ➲ 시각장애인 등 이동보조를 위하여 음성 앱과 네비게이션, 센서 등 모바일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	**■ AI 융합 의사소통 보조기기 보급 지원** ➲ TTS(Text-to-Speech) 기술을 활용한 음성지원 웨어러블 보조기기 개발 · 보급 지원 ➲ 시각장애인 대상 STT(Speech-to-Text) 기술을 활용한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 · 보급 지원
		●	●	●	**■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지원 횟수 확대 · 현실화 ➲ 청각장애인 대상 문자 및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

▢ 기관 및 인력 지원 /서비스 거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 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업무 대비 낮은 소득, 전문역량을 지닌 인력의 부족 등으로 소진, 잦은 인력의 교체 문제들이 발생하는 바,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 소진 예방을 위한 처우 개선 등이 중요하게 제시됨.

-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거점이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양적 확대가 필요함이 제기됨. 장애 유형에 따라 서비스 거점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거점 기관의 부족으로 현재 있는 기관의 종사자의 업무 가중과 그로 인한 서비스 품질의 저하라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거점기관의 확대, 종사자 처우와 역량의 개선 등이 서로 연계되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이 나타남.

<표 13> 기관 및 인력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개선과제
6.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6.1. 기관 및 인력지원	●	●	●	■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지원을 통한 인력 양성 지원** ➲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의무화 및 보수교육 수당 지급 ➲ 전문분야별 활동지원사 육성을 위한 교육 실습기관 지정 및 교육기관 확대
			●		■ **장애인 분야별 전문서비스 상담인력 확대** ➲ 장애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다양한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상담사 배치
		●	●	●	■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 전담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감수성 교육 및 장애인 고용사업장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 전담인력 소진 예방을 위한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센터 전담인력 처우 개선 및 현장 돌봄 노동자들의 쉼과 재충전 보장
				●	■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투명성 확대** ➲ 장애유형에 맞는 평가지표 설계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투명성 제고
				●	■ **발달장애인 위한 서울시 전담 부서 설립** ➲ 정책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한 서울시에 발달장애인 전담부서 신설

<표 14> 서비스 거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개선과제
6.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6.2. 서비스 거점 강화	●	●	●	■ **발달·정신장애인 IL센터 운영 고도화** ➲ 발달·정신장애인 IL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및 종사자 처우개선 ➲ 장애 유형에 맞는 지침 및 IL 평가 기준의 마련
			●		■ **지역 밀착형 서비스 거점장소 확대** ➲ 서비스 거점 장소로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기관, 보건소 등 지정 ➲ 지역사회에 보다 밀착형의 작은 규모 복지관(분관형태) 확대
			●	●	■ **각 자치구별·권역별 거점 서비스 기능·역량 확대** ➲ 정신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서울 4개 권역 운영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기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발달장애 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 지원

2) 개선과제별 정책우선순위 평가결과

정책과제 우선순위 평가 결과(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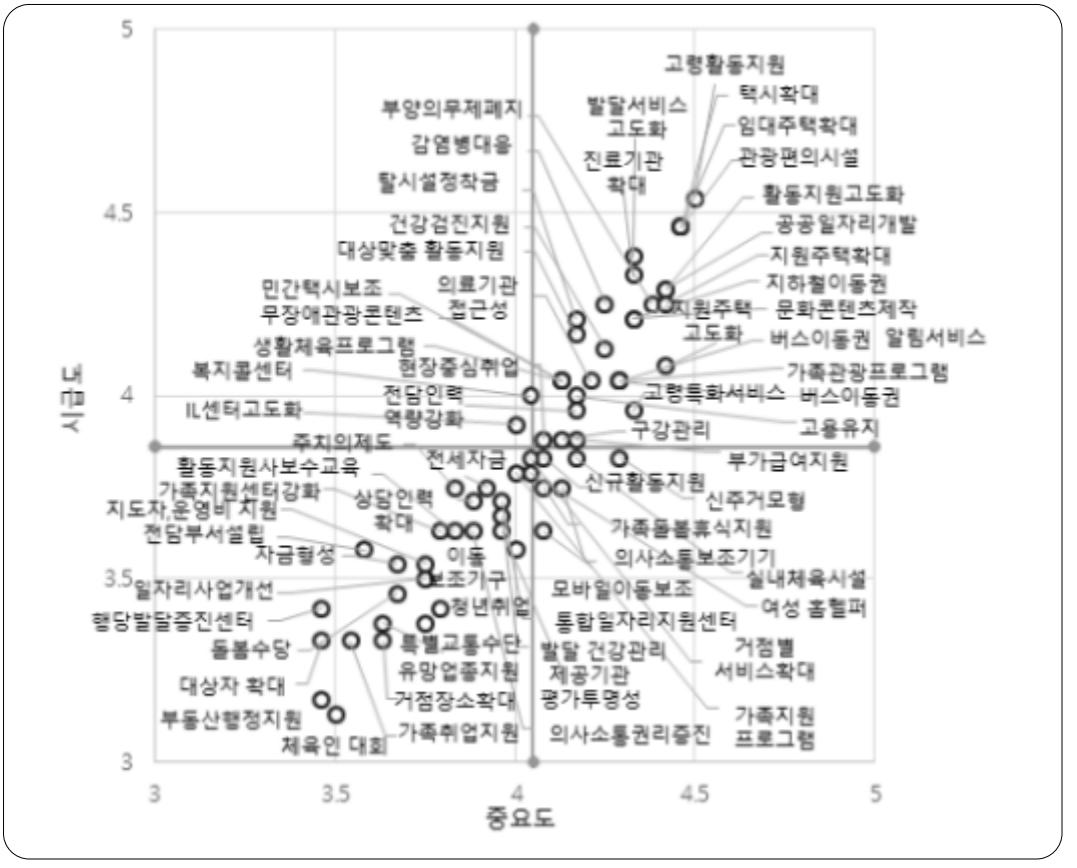
-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65개 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종합하여 볼 때,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과제 중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이동권 보장 과제 중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주거 지원 과제 중 임대주택 확대 및 분양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등이 정책과제 영역별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5>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개선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종합)** (단위: 점(5점 만점))

정책과제	개선과제	중요도	시급성	가중평균	순위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4.50	4.54	**4.52**	**1**
	고령장애인 욕구조사 기반 특화서비스 개발	4.33	3.96	**4.17**	**20**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고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4.42	4.29	**4.37**	**5**
	대상 맞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4.17	4.17	**4.17**	**21**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고도화	4.33	4.38	**4.35**	**7**
	사용자 중심의 신규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4.08	3.83	**3.98**	**34**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3.46	3.33	**3.41**	**63**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추가 확대	3.46	3.42	**3.44**	**62**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4.04	3.79	**3.94**	**39**
건강관리 지원 강화	장애인 진료기관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4.33	4.33	**4.33**	**9**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강화	4.25	4.13	**4.20**	**15**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권 보장	4.21	4.04	**4.14**	**22**
	서울형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	3.83	3.75	**3.80**	**48**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지원	4.13	3.88	**4.03**	**31**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강화	3.96	3.67	**3.84**	**44**
	장애인 감염병 대응 핫라인 구축	4.25	4.25	**4.25**	**14**
주거 지원 강화	신주거모형 개발 및 장애인 주거 선택권 강화	4.29	3.83	**4.10**	**24**
	장애 당사자 맞춤형 지원주택 서비스 고도화	4.42	4.08	**4.28**	**13**
	장애인 지원주택 제공 확대	4.42	4.25	**4.35**	**8**
	임대주택 확대 및 분양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4.46	4.46	**4.46**	**2**
	전세자금 지원 비용 현실화 및 지원 강화	3.92	3.75	**3.85**	**43**
	장애인 부동산 임차·매매를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3.46	3.17	**3.34**	**65**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및 주거지원 확대	4.17	4.21	**4.19**	**16**
장애인 가족지원 강화	가족 돌봄 휴식지원 확대	4.08	3.75	**3.94**	**38**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역할 강화	3.79	3.63	**3.72**	**51**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4.00	3.79	**3.91**	**40**
	장애인 돌봄 수당 도입	3.67	3.46	**3.58**	**57**
	장애인 가족의 취업지원	3.54	3.33	**3.45**	**61**

정책과제	개선과제	중요도	시급성	가중평균	순위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지원 강화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4.46	4.46	**4.46**	**2**
	다양한 장애 관점의 무장애 관광콘텐츠 확충	4.13	4.04	**4.09**	**25**
	장애인 가족 관광 프로그램 지원	4.29	4.04	**4.19**	**17**
	주체적 문화콘텐츠 제작 활동을 위한 지원 강화	4.33	4.21	**4.28**	**11**
생활체육 지원 강화	실내 체육시설 확보 및 확대	4.17	3.83	**4.03**	**30**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 체육 프로그램 확대	4.13	4.04	**4.09**	**25**
	장애인 체육시설 지도자 증원 및 인건비 지원 확대	3.75	3.54	**3.66**	**52**
	장애인 전문체육인 · 생활체육인 대회 지원 확대	3.50	3.13	**3.34**	**64**
생활안정 지원 강화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4.17	3.88	**4.05**	**29**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3.67	3.54	**3.62**	**55**
	가족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4.38	4.25	**4.33**	**10**
일자리 지원 강화	장애인 맞춤 직무 개발을 통한 공공일자리 개발 · 확대	4.42	4.29	**4.37**	**5**
	선배치 후훈련 방식을 통한 현장 중심 취업 지원 확대	4.08	3.88	**4.00**	**33**
	중증장애인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 높은 유망업종 지원	3.63	3.38	**3.53**	**59**
	장애인 우선 고용 및 고용유지 방안 마련	4.17	4.00	**4.10**	**23**
	'장애인 통합일자리 지원센터' 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3.96	3.71	**3.86**	**42**
	장애인 취업지원, 일자리사업 개선	3.75	3.50	**3.65**	**53**
	청년 장애인의 일자리 취업 지원	3.79	3.42	**3.63**	**54**
이동권 보장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4.46	4.46	**4.46**	**2**
	민간 택시의 장애인 이동권 지원 보조	4.13	4.04	**4.09**	**25**
	버스 이용 이동권 보장 강화	4.29	4.04	**4.19**	**17**
	지하철 이동권 보장	4.33	4.21	**4.28**	**11**
	특별 교통수단 및 서비스 확대	3.75	3.38	**3.59**	**56**
	이동권 지원을 위한 콜센터 확대	4.04	4.00	**4.02**	**32**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4.29	4.04	**4.19**	**17**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권 보장	이동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보조기구 개발 · 보급 지원	4.00	3.58	**3.82**	**45**
	모바일 장치 활용 시각장애인 이동보조 인프라 구축	4.08	3.63	**3.89**	**41**
	AI 융합 의사소통 보조기기 보급 지원	4.13	3.75	**3.97**	**35**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3.88	3.63	**3.78**	**49**
기관 및 인력지원 강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지원을 통한 인력 양성 지원	3.83	3.63	**3.75**	**50**
	장애인 분야별 전문서비스 상담인력 확대	3.88	3.71	**3.81**	**47**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4.17	3.96	**4.08**	**28**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투명성 확대	3.96	3.63	**3.82**	**46**
	발달장애인 위한 서울시 전담 부서 설립	3.58	3.58	**3.58**	**58**
서비스 거점 강화	발달 · 정신장애인 IL센터 운영 고도화	4.00	3.92	**3.97**	**36**
	지역 밀착형 서비스 거점장소 확대	3.63	3.33	**3.50**	**60**
	각 자치구별 · 권역별 거점 서비스 기능 · 역량 확대	4.04	3.83	**3.95**	**37**
평균		4.05	3.86	**3.97**	-

<그림 2>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개선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종합**



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과제 선정 및 체계 수립

▢ 과제 선정

- 도출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과제와 정책과제별 우선 고려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여 제2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참조할 과제체계를 수립함.

- 델파이 조사와 FGI에서 드러난 핵심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뿐만 아니라 핵심과제 영역과 정책과제 영역 자체의 정책적 의미를 고려하여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자 단순 우선순위에 따른 과제 선정이 아닌, 3단계(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른 과제 선정-정책영역 중요도를 고려한 선정과제 보완-정책 실현가능성 판단)를 거쳐 과제를 선정함.

<표 16> 정책과제 영역별 최종선정과제 목록 (단위: 점(5점 만점))

핵심과제	정책과제	선정 구분	신규 · 개선과제	가중평균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1.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우선**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4.52**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고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4.37**
		우선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고도화	**4.35**
		우선	고령장애인 욕구조사 기반 특화서비스 개발	**4.17**
		우선	대상 맞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4.17**
		중요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3.94**
	1.2. 건강관리 지원 강화	**우선**	장애인 진료기관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4.33**
		우선	장애인 감염병 대응 핫라인 구축	**4.25**
		우선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강화	**4.20**
		우선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권 보장	**4.14**
		우선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지원	**4.03**
2. 주거 및 가족 지원 강화	2.1. 주거 지원 강화	**우선**	임대주택 확대 및 분양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4.46**
		우선	장애인 지원주택 제공 확대	**4.35**
		우선	장애 당사자 맞춤형 지원주택 서비스 고도화	**4.28**
		우선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및 주거지원 확대	**4.19**
		우선	신주거모형 개발 및 장애인 주거 선택권 강화	**4.10**
		선택	전세자금 지원 비용 현실화 및 지원 강화	**3.85**
	2.2. 장애인 가족 지원	**중요**	가족 돌봄 휴식지원 확대	**3.94**
		중요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3.91**
3. 문화 · 체육 · 여가생활 지원 강화	3.1.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지원	**우선**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4.46**
		우선	주체적 문화콘텐츠 제작 활동을 위한 지원 강화	**4.28**
		우선	장애인 가족 관광 프로그램 지원	**4.19**
		우선	다양한 장애 관점의 무장애 관광콘텐츠 확충	**4.09**
	3.2. 생활체육 지원	**우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 체육 프로그램 확대	**4.09**
		우선	실내 체육시설 확보 및 확대	**4.03**
4.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4.1. 생활안정 지원	**우선**	가족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4.33**
		우선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4.05**
	4.2. 일자리 지원	**우선**	장애인 맞춤 직무 개발을 통한 공공일자리 개발 · 확대	**4.37**
		우선	장애인 우선 고용 및 고용유지 방안 마련	**4.10**
		우선	선배치 후훈련 방식을 통한 현장 중심 취업 지원 확대	**4.00**
		선택	'장애인 통합일자리 지원센터' 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3.86**
5. 사회활동 지원 강화	5.1. 이동권 보장	**우선**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4.46**
		우선	지하철 이동권 보장	**4.28**
		우선	버스 이용 이동권 보장 강화	**4.19**
		우선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4.19**
		우선	민간 택시의 장애인 이동권 지원 보조	**4.09**
	5.2. 4차 산업기술 활용	**중요**	AI 융합 의사소통 보조기기 보급 지원	**3.97**
		선택	모바일 장치 활용 시각장애인 이동보조 인프라 구축	**3.89**
6.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6.1. 기관 및 인력지원	**우선**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4.08**
		선택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투명성 확대	**3.82**
	6.2. 서비스 거점	**중요**	발달 · 정신장애인 IL센터 운영 고도화	**3.97**
		중요	각 자치구별 · 권역별 거점 서비스 기능 · 역량 확대	**3.95**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 3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 4
3. 연구방법 ····· 6

제2장 이론적 고찰

1. 주요 개념 정의 ····· 11
2. 선행연구 검토 ····· 12

제3장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현황과 자립생활 실태

제1절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정책 운영현황 및 환경변화 ····· 25

1.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도 ····· 25
2.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 운영 ····· 28
3.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정책 환경 ····· 56

제2절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정책 이행성과 ····· 66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 66
2.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 69

3.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 71
4.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및 가족 지원 ····· 73
5.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강화 ····· 75
6. 종합 이행성과 ····· 77
제3절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 80
1.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개요 ····· 80
2.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 ····· 81
제4절 소결 ····· 94
1. 운영현황 및 이행성과 ····· 94
2. 정책환경 ····· 95
3.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 97

제4장 서울시 제1기 과제 이행평가 및 정책수요 조사결과

제1절 조사 개요 ····· 103
1. 조사 설계 ····· 103
2. 조사 내용 ····· 105
제2절 제1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이행성과 평가 ····· 108
1. 조사 참여자 특성 ····· 108
2. 조사 결과 ····· 109
제3절 제2기 개선과제 도출 및 추진 필요성 평가결과 ····· 126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분야 개선과제 추진 필요성 평가 ····· 126

2.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분야 개선과제 추진 필요성 평가 ····· 128
3.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분야 개선과제 추진 필요성 평가 ····· 130
4.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및 가족 지원 분야 개선과제 추진 필요성 평가 ····· 132
5.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강화 분야 개선과제 추진 필요성 평가 ····· 134
제4절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FGI) 결과 ····· 136
1. 조사목적 및 대상 ····· 136
2.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 질문 및 분석 개요 ····· 138
3.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 내용 ····· 140
제5절 정책개선과제 도출 및 과제 우선순위 평가 ····· 166
1. 정책개선과제의 도출 ····· 166
2. 개선과제별 정책우선순위 평가결과 ····· 189
제6절 소결 ····· 207

제5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과제 선정 및 체계 수립

1. 과제 선정 개요 ····· 211
2. 과제 선정 ····· 213

제6장 결론

참고문헌 ····· 230

표 목 차

〈표 1-1〉 자문위원회 구성 ····· 6
〈표 1-2〉 자문회의 주요 논의내용 ····· 7
〈표 2-1〉 장애인 일상생활 관련 선행연구 ····· 13
〈표 2-2〉 장애인의 사회활동 관련 선행연구 ····· 17
〈표 2-3〉 장애인의 경제활동 관련 선행연구 ····· 20
〈표 3-1〉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 ····· 25
〈표 3-2〉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26
〈표 3-3〉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5개 분야 10개 정책과제 ····· 27
〈표 3-4〉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 28
〈표 3-5〉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전후 비교 ····· 29
〈표 3-6〉 서울시 성인 최중증장애인(발달, 뇌병변 등) 낮활동 지원 확대 개요 ····· 30
〈표 3-7〉 성인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 확대 전후 비교 ····· 30
〈표 3-8〉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운영 개요 ····· 31
〈표 3-9〉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전후 비교 ····· 32
〈표 3-10〉 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개요 ····· 32
〈표 3-11〉 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전후 비교 ····· 33
〈표 3-12〉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개요 ····· 33
〈표 3-13〉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전후 비교 ····· 34
〈표 3-14〉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개요 ····· 34
〈표 3-15〉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전후 비교 ····· 35
〈표 3-16〉 장애인 바우처 택시 장애유형 확대 개요 ····· 35
〈표 3-17〉 장애인 바우처 택시 장애유형 확대 전후비교 ····· 36
〈표 3-18〉 뇌병변 · 발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개요 ····· 36

〈표 3-19〉 뇌병변 · 발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전후 비교 ····· 37
〈표 3-20〉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개요 ····· 37
〈표 3-21〉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전후 비교 ····· 37
〈표 3-22〉 장애인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 및 지원주택 확대 개요 ····· 38
〈표 3-23〉 장애인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 및 지원주택 확대 전후 비교 ····· 39
〈표 3-24〉 저소득 중증장애인 임대 · 전세 주택 제공 확대 개요 ····· 39
〈표 3-25〉 저소득 중증장애인 임대 · 전세 주택 제공 확대 전후 비교 ····· 40
〈표 3-26〉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 확대 개요 ····· 40
〈표 3-27〉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개요 ····· 41
〈표 3-28〉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전후 비교 ····· 42
〈표 3-29〉 서울시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개요 ····· 42
〈표 3-30〉 서울시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전후 비교 ····· 43
〈표 3-3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개요 ····· 43
〈표 3-32〉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전후 비교 ····· 43
〈표 3-33〉 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개요 ····· 44
〈표 3-34〉 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전후 비교 ····· 45
〈표 3-35〉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 개요 ····· 45
〈표 3-36〉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개요 ····· 46
〈표 3-37〉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전후 비교 ····· 46
〈표 3-38〉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개요 ····· 47
〈표 3-39〉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전후 비교 ····· 48
〈표 3-40〉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 활동 개요 ····· 48
〈표 3-4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의 전당 '어울림플라자' 건립 개요 ····· 49
〈표 3-42〉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확대 운영 개요 ····· 50
〈표 3-43〉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확대 운영 전후 비교 ····· 50
〈표 3-4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 자치구 확대 개요 ····· 51
〈표 3-4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 자치구 확대 전후 비교 ····· 51

〈표 3-46〉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원 확대 및 강화 개요 ····· 52
〈표 3-47〉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원 확대 및 강화 전후 비교 ····· 52
〈표 3-48〉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 운영 및 보수교육 지원 개요 ····· 53
〈표 3-49〉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 운영 및 보수교육 지원 전후 비교 ····· 54
〈표 3-50〉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운영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개요 ····· 54
〈표 3-5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운영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전후 비교 ····· 55
〈표 3-52〉 일상생활 지원 강화 세부사업 현황 ····· 68
〈표 3-53〉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세부사업 현황 ····· 70
〈표 3-54〉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세부사업 현황 ····· 72
〈표 3-55〉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및 가족 지원 세부사업 현황 ····· 74
〈표 3-56〉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강화 세부사업 현황 ····· 76
〈표 3-57〉 종합 이행성과 현황 ····· 78
〈표 3-58〉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구성 ····· 81
〈표 4-1〉 델파이 조사설계(정량조사) ····· 104
〈표 4-2〉 정성조사설계 ····· 105
〈표 4-3〉 제1차 델파이 조사 내용 ····· 105
〈표 4-4〉 제2차 델파이 조사 내용 ····· 106
〈표 4-5〉 집단심층면접조사 내용 ····· 106
〈표 4-6〉 제3차 델파이 조사 내용(정책중요도 및 추진시급성) ····· 107
〈표 4-7〉 제1차 델파이 조사 참여자 현황 ····· 108
〈표 4-8〉 정책과제 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 109
〈표 4-9〉 정책과제 2.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 110
〈표 4-10〉 정책과제 1. 이동 · 의사소통 편의 보장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 111
〈표 4-11〉 정책과제 2. 신주거모형 개발 및 주거 지원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 112
〈표 4-12〉 정책과제 1. 생활안정 지원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 113
〈표 4-13〉 정책과제 2.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 114
〈표 4-14〉 정책과제 1.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활성화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 115

〈표 4-15〉 정책과제 2. 장애인 가족 지원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 116
〈표 4-16〉 정책과제 1.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 116
〈표 4-17〉 정책과제 2. 자립관련 기관 · 인력에 대한 지원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 117
〈표 4-18〉 정책과제 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세부과제 지속추진 필요성 평가 ····· 118
〈표 4-19〉 정책과제 2.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세부과제 지속추진 필요성 평가 ····· 119
〈표 4-20〉 정책과제 1. 이동 · 의사소통 편의 보장 세부과제 지속추진 필요성 평가 ····· 119
〈표 4-21〉 정책과제 2. 신주거모형 개발 및 주거지원 세부과제 지속추진 필요성 평가 ····· 120
〈표 4-22〉 정책과제 1. 생활안정 지원 세부과제 지속추진 필요성 평가 ····· 121
〈표 4-23〉 정책과제 2.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세부과제 지속추진 필요성 평가 ····· 121
〈표 4-24〉 정책과제 1.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활성화 세부과제 지속추진 필요성 평가 ····· 122
〈표 4-25〉 정책과제 2. 장애인 가족 지원 ····· 123
〈표 4-26〉 정책과제 1.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 세부과제 지속추진 필요성 평가 ····· 124
〈표 4-27〉 정책과제 2. 자립관련 기관 · 인력에 대한 지원 세부과제 지속추진 필요성 평가 ····· 125
〈표 4-28〉 활동서비스 지원 강화 분야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필요성 평가 결과 ····· 126
〈표 4-29〉 건강관리 지원 강화 분야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필요성 평가 결과 ····· 127
〈표 4-30〉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과 의사소통 지원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필요성 평가 결과 ····· 128
〈표 4-31〉 주거지원 강화 분야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정책 필요성 평가 결과 ····· 129
〈표 4-32〉 생활안정 지원 분야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정책 필요성 평가 결과 ····· 130
〈표 4-33〉 고용 지원 분야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정책 필요성 평가 결과 ····· 131
〈표 4-34〉 문화 · 체육 · 여가생활 지원 분야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정책 필요성 평가 결과 ····· 132
〈표 4-35〉 장애인 가족 지원 분야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정책 필요성 평가 결과 ····· 133
〈표 4-36〉 서비스 거점 강화 분야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정책 필요성 평가 결과 ····· 134
〈표 4-37〉 기관 및 인력 지원 분야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정책 필요성 평가 결과 ····· 135
〈표 4-38〉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명단 ····· 137
〈표 4-39〉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FGI) 질문지 ····· 138
〈표 4-40〉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 169
〈표 4-41〉 건강관리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 172

〈표 4-42〉 주거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 174
〈표 4-43〉 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 176
〈표 4-44〉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 177
〈표 4-45〉 생활체육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 178
〈표 4-46〉 생활안정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 179
〈표 4-47〉 일자리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 181
〈표 4-48〉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 184
〈표 4-49〉 4차 산업기술 활용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권 보장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 185
〈표 4-50〉 기관 및 인력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 187
〈표 4-51〉 서비스 거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 188
〈표 4-52〉 개선과제 평가지표(정책중요도 및 추진시급성)의 가중치 평가 결과 ····· 189
〈표 4-53〉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 190
〈표 4-54〉 건강관리 지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 192
〈표 4-55〉 주거 지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 193
〈표 4-56〉 장애인 가족지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 194
〈표 4-57〉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지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 195
〈표 4-58〉 생활체육 지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 196
〈표 4-59〉 생활안정 지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 197
〈표 4-60〉 일자리 지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 199
〈표 4-61〉 이동권 보장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 200
〈표 4-62〉 4차 산업기술 활용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권 보장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 201
〈표 4-63〉 기관 및 인력지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 202
〈표 4-64〉 서비스 거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 203
〈표 4-65〉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개선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종합) ····· 204
〈표 5-1〉 과제 선정 단계별 고려사항 ····· 212
〈표 5-2〉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개선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종합) ····· 213
〈표 5-3〉 정책과제 영역별 선정과제 목록 ····· 215

〈표 5-4〉 지향가치 간 가중치 평가 ····· 218
〈표 5-5〉 핵심과제 영역 간 가중치 평가 ····· 219
〈표 5-6〉 정책과제 영역 간 가중치 평가 ····· 220
〈표 5-7〉 정책과제 영역의 과제추가 여부 ····· 221
〈표 5-8〉 정책과제 영역별 선정과제(2단계) 목록 ····· 222
〈표 5-9〉 과제 세부내용 중 정책 실현가능성 이슈 사항 ····· 224
〈표 5-10〉 정책 실현가능성을 위한 과제 세부내용 수정사항 (실현가능성 없는 세부 내용 일부 삭제) ··· 225
〈표 5-11〉 정책과제 영역별 최종선정과제 목록 ····· 226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 5
〈그림 3-1〉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 ····· 82
〈그림 3-2〉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일상생활 ····· 83
〈그림 3-3〉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자립생활 ····· 84
〈그림 3-4〉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고용 ····· 85
〈그림 3-5〉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사회 및 문화 · 여가활동 ····· 87
〈그림 3-6〉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주거 ····· 88
〈그림 3-7〉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복지서비스 ····· 89
〈그림 3-8〉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소득 ····· 90
〈그림 3-9〉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임신, 출산, 양육 ····· 92
〈그림 3-10〉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 ····· 93
〈그림 4-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개선과제의 정책 분야 ····· 166
〈그림 4-2〉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 191
〈그림 4-3〉 건강관리 지원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 192
〈그림 4-4〉 주거 지원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 193
〈그림 4-5〉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 194
〈그림 4-6〉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지원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 196
〈그림 4-7〉 생활체육 지원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 197
〈그림 4-8〉 생활안정 지원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 198
〈그림 4-9〉 일자리 지원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 199
〈그림 4-10〉 이동권 보장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 200
〈그림 4-11〉 4차 산업기술 활용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권 보장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 201
〈그림 4-12〉 기관 및 인력지원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 202

〈그림 4-13〉 서비스 거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 203
〈그림 4-14〉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개선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종합 ····· 206
〈그림 5-1〉 정책중요도와 추진시급성에 따른 과제 선정(예시) ····· 211
〈그림 5-2〉 AHP 적용 정책영역 간 가중치 평가를 위한 영역 계층화 ····· 217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021년 기준 서울지역 등록 장애인 수는 392,319명(전체 인구의 약 4.1%)이며, 서울시는 장애인 복지시설 총 627개소(시립 23개소, 구립 66개소, 사립 538개소)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장애인 연령현황은 60대 이상의 장애인수(250,656명)는 전체 장애인의 63.8% 차지하며, 60대 장애인수가 가장 많고,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 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42.9%), 청각(15.1%), 시각(10.5%), 뇌병변(10.2%) 순으로 구성되고, 장애의 원인으로는 88.1%가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특히 '질환(56.0%)'이 '사고(32.1%)'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장애유형과 원인을 고려한 정책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7416호)에 의거하여 수행된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들은 현재의 생활에 대해 10점 척도 기준으로 주거환경 만족 5.8점, 사회적 관계 4.7점, 건강 4.7점, 수입 2.6점, 결혼생활 2.6점, 직업 1.5점, 학교생활 0.7점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전반적 삶의 만족도 5.0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인들의 월 평균 가구 및 본인 수입은 50만 원 이상 100만 원(34.7%),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25.3%) 등으로 나타났고, 중증장애인들의 상당수(71.1%)가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생활자금 마련(82.7%), 의료비 부담(67.1%) 등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소의 사회 및 여가·문화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서울시 중증장애인들은 약 53.6% 수준으로, 활동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거나, 비용이 부담된다거나, 장애인들이 이용가능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들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2022년 기준 장애인 예산 1조 3,114억 원

(2021년 1조 1,986억 원, 전년대비)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사회복지 예산 14조 2,297억 원의 10% 수준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좌표를 차별적으로 설정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에 발맞추기에는 여전히 당사자 중심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정책적 좌표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제약(지배구조와 자기발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적인 억압구조)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systemic discrimination)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및 신규 과제의 발굴을 필요로 한다.

더불어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도 보다 능동적인 정책 수단이 작동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수요에 대응하는 당사자 중심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과제들을 개발하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서울지역 장애인들의 실질적으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사자 중심'의 제2기(2023년~2027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하려 한다.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서울지역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정책이고, 시간적 범위는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의 단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연구방향 및 내용의 체계성,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학계 · 연구계, 전문가 및 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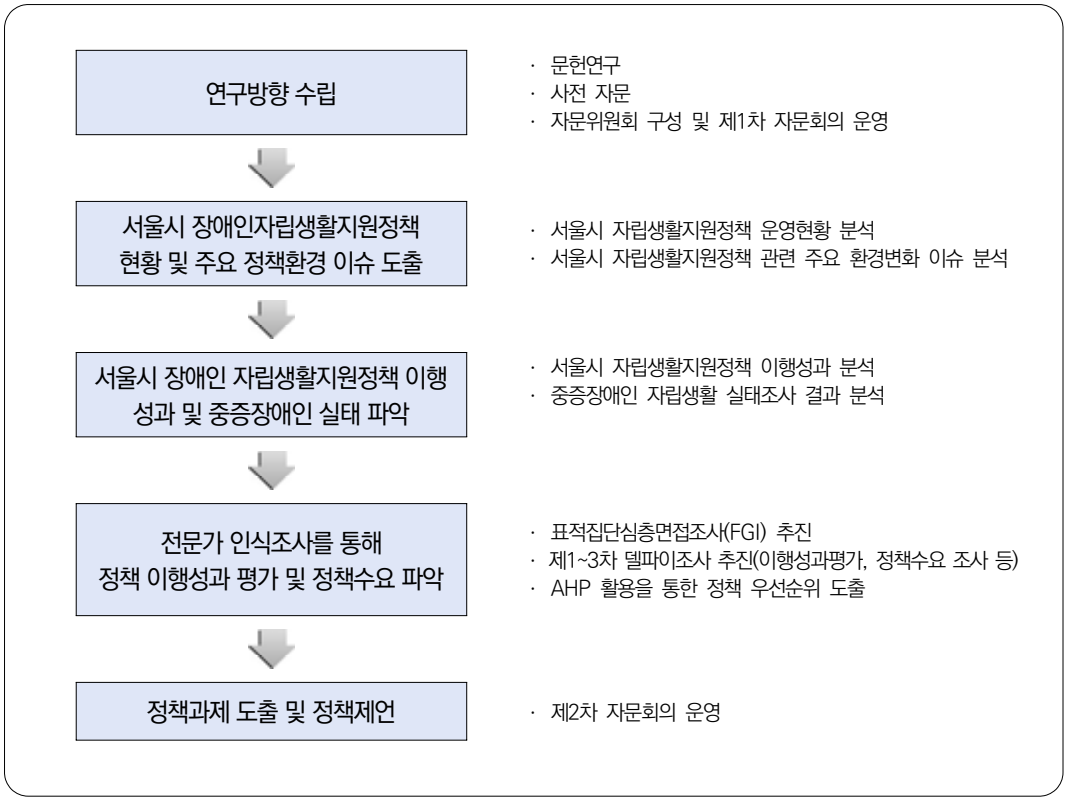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 연구는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정책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정책을 둘러싼 주요 환경변화 이슈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

획의 이행성과를 분석하고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실태 파악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표적집단면접조사(FGI), 델파이(Delphi) 조사 등을 활용하여 제1기(2018년~2022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제2기(2023년~2027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인 수요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선 단계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종합하여 제2기(2023년~2027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고 정책우선과제들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가 제2기(2023년~2027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아가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한다.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이 연구는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주요개념들을 정리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정책 관련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정책의 현황, 장애인자립생활지원정책 관련 주요 환경변화 이슈, 제1기(2018년~2022년) 지원정책의 이행성과, 서울지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실태와 주요 이슈 등을 조사·분석하여 전문가 인식조사 및 표적집단심층면접조사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이 연구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법, 조례, 시행규칙, 사업지침 등의 문헌자료, 서울시 복지정책실 업무바인더, 연도별 서울시 예산서, 제1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결과 등의 자료들을 수집·검토한다. 또한 이 연구는 정책분석의 체계성과 논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해외사이트 등을 조사·수집한다.

2) 전문가 자문

본 연구는 학계·연구계 장애인정책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연구방향성, 연구체계, 연구추진절차, 연구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고, 제2차 자문회의에서는 각 파트별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제2기(2023년~2027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에 반영 가능한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표 1-1> 자문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김 용 득	성공회대학교 교수	학계·연구계
2	박 광 옥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학계·연구계
3	박 수 지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학계·연구계
4	오 욱 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학계·연구계
5	서 해 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	학계·연구계
6	임 하 정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 팀장	서울시

<표 1-2> **자문회의 주요 논의내용**

구분	추진일시	추진내용
제1차 자문회의	2021. 4. 28. (목)	연구과제의 발전적 연구방향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의 체계성, 내용적 완성도 향상 방안 논의
제2차 자문회의	2021. 11. 23. (수)	주요 분석결과에 대한 검토, 정책과제 개발 관련 심층 논의

3) 전문가 인식조사 및 표적집단심층면접조사(FGI)

이 연구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분야 전문가 패널을 학계 · 연구계 및 당사자로 구성하여 제2기(2023년~2027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에 반영이 가능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 · 개발하기 위한 델파이(Delphi) 조사를 수행한다.

제1차 델파이(Delphi) 조사에서는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이행성과 평가,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과제의 필요성 평가,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등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제2차 델파이(Delphi) 조사에서는 일상생활 지원 강화, 이동권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문화 · 체육 · 여가생활 및 가족 지원,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등의 분야별 개선과제 추진 필요성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표적집단심층면접조사에서는 정책분석 및 제1차, 제2차 델파이조사에서 도출된 정책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대상자 관점에서의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정책 분야별 신규 개선과제 도출 등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제3차 델파이(Delphi) 조사는 제1~2차 델파이조사 및 표적집단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별 정책중요도와 추진시급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제2장

이론적 고찰





제2장
이론적 고찰

1. 주요 개념 정의

'자립생활'은 의존성에서 벗어나 자기결정권, 자기존중,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에 참여, 역할을 수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김동호, 2002; 최선경, 2015; 채성현 외, 2017; 이송희 외, 2020).

기존의 재활 패러다임은 장애를 기능적 손상 및 제약으로 보았고, 전문가에 의해 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적, 직업적 잠재능력을 최대로 회복시켜 비장애인의 생활수준으로 복귀해야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 자신의 참여, 선택, 결정을 기본철학으로 자기주도권(self-direction),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선택권(choice)을 중요한 요건으로 하여 사회전문가의 태도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자립패러다임으로 확대되었다(박선아 외, 2009; 최선경, 2015). 이전까지 장애인의 자립이 주로 경제적 · 신체적 기능의 자립이었다면, 새로운 자립패러다임은 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강조하여 장애의 원인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이자 장애인이 삶을 영위하는 사회 환경과 구조의 문제에서 찾았고, 변화를 위한 개입의 대상도 장애인의 신체가 아닌 재활과정이나 사회구조, 물리적 환경 등 사회적 통제기제 전반을 포함한 사회 환경으로 보았다(박선아 외, 2009; 이호영, 2017; 김용진 외, 2018).

자립패러다임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일본을 거쳐 2000년대 초반 국내에 자립생활모델이 도입되었고, 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제35조), 자립생활의 연구(제52조), 자립생활지원(제53조)등의 조항이 신설되어 자립생활 이념이 정책에 반영되었다(김동호, 2002; 채성현, 2017; 김용진 외, 2018).

2. 선행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향후 정책과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장애인 자립생활에서의 일상생활, 장애인 자립생활에서의 사회활동, 장애인자립생활에서의 경제활동으로 구분했으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장애인 자립생활에서의 일상생활

장애인 자립생활 중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일상생활 수행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재가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주거,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신청자격 확대, 실질적 급여량 증가, 맞춤형 급여 개발 및 제공, 서비스 인력의 처우 개선을 언급하여 제도의 확대를 제안하였다(이송희, 2012; 김성희, 2014; 최용길 외, 2019). 이 밖에도 김성희(2014)는 서비스 범위 확대와 장애인의 참여와 활동에 강점을 두는 급여내용 구성을 정책과제로 제언하였으며, 최용길 외(2019)는 신청의 제한을 낮추기 위해 본인부담금 비율을 줄이고 최중증장애인과 중·경증장애인 사이의 급여량 격차를 조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장애인 활동보조제도(PAS)와 장애인케어제도(PCA)를 분석한 전지혜(2015)는 장기요양보험 및 장애아동 지원제도와의 호환, 지역사회 응급상황 대응체계 등의 보충적 서비스 마련, 가족의 돌봄 노동 제공 인정, 중증장애인 돌봄에 대한 추가 수가 인정,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케어 지원,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 등 제도를 다원화하는 것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도출했다.

지역에 자립한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오현성(2019)은 미국 애리조나주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CMHS) 사례를 기반으로 치료연속성과 탈시설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물중심 의료행위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연구를 통한 역량 증대를 제언하였다. 전근혜 외(2021)는 의료진의 관점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고려한 수가의 부적절성 개선, 본인부담금 경감에 대한 대책, 여러 기관과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자립장애인의 주거와 관련하여 권오정 외(2020)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의 주거생활서비스 요구 조사를 분석하였으며, 주거생활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 플랫폼 개발, 장애친화적인 가사편의서비스 인력 활용, 젊은 세대 대상으로 세분화된 주거생활서비스 발굴, 장애유형, 장애 정도를 고려한 주거생활서비스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서울시의 장애인지원주택 시범사업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서는 지원주택 공급 확대와 지원서비스의 지속적 개발 및 확장이 공통된 개선안으로 나왔으며(김인제 외, 2020; 박가영 외, 2020), 이 외에 박가영 외(2020)는 주택모델에서의 동료지원가 제도 정착을 통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일상생활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립생활 개선방안으로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및 욕구 파악조사를 실시한 이송희 외(2020)는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중증장애인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 중증장애인 가정 자녀양육 정보제공 및 가사양육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으며, 국내 장애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을 위해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김성희 외(2020)는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접근, 서비스 공급량 확대와 보호자 수당 도입 추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확대, 주택환경 개선과 재난 대비시설 장비 지원,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홍보 · 연계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기타 일상생활 관련 선행연구로 김현승 외(2021)의 연구에서는 고령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대응방안으로 지역사회 실천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교육 및 훈련, 장애인복지기관과 노인복지기관 간의 통합 돌봄 협업체계 구축, 장애인 및 노인 통합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시스템 마련, 지역사회 자원 확충, 장애노인 가족 발굴 및 지원 체계 마련, 미래계획 준비 지원 서비스 도입 및 운영을 도출하였으며, 배영현(2021)의 연구에서는 국내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 사례 분석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뉴노멀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재가 복지기술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대면 및 비대면 또는 기술과 사람이 연계되는 융합 복지기술 개발 및 검증, 대상자에 따라 공간과 기술이 융합된 복지기술 개발 및 검증, 정보격차 해소와 공감대 형성을 제시하였다.

<표 2-1> 장애인 일상생활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1	이송희(2012)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 분석 결과, ①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범위 확대, ②실질적 급여량 증가, ③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급여 내용 개발, ④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를 제언함.
2	김성희(2014)	'중증장애인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정책과제를 제시함. ①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확대, ②종합적 인정조사를 통한 맞춤형 급여 제공, ③중증장애인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확대, ④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범위 확대, ⑤장애인의 참여와 활동에 강점을 두는 급여내용 구성을 제언함.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3	전지혜(2015)	미국의 장애인 활동보조제도(PAS)와 장애인케어제도(PCA)를 제도를 분석함. 장기요양보험 및 장애아동 지원제도와의 호환, 탈시설지원체계나 지역사회 응급상황 대응체계 등의 보충적 서비스 마련, 가족의 돌봄 노동 제공 인정, 중증장애인 돌봄에 대한 추가 수가 인정,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케어 지원,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 등의 변화를 한국 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함.
4	최용길 외(2019)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개선방안으로 ①활동지원인력의 확보와 함께 본인부담금 비율을 줄여 신청의 제한을 낮춤, ②활동지원인력의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 ③급여량 증가와 최중증장애인과 중·경증장애인 사이의 급여량 격차 조정을 제언함.
5	오현성(2019)	미국 애리조나주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CMHS) 사례를 기반으로 치료연속성과 탈시설화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함. ①새로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안정적인 기반 필요, ②안정적인 지원에 기반한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연구로 역량 증대가 필요함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함.
6	전근혜 외(2021)	의료진의 관점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함.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고려한 수가의 부적절성 개선, 본인부담금 경감에 대한 대책, 여러 기관과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을 개선방안으로 도출함.
7	권오정 외(2020)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의 주거생활서비스 요구를 조사하여 특성을 분석함. 연구 결과,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주거생활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 플랫폼 개발, 가사편의서비스의 경우,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서비스 인력 활용 필요, 주거생활서비스 요구가 높은 젊은 세대 대상으로 세분화된 서비스 발굴, 서비스 개발 운영시 장애유형 차이 이해, 장애 정도를 고려한 주거생활서비스 지원 방안 모색을 제시함.
8	김인제 외(2020)	서울시 지원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지원주택 운영방안 및 제도화를 제시함. 연구 결과, 지원주택 공급 확대, 입주자의 자기결정 존중, 사례관리서비스 개입확장과 적절한 인력배치, 제도화된 서비스 전략 필요를 제시함.
9	박가영 외(2020)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의 성과를 데이터 및 설문지, 인터뷰 등을 통해 분석함. 연구 결과, ①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 주택 공급 확대, ②정신질환자 욕구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서비스의 지속적 개발, ③주택모델에서의 동료지원가 제도 정착이 필요함을 제언함.
10	이송희 외(2020)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및 욕구를 온라인/모바일 조사로 파악함. 연구 결과, (건강·보건의료)중증장애인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 (일상생활)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주거)다양한 주거모형 개발 및 확대 지원, (임신출산 및 양육)중증장애인 가정 자녀양육 정보제공 및 가사·양육지원 확대, (노후)고령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자립생활)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 및 정착을 위한 단계적 지원 방안 구체화와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복지서비스)인프라 확충 및 홍보·연계강화를 제언함.
11	김성희 외(2020)	국내 장애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을 위해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함. (보건·의료건강)장애특성에 따른 맞춤형 접근,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공급량 확대와 보호자 수당 도입 추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확대,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상담 및 구제 수단의 접근성 확대, (주거 및 재난 안전) 주택환경 개선과 대상자 확대와 재난 대비 시설 장비 지원이 필요함.
12	배영현(2021)	국내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 사례 분석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뉴노멀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재가 복지기술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함. ①대면 및 비대면 또는 기술과 사람이 연계되는 융합복지기술 개발 및 검증, ②대상자에 따라 공간과 기술이 융합된 복지기술 개발 및 검증, ③정보격차 해소와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도출됨.
13	김현승 외(2021)	고령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함. ①지역사회 실천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교육 및 훈련, ②장애인복지기관과 노인복지기관 간의 통합 돌봄 협업체계 구축, ③장애인 및 노인 통합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시스템 마련, ④지역사회 자원 확충, ⑤장애노인 가족 발굴 및 지원 체계 마련, ⑥미래계획 준비 지원 서비스 도입 및 운영을 대응과제로 도출함.

2) 장애인 자립생활에서의 사회활동

자립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뒷받침 되는 제도와 환경이 중요하다.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에 기반이 되는 이동권 확보와 문화 · 체육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 의사소통 지원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하여 이민경(2015)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인적서비스 지원 확대 기조를 유지하며, 물리적 편의성 이외의 이동편의 보장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중도 척수장애인을 심층 인터뷰한 김득연 외(2020)의 연구에서도 장애인 이동차별을 없애는 중단기 계획 추진과 함께 운수종사자 대상 장애 감수성 및 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 이동시설의 안전 확보와 장애인 이동 관련 인력 전문성 교육, 장애 유형 · 생활환경별 상황에 적합한 이동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함을 분석하였다.

문화 · 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오승하 외(2014)와 이민경(2015)은 문화행사 관람 시 장애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편의시설 구축 등 접근성 보장, 관광지 · 문화여가시설 전반에 장애인 접근성 등을 담은 정보 인프라 구축, 장애인 문화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박지연(2020)은 장애인 생활체육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령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정보 접근 전략 강화, 교실/클럽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장려로 운동량 증가 유도, 수영을 위시한 수중 운동 우선 개발 보급, 1수업 2교사제 등 스포츠 지도자 운영체제의 변화를 고령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하여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서비스 이용 실태를 분석한 오문준 외(2021)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만족과 일상생활 편의성 증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비스 품질관리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고, 지역보조기기센터의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본 정승민(2020)의 연구에서는 최신 보조기기 다양화, 체험 가능한 다양한 보조기기 제품 확보,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개선방안으로 제언하였다. 또한 두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보조기기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를 언급했다(정승민, 2020; 오문준 외, 2021).

전동일 외(2014)는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의 현황 · 실태와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전달체계를 검토하여,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업무를 사례관리 사업에 위탁하는 것과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 등록제도 실효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과 창구단일화, 사례관리센터 신설할 것을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 개선방안으로 도출하였으며, 이 밖에 김성희 외(2020)는 보조기기의 공적 급여 지원 수준 향상과 임대 급여 제도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해외 보조기기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국립재활원의 보조기기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을 개발 및 운영한 김지해 외(2022)는 보조기기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 공동 설계 지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조성, 공유물 재현 지원, 공유물 활용 지원의 필요를 보조기기 공유 플랫폼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장애인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2])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전문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력 양성, AAC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이 필요하며, 기존의 보조공학 전달체계와의 연계성을 높일 것을 제시하였으며(남세현 외, 2015; 이근민 외, 2017), 이 외에 이근민 외(2017)는 사각지대가 없는 공적급여 체계 마련, 보조기기센터의 양적·질적 확장이 전달체계 수립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조아라 외(2021)의 연구에서는 AAC를 사용하는 성인 뇌병변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의 AAC 사용과 자기결정 향상을 위한 지원 요구를 살펴보고 AAC의 효과성을 위한 개별화된 지원, 대화상대자 교육,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교육의 필요를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김경양(2021)은 성인 뇌병변장애인 당사자 및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의사소통 조력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 장애 관련 전문가 영역에 실습 중심 교육 제공, 중증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및 문제해결 담당 허브센터 구축을 의사소통 지원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2) Augmentativeand Alternative Communication(AAC): 음성 또는 쓰기의 생산 또는 이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음성 또는 쓰기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사용되는 의사소통방법.
출처: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Augmentative_and_alternative_communication
(검색일: 2022-06-02)

<표 2-2> **장애인의 사회활동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1	이민경(2015)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 여가 · 활동 실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분석함. ①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제고 노력 및 사회활동에 대한 인적서비스 지원 확대 기조 유지, ②이동편의의 보장범위를 물리적 편의성 이외의 범위로 확대하여 관련 지원방안 모색, ③문화행사 관람시 장애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 보장, ④관광지 · 문화여가시설 등에 장애인 접근 가능성 등 정보 인프라 구축 필요를 제언함.
2	김득연 외(2020)	중도 척수장애인의 사회참여 과정에서 이동성 경험에 대한 이해와 의미 탐구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 6명을 심층 인터뷰함. ①장애인 이동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중단기 계획, ②운수종사자 대상 장애감수성, 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 ③이동시설의 안전 확보와 장애인 이동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교육, ④장애 유형별, 생활환경별 상황에 적합한 이동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을 제언함.
3	김경양(2021)	장애인 당사자 및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인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요구 파악 및 지원 방안 수립을 연구함. 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의사소통 조력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 장애 관련 전문가 영역에 실습을 중심으로 한 교육 제공, 중증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및 문제해결 담당 허브센터 구축을 제언함.
4	남세현 외(2015)	AAC 중재 사회서비스 지원 모델의 구축 방안에 대해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조사를 통해 연구함. 연구 결과, 전문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력 양성, AAC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에 있어 보조공학 전달체계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함.
5	이근민 외(2017)	국내의 효과적인 AAC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AAC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을 비교 · 분석함. 사각지대가 없는 공적급여 체계 마련, 보조기기센터의 양적 · 질적 확장, 기존 인프라 활용, 전문화 체계 마련 및 보수교육 진행이 필요함을 제시함.
6	조아라 외(2021)	AAC 사용 성인 뇌병변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의 AAC 사용과 자기결정 향상을 위한 지원 요구를 살펴봄. AAC의 효과성을 위한 개별화된 지원, 대화상대자 교육,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함.
7	오승하 외(2014)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 실태를 분석하여 문화복지정책 수립 및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함. 장애인 문화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문화복지서비스 환경 구축과 정부 · 지자체 차원의 관람시스템 개발 및 보완, 문화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8	박지연(2020)	장애인 생활체육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령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특성과 여건에 대한 실태를 규명하고 고령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장애인 생활체육 정보 접근 전략을 강화, 교실형, 클럽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장려로 운동량 증가 유도, 수영을 위시한 수중 운동 우선 개발 보급, 1수업 2교사제 등 스포츠 지도자 운영체제의 변화를 제시함.
9	전동일 외(2014)	장애인 보조기구 관련 사업과 현황 ·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전달체계를 검토함. ①사례관리사업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업무를 위탁 수행, ②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신설, ③장애인 보조기구 품목 등록제도 실효성 확보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과 창구단일화를 제시함.
10	오문준 외(2021)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서비스 이용 실태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만족과 일상생활 편의성 증진에 대한 고려 필요, ②정책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서비스 품질관리차원에서 다양한 노력 추진 필요, ③정기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함.
11	정승민(2020)	지역보조기기센터의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자 특성에 따른 보조기기 서비스 단계별 만족도를 분석함. 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최신보조기기 다양화, 체험 가능한 다양한 보조기기 제품 확보,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보조기기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제언함.
12	김지해 외(2022)	기존의 해외 보조기기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의 메뉴 구조, 주요 기능, 보조기기 오픈소스 분류 기준을 살펴보고 웹사이트를 개발 및 시범 운영하여, 이용자와 인터뷰하여 종합적 시사점을 도출함. 보조기기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 공동 설계 지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조성, 공유물 재현 지원, 공유물 활용 지원이 되어야 함을 제언함.

3) 장애인 자립생활에서의 경제활동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장애인 고용정책과 노동시장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산업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변화와 기술 발전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먼저 장애인 고용정책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직업재활시설 운영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임동진 외, 2016; 강동욱 외, 2021), 임동진 외(2016)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업 고용이 아닌 공적 부조 방식으로 지원할 것과 개별 사례 중심으로 점진적인 장애인 차별 개선, 고용의 질 관점에서 '사업주지원제도'를 제고할 것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강동욱 외(2021)는 4차 산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신규일자리 창출, 장애인 근로자 보호,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직업재활시설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가 장애인의 노동시장 전이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변민수 외(2021)는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 및 서비스 영역 확대와 데이터에 기반한 장애인 고용 플랫폼 구축,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담보된 장애인 고용 거버넌스를 제시하였다.

장애인 노동시장과 고용의 질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계층별 노동시장 개입 전략을 위시한 취약한 장애 특성을 가진 집단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직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장애인 근로자의 인적 자본 향상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내실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언하였다(김항구 외, 2017; 서지혜 외, 2018; 임예직 외, 2020; 강동욱 외, 2021; 노법래 외, 2021; 부경희 외, 2021; 오욱찬 외, 2021).

장애인 고용의 질을 다룬 연구에서 김항구 외(2017)는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 확대에 중점을 둔 장애인 고용정책과 임금보존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및 하한선에 대한 기준 설정을 제언하였으며, 서지혜 외(2018)는 고용안정성 유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과 장애인 직업훈련 교육기관에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직무 불일치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의 질을 분석한 오욱찬 외(2021)는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차별 해소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장애인 노동시장을 분석한 연구에서 임예직 외(2020)는 장애인의 노동 불안정에 대한 정의와 정확한 추산 및 개입이 필요하며 다각적인 고용 지원 정책 및 새로운 일자리 개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적용 검토를 장애인의 노동의 불안정성을 완충할 대책으로 보았다.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영향요인을 분석한 부경희 외(2021)는 노동시장 진입에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중요하며 경증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지원금 체계를 설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일정한

근로활동 및 소득에 대한 제한선 상향과 이용기간 유예 방안 검토를 제언하였다.

또한 노법래 외(2021)는 장애인 고용 이행 궤적을 분석하면서 분절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가교 일자리 확대와 근로 및 실업빈곤집단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김용탁(2021)은 보호고용 혹은 직업훈련 영역에서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방안으로 완충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자체 및 일반 사업체 대상 공모 방식으로 설립이 용이한 모델의 추진, 초기 설립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과 공익성 중심의 초기 컨설팅 강화를 제언하였다.

장애인 고용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수용 외(2021)는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일반형 표준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와 형태에 따른 지원 설계, 장애 특성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인증 기준의 다변화 등 다양한 업종 진입 유도 등을 도출했으며, 안예지 외(2020)는 장애인 고용 플랫폼 개발 및 지속가능성을 탐색하여 유연하고 포용적인 기업문화와 발달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제도 지원, 장애인 노동여부와 분리된 소득보장 급여 보장, 지원고용 전문가 전문적 역할 확대, 근로지원인의 고용보장성과 안정성 확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서비스 및 품질 기준의 평가를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변화가 장애인 고용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선행연구로 정광진(2017)은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고용과의 관련성을 조망하여 보조공학기기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 첨단화와 재직자에 대한 훈련 강화, 기본소득을 비롯한 새로운 노동 규범에 대한 논의 강화 등 장애인 고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였다. ICT[3]가 장애인 고용환경에 일으키는 변화를 알아본 곽정란(2017)의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ICT를 활용하여 장애인 재택고용을 지원한 사례를 분석하여, 장애인 재택근무환경 지원과 기업이 장애인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경우 조성금을 지급하는 대안을 소개하였으며, 신숙경(2019)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원격근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직무의 성격에 따른 장애인의 원격 근무 채용 확대, 장애인에게 적합한 원격근무 현황분석과 사례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유은주 외(2021)는 장애인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위한 지원 및 관리방안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심리적 지원서비스와 직업역량 강화 지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방안으로 장애인 근로자 재택근무 인사관리 매뉴얼 제공, 재택근무 고용모델 개발을 제안하였다.

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 라디오, 텔레비전, 휴대 전화, 컴퓨터 및 네트워크 하드웨어, 위성 시스템 뿐만 아니라 화상 회의 및 원격 학습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및 가전 제품 등 모든 통신 장치를 포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르는 용어.
출처: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Information_and_communications_technology
(검색일: 2022-06-02)

이 밖에 장애인의 소득보장 · 안정을 위해서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소득보장 수준의 적절성을 점검하며, 부가급여 재편방식 고려를 제언한 연구(나영희 외, 2014; 김성희 외, 2020; 이송희 외, 2020)가 있다.

<표 2-3> 장애인의 경제활동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1	임동진 외(2016)	2012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함.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업 고용이 아닌 공적 부조 방식 지원, 장애인 차별에 관해 개별 사례 중심으로 접근하여 차별 요소를 점진적으로 개선, 고용의 질 관점에서 '사업주지원제도'를 제고할 것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함.
2	강동욱 외(2021)	국내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도출함. 장애인의무고용제도 · 직업재활시설 운영합리화, 4차 산업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신규일자리 창출, 장애인근로자 보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직업재활시설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가 장애인의 노동시장 전이확대, 특수교육대상자 취업지원 강화 등을 제언함.
3	변민수 외(2021)	문헌고찰, 노동시장 주요 지표 통계량 분석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정책 과제를 제시함. ①장애인 고용정책 대상과 서비스 영역의 확대, ②장애인의 직무수행능력 관련 정보와 기업의 직무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에 기반한 장애인 고용 플랫폼 구축, ③정부 · 기업 · 사회의공감과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담보된 장애인 고용의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제시함.
4	이수용 외(2021)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선행연구와 양적분석,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①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일반형 표준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와 형태에 따른 지원 설계 필요, ②장애 특성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의 다변화 등 표준사업장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업종 진입 유도, ③표준사업장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설계와 지원 필요를 제시함.
5	김항구 외(2017)	장애인 근로자의 좋은 일자리 분포와 진입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분석함. 연구 결과, 장애인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 확대에 중점을 둔 고용정책, 장애인근로자들의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임금보존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 및 하한선에 대한 기준 설정, 인구사회학적 계층별 우선 개입 전략을 제언함.
6	서지혜 외(2018)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웨이브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질 결정요인에 따른 고용의 질 향상 방안을 찾고자함. 연구 결과, ①고용안정성 유지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 ②장애인 고용사업체에 직무분석 시스템 마련, ③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 ④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좋은 일자리 유지 지원방안 마련을 제시함.
7	임예직 외(2020)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4차 조사 자료를 분석을 통해 장애인 노동시장의 불안정 노동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고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함. 장애인의 노동 불안정 정의 및 정확한 추산 및 개입, 장애인 집단 내 더욱 취약한 계층에게 대한 정책적 관심, 다각적인 고용 지원 정책 및 새로운 일자리 개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적용 검토를 제언함.
8	노법래 외(2021)	장애인 고용 이행 궤적을 일자리에 따라 유형화하고, 장애인 고용 상황의 잠재이행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Hidden Markov Model을 통해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른 경로 구조 차이를 비교함. 연구 결과, 분절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가교 일자리 확대와 취약한 장애 특성을 가진 집단에 대한 지원, 근로 및 실업빈곤집단에 대한 다양한 정책 레퍼토리 개발을 제언함.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9	부경희 외(2021)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미취업기간, 성인이전과 이후 장애발생 시기를 구분하고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6-2019)를 이용하여 사건사 분석을 실시함. 분석 결과, ①인구학적 요인, 연령대별로 성인 이전 장애 발생자와 성인 이후 장애 발생에 맞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맞춤형 개입 필요, ②노동시장 진입에 주관적인 건강상태 중요, ③경증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지원금 체계 설계 필요, ④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일정한 근로활동 및 소득에 대한 제한 상향, 이용기간 유예 방안 검토를 제언함.
10	오욱찬 외(2021)	장애인 고용의 질을 직무 불일치의 관점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불일치가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1~4차 자료를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함. 장애인의 직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개선,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평생학습체계 구축,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차별 해소, 장애인 교육 및 자격기술 내실화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함.
11	김용탁(2021)	장애인 완충형 일자리 모델 도입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도입시 고려사항을 제시함. 연구 결과, ①완충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②설립이 용이한 모델은 지자체 및 일반 사업체 대상 프로그램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기반 조성에 시간이 소요되는 모델은 중장기적 접근으로 설립 추진하는 두 가지 방안 동시 진행, ③초기 설립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④생산성보다는 공익성을 중심으로 초기 컨설팅 강화를 제시함.
12	유은주(2021)	장애인 근로자의 재택근무 현황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문헌고찰과 심층면접, 전문가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근로자 재택근무를 위한 지원 및 관리방안을 마련함. 재택근무 장애인 근로자 지원방안으로 지역사회 기반 심리적 지원서비스와 직업역량 강화 지원을, 사업주 지원방안으로 장애인 근로자 재택근무 인사관리 매뉴얼 제공, 재택근무 고용모델 개발을 제안함.
13	나영희 외(2014)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향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해외사례분석을 실시함. 국내 장애인소득보장정책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 기준은 장애정도가 아닌 근로능력 손실정도가 우선되어야 하며, 비기여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재편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14	이송희 외(2020)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및 욕구를 온라인/모바일 조사로 파악함. 연구 결과, (고용)서울형 공공일자리 지원 내실화, (소득)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확대 지원을 제언함
15	김성희 외(2020)	국내 장애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을 위해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함. (교육)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기관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취업 및 직업생활)공공일자리 확대와 직종 다양화, (복지서비스)소득보장 수준의 적절성 점검, (경제상태)의료비 부담 감소와 장애인 연금인상을 부문별로 제언함.
16	곽정란(2017)	ICT를 활용한 장애인 재택 고용과 ICT를 활용한 장애인고용 활동보조 조성금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 일본은 ICT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재택근무환경을 지원하고, 활동보조와 관련하여 ICT를 활용하는 경우 조성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쓰고 있음.
17	신숙경(2019)	ICT의 발전이 장애인의 노동시장과 고용환경에 일으키는 변화를 알아보고 ICT기반의 근무환경과 직무배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시함. 활성화 전략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의 원격근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직무의 성격에 따라 장애인의 원격 근무 채용 확대, 장애인을 위한 원격근무 현황분석과 사례연구 필요를 제시함.
18	정광진(2017)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고용과의 관련성을 거시적 관점에서 SWOT분석을 통해 조망함. 연구결과, 보조공학기기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 첨단화와 재직자에 대한 훈련 강화, 기본소득을 비롯한 새로운 노동 규범에 대한 논의 강화로 장애인 고용 4.0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19	안예지 외(2020)	무인 비즈니스 유지관리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FGI를 통해 장애인 고용 플랫폼 개발 및 지속가능성을 탐색함. 유연하고 포용적인 기업문화 조성, 장애인 노동여부와 분리된 소득보장 급여 보장, 발달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제도 활용지원과 지원고용 전문가 전문적 역할 확대, 근로지원인의 고용보장성과 안정성 확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서비스 및 품질 기준의 평가를 제언함.

제3장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현황과 자립생활 실태





제3장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현황과 자립생활 실태

제1절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정책 운영현황 및 환경변화

1.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도

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은「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2019. 9. 26 일부 개정 및 시행)제5조와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2020. 12. 31 타법 개정 및 시행)제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제5조 2항에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의 추진 근거가 되고 있다.

<표 3-1>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에 따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4.〉
④ 계획의 세부항목과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시기와 세부사항을 규정한 제2조는 종합계획의 5년 단위 수립과 시행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표 3-2>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 등)
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0.〉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계획(평가 포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종합계획과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고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0.〉
1. 종합계획
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분석
나.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추진 전략 및 방향
다.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규모 및 내용
라. 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마.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자립생활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장애인자립생활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아. 종합계획 이행에 따른 성과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 및 향상에 필요한 사항
2. 실태조사
가. 중증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
나. 주거영역
다. 소득보장 영역
라. 고용영역
마. 활동지원서비스 영역
바. 자립생활 지원 영역
사. 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영역
아. 그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의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조례와 이 규칙에 따른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서울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자립생활 여건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역사회 전달체계 개편 및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위해 2017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영역 91문항의 설문 및 행복e음 시스템자료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실시 결과 10개 영역 31개 분야 67건의 정책제언이 도출되었다. 또한「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 2조에 따른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TF팀을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였으며, 민관합동 TF팀은 연합회, 복지관 등 장애인단체 측 3명, 서울시복지재단 2명, 전문가 3명, 시의원 2명, 주관부서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어 5개 분야 10개 정책과제와 26개 단위사업을 발굴 및 검토했다.

2018년에 수립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은 정책목표를 '불편 없는 일상생활 실현', '생활안정 및 고용창출로 경제적 자립 지원', '자기주도적 삶 영위 및 문화·여가생활 향유'로 세우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5개 분야 10개 정책과제와 26개 단위사업 시행을 계획했다.

5개 분야는 일상생활 지원 강화,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문화·체육·여가생활 및 가족 지원,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로, 5개 분야 정책 아래 10개 정책과제는 활동지원서비스 강화와 맞춤형 건강관리, 이동의사소통 편의 증진과 주거모델 개발 및 주거 지원, 생활안정 지원과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문화·체육·여가생활 활성화와 장애인 가족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와 관련기관 인력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3>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5개 분야 10개 정책과제

5개 분야	10개 정책과제
일상생활 지원 강화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이동·의사소통 편의 증진
	주거모델 개발 및 주거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생활안정 지원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문화·체육·여가생활 및 가족 지원	문화·체육·여가생활 활성화
	장애인 가족 지원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강화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
	관련 기관·인력 지원

출처: 장애인자립지원과, 2018

2.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 운영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①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은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나, 서울시 장애인 시설 거주 시 퇴소 2년 내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자 활동지원시간이 감소한 고령 장애인도 포함하고 있다.

동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받아 방문조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자를 선정하며, 구간에 따라 가사 · 일상생활 등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탈시설 장애인의 경우 월 120시간 시비를 추가급여로 지급하고 고령 장애인은 감소한 시간만큼 보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 최중증 장애인 중 자치구 추천자는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월 350시간 시비를 추가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표 3-4>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구분	내용
목적	최중증 장애인의 돌봄공백 방지 및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 여건 조성
대상	• 만 6세~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방법 · 절차	① 신청 (주민센터) ⇒ ② 방문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 ③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자치구) ⇒ ④ 결과 통보 (자치구→신청자)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 · 가사활동 · 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구간에 따라 월 최소 47시간~최대 830시간(국비 47~480시간, 시비 100~350시간)[1)]

주1) 시간당 14,800원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의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는 시비추가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24시간 대상자, 탈시설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에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기요양전환자로 전환되어 활

동지원급여가 급격히 감소되었던 것을 개선하여 월 100~320시간 보전급여를 시비로 추가지원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는 2018년 100명이었던 것을 200명으로 확대하였다. 탈시설 장애인의 경우 퇴소 후 1년 월 30시간 지원하던 급여를 퇴소 후 2년 월 120시간 급여로 확대하였으며, 2022년까지 퇴소 후 3년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표 3-5>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시비추가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 추가지원	활동지원 급여 중단	⇨	월 100~320시간 보전급여 지원 시비추가 지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100명 지원	⇨	200명 지원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퇴소 후 1년 30시간 지원	⇨	퇴소 후 3년 120시간 지원(예정)

출처: 서울특별시, 2022

② 성인 최중증장애인(발달, 뇌병변 등) 낮활동 지원 확대

서울시는 복지서비스가 제한적이었던 도전행동을 가진 성인 발달장애인 및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사례를 발굴하고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낮활동을 지원하여 개인별 도전행동에 맞는 맞춤형 긍정행동지원 및 부모교육을 하고 있다.

낮활동 사업의 수행기관은 장애인 복지관 총 23개소(발달 17, 뇌병변 5, 시각·중복 1)이며 복지관 당 4명 이내로 이용을 제한하고, 2명의 전담인력, 보조인력 2~4명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들의 전문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설치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 빠르게 고령화 되는 장애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중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중고령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중고령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표 3-6> 서울시 성인 최중증장애인(발달, 뇌병변 등) 낮활동 지원 확대 개요

구분	내용
목적	• 도전행동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및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대상 돌봄 사각지대 사례 발굴 • 가정 돌봄 부담 완화
대상	• 도전행동을 가진 성인 발달 및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 중고령 장애인
방법·절차	• 성인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사업 : 장애인 복지관 총 23개소, 전담인력 2명, 보조인력 2~4명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전 자치구 설치(2022년까지 25개소 완료예정) • 중고령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지원내용	• 개인별 도전행동에 맞는 맞춤형 긍정행동지원 및 부모교육 •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에 중고령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시설 확대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는 성인 최중증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는 운영기관을 기존 10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했으며, 낮활동 전담인력을 복지관 정원인원에 포함하여 순환근무를 가능하게 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이용인 수는 기존 40명에서 개선 후 9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또한 기존 1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하여 전 자치구에 설치하였으며, 중고령장애인 특화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여 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표 3-7> 성인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 확대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운영	운영기관 : 10개소 이용인수 : 40명	⇨	운영기관 : 23개소 이용인수 : 96명 낮활동 전담인력 근무여건 개선[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0개소 설치	⇨	25개소 전 자치구 설치
중고령장애인 특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	공동생활가정 특화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 설계 위한 TF구성 및 개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특화프로그램 운영

주1) 복지관 정원인원에 포함하여 순환 근무 가능

출처: 서울특별시, 2022

③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서울시는 장애인 활동제약 최소화와 완전한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대여, 맞춤제작 및 개조, 수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남, 동북, 서남, 서북 보조기기센터 총 4개소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전화, 방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를 받으면 센터에서 초기상담을 거쳐 이용자 장애정도 등을 분석한다. 분석 단계에서 서비스 대상자의 장애 정도 등을 분석하여 평가 및 사정이 이루어지며, 사례회의, 대기자 관리 등을 통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 후 현장적용단계에서 보조기기의 선택 및 이용자 사용훈련 등을 지원한 다음, 서비스 실행단계에서 보조기기 임대, 지원, 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 후 사례관리 등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표 3-8>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운영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장애인 활동제약 최소화와 완전한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대상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방법 · 절차	① 접수/초기상담 ⇒ ② 이용자 장애정도 등 분석 ⇒ ③ 서비스 계획 수립 ④ 현장 적용 (이용자 사용훈련 등) ⇒ ⑤ 서비스 실행 ⇒ ⑥ 사후관리 (사례관리 등) • 동남, 동북, 서남, 서북 보조기기센터 총 4개소 비영리 법인 위탁운영
지원내용	보조기기 대여, 맞춤제작 및 개조 수리 등 서비스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이용인원 2만 명에서 2만 4천 명으로 이용인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보조기기 구입 및 물품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기기 관리 및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표 3-9>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보조기기센터 이용인원	이용인원 : 2만 명 목표	⇨	이용인원 : 2만 4천 명 목표 -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개편 - 보조기기 관리 개선
보조기기 구입	예산 : 200백만 원	⇨	예산 : 440백만 원

출처: 서울특별시, 2022

④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서울시는 임신 · 출산 ·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부담 경감과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 등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수행기관인 장애인 복지관 15개소가 신청을 접수하여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홈헬퍼를 선발 · 교육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연계하거나 파견하고 있다.

<표 3-10> 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임신 · 출산 ·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부담 경감과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
대상	임신 · 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1)]
방법 · 절차	①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수행기관에 신청 – 소득기준 등 심사, 선정 ⇨ ② 홈헬퍼 선발 자격증(수료증)소지자 선발 및 기관별 교육 ⇨ ③ 서비스 실시 – 서비스 대상자 홈헬퍼 연계 및 파견 – 서비스 실시
지원내용	여성장애인의 임신 · 출산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파견

주 1)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예외 인정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은 기존 5개년 계획에서 목표했던 신생아양육 서비스 시간 확대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만 4세 미만 대상 서비스 시간을 월 70시간에서 월 90시간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중위소득 120%이하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헬퍼의 처우 또한 기존의 고정시급이었던 것에서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교통비,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표 3-11> 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신생아양육 서비스시간 확대	월 120시간	⇨	월 120시간
만 4세미만 서비스 시간 확대	월 70시간	⇨	월 90시간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홈헬퍼 처우 개선	고정시급(10,300원)	⇨	최저임금 반영 교통비, 주휴수당, 휴일수당 분리 지급

출처: 서울특별시, 2022

(2)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①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서울시는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서울의료원, 국립재활원으로 확대하고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보라매병원을, 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서울재활병원을 지정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를 확충하여 장애인 대상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검진, 암 검진 등을 지원하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사업, 장애인 건강검진 및 재활 등 서비스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표 3-12>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
대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방법 · 절차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 보라매병원(서울시 남부), 서울재활병원(서울시 북부)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 서울의료원, 국립재활원
지원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사업, 장애인 건강검진 및 재활 등 서비스연계지원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 확충,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검진, 암 검진 등 수행

출처: 서울특별시, 2022

기존 1개소이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2개소로 늘려 장애인 건강검진 후 예방적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민간의료기관 참여 미비를 사유로 기존 1개소였던 것을 2개소로 확대해 부분적으로 목표가 이행되었다.

<표 3-13>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운영기관 1개소	⇨	운영기관 2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기관 1개소	⇨	운영기관 2개소

출처: 서울특별시, 2022

②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장애인 운동 컨설팅 전담요원 양성 및 배치)

장애인의 여가시간 활용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주간보호센터, 작업보호장, 복지관, 특수학교, 공공체육시설 등에 배치되어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로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상담신청을 받아 장애인 스포츠 상담과 운동처방 및 지도, 관리를 하고 있다.

<표 3-14>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장애인의 여가시간 활용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생활체육 활성화
대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방법 · 절차	•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전담 지도자 상시 배치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방문상담 및 지도 · 관리
지원내용	장애인스포츠 상담 및 체육활동 지도

출처: 서울특별시, 2022

기존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원 80명을 109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소속을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구장애인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사업안정성 제고를 의도했다.

<표 3-15>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80명	⇨	109명

출처: 서울특별시, 2022

2)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1) 이동·의사소통 편의 보장

① 장애인 바우처 택시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

서울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수요를 분산하여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울시민이면서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이용요금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택시 콜센터에 접수 후 택시를 이용하고, 하차 시 신한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서울시가 총 결제액의 75%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1회 최대 3만 원의 제한이 있으며, 1일 최대 4회, 월 40회 이용가능하다.

이 밖에 운전기사 장려금으로 콜당 500원의 봉사수당과 근거리수당(5km이내, 8700원 이내)을 별도 지원하고 있다.

<표 3-16> **장애인 바우처 택시 장애유형 확대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수요 분산
대상	서울시민으로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
방법·절차	① 콜센터 접수 (나비콜·국민캡·마카롱택시) ⇨ ② 택시 이용 ⇨ ③ 하차 시 결제 (신한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1]) - 1일 최대 4회, 월 40회 이용가능
지원내용	총 결제액의 75% 지원(1회 최대 3만 원 제한2))

주 1) 관할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주 2) 예약서비스 요금 미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장애인 바우처 택시 대상은 기존의 중증 시각 · 신장장애인에서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되었으며, 택시 이용요금의 지원율은 65%에서 75%로 인상되었다. 이 외에 운전기사 장려금으로 콜당 500원의 근거리 수당(5km이내, 요금 8,700원 이내)이 추가로 지원된다.

<표 3-17> 장애인 바우처 택시 장애유형 확대 전후비교

구분	기존		개선
이용대상 확대	중증 시각 · 신장장애인	⇨	전 장애유형
택시요금 지원율 인상	65%	⇨	75%
근거리 수당 지원	-	⇨	근거리수당

출처: 서울특별시, 2022

② 뇌병변 · 발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서울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는 뇌병변 · 발달 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특성 및 개인요구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탈시설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 및 복지관, 자립주택 등 의사소통 컨설팅, 스마트 사업을 통한 AAC 어플 개발 및 보급, AAC 이해 교육 및 자문 및 의사소통권리 홍보와 함께 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 확대 및 지원체계 마련과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3-18> 뇌병변 · 발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 활성화
대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는 장애인
방법 · 절차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1개소
지원내용	개별 맞춤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제공 · 연계, 의사소통정보플랫폼 및 의사소통권리증진네트워크 운영, 스마트 의사소통 시스템 개발 · 보급, 의사소통서포터 양성 및 찾아가는 기관컨설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범 운영을 거쳐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에 따라 확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표 3-19> 뇌병변·발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의사소통권리증진 센터 설치·운영	-	⇨	운영기관 1개소

출처: 서울특별시, 2022

③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서울시는 청각장애인의 자기계발 활성화 및 사회참여 욕구 촉진을 위해 서울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문자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를 통해 문자통역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이 확인되면 시 전문 문자통역사를 통해 문자통역 서비스를 현장 지원 및 원격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분야는 취업활동, 취업 후 직무관련 지원, 기타 자기계발 등이다.

<표 3-20>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청각장애인의 자기계발 활성화 및 사회참여 욕구 촉진
대상	서울시 등록 청각장애인
방법·절차	문자통역서비스 신청 시 전문 문자통역사를 통해 현장 지원 및 원격 지원
지원내용	취업활동 지원, 취업 후 직무관련 지원, 기타 자기계발 지원 등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는 기존에 청년(20~29세) 청각장애인만 서비스 지원하던 것을 확대하여 전연령 청각장애인에게 문자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표 3-21>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청년(20~29세) 청각장애인만 서비스 지원	⇨	전연령 청각장애인에게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2022

(2) 신 주거모델 개발 및 주거 지원

① 장애인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 및 지원주택 확대

서울시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서비스 마련을 위해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시 지원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결합 지원하고 있다. 서울주택공사(SH)가 주택공급을, 선정된 운영기관이 주거유지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서울시 주택정책과와 SH공사가 수요조사와 물량 및 예산 확보를 통해 공급계획을 수립하면 SH공사가 지원주택을 공급, 입주자를 모집하고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을 사정한다. 서울시는 기준에 따라 입주자와 운영기관을 선정하며, 장애인 복지정책과가 선정 실무를 총괄하고 운영기관을 지도·감독한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실적을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표 3-22> 장애인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 및 지원주택 확대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장애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서비스 마련
대상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시 지원 시설 거주 장애인
방법·절차	① 주택정책과 SH공사 - 공급계획 수립 - 수요조사 (물량 및 예산 확보) ⇨ ② SH공사 -지원주택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연 2회) -신청자 소득, 재산 등 사정 -신청자 서비스필요도 조사 ⇨ ③ 서울시 -입주자 선정(기준) -운영기관 선정(기준) -기타 운영 관련 논의 ④ 장애인 복지정책과 - 운영기관 선정실무 총괄 - 입주자 선정실무 총괄 - 운영기관 지도·감독 ⇨ ⑤ 운영기관 - 입주자 맞춤형 - 주거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실적 보고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결합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는 연간 주택 공급량을 늘려 2022년 지원주택 신규 물량을 70호 확보했으며,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지원금을 기존 1천 2백만 원에서 상향하여 1천 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3> **장애인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 및 지원주택 확대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연간 주택 공급량	연간 60호 신규 공급	⇨	연간 70호 신규 공급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지원	자립정착지원금 1천 2백만 원 지원	⇨	자립정착지원금 1천 5백만 원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2022

② 저소득 중증장애인 임대 · 전세 주택 제공 확대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방지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임대 · 전세 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를 배정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최고 15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최고 8점의 가점을 배정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340호)」제9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다가구 · 원룸을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경우 1순위,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경우 2순위로 공급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이내이며, 임대기간은 20년으로, 최초 계약을 2년으로 하여 2년마다 재계약 할 수 있다.

<표 3-24> **저소득 중증장애인 임대 · 전세 주택 제공 확대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방지와 주거불안 해소
대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 일반 공급 1순위, 최고 15점까지 가점 • 매입임대주택 : 다가구임대료 시세 30~50% 이내, 임대기간 20년(최초 2년, 2년마다 재계약)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영구임대주택 가점대상 기준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전세주택가격 상승 및 전세물량 감소 등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지원금이 기존 가구당 1억~1억 2천만 원에서 가구당 1억 7천만 원~1억 8천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존에는 자치구 사업담당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을 진행했지만 전문 법무사에게 계약 사무를 위임하여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전문성 확보를 의도하였다.

<표 3-25> **저소득 중증장애인 임대·전세 주택 제공 확대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영구임대주택 가점대상 용어 정비	1~3등급 장애인 4~6등급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지원	- 1가구당 전세 지원금 1억 원 ~ 1억 2천만 원 - 자치구 사업담당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 진행	⇨	- 1가구당 1억 7천만 원 ~ 1억 8천만 원 - 계약사무를 전문 법무사에게 위임, 담당자 업무부담 경감 및 전문성 확보

출처: 서울특별시, 2022

③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 확대

서울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활동에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주거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50~65% 이하,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이다.

선정된 수행기관이 자치구에 신청한 가구 중 현장실사 및 전문가 기술자문 회의를 통해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이후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운영기관에 의해 선정된 시공업체가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대상 가구는 개조비의 30%를 부담한다.

<표 3-26>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 확대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활동에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주거편의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장애인가구 100가구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방법 · 절차	① 서울시 - 기본계획수립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홍보 - 사업비 지원 - 대상가구 조사 · 통보 - 사업시행 중간점검 - 사업종료 후 정산검사 ⇨ ② 자치구 - 예비대상가구 우선순위 결정 - 공사시공에 따른 도로점용 등의 협조 - 수혜자 만족도, 불편사항 등 의견수렴 협조 ⇨ ③(수행기관)따뜻한 동행 - 사업수행계획 수립 - 시공업체 선정 - 시공대상 및 순위 확정 - 공사시행 기술자문 · 관리 · 감독 -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추진성과 평가 · 보고
지원내용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출처: 서울특별시, 2022

3)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1) 생활안정 지원

①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이룸통장)

서울시는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미만,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 참여를 접수한 대상 중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고득점순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참여자가 매월 협력은행을 방문해 직접 입금하거나 매월 자동이체를 하여 저축하는 방식이다.

10,15,20만 원 중 선택하여 매월 저축이 가능하며, 서울시는 월 15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다. 3년 적립 시 본인저축액과 지원금을 포함한 만기적립금 및 이자를 받으며,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할 수 있다.

<표 3-27>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 및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9세 미만 중증장애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700명
방법 · 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접수 • 선정된 참여자가 3년간 매월 협력은행 방문, 본인저축액 직접 입금 또는 매월 자동이체
지원내용	• 10 · 15 · 20만 원 선택 본인저축액에 월 15만 원 정액 지원 – 3년(총 36회) 적립 시 만기적립금(본인저축액 + 지원금) 및 이자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대상이었던 장애1~2등급 및 일부 3급이『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원 대상의 연령이 만 15세~34세 이하에서 만 15세~39세 이하로 확대되었다.

<표 3-28>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대상	• 만 15세~34세 이하 • 장애1~2등급 및 일부 3급	• 만 15세~39세 이하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출처: 서울특별시, 2022

②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서울시는 정부의 법정요건이 맞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1억 3천 5백만 원 이하인 가구이며, 동주민센터에 신청한 가구 중 기준에 맞는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21년 5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과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표 3-29> **서울시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대상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 1억 3천 5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3천만 원 초과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제외
방법 · 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선정기준에 맞는 지 심사 후 급여 지급
지원내용	• 생계급여 및 해산 · 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맞춤형 생계급여의 1/2~1/3), 해산급여(70만 원) · 장제급여(80만 원)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는 기존 대상자에게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소득 · 재산이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이하이며, 5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 이를 개선하여 2021년 5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되었다.

<표 3-30> 서울시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출처: 서울특별시, 2022

③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서울시는 중점보호가구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및 장애아동수당을 매월 4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시설거주 수급자인 중증장애아동이다.

<표 3-3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 보전
대상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8,529명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시설거주 수급자인 중증장애아동 356명
방법 · 절차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4만 원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월 4만 원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서울형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와 서울형 장애아동수당을 기존 월 3만 원에서 월 4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3-32>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월 3만 원	⇨	월 4만 원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인상	월 3만 원	⇨	월 4만 원

출처: 서울특별시, 2022

(2)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① 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서울시는 취업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의 직무능력 습득과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공공기관과 연계해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에 등록된 미취업 발달장애인이며, 사서보조 지원 사업,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제공을 통해 발달 장애인의 직무능력 습득과 취업연계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표 3-33> 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취업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의 직무능력 습득과 경제활동 참여
대상	만 18세 이상 서울시에 등록된 미취업 발달장애인
방법 · 절차	① 서울시 –추진계획수립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 ② 수행기관 –장애인 일자리 사업시행 (참여자 선발, 교육포함) ⇨ ③ 서울시 ↔ 수행기관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④ 수행기관 – 보조금 집행 ⇨ ⑤ 수행기관 ↔ 서울시 – 정산보고
지원내용	• 공공도서관 사서보조 일자리 제공 • 음악연주에 소질이 있는 미취업발달장애인을 장애인식개선강사로 양성하여 일자리 제공 •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

출처: 서울특별시, 2022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양성사업은 2019년 최초 시행 시 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이후 11명 확대하여 3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기존 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던 것을 이후 확대하여 1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표 3-34> 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양성사업	20명 일자리 제공	⇨	33명 일자리 제공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20명 일자리 제공	⇨	110명 일자리 제공

출처: 서울특별시, 2022

②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 확대

서울시는 취업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의 취업률 제고 및 자립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18세 이상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며, 사업체 선정에서 직무배치, 직업훈련을 거쳐 취업에 연계된다. 직무지도원과 근로지원인을 파견하여 장애특성에 맞는 사업체에 배치하고 훈련하는 형식이다.

<표 3-35>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취업률 제고 및 자립생활 향상 도모
대상	18세 이상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방법 · 절차	• 사업체 선정 • 직무 · 환경분석 • 참여자 직무분석 ⇨ • 장애인 직무배치 • 직무지도원 파견 ⇨ • 직업훈련 (3~6개월) ⇨ • 취업 확정 • 미취업자 (타사업체 연계)
지원내용	• 장애 특성에 맞는 사업체에 배치 훈련(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파견) - 현장 직업훈련 100명 - 인턴십 40명 - 취업(선배치 후훈련) 90명

출처: 서울특별시, 2022

③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운영 다각화)

서울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사자 배치기준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신규아이템을 개발하여 시설에서 생산, 사업화가 가능한 저투자 고효율 사업아이템으로의 확대를 유도했다.

이외에 중증장애인의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투자비용 및 진입장벽이 낮고, 수익은 높아 장애인자립기반 확대에 적합한 사업 전환 품목을 집중 지원했다.

<표 3-36>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시설 종사자
지원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보조금 지원 - 종사자 배치기준 충족을 위해 부족인원에 대하여 단계적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아이템 개발 - 시설에서 생산, 사업화가 가능한 저투자 고효율 틈새 아이템 신규 개발 및 사업타당성 분석과 설명회를 통한 내실 있는 사업아이템 확대 유도 • 중증장애인의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업종 전환 지원 - 초기 투자비용 및 진입장벽이 낮고, 수익은 높아 장애인자립기반 확대에 적합한 사업 전환 품목을 집중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종사자가 기존의 630명에서 862명으로 확대되었다. 중증장애인의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업종 전환을 위한 업종전환 품목별 협의체 지원은 14건에서 34건으로 늘어났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규아이템 개발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은 기존 6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되었다.

<표 3-37>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배치	630명	⇨	862명
유망직종 업종전환 품목별 협의체 지원	14건	⇨	34건
직업재활시설 경영 컨설팅 지원	6개소	⇨	15개소

출처: 서울특별시, 2022

4) 문화·체육·여가 생활 및 가족 지원

(1) 문화체육여가생활 활성화

①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서울시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으로 보편적 관광향유권 보장과 관광도시 서울을 목표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개발, 서울다누림관광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내외국인 서비스 체계강화, 관광약자를 위한 여행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과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제 운영을 통해 관광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서울다누림차량(휠체어 리프트 버스) 운영과 외부기관 MOU 후속조치를 통한 유니버설 관광 협력체계 강화로 관광약자 유형별 관광코스를 개발 및 홍보하고 있다.

<표 3-38>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개요**

구분	내용
목적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으로 보편적 관광향유권 보장과 관광도시 서울 조성
대상	영유아, 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광약자
방법 · 절차	•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및 인증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내실화 -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제 운영 • 외부 협업을 통한 관광약자 유형별 다누림 관광코스 개발 및 홍보 강화 - 서울다누림차량(휠체어 리프트 버스) 운영을 통한 안전여행 지원 - 외부기관 MOU 후속조치를 통한 유니버설 관광 협력체계 강화 • 관광약자를 위한 여행활동 지원 확대 - 서울 거주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지원내용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및 인증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내실화 외부 협업을 통한 관광약자 유형별 다누림 관광코스 개발 및 홍보 강화 서울다누림관광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내외국인 서비스 체계강화 관광약자를 위한 여행활동 지원 확대

출처: 서울특별시, 2022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정원이 기존의 1,323명에서 1,46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당일과 숙박을 병행하던 단체여행 여행상품이 전원 숙박 개별 여행 상품으로 개선되었다.

경사로, 자동문 등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한 곳이 기존 44개소에서 63개소로 늘어나 관광시설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관광약자 여행활동 지원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1대에서 7대로 확대되었다.

이 외에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제를 운영하여 관광편의시설, 객실, 화장실 등의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인증하고 있다.

<표 3-39>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지원	1,323명 지원 단체여행 진행 당일, 숙박여행 병행	⇨	1,460명 지원(137명 확대) 개별 여행 진행 전원 숙박여행 상품 제공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44개소	⇨	63개소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 도입운영	1대	⇨	7대
무장애 관광시설 인증제 운영	-		314개소

출처: 서울특별시, 2022

②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육 활동

서울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육 활동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성 증대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사회 통합 도모를 위해 기존 시설의 무장애 리모델링과 무장애공간으로 조성된 서울어울림체육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생활체육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 실외 체육시설 등 기존 시설에 있던 단차제거, 휠체어 회전반경 확보, 스위치 등 편의시설 위치 조정 등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표 3-40>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 활동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성 증대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사회 통합 도모
대상	서울시민
지원내용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 가족, 친구, 동료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동호회 활동 지원 - 어울림대회 개최 지원, 통합체육교실 운영 • 실내체육관, 실외 체육시설 등 기존시설 무장애 리모델링 - 2개 자치구(동작, 광진) 3개소 시설개선 추진 - 단차제거, 화장실, 복도 휠체어 회전반경 확보, 스위치 등 편의시설 위치 조정

출처: 서울특별시, 2022

③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의 전당 '어울림플라자' 건립

서울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복지 ·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복지 · 문화시설인 '어울림플라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규모는 지상 5층에 지하 4층으로 연수시설과 장애인치과병원 등 장애인 특화시설과 도서관, 다목적홀, 공연장 등 문화체육시설,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임대시설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어울림플라자는 2018년에 설계공모를 시작해 2020년까지 설계과정을 거쳤으며, 2021년 건립 공사에 착수, 2022년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2024년 상반기 준공으로 계획되어 있다.

<표 3-4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의 전당 '어울림플라자' 건립 개요**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목적</td><td>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복지 · 문화시설 조성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역량강화,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구현</td></tr>
<tr><td>대상</td><td>서울시민</td></tr>
<tr><td>방법 · 절차</td><td>2018년 설계공모 ⇨ 2019년 설계 ⇨ 2020년 설계 ⇨ 2021년 착수 ⇨ 2022년 공사(예정)</td></tr>
<tr><td>지원내용</td><td>•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복지 · 문화시설 조성
- 위치 : 강서구 공항대로 489(등촌동)
- 규모 : 지상 5층, 지하 4층(대지면적 6,683㎡, 연면적 23,758㎡)
- 주요시설 : 장애인특화시설, 문화체육시설, 임대시설 등
<table>
<tr><th>구분</th><th>주요시설</th></tr>
<tr><td>장애인특화시설</td><td>연수시설(객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 장애인치과병원 등</td></tr>
<tr><td>문화체육시설</td><td>도서관, 다목적홀, 공연장, 수영장, 체육센터 등</td></tr>
<tr><td>임대시설</td><td>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td></tr>
</table></td></tr>
</table>

출처: 서울특별시, 2022

(2) 장애인 가족지원

①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확대 운영

서울시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가족이며, 수행기관은 장애인복지관 50개소, 총괄 역할을 맡는 거점복지관 4개소다.

3일 이내 개별가족 단위 여행 지원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거동불편장애인의 휴식을 지원하는 주돌봄자 2인 중에 활동보조인 또는 자원봉사자가 포함된다. 돌봄 휴가 등 유사사업과 중복참여가 제한되며, 돌봄비 및 휴가비간 전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3-42>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확대 운영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부담 경감으로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방법 · 절차	수행기관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신청 ·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애인과 가족에게 휴식 지원 및 개별여행 지원
지원내용	• 3일 이내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및 개별여행지원 - 거동불편장애인 휴식을 지원하는 주돌봄자 2인 중 활동보조인 또는 자원봉사자 포함 - 돌봄 휴가 등 유사사업의 중복참여 제한, 돌봄비 및 휴가비 간 전용 가능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의 운영기관이 기존 48개소에서 50개소로 늘어났으며, 기존 지원 인원 36명에서 39명으로 증원되었다. 중증 · 중복 뇌병변 장애인 가족 20% 할당제로 장애유형별 참여가 확대되었다.

<표 3-43>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확대 운영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운영기관 : 48개소 지원인원 : 36명	⇨	운영기관 : 50개소 지원인원 : 39명

출처: 서울특별시, 2022

②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전 자치구 확대 운영

서울시는 돌봄 부담을 진 중증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 심리적 부담 완화와 각 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 광역센터 1개소와 기초센터 2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서울시가 담당하는 광역센터에는 무급센터장 1명과 직원 6명, 자치구가 담당하는 기초센터에는 무급센터장 1명과 직원 3명의 인력이 있다. 광역센터는 기초센터 지원, 서비스 개발 · 보급, 종사자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며, 기초센터는 가족지원(긴급돌봄), 가족역량강화, 지역사회네트워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3-4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 자치구 확대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돌봄 부담을 진 중증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 심리적 부담 완화와 각 가족구성원 역량강화
대상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방법 · 절차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광역-서울시, 기초-자치구) - 광역센터 7명(무급센터장1, 직원6), 기초 4명이상(무급센터장1, 직원3)
지원내용	• 광역센터 : 기초센터 지원, 서비스 개발 · 보급, 종사자 교육, 네트워크 구축 • 기초센터 : 가족지원(긴급돌봄), 가족역량강화, 지역사회네트워크 등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는 센터 소재지에 따른 지역 편중성 해소와 근거리 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자치구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기초센터)를 확대하여 기존의 11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하였다.

<표 3-4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 자치구 확대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광역 · 기초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12개소	⇨	26개소

출처: 서울특별시, 2022

5)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강화

(1)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

①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원 확대 및 강화

서울시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및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센터를 추가로 확대했으며, 2021년 기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6개소에 운영보조금 140억 8천 6백만 원을 지원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기타 자립지원 서비스 등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42개 센터에서는 거주시설 연계사업이 운영되었으며, 2021년 기준 거주시설 장애인 699명을 대상으로 1,829회의 자립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70명의 탈시설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6>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원 확대 및 강화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지역장애인의 자립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지원
대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방법 · 절차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6개소에 운영보조금 지원(2022년 2개소 추가 공모 예정) • 보조금 지원으로 42개 센터에서 거주시설 연계사업 수행 - 거주시설 장애인 699명 대상 1,829회 자립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성과평가 실시
지원내용	•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기타 자립지원 서비스 등

주1) 2021년 기준

출처: 서울특별시, 2022

보조금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기존 45개소에서 56개소로 확대(2021년 기준, 종사인력 338명)되었으며, 2022년 2개소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2022년 기준 지원센터 전체 55개소 총 종사인력은 기존 180명에서 346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인상률이 반영되어 기존 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82%였던 인건비가 85%로 인상되었다.

<표 3-47>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원 확대 및 강화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미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45개소 지원	⇨	56개소 지원(2개소 추가 공모 예정)
지원센터 종사인력 확대	180명 지원	⇨	346명 지원(2022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82%	⇨	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85%1)

주1)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률 매년 반영

출처: 서울특별시, 2022

(2) 자립관련 기관·인력에 대한 지원

①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 운영 및 보수교육 지원

서울시는 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시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지원사이며, 매년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보수교육은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활동지원기관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각 자치구는 교육계획을 승인, 교육비를 교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10개소이며, 신규 2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양질의 활동지원사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실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실습기관 지정을 위해 현장실습기관(장애인) 확보, 실습 매뉴얼 마련 및 사전교육, 교육생과 현장실습 장애인 매칭, 현장실습 관리 및 일지 등 관련 서류 작성과 보관이 이루어진다. 실습기관의 교육과정은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이다. 기관별로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며, 신규교육 소요비용(표준교육 15만 원, 전문교육 12만 원)은 본인부담이다.

<표 3-48>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 운영 및 보수교육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이용 장애인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지원
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방법 · 절차	• 활동지원사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 교육기관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10개소 • 장애인활동지원 실습기관 지정 운영 - 법적근거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활동지원사), 시행규칙 별표3(교육과정)
지원내용	• 활동지원사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매년 실시 - 운영체계 ①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전문강사 풀 구축 · 제공 ⇨ ② 자치구: 교육계획 승인 및 교육비 교부 ⇨ ③ 활동지원기관: 교육계획 수립(강사, 교육내용, 교육생 모집), 결과 보고서, 정산서 제출 • 장애인활동지원 실습기관 지정 - 현장실습기관(장애인) 확보, 실습 매뉴얼 마련 및 사전교육, 교육생과 현장실습 장애인 매칭, 현장실습 관리 및 일지 등 관련 서류 작성 · 보관 - 교육과정 : 이론 및 실기교육(40시간), 현장실습(10시간) - 전담인력 인건비(기관별 2명) 및 운영비 지원 - 교 육 비 : 신규교육 소요비용은 본인부담(표준교육 15만 원, 전문교육 12만 원)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교육대상 규모는 2022년 기준 27,393명이다. 실습기관을 통해 교육기관을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문성 강화교육을 추가하여 활동지원기관 80개소의 3,200명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9>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 운영 및 보수교육 지원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	⇨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의무화
실습기관 지정 ⇒ 교육기관 확대	교육기관 10개소 전문성 강화교육 미실시	⇨	교육기관 12개소(신규 2개소 확대) 뇌병변장애인 전문교육 실시

출처: 서울특별시, 2022

②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운영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서울시는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자와 종사자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과정 제도화와 맞춤식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했다. 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 8시간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교육을 주관하고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 외에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특화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단체 또는 기관 공모를 통해 교육 주관기관을 정하는 방식이다. 연 6회 운영하며 1회당 8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표 3-50>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운영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자와 종사자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도화하여 개개인의 성향에 적합한 맞춤식 자립생활 지원
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방법 · 절차	• 활동지원사 역량강화 보수교육 - 교육주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특화 강좌 개설 운영 - 교육주관 :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단체 또는 기관 공모

구분	내용
지원내용	• 활동지원사 역량강화 보수교육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직원 중 사회복지사 연 8시간 보수교육 의무 실시 - 대상인원 : 350명 - 교육비 지원 : 1천 6백 8십만 원(1인당 48,000원) •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특화 강좌 개설 운영 - 6회 운영(1회 8시간)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센터 종사자 대상 주제별 전문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화강좌 또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개설 및 운영하고 있다.

<표 3-5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운영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IL센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미지원	⇨	센터 종사자 대상 주제별 전문교육 지원(희망수요 조사 예정)
특화강좌 개설 운영	미지원	⇨	맞춤형 컨설팅 지원(13개소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2022

3.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정책 환경

1) 정책 환경 관련 주요 이슈 : 이동권 및 접근권

2021년 12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출근시간 지하철 승하차를 통한 이동권 시위를 벌였다. 교통약자법의 개정안 통과 이후 전장연은 장애인 탈시설 · 이동권 · 교육권 등에 대한 예산 확보와 법률 개정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기하며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전국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다른 성별 · 세대에 비해 2,30대 남성계층에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수 없으며 시위의 책임소재 또한 장애인에게 있다는 응답이 뚜렷하게 높아, 젠더에 따른 여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슈	이슈 내용	장애인 측 요구사항
장애인 이동권 시위 지속	• 장애인 단체의 출근시간 지하철 승하차 이동권 시위 • 2021년 12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시작됨. • 개정안 통과 이후 장애인 단체 측은 탈시설 · 이동권 · 교육권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기, 시위가 지속됨.	• 지하철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공사 예산 편성 요구 • 시내저상버스 도입 가속화 촉구 • 마을 · 시외 · 고속버스 저상버스 도입 촉구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 확충 및 광역이동지원 • 2023년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4], 장애인 권리 4대 법률[5] 제 · 개정 요구 • 단계적 시행이 아닌 조속한 교체 요구(소상공인업체 무인정보단말기 교체에 정부지원 요구)
지하철 시위에 대한 상반된 여론[6]	• 젠더에 따른 여론 차 •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다른 성별 · 세대에 비해 2,30대 남성계층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남.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이슈	•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 보장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1년 6월 통과됨. • 장애인 단체는 공개된 시행령 초안의 '단계적 시행'에 대해 비판하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널리 보급되어 쓰이면서 장애인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자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 보장을 명시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1년 6월 통과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는 공개된 시행령 초안의 '단계적 시행'에 대해 현 무인정보단말기의 낮은 접근성을 비판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무인정보단말기 교체 지원 등 적극적 지원과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

4)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통한 이동권

5) 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 특수교육법

6) 서울신문, "이대남 절반 "시위 불편 못 참아"… 전장연 저격한 이준석에 동조" (2022.07.11.)

2) 정책 환경 관련 주요 이슈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후 도입된 활동지원 종합조사에서 기존 활동지원시간이 삭감된 것에 문제가 제기되자 임시조치로 3년간 삭감을 유예하는 산정특례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후 산정특례의 유효기간은 폐지되어 기존 급여가 유지되었으나, 장애인 단체 측은 내부장애 · 발달장애의 경우 받게 되는 낮은 급여와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활동지원 종합조사의 산정 기준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65세가 된 장애인은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었으나 2020년 12월 2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확보 문제와 신청자격 기준의 모호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수가는 활동지원 중개기관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형태로, 활동지원사의 임금은 5대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제공된다. 포괄적 형태의 수가로 인해 기관마다 상이한 활동지원사의 처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슈	이슈 내용	장애인 측 요구사항
활동지원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논란	• 활동지원 종합조사에서 삭감된 시간에 대해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가 이뤄짐. • 장애인 단체는 내부장애 · 발달장애의 적은 급여,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등에 문제를 제기, 활동지원 종합조사의 산정 기준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임.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과 장기요양급여 시간 차이 100% 지원 • 신장장애인 이동체계 및 지원 마련 •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4년간 연 240시간 지원(65세 이상 포함) • 활동지원서비스 수가에 법정 수당과 기관 운영비 전액 반영 •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결정위원회' 구성 •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분리 산출 · 지급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서비스 전환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갖게 됨. • 지자체의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구체적이지 않은 신청자격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개선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수가는 활동지원 중개기관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형태로, 활동지원사의 임금은 5대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제공됨. • 포괄적 형태의 수가로 인해 기관마다 상이한 활동지원사의 처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3) 정책 환경 관련 주요 이슈 : 정신적 장애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근거가 되었던 장애인 복지법 15조 삭제 안건이 2021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 유예를 두고 통과되어,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복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과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지역 인프라 점검 등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인구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장애인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약 15~20년 이른 시기에 신체적 및 기능적 노화를 경험하고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장애 및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노년기를 맞이할 위험성이 높다. 이에 발달장애인 돌봄 기관들은 발달장애인 조기 노화에 대한 전문 의료 진료와 돌봄채널 다양화를 통해 24시간 보호를 하는 등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살 및 발달장애인자녀 살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단체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6일 국회는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였다. 결의안은 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수립과 이행, 발달장애인과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슈	이슈 내용	장애인 측 요구사항
정신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적용	• 장애인 복지법 15조 삭제 안건이 통과되어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게 됨. • 개정안 시행을 위해 정신장애인의 장애인 복지 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 정신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탈원화 · 탈시설 로드맵 재설계 •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개인별 자립지원 체계 확립 • 성인 재가 발달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및 평생교육 지원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권익옹호 강화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대응	• 서울시 발달장애인 인구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장애인 고령화 또한 진행 중임. •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장애 및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노년기를 맞이할 위험성이 높아 관련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음.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논의	•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살 및 발달장애인자녀 살해 사건 발생이 연속적으로 발생함. • 장애인부모단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요구함. • 국회,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함.	

4) 정책 환경 관련 주요 이슈 : 탈시설 및 주거지원

정부가 2021년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명시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2022년부터 3년 간 운영된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전국 10개 지자체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 일자리 · 건강 등 복합 서비스 지원 모형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20명의 장애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6월 21일「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시설장애인 부모단체 · 시설협회 측의 찬반시위가 있었으며, 장애인 단체는 통과된 조례안의 내용 중 시설 측의 의견을 반영해 탈시설 적용대상 범위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과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된 것을 비판하였다.

탈시설 시범사업에 따른 탈시설화가 진행 중이지만 수요에 비해 적은 주택공급과 지역의 주택 인프라 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역 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서울시가 2018년부터 시행한 주택지원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모델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슈	이슈 내용	장애인 측 요구사항
서울시 탈시설 조례를 둘러싼 갈등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 •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와 시설장애인 부모 단체 · 시설협회 측의 찬반시위가 계속됨. • 장애인 단체는 통과된 조례안의 내용 중 탈시설 적용대상 범위를 한정한 것을 비판함.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확대, 운영지원 강화 • 정신질환 · 정신장애 당사자 탈원화를 위한 전환 서비스 지원사업 실시 • 시설입소 방지를 위한 재가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강화 • 비수급 탈시설 장애인 생계비 지원 확대 • 공동생활가정 탈시설 추진 • 인권침해, 시설비리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 지원 이행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행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2022년부터 3년 간 실시됨. • 선정된 전국 10개 지자체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복합 서비스 지원 모형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20명의 장애인을 지원할 예정임.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요구	• 탈시설 시범사업에 따른 탈시설화가 진행 중이지만 주택공급과 지역 주택 인프라 부족 문제가 제기됨. •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역 주택의 충분한 공급, 주택지원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서울시의 지원주택모델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5) 정책 환경 관련 주요 이슈 : 고용ㆍ일자리

2020년 7월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맞춤형 3대 직무(권리옹호, 문화예술, 인권교육)를 통해 일반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든 일자리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취업박람회가 열리는 등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지만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7.2%이며, '보호자는 취업을 희망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는 15.6%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는 당사자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자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는 18.1%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혹은 보호자가 판단한 당사자 의사보다 당사자의 취업희망의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일자리가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한정된 직종에 머물면서 고용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 개발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업훈련 및 공공일자리 확대와 ICT기술을 결합한 장애인 직무 개발이 논의되고 있다.

이슈	이슈 내용	장애인 측 요구사항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 서울시는 최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일자리를 위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최초로 도입함.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모델 개발 및 지원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연속적 · 안정적 일자리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위탁기관 전담인력 확대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보 • 발달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확대(인턴, 공공일자리)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취업희망의사	•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지만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 7.2% • 보호자는 취업을 희망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15.6%, • 보호자는 당사자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자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18.1% • 조사결과,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판단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취업희망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일자리 · 직무 개발 확대	•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 개발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대안으로 직업훈련 및 공공일자리 확대와 ICT기술을 결합한 장애인 직무 개발이 논의되고 있음.	

6) 정책 환경 관련 주요 이슈 : 소득안정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장애인 연금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일괄적으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실업급여, 기초연금과 중복수급이 불가능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늘면서 별도의 소득보조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장애인 고용이 축소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은 늘어나 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방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설하였으나 장애인 단체 측은 코로나19 등 긴급재난상황에 취약한 장애인의 소득 보조를 촉구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낮다고 평가된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에 해당되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18년부터 기준노동자와 견주어 생산력이 70%이상이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는 비율은 늘지 않아 생산력을 판단하는 과정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슈	이슈 내용	장애인 측 요구사항
장애인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하고 있음. • 실업급여, 기초연금과 중복수급이 불가능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늘면서 별도의 소득보조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음.	• 장애인 대상 별도 재난지원금 지급 • 저소득 생계곤란 및 중증 장애인 대상 긴급 소득보장 별도 지원금 지급 • 서울형 중증장애인 생활수당 도입(월 10만 원) • 정부의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임금 보조
긴급재난상황 장애인 소득 보조	• 코로나 19의 여파로 장애인 고용이 축소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늘어나 장애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장애인 고용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설함. • 장애인 단체 측은 긴급재난상황에 취약한 장애인의 소득 보조를 요구함.	
장애인 임금 개선	• 근로능력이 낮다고 평가된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의 적용을 받음. • 2018년부터 기준노동자와 견주어 생산력이 70%이상이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비율은 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7) 정책 환경 관련 주요 이슈 : 의사소통 및 사회활동

2018년 시행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으로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애인활동보조시간이 차감되는 형식이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간 자체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소외에 대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등 성인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대 및 운영방식과 목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의사소통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기기를 활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120여 곳의 AAC존을 만들었지만 AAC와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홍보와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슈	이슈 내용	장애인 측 요구사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으로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함.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애인활동보조 시간이 차감되며 서비스 제공 시간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강화 ▪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주간활동 프로그램 개발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운영 개선안 마련 ▪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시간 보장 및 주말 서비스 등 유연한 운영 도입 ▪ 서울시 전 자치구에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 서울특별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면 개정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 학령기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성인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대 및 운영방식과 목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보완대체의사소통(AAC) 확대	▪ 중증장애인이 의사소통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기기를 활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120여 곳의 AAC존을 만듦. ▪ AAC와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홍보와 지원사업의 지속 논의가 나오고 있음.	

8) 정책 환경 관련 주요 이슈 : 의료·건강·긴급돌봄

중증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에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 부족과 지역마다 다른 인프라로 인해 저조한 사업 참여율을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개정안은 건강주치의 적용 대상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코로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높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경우 확진 후 정부의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워 감염되면 위중증 환자가 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복지관이 휴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장애인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팬데믹 시대 장애인을 위한 예방·치료와 일상생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긴급돌봄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감염병 사태 등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수요가 늘면서 활동지원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매칭되거나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장비 부족 등 인력과 시설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슈	이슈 내용	장애인 측 요구사항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 의료기관의 참여율 부족과 지역마다 다른 인프라로 인해 중증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참여율이 저조함. • 개선방안으로 발의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소규모 의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서울시 산하병원 권역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 서울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2개소 추가 설치 • 장애인 진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원 설립 • 펜데믹 시대 장애인거주시설의 '긴급탈시설' 이행 • 방문 PCR·예방접종 및 이동지원 시행
팬데믹 시대 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높은 중증률과 기존 서비스 중지로 감염병 사태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예방·치료와 일상생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음.	
긴급돌봄서비스 보완	•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사업을 시행함. • 수요가 늘면서 활동지원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매칭되거나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장비가 부족한 등 인력과 시설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9) 정책 환경 관련 주요 이슈 : 문화·체육·관광

2020년 12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법률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및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시행되었으며, 정부는 2022년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국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해 전국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민간시설인 멀티플렉스 영화관에도 베리어프리 영화상영 및 상영환경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관광 약자(장애인, 노인, 영유아 동반가족 등)의 제약 없는 여행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무장애 관광 교통수단 도입과 관광지와 숙박, 식음료, 쇼핑 등 편의시설과의 연계 강화를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고 관광편의시설을 대상으로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지원, 공사를 한 시설을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업소'로 선정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슈	이슈 내용	장애인 측 요구사항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정부는 2022년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 방향을 제시할 예정임.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 및 전문성 강화 • 장애예술인 지속가능한 일자리 직무 개발 • 장애인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 • 서울시 장애인버스 확대 • 저상시티투어 버스 도입 등 무장애 관광 활성화
장애인 문화접근성 개선	• 정부는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 전국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장애인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승소, 민간 영화관에서도 베리어프리 영화상영 및 상영환경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무장애 관광 개발 및 지원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관광 약자의 제약 없는 여행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무장애 관광 교통수단 도입과 관광지와 편의시설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함. • 서울시는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제를 도입, 관광편의시설을 대상으로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지원하고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업소'로 선정하고 있음. 각 지자체도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코스를 개발 중에 있음.	

10) 정책 환경 관련 주요 이슈 : 전달체계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에게 보건의료, 주거, 소득(일자리), 사회참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책 모델'이 시행되었지만 장애인 측은 돌봄 위주, 시설 중심 정책이라 비판하며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활동보조지원과 주택공급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발달장애인의 재활 · 치료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센터와 직업재활센터 등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문제행동 치료 지원을 위한 거점병원 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전국 권역별 확대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예산확보의 미비함으로 실질적으로 추진된 서비스가 적어 비판을 받았다.

2022년 5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장애인단체측은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비용추계가 따로 없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슈	이슈 내용	장애인 측 요구사항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커뮤니티 케어) 시행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책 모델'이 시행됨. • 장애인 측은 돌봄 위주, 시설 중심 정책이라 비판하며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지원과 주택공급 확대 등을 요구함.	• 발달 ·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 체계 보장 • 서울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시범사업 시행 • 서울시 발달장애인 전담부서 설치 •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권역별 센터 도입 • 발달장애인 실태 전수조사 실시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체계 정책 비판	• 2018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목적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발표됨. •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보육교육서비스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훈련센터 및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확대,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등 내용을 발표함. • 예산확보의 미비함으로 시행의 부진함이 비판받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년 5월 통과되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생김. • 장애인단체 측은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비용추계가 따로 없어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제2절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정책 이행성과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2018.9.26. 일부개정)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 5조 2항은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TF팀을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운영했으며, 2018년 8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민관합동 TF팀은 5대 분야 10개 정책과제와 26개 단위사업을 발굴 및 검토하여 계획안을 구성하고, 수립된 정책과제들을 2022년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의 이행성과는 계획을 수립한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세부사업 내 세부사업 51개의 추진목표치에 실제 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이행완료', '이행 중', '확인불가'로 명시했다.[7] 추진목표치는 수정된 목표치를 반영했으며, 기존 목표치와 비교하여 수정된 목표치가 얼마나 증감되었는지 표시했다. 소요예산은 이 기간 동안 확보한 사업예산의 총 합산으로 분석했다.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핵심과제 '일상생활 지원 강화'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하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홀로서기가 가능한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활동지원서비스 강화'와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설정하고 각각 4개의 세부사업과 2개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정책과제 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의 세부사업 '1.1.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24시간, 중고령, 탈시설 등)'에서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자 장기요양 전환자 활동지원시간이 일부 감소한 장애인에게 월 100~320시간 보존급여를 지원하고 시비를 추가 지원했으며, 사업은 법률개정

7) 본 연구에서는 제1기(2018~2022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세부사업(26개)를 단위사업으로, 세세부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활용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세부사업은 제1기(2018~2022)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총 26개 세부사업의 하위 세세부사업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에 의거,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수정된 목표치에 따라 이행 중이다. 또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은 대상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였고, 1인당 연간 147백만 원의 예산이 드는 것을 사유로 예산액에 맞춰 목표치를 수정하여 이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탈시설 장애인에게 퇴소 후 1년 동안 30시간 지원하던 것을 22년까지 퇴소 후 3년 동안 120시간 지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2년 예산을 확보하여 목표치를 기존보다 높여 이행 중이다.

세부사업 '1.2. 성인 최중증장애인(발달 · 뇌병변 장애인 등) 낮활동 지원 확대' 에서 최중증 장애인의 낮활동 운영은 기존 목표치를 수정해 이행 중이다. 최중증 장애인의 낮활동 지원 운영기관을 10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하고 이용인 수를 40명에서 96명으로 늘렸으며, 낮활동 전담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소요예산 중 21년도와 22년도 예산은 전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에 낮활동 종사자 인건비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순수 사업비만 산정했다. 전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은 설치부지 확보 지연을 사유로 이행 중이며, 2022년에 전 자치구에 설치예정이다. 중고령 장애인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도 이행 중이다.

'1.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는 이용인원과 예산을 2018년도 대비 확대했다. '1.4.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는 2022년도 예산확보 범위에 따라 목표치를 수정해 이행 중이며, 만 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시간 확대는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여 이행 완료되었다.

[정책과제 2]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은 세부사업내용에 따라 '2.1.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은 '2.1.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으로, '2.2. 장애인 운동 컨설팅 전담요원 양성 및 배치'는 '2.2.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1.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은 운영기관을 서울 남부의 보라매병원과 서울 북부의 서울재활병원 2개소로 확대하여 이행 완료되었다. 반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은 민간의료기관의 미비한 참여를 사유로 이행 중이다.

'2.2.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은 기본계획 추진목표를 초과달성하여 목표치를 수정했으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늘리고 23년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사업 안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표 3-52> 일상생활 지원 강화 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대상	내용	소요예산1)	이행수준 (이행률%)2)	기존 목표치 대비증감
핵심과제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정책과제 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1.1.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24시간, 중고령, 탈시설 등)					
(1.1.1) 시비추가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 추가 지원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자 중 기존 시비추가 200시간 이상인자	월 100~320시간 보전급여 지원 시비추가 지원	2,080	이행 중 (11%)	▽(27%)
(1.1.2)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최중증 장애인 중 자치구 추천자	월 350시간 시비추가 (200명 지원)	36,988	이행 중 (94%)	▽(9%)
(1.1.3) 탈시설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서울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퇴소 후 3년 120시간 지원	12,069	이행 중 (66%)	▲(61%)
1.2. 성인 최중증장애인(발달 · 뇌병변 장애인 등) 낮활동 지원 확대					
(1.2.1)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운영	중증 · 중복 뇌병변 장애인	운영기관 23개소 이용인수 96명 낮활동 전담인력 근무여건 개선	4,923	이행 중 (75%)	▽(9%)
(1.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도전행동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25개소 전 자치구 설치	49,546	이행 중 (98%)	▲(8%)
(1.2.3) 중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중고령 장애인	중고령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62	이행 중 (40%)	-
1.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1.3.1)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이용인원 2만 4천명 목표	1,622	이행 중 (81%)	-
1.4.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1.4.1) 신생아 양육서비스 시간 확대	임신 · 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3)를 양육하는 서울시 등록 여성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여성장애인의 양육지원을 위한 홈헬퍼 파견 월 120시간	7,950	이행 중 (91%)	▽(8%)
(1.4.2) 만 4세미만 서비스 시간 확대		여성장애인의 양육지원을 위한 홈헬퍼 파견 월 90시간		이행완료 (103%)	▽(29%)
[정책과제 2]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2.1.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2.1.1) 지역장애인보건의료 센터 운영	서울시 등록 장애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보라매병원(서울시 남부) 서울재활병원(서울시 북부)	4,313	이행완료(100 %)	-
(2.1.2)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운영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추진(서울의료원, 국립재활원)	114	이행 중 (64%)	▽(8%)
2.2.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2.2.1)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	서울시 등록 장애인	장애인스포츠 상담 및 체육활동 지도(109명)	15,798	이행 중 (86%)('21)	▲(619%)

주 1) 2018~2022년 예산 합계. 예외일 경우 별도 표기.
주 2) 2018~2022년 6월까지 이행률. 예외일 경우 별도 표기.
주 3)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예외 인정.
출처: 서울시 내부 자료, 2022

2.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핵심과제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는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 전세보증금 지원, 맞춤형 주택 등 새로운 주거모델 공급 등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이동 · 의사소통 편의 보장'과 '신거주모형 개발 및 주거지원'을 설정하고 각각 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정책과제1] 이동 · 의사소통 편의 보장'의 세부사업 '1.1.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에서는 총 택시 결제액의 75%를 지원해주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대상을 기존의 중증 시각 · 신장장애인에서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했으며, 택시 이용요금의 지원율도 65%에서 75%로 인상했다. 목표치인 이용인원 도달까지는 이행 중이다.

세부사업 '1.2. 뇌병변 · 발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해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1개소를 설치했으며,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서비스와 장애인 의사소통에 대한 홍보 및 정보플랫폼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사업 '1.3.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은 취업활동 및 자기계발 관련 활동에 대해 전문문자통역사가 현장 지원 및 원격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대상을 청년 청각장애인(20~29세) 에서 전연령 청각장애인으로 확대했으며 상향조정한 목표치를 이행 완료했다.

'[정책과제 2] 신거주모형 개발 및 주거지원'의 세부사업 '2.1. 장애인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 및 지원주택 확대'는 신 거주모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여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를 결합 지원했다. 신 거주모형 개발은 목표를 수정하여 이행했으며, 장애인지원주택 공급은 기존보다 목표치를 상향하여 이행 중이다.

세부사업 2.2. '저소득 중증장애인 임대 · 전세 주택 제공 확대'는 영구/매입임대주택 공급 1순위로 장애인 가구를 두고 있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기존의 1억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었으며, 목표치인 장애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호수와 전세보증금 지원 세대 수는 이행 중이다.

세부사업 2.3.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 확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행 중이다.

<표 3-53>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대상	내용	소요예산1)	이행수준 (이행률%)2)	기존 목표치 대비 증감
핵심과제 2: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정책과제 1] 이동 · 의사소통 편의 보장					
1.1.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					
(1.1.1)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	서울시민으로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	장애인 바우처 택시 대상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 총 결제액의 75% 지원 연 이용인원 : 4,000명('18) → 13,228명('22)	21,320	이행 중 (67%)	-
1.2. 뇌병변 · 발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1.2.1)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 운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는 장애인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서비스 제공, 홍보 및 정보플랫폼 구축, 서비스 확대 및 지원체계 마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1개소)	1,134	이행완료 (100%)	-
1.3.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1.3.1)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서울시 등록 청각장애인	대상 전 연령 확대, 전문 문자통역사를 통해 취업활동 등 현장 지원 및 원격 지원	400	이행완료 (100%)('21)	▲(36%)
[정책과제 2] 신거주모형 개발 및 주거지원					
2.1. 장애인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 및 지원주택 확대					
(2.1.1) 신거주모형 개발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시 지원 시설 거주 장애인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결합 지원(1호)	120	이행완료 (100%)	▽(50%)
(2.1.2) 장애인지원주택 공급		158호 공급('21) (164명 지원)	16,338	이행 중 (74%)	▲(13%)
2.2. 저소득 중증장애인 임대 · 전세 주택 제공 확대					
(2.2.1) 장애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호수	서울시 등록 장애인	영구/매입임대주택 입주 1순위, 공동생활가정 45.3% 장애인 공급	sh공사	이행 중 (35%)('21)	-
(2.2.2) 전세보증금 지원 확대	서울시 등록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지원 1억 7천만 원 → 1억 8천만 원 상향	19,000	이행 중 (79%)('21)	-
2.3.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 확대					
(2.3.1)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	서울시 등록 저소득 중증 장애인가구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총 706가구 지원)	2,940	이행 중 (74%)	▲(2%)

주 1) 2018~2022년 예산 합계. 예외일 경우 별도 표기.

주 2) 2018~2022년 6월까지 이행률. 예외일 경우 별도 표기.

출처: 서울시 내부 자료, 2022

3.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핵심과제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는 자립생활의 기초인 소득지원 및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고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생활안정 지원'과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설정했으며, 각각 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정책과제 1] 생활안정 지원'의 세부사업 1.1.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은 만 15세 이상 39세 미만 중증장애인 중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에 월정액과 이자를 지원하여 자금형성을 돕고 있는 사업으로, 이행 중이다.

세부사업 1.2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에서 서울시는 2021년 5월 부양의무자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과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급여수급자가 대폭 증가했고, 사업은 이행완료 되었다.

세부사업 1.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는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시설거주 수급자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장애아동수당을 기존 월 3만 원에서 월 4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

'[정책과제 2]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의 세부사업 2.1. '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는 만18세 이상 미취업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애로사항과 사업효과성을 감안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를 제외하고 목표치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했으며,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을 제외한 두 사업은 이행 중이다.

세부사업 2.2.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 확대'는 18세 이상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과 같이 파견하여 장애 특성에 맞는 사업체에 배치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업체 발굴 난항과 센터인력 부족 등 현실적 제약사항이 발생하여 세부추진목표를 모두 기존보다 목표치를 하향하고 이행 중이다.

세부사업 2.3.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다각화'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사자 보조금 지원 및 신규아이템 개발, 중증장애인의 유망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존보다 목표치를 하향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보조금 지원'과 기존 목표치를 이행한 '중증장애인의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업종 전환 지원'은 이행 완료되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 아이템 개발'은 이행 중이다.

<표 3-54>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대상	내용	소요예산1)	이행수준 (이행률%)2)	기존 목표치 대비 증감
핵심과제 3: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정책과제 1] 생활안정 지원					
1.1.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1.1.1)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이룸통장)	만 15세 이상 39세 미만 중증장애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10·15·20만 원 선택 본인저축액에 월 15만 원 정액 지원 3년 적립 시 만기적립금 및 이자 지원	15,859	이행 중 (77%)('21)	-
1.2.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1.2.1)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 135백만 원 이하인 서울 시민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71,088	이행완료 (113%)	▲ (1606%)
1.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1.3.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시설거주 수급자 중증장애아동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인상 월 3만 원 → 월 4만 원	70,529	이행완료 (103%)	-
[정책과제 2]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2.1. 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2.1.1)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지원사업	만 18세 이상 미취업 발달장애인	공공도서관 사서보조 일자리 제공	4,744	이행 중 (94%)	▽(79%)
(2.1.2)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		음악연주에 소질 있는 미취업발달장애인을 장애인식개선강사로 양성		이행완료 (100%)('21)	▽(79%)
(2.1.3)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 배치	3,640	이행 중 (90%)	-
2.2. 중증장애인 현장 중심 직업훈련 지원 확대					
(2.2.1) 발달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취업	18세 이상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장애 특성에 맞는 사업체에 배치 훈련(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파견)	4,700	이행 중 (87%)('21)	▽(26%)
(2.2.2) 발달장애인 취업을 위한 직무지도원 양성		발달장애인 전문 지도원(직무지도원) 운영	1,289	이행 중 (73%)('21)	▽(70%)
2.3.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다각화(인력 충원)					
(2.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보조금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보조금 지원 630명 → 862명 확대('21)	206,244	이행완료 (105%)('21)	▽(9%)
(2.3.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아이템 개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아이템 개발 6개소 → 8개소('21)	152	이행 중 (74%)('21)	-
(2.3.3) 중증장애인의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업종 전환 지원		중증장애인의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업종 전환 지원 14개소 → 34개소('21)	410	이행완료 (106%)('21)	-

주 1) 2018~2022년 예산 합계. 예외일 경우 별도 표기.
주 2) 2018~2022년 6월까지 이행률. 예외일 경우 별도 표기.
출처: 서울시 내부 자료, 2022

4. 문화、체육、여가 생활 및 가족 지원

핵심과제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및 가족 지원'은 문화 · 여가생활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여 가정을 기반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 여가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활성화'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설정했으며, 각각 3개의 세부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정책과제 1]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활성화의 세부사업 1.1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은 영유아, 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 목표를 세웠으나, 예산 삭감 및 코로나 19를 사유로 목표치를 낮췄으며 그 중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시설 인증제 운영',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 도입 · 운영', '무장애 관광 포털 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은 이행 완료되었다. '무장애 관광 콘텐츠 확충',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지원'은 이행 중이며, '관광약자 사회적 인식개선'은 기존 목표치 부재로 이행 확인이 불가했다.

세부사업 1.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육 활동'에서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는 2022년에 착공 예정이며, 무장애 리모델링은 단차제거, 화장실, 복도 휠체어 회전반경 확보, 스위치 등 편의시설 위치 조정 등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이행 중이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동호회 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어울림 대회를 개최하여 이행을 완료했다.

세부사업 1.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의 전당 어울림플라자 조성'은 2021년에 어울림플라자 공사에 착수하여 목표치를 이행 완료했다.

[정책과제 2] '장애인 가족 지원'의 세부사업 2.1. '장애인 돌봄 가족 휴식제 확대 운영'에선 대한민국 국적 및 서울시 거주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휴가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프로그램 운영기관과 지원인원을 확대해 이행 중이다.

세부사업 2.2.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전 자치구 확대 운영' 은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가족센터를 전 자치구에 확대 ·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업 이행을 완료했다.

<표 3-55> **문화·체육·여가 생활 및 가족 지원 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대상	내용	소요예산[1]	이행수준 (이행률%)[2]	기존 목표치대비 증감
핵심과제 4: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및 가족 지원					
[정책과제 1]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활성화					
1.1.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1.1.1)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영유아, 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광약자	44개소 → 63개소('21)	2,141	이행완료 (112%)('21)	▽(75%)
(1.1.2) 무장애 관광시설 인증제 운영		314개소 인증('21)	951	이행완료 (104%)('21)	-
(1.1.3)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 도입운영		1대 → 7대('21)	2,071	이행완료 (173%)('21)	-
(1.1.4) 무장애 관광 콘텐츠 확충		관광약자 유형별 관광지 및 편의시설 콘텐츠 확충 및 품질관리	70	이행 중 (12%)	-
(1.1.5) 무장애 관광 포털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		• 다누림 센터개관 • 홈페이지(영문)구축 • 포털운영 기능고도화 • 관광정보 DB 고도화 • 상담 총 1,858건	2,203	이행완료	-
(1.1.6) 관광약자 사회적 인식 개선		• 매뉴얼제작 • 매뉴얼 영상 제작 • 가이드북 개정 • 홍보영상 제작 • 매뉴얼 가이드 지속보급	1,326	확인불가	
(1.1.7) 관광취약계층 여행 활동지원		개별 여행 진행 및 전원 숙박여행 상품 제공 (1,323명 → 1,460명)	1,597	이행 중 (92%)('21)	▽(37%)
1.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육 활동					
(1.2.1)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	서울 시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29,101	이행완료 (100%)	-
(1.2.2) 무장애 리모델링		단차제거, 화장실, 복도 휠체어 회전반경 확보, 스위치 등 편의시설 위치 조정(총 34건)		이행 중 (52%)	-
(1.2.3) 생활체육 활성화		동호회 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어울림 대회 개최		이행완료 (213%)	-
1.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의 전당 '어울림플라자' 건립					
(1.3.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의 전당 '어울림플라자' 조성	서울 시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복자문화시설 조성	20,774	이행완료 (100%)	▽
[정책과제 2] 장애인 가족 지원					
2.1. 장애인 돌봄 가족 휴식제 확대 운영					
(2.1.1)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확대 운영	대한민국 국적 및 서울시 거주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운영기관: 48개소 → 50개소	3,117	이행 중 (92%)('21)	-
2.2.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전 자치구 확대 운영					
(2.2.1) 광역 · 기초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12개소 → 26개소	12,579	이행완료 (100%)	▽(4%)

주 1) 2018~2022년 예산 합계. 예외일 경우 별도 표기.

주 2) 2018~2022년 6월까지 이행률. 예외일 경우 별도 표기.

출처: 서울시 내부 자료, 2022

5.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강화

핵심과제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강화'는 정보교류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다양화하여 지역사회 내 자조적인 자립생활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와 '자립관련 기관 · 인력에 대한 지원'을 설정했으며, 각각 1개의 세부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정책과제 1]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의 세부사업 1.1.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원 확대 및 강화'는 보조금 지원센터를 22년까지 58개소로 확대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목표치를 이행했으며, 센터 당 종사인력을 확대하는 사업을 이행 중이다.

[정책과제 2] '자립관련 기관 · 인력에 대한 지원'의 세부사업 2.1.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지원 및 실습기관 지정 운영'은 사업 내용에 따라 명칭을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 운영 및 보수교육 지원'으로 변경했으며, 활동지원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대상인원 목표치를 이행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실습기관 지정은 22년까지 12개소를 이행했으며, 교육기관 확대 및 교육 전문화 우선 추진을 사유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이행 중이다.

세부사업 2.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운영자 및 인력 역량 강화'는 자립생활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 8시간 보수교육을 의무실시하고, 자립생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특화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의 어려움을 사유로 이행 중이다.

<표 3-56>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강화 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대상	내용	소요예산[1]	이행수준 (이행률%)[2]	기존 목표치 대비 증감
핵심과제 5: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강화					
[정책과제 1]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					
1.1.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원 확대 및 강화					
(1.1.1) 미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45개소 → 58개소	4,470	이행완료 (106%)('21)	-
(1.1.2) 지원센터 종사 인력 확대		180명 → 338명('21)	11,214	이행 중 (92%)('21)	-
(1.1.3)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82% → 85%	3,989	이행완료 (100%)('21)	-
[정책과제 2] 자립관련 기관·인력에 대한 지원					
2.1.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 운영 및 보수교육 지원					
(2.1.1)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서울시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의무화	비예산	이행완료 (147%)	-
(2.1.2) 실습기관 지정 →교육기관 확대		교육기관 10개소 → 12개소 전문성 강화교육 실시	비예산	이행 중 (57%)	▲(50%)
2.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운영자 및 인력 역량 강화					
(2.2.1) IL센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IL센터 사회복지사	연 8시간 보수교육 의무실시	-	이행 중 (23%)	-
(2.2.2) 특화강좌 개설 운영	IL센터 종사자	맞춤형 컨설팅 13개소 지원	90	이행 중 (9%)	-

주 1) 2018~2022년 예산 합계. 예외일 경우 별도 표기.

주 2) 2018~2022년 6월까지 이행률. 예외일 경우 별도 표기.

출처: 서울시 내부 자료, 2022

6. 종합 이행성과

2018년 수립 이후 2022년 6월까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의 이행성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목표치를 이행 완료한 사업은 51개의 세부사업 중 21개이며, '핵심과제 1 일상생활 지원 강화'에서 2개, '핵심과제 2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에서 3개, '핵심과제 3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에서 5개, '핵심과제 4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및 가족지원'에서 8개, '핵심과제 5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강화' 에서 3개의 세부사업이 이행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 중인 사업은 51개의 세부사업 중 29개로, '핵심과제 1 일상생활 지원 강화'에서 10개, '핵심과제 2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에서 5개, '핵심과제 3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에서 6개, '핵심과제 4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및 가족지원'에서 4개, '핵심과제 5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강화'에서 4개의 세부사업이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불가 사업은 '핵심과제 4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및 가족지원'에서 1개로 확인되었다.

기존 목표치를 상향한 단위 사업은 총 8개로, '핵심과제 1 일상생활 지원 강화'에서 3개, '핵심과제 2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에서 3개, '핵심과제 3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에서 1개, '핵심과제 5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강화' 에서 1개의 세부사업이 기존 목표치보다 목표치를 상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목표치를 하향한 단위 사업은 총 17개로, '핵심과제 1 일상생활 지원 강화'에서 6개, '핵심과제 2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에서 1개, '핵심과제 3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에서 6개, '핵심과제 4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및 가족지원'에서 4개의 세부사업이 기존 목표치보다 목표치를 하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시 목표했던 5대 분야 10개 정책과제의 51개 세부사업 중 이행완료 사업 21개, 이행 중 사업 29개, 확인불가 사업은 1개이며, 기존 목표치보다 상향하여 목표치를 수정한 사업은 8개, 기존 목표치보다 하향하여 목표치를 수정한 사업은 17개로 나타났다.

<표 3-57> 종합 이행성과 현황

구분		이행 중(▲1)▽2))	이행완료	확인불가
핵심과제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정책과제 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1.1.1) 시비추가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 추가 지원▽	(1.4.2) 만 4세미만 서비스 시간 확대(월 90시간)▽	-
		(1.1.2)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200명 지원)▽		
		(1.1.3)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2.1)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운영(운영기관 23개소)▽		
		(1.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전 자치구 설치)▲		
		(1.2.3) 중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1.3.1)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1.4.1) 신생아 양육서비스 시간 확대(월 120시간)▽		
	[정책과제 2]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2.1.2)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2개소)▽	(2.1.1)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2개소)	-
		(2.2.1)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핵심과제 2: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정책과제 1] 이동 · 의사소통 편의 보장	(1.1.1)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	(1.2.1)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 운영(1개소)	-
			(1.3.1)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정책과제 2] 신거주모형 개발 및 주거지원	(2.1.2) 장애인지원주택 공급(158호)▲	(2.1.1) 신거주모형 개발(1호)▽	-
		(2.2.1) 장애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호수		
		(2.2.2) 전세보증금 지원 확대		
		(2.3.1)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총 706가구 지원)▲		
핵심과제 3: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정책과제 1] 생활안정 지원	(1.1.1)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이룸통장)	(1.2.1)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
			(1.3.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정책과제 2]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2.1.1)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지원사업▽	(2.1.2)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
		(2.1.3)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2.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보조금 지원(839명)▽	
		(2.2.1) 발달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취업▽	(2.3.3) 중증장애인의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업종 전환 지원(34개소)	
		(2.2.2) 발달장애인 취업을 위한 직무지도원 양성▽		
		(2.3.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아이템 개발(8개소)▽		

구분		이행 중(▲1)▽2))	이행완료	확인불가
핵심과제 4: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및 가족 지원	[정책과제 1]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활성화	(1.1.4) 무장애 관광 콘텐츠 확충	(1.1.1)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63개소)▽	(1.1.6) 관광약자 사회적 인식개선
			(1.1.2) 무장애 관광시설 인증제 운영(314개소)	
			(1.1.3)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 도입 · 운영(7대)	
			(1.1.5) 무장애 관광 포털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	
			(1.2.1)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	
		(1.1.7)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지원(1,460명)▽	(1.2.3) 생활체육 활성화	
		(1.2.2) 무장애 리모델링(총 34건)	(1.3.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의 전당 '어울림플라자' 조성▽	
	[정책과제 2] 장애인 가족 지원	(2.1.1)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확대 운영(운영기관 50개소)	(2.2.1) 광역 · 기초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26개소)▽	-
핵심과제 5: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강화	[정책과제 1]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	(1.1.2) 지원센터 종사 인력 확대(총 338명)	(1.1.1) 미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
			(1.1.3)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과제 2] 자립관련 기관 · 인력에 대한 지원	(2.1.2) 실습기관 지정 →교육기관 확대(12개소)▲	(2.1.1)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
		(2.2.1) IL센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총 350명)		
		(2.2.2) 특화강좌 개설 운영		

주 1) 목표치가 기존보다 상향되었을 경우 표시.

주 2) 목표치가 기존보다 하향되었을 경우 표시.

제3절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1.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개요[8)]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은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3년마다 장애인자립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본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은 20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한다.

조사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기존 1~3급)를 갖고 있는 서울시 등록 재가 장애인이며, 온라인 웹조사와 모바일 조사로 조사를 진행했다. 2020년 7월 6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의 조사기간 동안 1,519명을 조사했으며, 유효표본은 1,518명으로 나타났다. 조사 항목은「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조사영역을 포함하여 총 11개 영역과 10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전체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58.8%, '여성'이 41.2%이며, 연령대는 50-64세의 비율이 30.4%로 가장 높고,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인이 21.0%, 뇌병변장애인이 17.1%, 지적장애인이 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38.8%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가구원수는 2인가구가 32.6%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등학교 39.3%, 초등학교 18.7% 등의 순이었다. 수급여부별로 살펴보면 비수급자의 비율이 47.7%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5대 권역으로 분류하여 권역별 분포를 보면 동북권(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3.5%, 서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32.1%, 동남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15.9%,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13.3%,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5.1% 순으로 확인되었다.

8)「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3년마다 장애인자립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본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은 20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수립하며, 조사결과를 발췌 요약하여 작성했다.

<표 3-58>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구성

구분	조사내용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기존 1-3급)를 갖고 있는 서울시 등록 재가 장애인
조사방법	온라인 웹조사(CAWI), 모바일 조사
조사기간	2020년 7월 6일 ~ 2020년 10월 14일
표본 수	1,519명(유효표본 1,518명)
조사항목	일반적 특성(10),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22), 일상생활(9), 자립생활(6), 고용(8), 사회 및 문화 · 여가 활동(11), 주거(8), 복지서비스(3), 소득(6), 임신 · 출산 및 양육(12),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7) (총 11개 영역, 102개 문항)

출처: 이송희 외, 2020

2.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

1)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에 대해 응답자 중 53.9%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나쁨이라 응답했으며, 61.3%가 질환을 겪고 있고, 67.1%가 최근 6개월 간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질환에도 진료 및 치료를 받지 않은 응답자(5.7%)는 '돈이 없어서'와 '시간이 없어서'(20.7%)를 주된 이유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39.1%가 최근 1년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이 있었고,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는 32.5%, '최근 1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14.0%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이용한 병의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89.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 '의료진이 나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32.5%)를 이유로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의료비 지원'(62.8%)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7.9%가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향후 사용하고 싶은 보조기기는 '없음'(70.8%)을 제외하면 '보행보조로봇'(11.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보조기기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개선사항 없음'(54.5%)을 제외하면 '급여비용 인상'(13.8%)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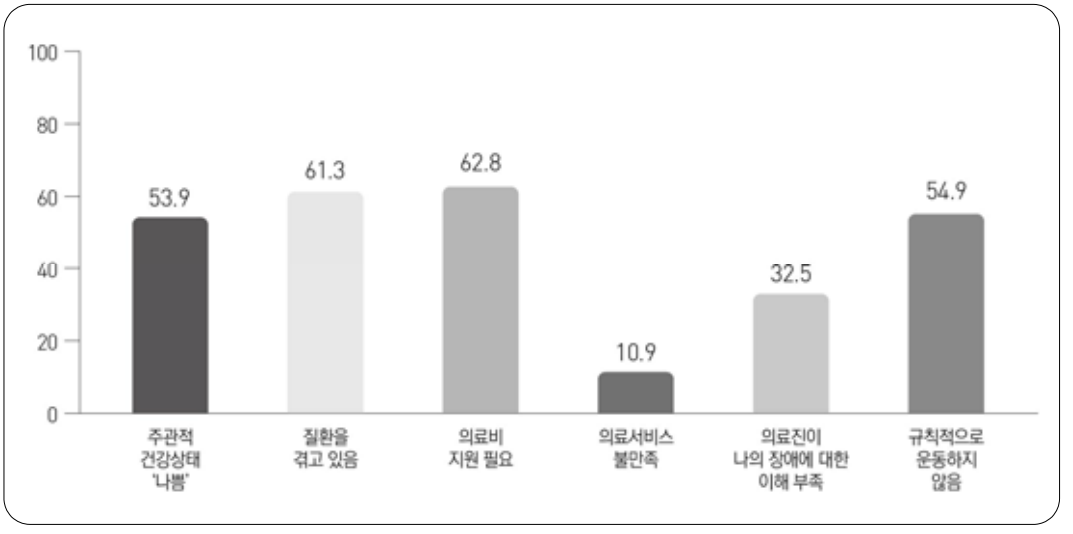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응답자 중 13.4%가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주요 이용처는 '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47.8%)이었고, 이용 빈도는 한 달에 1~2회 정도(30.5%), 향후 희망하는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의 식사 서비스 종류는 '일반식 서비스'(79.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가 54.9%로 절반을 넘었으며,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운동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20.5%), 아파서/움직일 수 없어서(17.5%)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에 대해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편'(33.9%)이며, 일상생활 시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때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60.0%)하고, 집안에서 하는 활동 중 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활동은 'TV시청'(59.7%)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불편했던 점은 '병원 이용의 어려움'(37.1%)이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대응에 있어 서울시에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방역위생물품 지원 확대'(49.9%)로 확인되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응답자(95.1%)는 재난지원금을 주로 '시장과 동네마트'(94.5%)에서 사용했으며, 재난지원금의 개선점은 '현금 지급'(27.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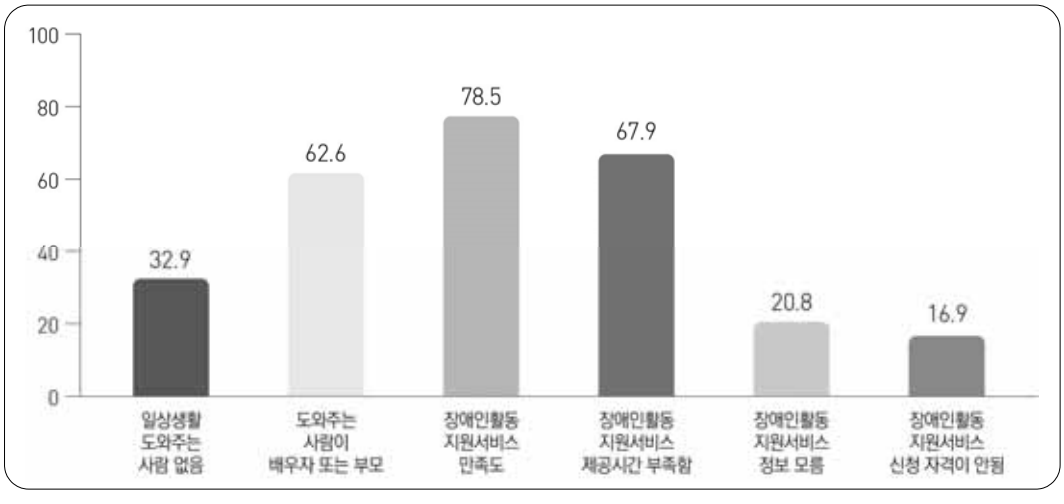
2) 일상생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동작에서 스스로 가능한 일상생활동작에 대해 '음식물 넘기기'를 가장 지원이 불필요한 동작으로, '목욕하기'를 가장 지원이 필요한 동작으로 꼽았으며, 수단적 일상생활동작과 관련해 가장 타인의 지원이 불필요한 것은 '전화사용', 가장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빨래하기', '청소', '식사준비'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7.1%는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존재하며, 도와주는 사람은 주로 '배우자'(33.2%)와 '부모'(29.4%)로 확인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응답자는 23.5%이며,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14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서비스 제공 시간 부족'(67.9%)을 꼽았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가 없어서'(42.3%), '정보를 몰라서'(20.8%), '신청자격이 안 되어서'(16.9%)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개선사항은 '본인부담금 축소'(28.9%),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18.2%)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는 69.4%이며, 정보통신기기 사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사용 방법 모름'(38.0%), '정보통신기기 구입 비용 부담'(30.1%), '내 장애에 적합한 정보통신기기 구입 어려움'(7.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에 대비해 정부가 지원할 사항으로 '정보통신기기 구입 및 이용 비용(통신비/ 와이파이 등)지원'(54.7%), '장애특성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13.0%), '온라인서비스 이용 교육 및 실습 확대'(6.9%)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2>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일상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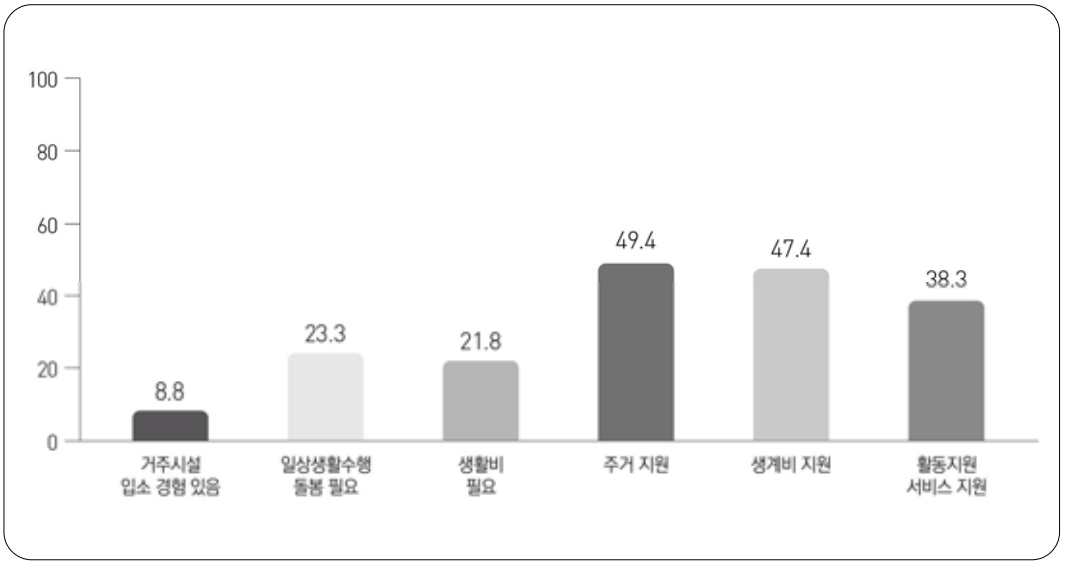


3) 자립생활

거주시설에 입소한 적 있는 응답자는 8.8%로, 시설에 3년 미만(57.9%)으로 거주했으며 퇴소 후 경과기간이 3년 미만(48.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에서 퇴소한 이유는 '단체생활이 싫고 개인생활을 하고 싶어서'(15.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퇴소를 결정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일상생활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23.3%), 생활할 돈이 없는 것(21.8%)으로 나타났으며, 퇴소 후 가장 살고 싶은 주택 유형은 임대 아파트(32.3%)이며, 퇴소 후 살고 싶은 대상은 가족(49.6%)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의 자립생활능력과 관련하여 신체적 자립능력이 가장 높고 경제적 자립능력이 가장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설 퇴소를 위해 주거지원(49.4%)과 자립정착금 및 초기정착 생계비 지원(47.4%), 활동지원서비스(38.3%) 등의 정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자립생활'에 대해 들어본 응답자는 27.5%로, 인지경로는 'TV 또는 인터넷'(29.0%),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기관'(28.8%)이었으며, 본인이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36.2%로 나타났다. 자립생활 시 가장 도움을 받은 곳은 '주민센터 등 관공서'(22.9%)이며,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할 것은 소득(생계비)지원(75.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자립생활



4)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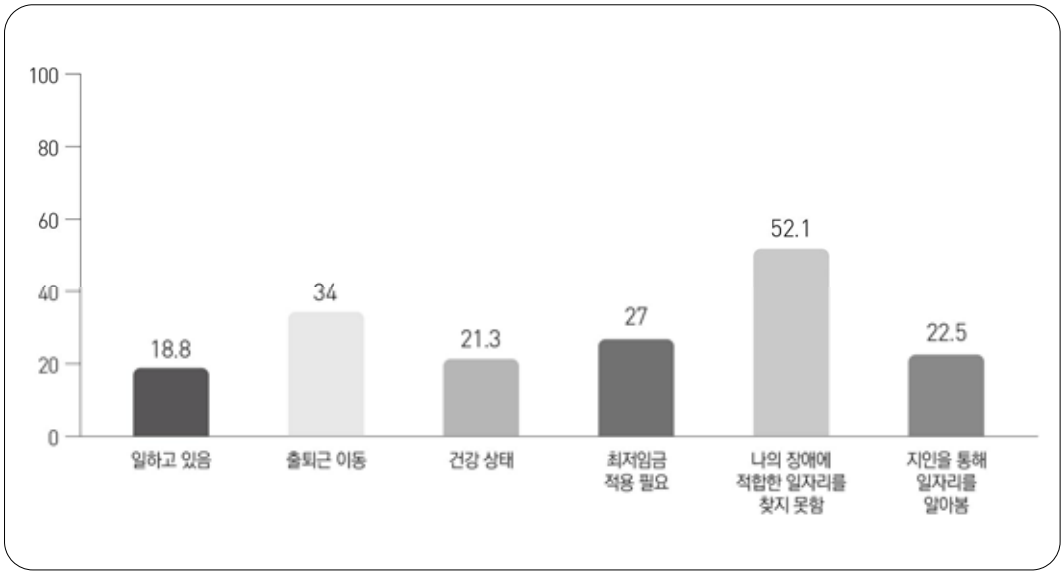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중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18.8%였으며,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가 34.0%로 가장 많았고 월 평균 소득은 1,174,456원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출퇴근 이동(23.0%)과 건강상태(2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근로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27.0%)을 희망하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응답자(81.2%)가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은 '나의 장애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52.1%)가 가장 많았으며, 71.9%의 응답자가 향후 일자리를 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지난 1개월간 수행한 구체적인 구직활동으로는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22.5%)이 가장 높았고, 일을 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상태가 나쁘다(59.2%)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필요한 지원에 관한 응답은 '장애 특성에 맞는 직종 및 취업처 개발'(28.0%), '임금보조'(16.0%), '취업 및 창업 정보'(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고용



5)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외출이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69.5%였으며, 지난 1주일 동안 외출 횟수는 거의 매일한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다. 전혀 외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응답자(21.3%)는 외출하지 않은 이유로 '몸이 아파서'(53.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도보(72.1%), 지하철 및 전철(59.7%), 일반 버스(49.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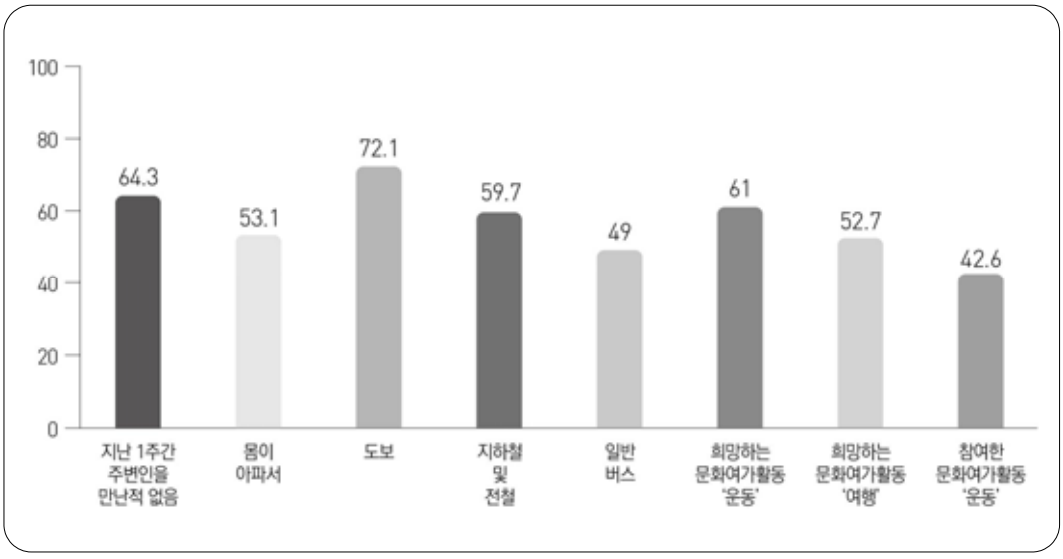
지난 1주일간 친구 · 친척 · 직장동료를 만난 적이 없는 응답자가 64.3%였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에 있다는 응답이 70.0%,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있다는 응답이 55.1%,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에 있다는 응답이 25.3%로 나타났다.

평소 희망하는 문화 · 여가활동에 대해 기타를 제외하고 운동(61.0%), 여행(52.7%), 친구 및 가족 모임(52.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참여한 문화 · 여가활동은 기타를 제외하고 운동(42.6%), 친구 및 가족 모임(28.6%), 종교활동(28.2%)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 ·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는 응답자(46.4%)는 그 이유로 '활동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27.4%)과 '비용 부담'(22.7%)을 꼽았다.

현재 생활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주거환경'이 평균 5.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 삶의 만족도'(5.02점), '사회적 관계(친구 등)'(4.7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평생교육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건강 · 체육교육'이 32.2%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 · 예술 교육'(25.5%), '직업능력향상교육'(20.9%)등의 순이었으며, 지난 1개월간 실제로 참여한 평생교육 활동은 '건강 · 체육 교육'이 10.0%로 가장 높았고, '문화 · 예술교육'(6.5%), '직업능력향상교육'(5.6%) 등의 순으로 나타나, 희망 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평소 평생교육활동의 만족도는 불만족이 54.0%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사유는 '비용 부담'(21.6%)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평생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비용(수강료 등)지원'(38.3%)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림 3-5>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사회 및 문화 · 여가활동



6)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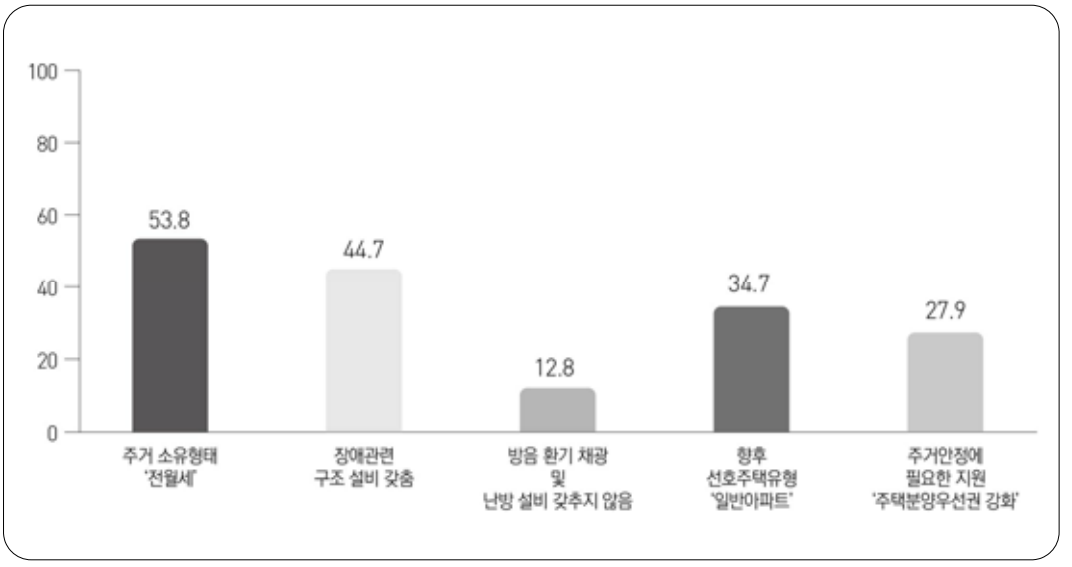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은 '일반 아파트'(22.7%)가 가장 많았고, '임대 아파트'(21.7%), '연립주택(빌라)'(18.5%) 등의 순이었으며, 살고 있는 집의 소유주 혹은 임대차 계약의 주체는 본인(34.1%)이고 소유형태는 자가(37.0%)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다수가 지상층에 거주(88.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가 자가가 아닌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은 '일반 셋집(민간임대주택)'(51.7%)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환경에 대해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응답이 87.2%로 가장 높은 반면, '장애와 관련하여 편리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가 44.7%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았다.

향후 살고 싶은 집으로는 일반 아파트(34.7%)가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향후 거주하고 싶은 대상은 '가족(부모, 형제 · 자매)'(45.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응답은 '공공 및 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권 강화'(27.9%), '장애인 맞춤형 주택제공 확대(다양한 주거모델 개발)'(21.1%), '전세보증금 지원 확대'(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주거**



7) 복지서비스

연금/수당 관련 복지사업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68.4%), 장애인연금(64.8%), 장애수당(64.4%)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이용경험 비율은 장애수당(41.0%), 장애인연금(38.1%), 기초노령연금(25.4%)등의 순으로 장애수당이 인지도에 비해 이용경험률이 높았다.

서비스 관련 복지사업에 대한 인지 비율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46.6%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33.1%), 중증장애인야간순회방문서비스(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이용경험 비율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18.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4.3%), 중증장애인응급알림서비스(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 관련 복지사업에 대한 인지여부는 전세자금 및 전세주택 지원(32.9%), 저소득층 월세지원(26.5%), 주택구입자금(24.0%), 주택개조사업(16.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이용경험 비율은 저소득층 월세지원(8.7%), 전세자금 및 전세주택 지원(5.4%), 주택구입자금/주택개조사업(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재활 관련 복지사업에 대한 인지여부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42.9%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34.1%), 장애인 보조기구 건강보험(22.9%)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이용경험 여부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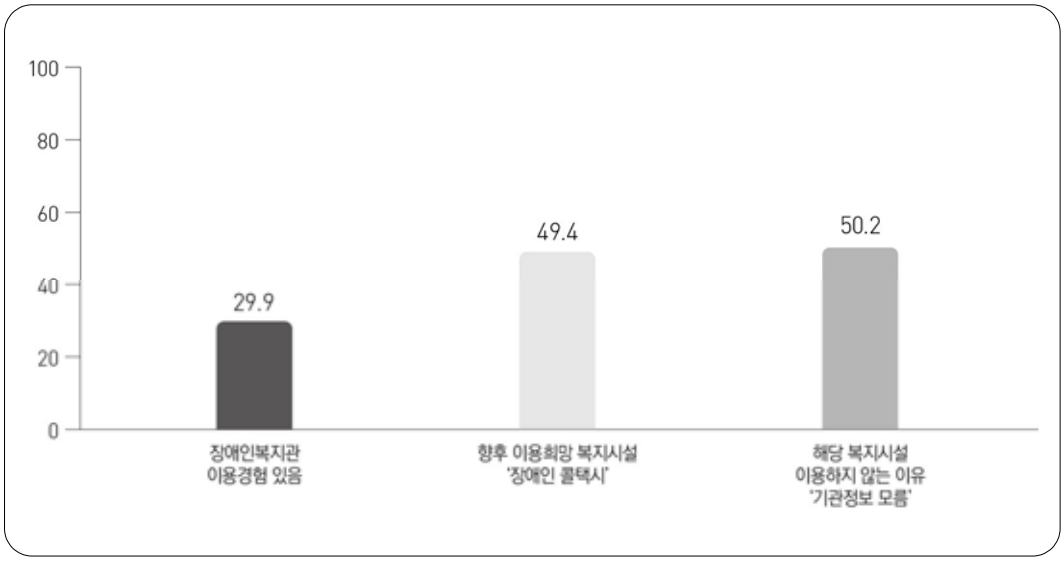
보육/교육 관련 복지사업에 대한 인지여부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13.6%), 장애아 보육료 지원(11.5%)의 순으로 관련 이용경험 여부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융자 관련 복지사업에 대한 인지여부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38.9%),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21.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11.9%)의 순으로 관련 이용경험 여부 또한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29.9%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으며, 장애인콜택시(26.3%), 종합사회복지관(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복지시설은 장애인콜택시(49.4%), 장애인복지관(43.5%), 종합사회복지관(3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복지시설 이용을 희망하나,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해당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기관(프로그램) 정보 모름'(5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림 3-7>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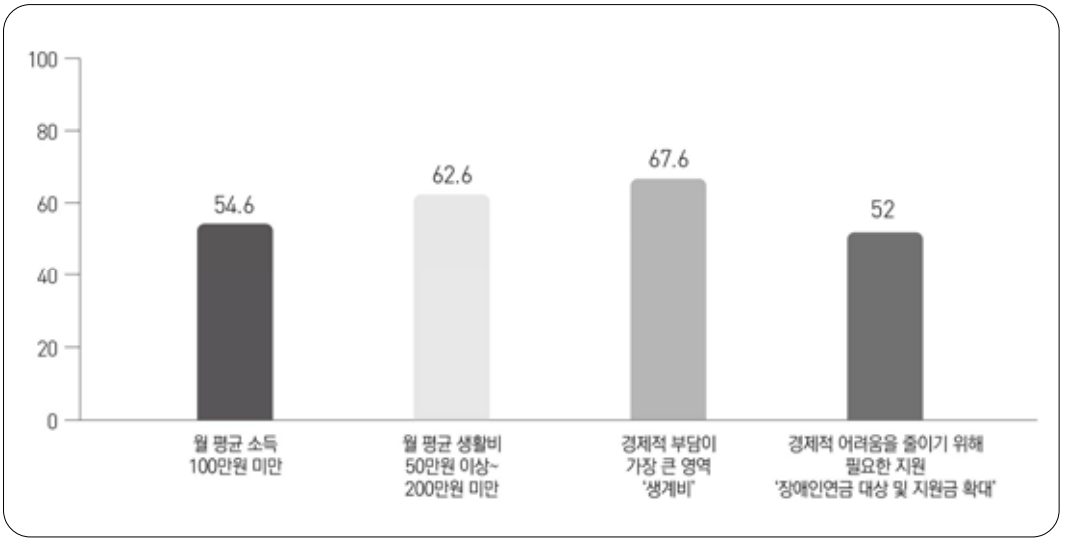


8) 소득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4.7%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25.3%), 50만 원 미만(19.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는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이 37.2%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25.4%), 50만 원 미만(12.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월평균 용돈은 받지 않는다(41.2%)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5만 원 미만 지출했다는 응답이 26.0%로 가장 높았다. 생활비 지출 중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영역은 생계비(식비, 생필품, 공공요금)의 비중이 67.6%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대상 및 지원금 확대'에 응답한 비율이 52.0%로 가장 많았다.

<그림 3-8>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소득



9) 임신, 출산, 양육

전체 응답자의 54.8%는 자녀가 있으며, 자녀 수는 1명이 43.8%로 가장 많았다.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응답자는 23.3%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장애가 있는 자녀는 17.5%로 나타났다. 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본인이 45.9%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42.3%), 부모(8.2%)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아서(미혼)'(68.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미혼 상태가 아닌 응답자의 경우 '장애 및 건강 때문에'(13.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신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육아/양육 걱정'(60.7%), '의료비 부담'(47.9%)으로 나타났으며, 임신 · 출산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산후조리 문제'(47.5%), 집안일 어려움'(44.6%), '진료비 · 의료비 부담(출산 비용 등)'(4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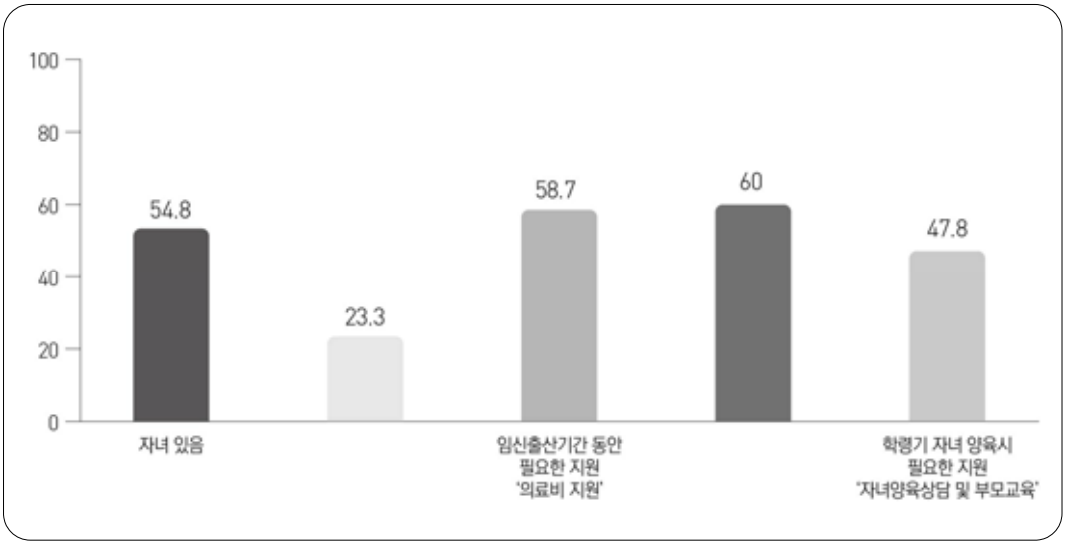
임신 · 출산 시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임신 · 출산비용 등 의료비 지원'(58.7%)이 가장 높았으며, '산전 · 산후 조리서비스 지원'(54.5%), '집안일(가사)도우미 지원'(4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의 연령대는 18세 이상 자녀(82.2%)가 가장 많았으며, 중 · 고등학생 자녀(10.3%), 초등학생 자녀(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만 3~5세 이하 유아기 자녀를 둔 응답자는 '집안일(가사) 부담'(60.0%), '자녀를 돌볼 사람(시설) 없음'(50.0%)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자녀 양육 시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응답은 '집안일(가사) 도우미 지원'(80.0%), '자녀 목욕, 옷 갈아입히기 지원'(50.0%), '학습도우미 지원(체험학습, 책읽기 등)'(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한 응답이 '자녀 교육 및 학습 지도 어려움'(56.5%), '자녀 문화 · 여가 생활 지원 어려움' (43.5%),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담 및 걱정'(26.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양육 시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자녀양육 상담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자녀 학습도우미 지원(학교 숙제, 책읽기 등)'이 47.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자녀 문화 여가 활동 지원'(39.1%), '자녀 교육비 및 각종 치료비 지원'(3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임신, 출산, 양육**



10)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

전체 응답자의 71.1%가 노후생활에 대해 걱정을 해본 적이 있었으며, 그 중 가장 걱정되는 사항으로 '생활자금 마련'(82.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의료비 부담'(67.1%), '신체적 기능 저하'(56.3%) 등이 나타났다.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15.3%였으며, '예금, 적금, 저축 등'(52.8%)과 '국민연금'(48.9%)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노후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84.7%)는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로 '준비할 여유가 없어서'(74.8%)를 꼽았다.

향후 노후생활에 있어 각 영역별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하였을 때, 미래에 정신적 자립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2.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자립 2.10점으로 가장 낮았다. 미래에 '신체적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편'은 35.1%로 가장 많았으며, 미래에 '경제적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편'은 1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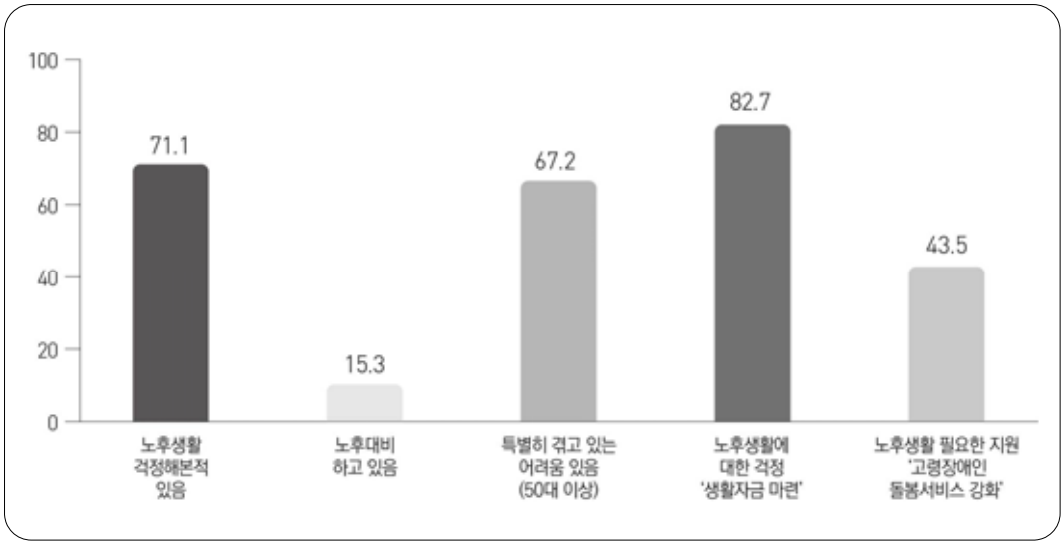
연령이 50대 이상인 응답자 중 젊은 시절 대비 특별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2%로, 그 세부사항으로 '신체적 기능 저하'(69.5%)가 가장 높았으며, '장애상태 악화'(62.3%),

'장애 이외의 원인으로 건강상태 악화'(5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50대 이상인 응답자 중 10.2%가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름'에 응답한 비율이 28.0%로 가장 높았다.

연령이 50세 이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에 응답한 비율이 43.5%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한 노후생활(건강관리, 여가 · 평생교육 활동)지원'(35.6%), '장애인지원제도와 노인지원제도의 연계방안 마련'(2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 :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



제3절 소결

본 절에서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정책의 운영현황과 이행성과, 장애인 관련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요약하여 주요점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에서 수립했던 사업의 운영현황을 정리하고 1기 계획 이후 장애정책을 둘러싸고 변화한 주요 환경과 이슈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의 세부과제의 추진목표 이행수준을 분석하였으며, 20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정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운영현황 및 이행성과, 정책환경, 실태조사에서 각각 도출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운영현황 및 이행성과

첫째, 계획 수립과정에서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은 수립과정에서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와 민관합동 TF팀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실태조사의 대상이 중증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민관합동 TF팀의 장애인 단체 측 대표들도 신체적 장애인으로 구성되어있어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의견수렴 반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합적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행 점검·성과 평가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기 계획에 해당하는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실행계획 제출은 2019년도와 2020년도 두 차례 있었으며, 실적 제출은 2020년도에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의 진행과정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부재로 인해 이행 점검과 성과 평가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내용에 따라 여러 부서가 추진부서로 참여하여, 전반적인 사업 진행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한 협업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체육진흥과, 주택정책과, 관광정책과 등 여러 개의 부서가 세부사업의 추진부서로 참여하였다. 부서별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이행 및 성과를 수렴하는 협업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추진실적이 저조하거나 현실적 제약 등으로 계획 수립 시 세웠던 기존 목표치가 변경된 사

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획수립 시 세웠던 기존 목표치를 변경한 세부사업은 전체 세부사업 51개 중 25개이며, 이 중 기존 목표치를 상향한 사업은 8개, 하향한 사업은 17개이다. 기존 목표치 상향은 주로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경우 이루어졌으며, 기존 목표치 하향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한 사업내용 변경, 예산 미확보, 인력부족, 참여 미비, 코로나19의 영향 등 다양한 사유로 이루어졌다.

이행완료 사업 중 기존 목표치가 하향된 사업은 7개로 나타나 기존 목표치를 하향하여 이행 완료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행 중 사업 중 기존 목표치가 상향된 사업은 6개로 나타나 기존 목표치를 초과달성해 목표치를 상향하여 이행 중인 사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정책과제 내 세부사업의 평균 이행수준이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10개 정책과제의 추진목표치 이행수준을 '이행 중'과 '이행완료'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을 때, 이행 완료된 세부사업이 가장 많은 정책과제는 '이동 · 의사소통 편의 보장'과 '생활안정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이며, 이행 완료된 세부사업이 가장 적은 정책과제는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였다.

이 외에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활성화'를 제외하고 5개의 정책과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주거모델 개발 및 주거 지원',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가족 지원', '자립관련 기관 · 인력에 대한 지원'은 이행 완료 세부사업이 절반 이하로 나타나, 세부사업 이행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사업의 평균 이행수준은 5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정책환경

본 장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비롯하여 법 · 제도 · 기술의 변화 등 최근의 정책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조사하였다. 정책환경 관련 주요 이슈들을 조사한 결과, 이동권, 일자리, 활동지원, 탈시설, 의사소통 등의 이슈가 나타났으며, 법 · 제도 · 기술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요구하거나 대응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확인되었다. 정책환경 관련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기술변화에 따라 심화되어, 시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출근시간 지하철 시위를 통해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 보장을 명시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와 수가 조정에 대한 장애인 단체와 관련 기관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기요양급여제도 중복수급 방지조항으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삭감에 대해 장애인단체는 시간 보전 및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셋째, 발달장애인 단체는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단체는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체계의 부족함을 비판하고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와 국가책임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이 법 적용을 받게 되자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넷째, 최중증 장애인의 취업의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무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사업은 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직무개발을 위해 직업훈련 및 공공일자리 확대와 ICT기술을 결합한 직무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재난상황에 대한 소득지원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이 축소되면서 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소득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평균 소득과 임금의 최저임금 적용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최저임금 적용을 판단하는 장애인 생산력 판정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섯째, 최중증장애인 대상 주간활동과 평생교육서비스 확대에 대한 논의와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지원사업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성인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의사소통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AAC)지원사업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곱째, 재난상황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과 긴급돌봄서비스 보완·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전염병 등에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에 대한 대책의 필

요성이 발견되었으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긴급돌봄사업에서는 수요가 늘면서 비전문인력이 매칭되거나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기기와 시설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여덟째, 중앙정부는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밝혔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무장애 관광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전국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밝혔으며,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탈시설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내용과 적용 대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장애인단체 측은 지역 인프라 부족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서울시에서 통과된「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한정된 대상(시설) 적용범위를 비판하며 조례안 적용 범위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열 번째, 장애인 자립생활 및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들이 정책 내용 개선과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요구받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책 모델'이 시행되었지만 돌봄 위주, 시설 중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며, 2018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2022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모두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장애인 단체측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발달장애인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3.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2020년에 실시된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건강, 일상생활, 자립생활, 고용,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주거, 복지서비스, 소득, 임신 출산 및 양육,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 등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의 실태를 조사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증장애인의 53.9%가 건강상태가 나쁘며, 61.3%가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의료비 지원(62.8%)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

며, 병의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나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32.5%)'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비 지원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확인되었다. 또한 응답자 절반(54.9%)이 건강관리를 위한 규칙적 운동을 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과 가족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범위 및 시간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증장애인의 67.1%는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며, 도와주는 사람은 주로 가족(배우자+부모 6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불만족하는 응답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간이 부족(67.9%)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20.8%), 신청자격이 안 되어서(16.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나타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지원 대상 및 시간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정착 및 유지를 위해 경제적 지원과 일상생활 돌봄 인력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이 탈시설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상생활 수행 돌봄(23.3%)과 생활비(21.8%)로 나타났으며, 탈시설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주거지원(49.4%)과 생계비 지원(47.4%), 활동지원서비스(38.3%)로 확인되었다. 또한 서울시에서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지원해야 할 것은 소득(생계비)지원(70.5%)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의 구직의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직무개발과 안정적인 근로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 근로소득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18.8%)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출퇴근 이동(23.0%), 건강상태(21.3%)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필요한 지원은 '최저임금 적용(27.0%)'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여, 출퇴근길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환경 조성, 근로소득 향상에 대한 욕구가 확인되었다.

이 외에 미취업상태 중증장애인(81.2%)은 미취업의 주된 이유로 나의 장애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52.1%)를 꼽았으며, 구직의향이 있을 경우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본다는 응답(22.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직무 개발 및 공공취업기관 활성화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다섯째,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중증장애인의 31.5%가 혼자 외출을 할 수 없으며, 지난 1주일간 전혀 외출하지 않은 경우도 21.3%로 나타

났다. 코로나 19의 영향을 제외하고 외출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몸이 아파서(53.1%), 이동의 어려움(8.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도보(72.1%), 지하철 및 전철(59.7%), 일반 버스(49.0%)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의존성이 높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편의성을 고려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사회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중증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 지원과 여행 및 관광관련 서비스 강화에 대한 욕구가 발견되었다.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은 운동(61.0%), 여행(52.7%)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참여한 문화·여가활동은 운동(42.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로는 활동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27.4%), 비용 부담(22.7%)이 꼽혀 문화·여가활동 지원서비스 강화에 대한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행을 희망하는 비율에 비해 실제 참여한 비율(12.5%)은 낮아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일곱째,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성에 대한 높은 욕구와 주거환경 편리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중증장애인의 주거 소유형태는 월세 32.0%, 전세 21.8%로 나타났으며,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51.7%)이 가장 높았다. 주거환경 전반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장애와 관련하여 편리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가 44.7%로 낮게 나타났으며,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12.8%로 장애를 고려한 주택의 편의성이 부족하며, 기본적인 구조 및 성능을 갖추지 않은 주거환경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공공 및 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권 강화'(27.9%)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주거환경의 편리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났다.

여덟째,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복지시설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는 연금/수당 관련 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평균 60%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서비스의 인지도와 이용경험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비례하는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경험은 장애인복지관(29.9%)이 가장 높았으며, 특정 복지시설 이용을 희망하지만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기관(프로그램) 정보 모름'(50.2%)을 해당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응답하여, 복지서비스와 복지시설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 강화 및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아홉째, 중증장애인의 생계비 및 소득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4.6%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며, 생활비 지출 중 생계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응답으로 '장애인연금 대상 및 지원금 확대'(52.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의 생계비 및 소득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음이 확인되었다.

열 번째, 중증장애인의 자녀 양육과 관련해 임신 · 출산과정의 의료적 지원, 양육 초기의 가사 부담, 학령기의 학습지도와 부모양육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이 임신 · 출산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의료비 지원(58.7%), 산전 · 산후조리서비스 지원(54.5%)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기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집안일 부담(60.0%)이, 학령기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자녀양육 상담 및 부모 교육(47.8%), 자녀 학습도우미 지원(47.8%)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임신 · 출산과정을 포함하여 자녀의 발달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열한 번째, 중증장애인의 노후생활 지원 및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증장애인 중 71.1%가 노후생활에 대해 걱정을 해본 적이 있었으나, 실제로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15.3%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은 '생활자금 마련'(82.7%), '의료비 부담'(67.1%), '신체적 기능 저하'(56.3%) 순이었으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43.5%), '건강한 노후생활(건강관리, 여가 · 평생교육 활동) 지원'(35.6%)이라 응답해 장애인의 고령화에 대비한 돌봄서비스와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서울시 제1기 과제 이행평가 및 정책수요 조사결과





제4장
서울시 제1기 과제 이행평가 및 정책수요 조사결과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1) 델파이 조사 참여 대상의 선정

본 연구는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활용 가능한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정책수요 조사의 일환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조사 및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추진하였다.

델파이 조사 설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서면을 통한 의견의 제시와 수렴의 방법을 활용하는 델파이 조사의 성격 상 3차에 걸쳐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위한 질문이 제1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의 이행 평가와 제2기 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묻는 것으로 타당하며 신뢰성 있는 응답을 얻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구성과 선정은 장애인 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정부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의 이해도를 갖춘 전문가로 한정하였다. 이는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평소 지식과 제도에 대한 관심을 요하며 동시에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에 반영할 개선과제 도출을 위하여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동시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는 서울시 장애인 통거버넌스 위원 혹은 장애인 복지 분야 자문의 경험이 있는 정부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의 이해가 깊은 전문가를 탐색하고 이후 학술검색 및 논문자료 검색 등을 통하여 검색된 정부 장애인 정책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서울시복지재단의 협의를 거쳐 1차 Pool을 구성하였다. 이후 1차

Pool의 전문가 개별 연락을 통해 이들로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는 눈덩이 표본추출(snowball sampling)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25명을 선정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1명이 중도에 이탈하여 최종 3차는 조사는 24명의 인원으로 진행하였다.

<표 4-1> **델파이 조사설계(정량조사)**

구분	제1차 델파이조사	제2차 델파이조사	제3차 델파이조사
조사대상	장애인 복지 분야 및 정부 장애인 정책 전문가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지 작성법		
응답자 수	25명	23명	24명
조사일자	2022.08.12. ~ 08.19.	2022.09.23. ~ 09.30.	2022.11.03. ~ 11.10.

2) 델파이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델파이 설문조사는 8월 12일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차수별 약 7일간 진행하여 11월 10일 제3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각 차수별 델파이조사의 경우 제1차는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의 이행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으로 구성하였으며, 제2차는 '정책 분야별 이슈 사항 및 1기 과제 확대 의견을 참고하여 개선방안 재평가', 제3차는 제1차와 제2차 조사 및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에서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중요도-시급성 평가와 함께 분야 간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쌍대비교법을 통하여 가중치를 파악할 수 있는 AHP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델파이 조사의 성격 상 설문지 작성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 배포 시 설문과 관련된 정책 사항, 이전 차수의 참여자 응답결과 등을 공유하며 진행하였다. 조사 진행은 조사의 효율성과 응답률 제고를 위하여 조사대상자(전문가)에게 전화 섭외를 통해 조사에 대한 취지 및 참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3) 표적집단 심층면접(FGI) 조사방법

본 연구는 수혜자 관점의 장애인 자립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및 전문가 조사에서 도출된 이슈사항의 정책대상자 관점 검토를 위하여 장애인 집단 조사의 일환으로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를 추진하였다.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는 서울시의 장애인 대상 정책의 이해를 고려하여 서울시의 주요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여 의견을 줄 수 있는 지부장 또는 지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으며, 장애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응답의 편의를 줄이기 위하여 면접조사는 정신 및 발달장애인 그룹, 신체그룹 2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보다 자세한 표적집단 심층면접 조사방법은 제4절에서 후술하였다.

<표 4-2> **정성조사설계**

구분	집단심층면접조사
조사대상	서울시 주요 장애인 단체장 또는 주요 보직자
조사방법	FGI (Focus Group Interview)
조사대상자 수	10명(2그룹)
조사기간	2022.10.18.
조사장소	서울복지타운 5층 회의실4

2.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제1차 델파이 조사내용은 '18년부터 현재('22년)까지 서울시가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의 정책과제별 이행성과 평가 및 장애인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에 있어서는 응답자들이 질문의 대상이 되는 정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책별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과제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과제별 주요 이슈 사항을 제시하고 비교하여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개선과제의 경우 핵심과제별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였다.

<표 4-3> **제1차 델파이 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이행성과 평가	•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정책과제별 이행성과 평가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과제의 필요성 평가	• 핵심과제별 주요 이슈 사항과 비교하여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과제의 축소 또는 확대 필요성 평가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 일상생활 지원 강화 개선 및 신규 추진 필요 과제 • 이동권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개선 및 신규 추진 필요 과제 •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개선 및 신규 추진 필요 과제 • 문화 · 체육 · 여가생활 및 가족 지원 개선 및 신규 추진 필요 과제 •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개선 및 신규 추진 필요 과제

제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집된 서울시 자립생활 지원 핵심분야별 개선과제와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주요 이슈 사항을 제시하여 비교하고 개선과제별 추진 필요성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4-4> 제2차 델파이 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일상생활 지원 강화	•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개선과제별 추진 필요성 평가 • 건강관리 지원 강화 개선과제별 추진 필요성 평가
이동권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과 의사소통 지원 개선과제별 추진 필요성 평가 • 주거지원 강화 개선과제별 추진 필요성 평가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 생활안정 지원 개선과제별 추진 필요성 평가 • 고용 지원 개선과제별 추진 필요성 평가
문화 · 체육 · 여가생활 및 가족 지원	• 문화 · 체육 · 여가생활 등의 지원 개선과제별 추진 필요성 평가 • 장애인 가족 지원 개선과제별 추진 필요성 평가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개선과제별 추진 필요성 평가 • 서비스 거점 강화 개선과제별 추진 필요성 평가

제2차 델파이 조사 이후 실시된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정책분석 및 제1차, 제2차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정책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대상자 관점에서의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의 개선방향, 정책 분야별 신규 개선과제 도출 등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4-5> 집단심층면접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일상생활 지원 강화 분야	• 정책 개선 방향 • 신체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 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 및 병원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주거 및 가족 지원 강화 분야	• 정책 개선 방향 • 주거지원의 양적 · 질적 강화 방안 •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
문화 · 체육 · 여가생활 지원 강화 분야	• 정책 개선 방향 • 문화 · 체육 · 관광 등 여가와 체육생활 지원을 위한 인프라 · 콘텐츠 지원 방안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분야	• 정책 개선 방향 • 급여 및 일자리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사회활동 지원 강화 분야	• 정책 개선 방향 • 이동권 증진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방안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이동권 및 의사소통 지원 보조기구 적용 방안
전달체계 강화 분야	• 장애인 서비스 기관 및 인력 지원 방안 • 서비스 거점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제3차 델파이 조사는 제1차와 제2차 델파이조사 및 집단심층면접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개선과제별 정책중요도와 추진시급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정책분야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쌍대비교문항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가중치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4-6> 제3차 델파이 조사 내용(정책중요도 및 추진시급성)

구분	조사내용
일상생활 지원 강화 개선과제	•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개선과제별 정책중요도 및 추진시급성 평가 • 건강관리 지원 강화 개선과제별 정책중요도 및 추진시급성 평가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개선과제	• 생활안정 지원 개선과제별 정책중요도 및 추진시급성 평가 • 일자리 지원 개선과제별 정책중요도 및 추진시급성 평가
사회활동 지원 강화 개선과제	• 이동권 보장 개선과제별 정책중요도 및 추진시급성 평가 • 의사소통 지원 및 4차 산업기술 활용 이동권 보장 개선과제별 정책중요도 및 추진시급성 평가
주거 및 가족 지원 강화 개선과제	• 주거 지원 개선과제별 정책중요도 및 추진시급성 평가 • 장애인 가족 지원 개선과제별 정책중요도 및 추진시급성 평가
문화 · 체육 · 여가생활 및 가족 지원 개선과제	•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지원 개선과제별 정책중요도 및 추진시급성 평가 • 생활체육 지원 평가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개선과제	• 기관 및 인력 지원 개선과제별 정책중요도 및 추진시급성 평가 • 서비스 거점 강화 개선과제별 정책중요도 및 추진시급성 평가
분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가중치 평가	• 개선과제 평가지표의 가중치 평가 • 지향가치 간 가중치 평가 • 정책 지원분야 간 가중치 평가 • 정책과제 간 가중치 평가

제2절 제1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이행성과 평가

1. 조사 참여자 특성

3차에 걸쳐 진행된 델파이 조사는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를 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1차는 25명 전원이 참여하였고, 2차는 2명이 무응답하여 23명, 3차는 개인적 사정으로 1명이 이탈하여 24명이 전원이 참여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 기준으로 성별은 남성이 약 68%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관심분야별로는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분야가 56%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적 장애 분야가 28%, 신체적 장애 분야가 16%로 가장 적은 규모였다. 이는 장애인 복지 관련 신체 및 정신적 두 분야에 모두 관심도를 적절히 나타내고 있어 연구의 편향을 발생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근무기관 유형별로는 장애인 관련 단체 · 협회 · 협의회가 56%였으며, 교육 · 연구기관 근무자는 4명, 공공기관 1명으로 구성되었다.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20년 이상이 전체 44%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 32%, 30년 이상 20%, 10년 미만 4% 순이였다.

<표 4-7> **제1차 델파이 조사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N	%
전체		25	100
성별	남성	17	68.0
	여성	8	32.0
연령별	40대	2	8.0
	50대	16	64.0
	60대	7	28.0
관심분야	신체적 장애	4	16.0
	정신적 장애	7	28.0
	신체 및 정신적 장애	14	56.0
근무기관 유형	공공기관	1	4.0
	교육 · 연구기관	4	16.0
	장애인 관련 단체 · 협회 · 협의회	14	56.0
	장애인 복지기관	6	24.0
근무경력	10년 미만	1	4.0
	10년 이상	8	32.0
	20년 이상	11	44.0
	30년 이상	5	20.0

2. 조사 결과

1)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이행성과 평가

(1) 핵심과제 1 : 일상생활 지원 강화

핵심과제 '일상생활 지원 강화'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하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홀로서기가 가능한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서울시는 '활동지원서비스 강화'와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설정하고 각각 4개의 세부사업과 2개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표 4-8> **정책과제 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단위: 명, %, 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부족	부족	보통	우수	매우우수	평균	표준편차
1-1.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24시간, 중고령, 탈시설 등)								
(1.1.1) 시비추가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 추가 지원	25	10 (40)	11 (44)	2 (8)	2 (8)	0 (0)	1.84	0.90
(1.1.2)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25	3 (12)	2 (8)	4 (16)	10 (40)	6 (24)	3.56	1.29
(1.1.3)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5	4 (16)	9 (36)	6 (24)	6 (24)	0 (0)	2.56	1.04
1.2. 성인 최중증장애인(발달·뇌병변 장애인 등) 낮활동 지원 확대								
(1.2.1)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운영	25	2 (8)	6 (24)	10 (40)	5 (20)	2 (8)	2.96	1.06
(1.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5	3 (12)	1 (4)	5 (20)	11 (44)	5 (20)	3.56	1.23
(1.2.3) 중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25	9 (36)	12 (48)	3 (12)	0 (0)	1 (4)	1.88	0.93
1.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1.3.1)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25	3 (12)	2 (8)	11 (44)	7 (28)	2 (8)	3.12	1.09
1.4.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1.4.1) 신생아 양육서비스 시간 확대	25	1 (4)	2 (8)	8 (32)	9 (36)	5 (20)	3.6	1.04
(1.4.2) 만 4세미만 서비스 시간 확대	25	1 (4)	4 (16)	4 (16)	6 (24)	10 (40)	3.8	1.26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성인 최중증장애인 낮 활동 지원 확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의 과제들을 포함하는 [정책과제 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정책은 각 세부 과제마다 대부분 목표치에 맞게 이행 중에 있어 양호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자 중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일부 감소한 장애인에게 월 100~320시간 보조급여를 지원하고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24시간, 중고령, 탈시설 등)' 과제의 경우 이행되지 못하여 1.84점으로 그 성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중고령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도 1.88점으로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만 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시간 확대는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여 이행 완료된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과제의 경우 3.8점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정책과제 2]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은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은 운영기관을 서울 남부의 보라매병원과 서울 북부의 서울재활병원 2개소로 확대, 이행 완료하여 2.96점 양호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은 민간의료기관의 미비한 참여를 사유로 낮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어 2.2점으로 다소 낮게 평가되었으며, [정책과제 2]의 경우 전반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강화보다 이행성과가 낮게 평가되었다.

<표 4-9> 정책과제 2.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단위: 명, %, 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균	표준 편차
2.1.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2.1.1) 지역장애인보건 의료센터 운영	25	6 (24)	2 (8)	8 (32)	5 (20)	4 (16)	2.96	1.40
(2.1.2)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25	8 (32)	8 (32)	6 (24)	2 (8)	1 (4)	2.2	1.12
2.2.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2.2.1)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25	3 (12)	6 (24)	10 (40)	5 (20)	1 (4)	2.8	1.04

(2) 핵심과제 2 :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핵심과제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는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 전세보증금 지원, 맞춤형 주택 등 새로운 주거모델 공급 등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이동 · 의사소통 편의 보장'과 '신거주모형 개발 및 주거지원'을 설정하고 각각 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표 4-10> **정책과제 1. 이동 · 의사소통 편의 보장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단위: 명, %, 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균	표준 편차
1.1.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								
(1.1.1)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	25	5 (20)	6 (24)	7 (28)	6 (24)	1 (4)	2.68	1.18
1.2. 뇌병변 · 발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1.2.1)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 권리 증진센터 설치 · 운영	25	3 (12)	4 (16)	10 (40)	5 (20)	3 (12)	3.04	1.17
1.3.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1.3.1) 청각장애인 문자 통역 지원	25	2 (8)	3 (12)	8 (32)	5 (20)	7 (28)	3.48	1.26

[정책과제 1] '이동 · 의사소통 편의 보장'은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 및 뇌병변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의 과제를 추진했다. 총 택시 결제액의 75%를 지원해주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대상을 기존의 중증 시각 · 신장장애인에서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했으며, 택시 이용요금의 지원율도 65%에서 75%로 인상했다. 목표치인 이용인원 도달까지는 이행 중이나, 아직 이행 완료에 미치지 못해 2.68점으로 평가되었다.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은 취업활동 및 자기계발 관련 활동에 대해 전문문자통역사가 현장지원 및 원격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대상을 청년 청각장애인(20~29세) 에서 전연령 청각장애인으로 확대했으며 상향조정한 목표치를 이행 완료하였기에 3.48점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표 4-11> **정책과제 2. 신주거모형 개발 및 주거 지원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단위:명,%,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균	표준 편차
2.1. 장애인을 위한 주거모델 개발 및 지원주택 확대								
(2.1.1) 신거주모형 개발	25	3 (12)	5 (20)	7 (28)	5 (20)	5 (20)	3.16	1.31
(2.1.2) 장애인지원주택 공급	25	3 (12)	8 (32)	8 (32)	5 (20)	1 (4)	2.72	1.06
2.2. 저소득 중증장애인 임대·전세 주택 제공 확대								
(2.2.1) 장애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호수	25	11 (44)	9 (36)	4 (16)	0 (0)	1 (4)	1.84	0.99
(2.2.2) 전세보증금 지원 확대	25	7 (28)	8 (32)	7 (28)	2 (8)	1 (4)	2.28	1.10
2.3.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 확대								
(2.3.1)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	25	5 (20)	6 (24)	9 (36)	4 (16)	1 (4)	2.6	1.12

[정책과제 2] '신주거모형 개발 및 주거 지원'은 장애인을 위한 주거모델 개발 및 지원주택 확대, 저소득 중증장애인 임대·전세주택 제공 확대,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 확대의 과제를 추진한다. '장애인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 및 지원주택 확대'는 신 거주모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여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를 결합 지원했다. 신 거주모형 개발은 목표를 수정하여 이행했으며, 장애인지원주택 공급은 기존보다 목표치를 상향하여 이행 중에 있어 3.16점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장애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호수' 세부과제의 경우 낮은 이행률로 인해 1.84점으로 해당 과제 영역에서 가장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3) 핵심과제 3 :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핵심과제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는 자립생활의 기초인 소득지원 및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고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과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생활안정 지원'과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설정했으며, 각각 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표 4-12> **정책과제 1. 생활안정 지원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단위: 명, %, 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균	표준 편차
1.1.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1.1.1)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지원 (이룸통장)	25	2 (8)	4 (16)	8 (32)	9 (36)	2 (8)	3.2	1.08
1.2.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1.2.1)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25	4 (16)	1 (4)	5 (20)	10 (40)	5 (20)	3.44	1.33
1.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1.3.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강화	25	3 (12)	5 (20)	6 (24)	8 (32)	3 (12)	3.12	1.24

[정책과제 1] '생활안정 지원'은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 목표치에 맞게 이행 완료했거나 이행 중에 있어 준수하게 평가되었다.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에서 서울시는 2021년 5월 부양의무자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과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급여수급자가 대폭 증가했고, 사업은 이행 완료되어 3.44점으로 그 중 높이 평가되었다.

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 현장 중심 직업훈련 지원 확대,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등 운영 다각화를 포함하는 [정책과제 2]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는 세부과제마다 대부분 목표치에 근접하게 이행 중에 있으나. '발달장애인 취업을 위한 직무지도원 양성'의 경우 발달장애인 전문지도원(직무지도원) 운영 부분에 있어 다소 이행률이 낮아 2.72점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보조금 지원 대상이 630명에서 862명으로 확대되어 3.64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표 4-13> 정책과제 2.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단위: 명, %, 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균	표준 편차
2.1. 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2.1.1)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지원사업	25	1 (4)	7 (28)	5 (20)	8 (32)	4 (16)	3.28	1.17
(2.1.2)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	25	1 (4)	4 (16)	9 (36)	6 (24)	5 (20)	3.4	1.12
(2.1.3) 발달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일자리	25	1 (4)	5 (20)	9 (36)	4 (16)	6 (24)	3.36	1.19
2.2. 중증장애인 현장 중심 직업훈련 지원 확대								
(2.2.1) 발달장애인 현장 중심 직업 훈련 및 취업	25	5 (20)	2 (8)	9 (36)	8 (32)	1 (4)	2.92	1.19
(2.2.2) 발달장애인 취업을 위한 직무지도원 양성	25	5 (20)	4 (16)	9 (36)	7 (28)	0 (0)	2.72	1.10
2.3.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다각화(인력 충원)								
(2.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보조금지원	25	0 (0)	1 (4)	11 (44)	9 (36)	4 (16)	3.64	0.81
(2.3.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 아이템 개발	25	0 (0)	7 (28)	12 (48)	4 (16)	2 (8)	3.04	0.89
(2.3.3) 중증장애인의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업종 전환지원	25	0 (0)	5 (20)	9 (36)	5 (20)	6 (24)	3.48	1.08

(4) 핵심과제 4 : 문화·체육·여가 생활 및 가족 지원

핵심과제 '문화·체육·여가 생활 및 가족 지원'은 문화·여가생활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여 가정을 기반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여가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이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문화·체육·여가 생활 활성화'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설정했으며, 각각 3개의 세부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정책과제 1] '문화·체육·여가 생활 활성화'는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 활동, 문화의 전당 '어울림 플라자'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영유아, 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 목표를 세웠으나, 예산 삭감 및 코로나 19를 사유로 목표치를 낮췄으며, '무장애 관광 콘텐츠 확충'의 경우 이런 사유로 인해 이행률이 다소 낮아 1.92점이라는 낮은 수치로 평가를 받았다.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급성 개선'의 경우 44개소에서 63개소로 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무장애 관광시설 인증제 운영'의 경우 314개소를 인증하는 등 목표치보다 높게 이행 완료되어 3.5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평가받았다.

<표 4-14> 정책과제 1. 문화·체육·여가 생활 활성화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단위:명,%,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균	표준 편차
1.1.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1.1.1)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5	3 (12)	1 (4)	6 (24)	9 (36)	6 (24)	3.56	1.26
(1.1.2) 무장애 관광시설 인증제 운영	25	3 (12)	1 (4)	5 (20)	11 (44)	5 (20)	3.56	1.23
(1.1.3)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 도입·운영	25	3 (12)	3 (12)	6 (24)	5 (20)	8 (32)	3.48	1.39
(1.1.4) 무장애 관광콘텐츠 확충	25	9 (36)	10 (40)	5 (20)	1 (4)	0 (0)	1.92	0.86
(1.1.5) 무장애 관광 포털 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	25	2 (8)	3 (12)	9 (36)	10 (40)	1 (4)	3.2	1.00
(1.1.6) 관광약자 사회적 인식개선	25	4 (16)	6 (24)	10 (40)	5 (20)	0 (0)	2.64	0.99
(1.1.7)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지원	25	6 (24)	4 (16)	9 (36)	4 (16)	2 (8)	2.68	1.25
1.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육 활동								
(1.2.1)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	25	5 (20)	3 (12)	6 (24)	8 (32)	3 (12)	3.04	1.34
(1.2.2) 무장애 리모델링	25	6 (24)	8 (32)	9 (36)	1 (4)	1 (4)	2.32	1.03
(1.2.3) 생활체육 활성화	25	5 (20)	4 (16)	7 (28)	4 (16)	5 (20)	3.0	1.41
1.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의 전당 '어울림 플라자' 건립								
(1.3.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의 전당 '어울림 플라자' 조성	25	5 (20)	3 (12)	5 (20)	7 (28)	5 (20)	3.16	1.43

[정책과제 2] '장애인 가족 지원'은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확대 운영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전 자치구 확대 운영했다.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확대 운영'은 대한민국 국적 및 서울시 거주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기존 48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목표에 근접하게 이행 중에 있어 3.24점으로 평가되었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광역·기초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를 기존 12개소에서 26개소로 이행 완료하여 3.48점의 높은 점수를 평가받았다.

<표 4-15> **정책과제 2. 장애인 가족 지원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단위: 명, %, 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균	표준 편차
2.1. 장애인 돌봄 가족 휴식제 확대 운영								
(2.1.1)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확대 운영	25	4 (16)	3 (12)	6 (24)	7 (28)	5 (20)	3.24	1.36
2.2.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전 자치구 확대 운영								
(2.2.1) 광역·기초 장애인가족 지원 센터 운영	25	3 (12)	3 (12)	5 (20)	7 (28)	7 (28)	3.48	1.36

(5) 핵심과제 5 :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강화

핵심과제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강화'는 정보교류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다양화하여 지역사회 내 자조적인 자립생활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와 '자립관련 기관·인력에 대한 지원'을 설정했으며, 각각 1개의 세부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정책과제 1]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는 세부과제인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원 확대 및 강화'의 경우 보조금 지원센터를 22년까지 58개소로 확대하여 3.56점의 높은 평가를 받았고,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의 경우 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목표치를 이행하였으나, 2.92점으로 다소 낮은 점수를 평가받았다.

<표 4-16> **정책과제 1.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단위: 명, %, 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균	표준 편차
1.1.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원 확대 및 강화								
(1.1.1) 미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25	3 (12)	2 (8)	5 (20)	8 (32)	7 (28)	3.56	1.33
(1.1.2) 지원센터 종사 인력 확대	25	5 (20)	3 (12)	5 (20)	10 (40)	2 (8)	3.04	1.31
(1.1.3)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25	6 (24)	3 (12)	7 (28)	5 (20)	4 (16)	2.92	1.41

[정책과제 2] '자립 관련 기관·인력에 대한 지원'의 경우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 운영 및 보수교육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운영자 및 인력 역량 강화를 추진했다.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세부과제는 자립생활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 8시간 보수교육을 의무실시하여 3.64점의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자립생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특화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의 어려움을 사유로 '특화강좌 개설 운영'의 경우 1.8점로 낮게 평가되었다.

<표 4-17> **정책과제 2. 자립관련 기관·인력에 대한 지원 세부과제 이행평가 결과** (단위: 명, %, 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균	표준 편차
2.1.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 운영 및 보수교육 지원								
(2.1.1)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25	2 (8)	3 (12)	4 (16)	9 (36)	7 (28)	3.64	1.25
(2.1.2) 실습기관 지정 → 교육기관 확대	25	5 (20)	7 (28)	8 (32)	5 (20)	0 (0)	2.52	1.05
2.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운영자 및 인력 역량 강화								
(2.2.1) IL센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25	7 (28)	10 (40)	6 (24)	1 (4)	1 (4)	2.16	1.03
(2.2.2) 특화강좌 개설 운영	25	14 (56)	5 (20)	4 (16)	1 (4)	1 (4)	1.8	1.12

2)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과제 필요성 평가

(1) 핵심과제 1 : 일상생활 지원 강화

[정책과제 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의 경우 대부분 확대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세부과제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4.24점으로 매우 확대되어야 한다고 평가되었다. 반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과제의 경우 3.84점으로 조금 낮게 평가되었다.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자 중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일부 감소한 장애인에게 월 100~320시간 보존급여를 지원하고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시비추가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 추가지원' 세부사업의 경우 이행성과 평가가 1.84점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나, 4.04점으로 매우 확대가 필

요한 과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8> **정책과제 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세부과제 지속추진 필요성 평가** (단위: 명, %, 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 축소	축소	유지	확대	매우 확대	평균	표준 편차	이행성과 평가	
									평균	표준 편차
1-1.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24시간, 중고령, 탈시설 등)										
(1.1.1) 시비추가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 추가 지원	25	0 (0)	1 (4)	5 (20)	11 (44)	8 (32)	4.04	0.84	1.84	0.90
(1.1.2)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25	0 (0)	1 (4)	7 (28)	8 (32)	9 (36)	4.0	0.91	3.56	1.29
(1.1.3)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5	0 (0)	1 (4)	3 (12)	10 (40)	11 (44)	4.24	0.83	2.56	1.04
1.2. 성인 최중증장애인(발달· · 뇌병변 장애인 등) 낮활동 지원 확대										
(1.2.1)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운영	25	0 (0)	1 (4)	5 (20)	12 (48)	7 (28)	4.0	0.82	2.96	1.06
(1.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5	1 (4)	0 (0)	16 (64)	5 (20)	3 (12)	3.36	0.86	3.56	1.23
(1.2.3) 중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25	0 (0)	0 (0)	6 (24)	13 (52)	6 (24)	4.0	0.71	1.88	0.93
1.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1.3.1)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25	0 (0)	1 (4)	8 (32)	10 (40)	6 (24)	3.84	0.85	3.12	1.09
1.4.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1.4.1) 신생아 양육서비스 시간 확대	25	0 (0)	0 (0)	5 (20)	13 (52)	7 (28)	4.08	0.70	3.6	1.04
(1.4.2) 만 4세미만 서비스 시간 확대	25	0 (0)	0 (0)	5 (20)	12 (48)	8 (32)	4.12	0.73	3.8	1.26

[정책과제 2]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에서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세부과제가 4.44점으로 가장 확대되어야 할 과제로 평가받았으나, 민간의료기관의 미비한 참여를 사유로 낮은 이행률로 인해 이행성과 평가점수는 2.2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받았다.

<표 4-19> **정책과제 2.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세부과제 지속추진 필요성 평가** (단위: 명, %, 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 축소	축소	유지	확대	매우 확대	평균	표준 편차	이행성과 평가	
									평균	표준 편차
2.1.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2.1.1) 지역장애인보건 의료센터 운영	25	0 (0)	0 (0)	4 (16)	13 (52)	8 (32)	4.16	0.69	2.96	1.40
(2.1.2)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25	0 (0)	0 (0)	1 (4)	12 (48)	12 (48)	4.44	0.58	2.2	1.12
2.2.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2.2.1)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25	0 (0)	1 (4)	7 (28)	11 (44)	6 (24)	3.88	0.83	2.8	1.04

(2) 핵심과제 2 :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정책과제 1] '이동·의사소통 편의 보장'에서는 취업활동 및 자기계발 관련 활동에 대해 전문문자통역사가 현장 지원 및 원격 지원해주는 서비스인 '청각장애인 문자 통역 지원' 세부과제가 4.08로 가장 확대가 필요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대상을 청년 청각장애인(20~29세) 에서 전연령 청각장애인으로 확대했으며 상향조정한 목표치를 이행 완료했기에 이행성과 평가 결과 또한 3.48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표 4-20> **정책과제 1. 이동·의사소통 편의 보장 세부과제 지속추진 필요성 평가** (단위: 명, %, 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 축소	축소	유지	확대	매우 확대	평균	표준 편차	이행성과 평가	
									평균	표준 편차
1.1.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										
(1.1.1)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	25	1 (4)	1 (4)	3 (12)	12 (48)	8 (32)	4.0	1.00	2.68	1.18
1.2. 뇌병변·발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1.2.1)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 권리 증진센터 설치· 운영	25	0 (0)	3 (12)	2 (8)	13 (52)	7 (28)	3.96	0.93	3.04	1.17
1.3.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1.3.1) 청각장애인 문자 통역 지원	25	0 (0)	1 (4)	4 (16)	12 (48)	8 (32)	4.08	0.81	3.48	1.26

[정책과제 2] '신거주모형 개발 및 주거지원'은 모든 세부과제의 확대 필요성이 4점 이상으로 확대가 필요한 정책과제로 평가되었다.

세부사업 '2.1. 장애인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 및 지원주택 확대'는 신 거주모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여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를 결합 지원했다. 신 거주모형 개발은 목표를 수정하여 이행했으며, 장애인지원주택 공급은 기존보다 목표치를 상향하여 이행 중에 있어 두 세부과제 모두 4.48점으로 매우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장애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호수' 세부과제의 경우 4.44점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받았으나, 이행성과 평가 결과는 1.84점으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정책과제 2. 신주거모형 개발 및 주거지원 세부과제 지속추진 필요성 평가 (단위: 명, %, 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 축소	축소	유지	확대	매우 확대	평균	표준 편차	이행성과 평가	
									평균	표준 편차
2.1. 장애인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 및 지원주택 확대										
(2.1.1) 신거주모형 개발	25	0 (0)	0 (0)	1 (4)	11 (44)	13 (52)	4.48	0.59	3.16	1.31
(2.1.2) 장애인지원주택 공급	25	0 (0)	0 (0)	1 (4)	11 (44)	13 (52)	4.48	0.59	2.72	1.06
2.2. 저소득 중증장애인 임대 · 전세 주택 제공 확대										
(2.2.1) 장애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호수	25	0 (0)	0 (0)	0 (0)	14 (56)	11 (44)	4.44	0.51	1.84	0.99
(2.2.2) 전세보증금 지원 확대	25	0 (0)	1 (4)	1 (4)	10 (40)	13 (52)	4.4	0.76	2.28	1.10
2.3.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 확대										
(2.3.1)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	25	0 (0)	0 (0)	4 (16)	9 (36)	12 (48)	4.32	0.75	2.6	1.12

(3) 핵심과제 3 :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정책과제 1] '생활안정 지원'의 경우에도 모든 세부과제의 확대 필요성이 4점 이상으로 확대가 필요한 정책과제로 평가되었다.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에서 서울시는 2021년 5월 부양의무자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과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급여수급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4.32점으로 매우 확대가 필요한 세부과제라고 평가되었다. 사업은 이행완료되었으며 이행성과 평가점수는 3.44점으로 나타났다.

<표 4-22> **정책과제 1. 생활안정 지원 세부과제 지속추진 필요성 평가** (단위: 명, %, 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 축소	축소	유지	확대	매우 확대	평균	표준 편차	이행성과 평가	
									평균	표준 편차
1.1.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1.1.1)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형성 지원(이룸통장)	25	0 (0)	0 (0)	5 (20)	12 (48)	8 (32)	4.12	0.73	3.2	1.08
1.2.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1.2.1)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25	0 (0)	0 (0)	2 (8)	13 (52)	10 (40)	4.32	0.63	3.44	1.33
1.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1.3.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25	0 (0)	0 (0)	3 (12)	12 (48)	10 (40)	4.28	0.68	3.12	1.24

[정책과제 2]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의 세부사업 2.2.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 확대’는 18세 이상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과 같이 파견하여 장애특성에 맞는 사업체에 배치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업체 발굴 난항과 센터인력 부족 등 현실적 제약사항이 발생하여 세부추진목표를 모두 기존보다 목표치를 하향하고 이행 중에 있어 이행성과 평가점수가 각각 2.92점, 2.72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두 세부과제 모두 3.96점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4-23> **정책과제 2.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세부과제 지속추진 필요성 평가** (단위: 명, %, 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 축소	축소	유지	확대	매우 확대	평균	표준 편차	이행성과 평가	
									평균	표준 편차
2.1. 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2.1.1)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지원사업	25	0 (0)	2 (8)	5 (20)	15 (60)	3 (12)	3.76	0.78	3.28	1.17
(2.1.2)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	25	0 (0)	2 (8)	7 (28)	11 (44)	5 (20)	3.76	0.88	3.4	1.12
(2.1.3) 발달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일자리	25	0 (0)	1 (4)	6 (24)	14 (56)	4 (16)	3.84	0.75	3.36	1.19

정책과제	N	매우 축소	축소	유지	확대	매우 확대	평균	표준 편차	이행성과 평가	
									평균	표준 편차
2.2. 중증장애인 현장 중심 직업훈련 지원 확대										
(2.2.1) 발달장애인 현장 중심 직업 훈련 및 취업	25	1 (4)	0 (0)	4 (16)	14 (56)	6 (24)	3.96	0.89	2.92	1.19
(2.2.2) 발달장애인 취업을 위한 직무지도원 양성	25	0 (0)	1 (4)	5 (20)	13 (52)	6 (24)	3.96	0.79	2.72	1.10
2.3.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다각화 (인력충원)										
(2.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보조금지원	25	1 (4)	1 (4)	9 (36)	8 (32)	6 (24)	3.68	1.03	3.64	0.81
(2.3.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 아이템 개발	25	1 (4)	1 (4)	8 (32)	9 (36)	6 (24)	3.72	1.02	3.04	0.89
(2.3.3) 중증장애인의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업종 전환지원	25	1 (4)	2 (8)	4 (16)	13 (52)	5 (20)	3.76	1.01	3.48	1.08

(4) 핵심과제 4 : 문화·체육·여가 생활 및 가족 지원

[정책과제 1] '문화·체육·여가 생활 활성화'의 '무장애 관광콘텐츠 확충' 세부과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인 3.8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행성과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인 1.92점으로 평가되었다. '무장애 리모델링'은 단차제거, 화장실, 복도 휠체어 회전반경 확보, 스위치 등 편의시설 위치 조정 등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세부과제로 4.36점으로 매우 확대가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지만 이행성과 평가 결과 낮은 이행률로 인해 2.32점으로 나타났다.

<표 4-24> **정책과제 1. 문화·체육·여가 생활 활성화 세부과제 지속추진 필요성 평가** (단위: 명,%,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 축소	축소	유지	확대	매우 확대	평균	표준 편차	이행성과 평가	
									평균	표준 편차
1.1.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1.1.1)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5	0 (0)	0 (0)	3 (12)	14 (56)	8 (32)	4.2	0.65	3.56	1.26
(1.1.2) 무장애 관광시설 인증제 운영	25	0 (0)	0 (0)	5 (20)	12 (48)	8 (32)	4.12	0.73	3.56	1.23
(1.1.3)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 도입·운영	25	0 (0)	0 (0)	6 (24)	9 (36)	10 (40)	4.16	0.80	3.48	1.39
(1.1.4) 무장애 관광콘텐츠 확충	25	0 (0)	0 (0)	3 (12)	13 (52)	7 (28)	3.84	1.30	1.92	0.86

정책과제	N	매우 축소	축소	유지	확대	매우 확대	평균	표준 편차	이행성과 평가	
									평균	표준 편차
(1.1.5) 무장애 관광 포털 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	25	0 (0)	1 (4)	6 (24)	11 (44)	7 (28)	3.96	0.84	3.2	1.00
(1.1.6) 관광약자 사회적 인식개선	25	0 (0)	1 (4)	6 (24)	11 (44)	7 (28)	3.96	0.84	2.64	0.99
(1.1.7)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지원	25	0 (0)	2 (8)	4 (16)	11 (44)	8 (32)	4.0	0.91	2.68	1.25
1.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육 활동										
(1.2.1)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	25	0 (0)	0 (0)	9 (36)	6 (24)	10 (40)	4.04	0.89	3.04	1.34
(1.2.2) 무장애 리모델링	25	0 (0)	0 (0)	3 (12)	10 (40)	12 (48)	4.36	0.70	2.32	1.03
(1.2.3) 생활체육 활성화	25	0 (0)	0 (0)	5 (20)	12 (48)	8 (32)	4.12	0.73	3	1.41
1.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의 전당 '어울림플라자' 건립										
(1.3.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의 전당 '어울림 플라자' 조성	25	0 (0)	0 (0)	7 (28)	8 (32)	10 (40)	4.12	0.83	3.16	1.43

[정책과제 2] '장애인 가족 지원'의 경우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확대 운영'은 4.04점으로 매우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광역 · 기초 장애인가족 지원 센터 운영은 3.52점으로 유지 및 확대되어야 할 세부과제로 응답했다.

<표 4-25> 정책과제 2. 장애인 가족 지원

(단위: 명, %, 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 축소	축소	유지	확대	매우 확대	평균	표준 편차	이행성과 평가	
									평균	표준 편차
2.1. 장애인 돌봄 가족 휴식제 확대 운영										
(2.1.1)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확대 운영	25	0 (0)	0 (0)	6 (24)	12 (48)	7 (28)	4.04	0.73	3.24	1.36
2.2.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전 자치구 확대 운영										
(2.2.1) 광역 · 기초 장애인가족 지원 센터 운영	25	1 (4)	1 (4)	12 (48)	6 (24)	5 (20)	3.52	1.00	3.48	1.36

(5) 핵심과제 5 :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강화

[정책과제 1]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 에서는 보조금 지원센터를 22년까지 58개소로 확대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목표치를 이행했으며, 센터 당 종사 인력을 확대하는 사업을 이행 중이다.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세부과제는 4.24점으로 매우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되었으나, 이행성과 평가 결과 2.9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표 4-26> **정책과제 1.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 세부과제 지속추진 필요성 평가** (단위: 명, %, 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 축소	축소	유지	확대	매우 확대	평균	표준 편차	이행성과 평가	
									평균	표준 편차
1.1.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원 확대 및 강화										
(1.1.1) 미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25	0 (0)	1 (4)	5 (20)	12 (48)	7 (28)	4.0	0.82	3.56	1.33
(1.1.2) 지원센터 종사 인력 확대	25	0 (0)	0 (0)	9 (36)	8 (32)	8 (32)	3.96	0.84	3.04	1.31
(1.1.3)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25	0 (0)	0 (0)	7 (28)	5 (20)	13 (52)	4.24	0.88	2.92	1.41

[정책과제 2] '자립 관련 기관·인력에 대한 지원' 중 세부사업 2.1.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지원 및 실습기관 지정 운영'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실습기관 지정은 22년까지 12개소를 이행했으며, 교육기관 확대 및 교육 전문화 우선 추진을 사유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이행 중이다. 두 개의 세부과제 모두 4.04점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세부사업 2.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운영자 및 인력 역량 강화'는 자립생활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 8시간 보수교육을 의무실시하고, 자립생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특화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의 어려움을 사유로 이행 중이다. 이행성과 평가점수는 1.8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나, 필요성 평가에서는 3.96점으로 확대가 매우 필요한 과제라고 평가되었다.

<표 4-27> **정책과제 2. 자립관련 기관·인력에 대한 지원 세부과제 지속추진 필요성 평가** (단위: 명, %, 점(5점만점))

정책과제	N	매우 축소	축소	유지	확대	매우 확대	평균	표준 편차	이행성과 평가	
									평균	표준 편차
2.1.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 운영 및 보수교육 지원										
(2.1.1)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25	0 (0)	2 (8)	6 (24)	6 (24)	11 (44)	4.04	1.02	3.64	1.25
(2.1.2) 실습기관 지정 → 교육기관 확대	25	0 (0)	1 (4)	6 (24)	9 (36)	9 (36)	4.04	0.89	2.52	1.05
2.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운영자 및 인력 역량 강화										
(2.2.1) IL센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25	0 (0)	0 (0)	9 (36)	7 (28)	9 (36)	4.0	0.87	2.16	1.03
(2.2.2) 특화강좌 개설 운영	25	0 (0)	1 (4)	6 (24)	11 (44)	7 (28)	3.96	0.84	1.8	1.12

제3절 제2기 개선과제 도출 및 추진 필요성 평가결과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분야 개선과제 추진 필요성 평가

1) 활동서비스 지원 강화 분야 정책개선과제 필요성 평가 결과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활동서비스 지원 강화 분야 개선과제에 대한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에 있어 아래의 〈표 4-28〉과 같이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정신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제공시간 확대(5년 이상) 및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확대, 중복장애인 활동시간 증가 및 지원 단가 확대 등이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또한 사용자 선택형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도입, 긴급상황 대처 일시적 추가 활동지원서비스 확충 등의 활동지원서비스의 사용자 중심의 신규 서비스 도입의 과제가 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표 4-28> **활동서비스 지원 강화 분야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필요성 평가 결과** (단위: 명, 점(7점만점))

정책 개선과제	1기 과제 확대 의견(%)[9]	유사 제안 수[10]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
•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정신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76	5	5.96
•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제공시간 확대(5년 이상) 및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확대 - 중복장애인 활동시간 증가 및 지원 단가 확대	84	6	5.87
• 활동지원서비스의 사용자 중심의 신규 서비스 도입 - 사용자 선택형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도입 - 긴급상황 대처 일시적 추가 활동지원서비스 확충 - 서비스 지원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 앱개발 보급 - 행동발달증진센터 추가 도입 필요	신규	3	5.87
•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 서울시 자체 활동지원서비스 필요조사 실시를 통해 중앙정부 부족 서비스 제공 방식 도입	76	3	5.57
•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 및 추가지원 인원 확대 (준독거, 최중증장애인 등) - 전문활동지원서비스(가칭)제도 도입(방문간호 등 실효성있게 추진 필요)	68	5	5.43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활동지원서비스 신설 - 필요한 경우 경증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개선	신규	3	4.96

2) 건강관리 지원 강화 분야 정책개선과제 필요성 평가 결과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건강관리 지원 강화 분야 개선과제에 대한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에 있어 아래의 〈표 4-29〉와 같이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강화에 필요한 장애 친화 의료 검진기관 확대 및 전문종합건강검진 센터 지정,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기관 확대, 의료비 바우처 지원과 장애인 감염병 대응 핫라인 구축, 장애인 구강 관련 건강관리 지원 강화 등이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표 4-29> 건강관리 지원 강화 분야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필요성 평가 결과 (단위: 명, 점(7점만점))

정책 개선과제	1기 과제 확대 의견(%)	유사 제안 수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
•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강화 - 장애 친화 의료 검진기관 확대 및 전문종합건강검진 센터 지정 -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기관 확대 - 의료비 바우처 지원	신규	5	6.22
• 장애인 감염병 대응 핫라인 구축 - 집중관리군 관리 및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 감염병 관련 PCR · 예방접종, 이동지원 강화	신규	5	5.78
•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강화(구강) - 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추가 설치 - 발달장애인 전문 치과병원 지정 및 확대 - 치과치료 지원 범위 및 금액 확대	신규	5	5.61
•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강화 - 노화 · 성인병 대응 강화 (약물 · 운동치료, 영양관리 등)	신규	3	5.57
•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 권역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추가 신설 - 장애인진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원 설립	96	5	5.48
•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 의료이용 이동권 보장 의료이용교통수단 마련 - 장애친화 병원 확대 및 의료기관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및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신규	8	5.35
• 서울형 '주치의료인' 제도 마련 - 주치의료체계 마련 및 정기적 비대면 진료 시행 - 노령장애인 전문의 및 병원 추가 도입	신규	3	5.3

9) 1기 과제 확대 의견(%) : 제시된 과제가 1기 과제의 확대 내용인 경우, 지난 1차 조사에서 확대 또는 매우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
10) 유사제안 수(건) : 1차 조사에서 전문가가 제시한 유사 과제의 건수

2.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분야 개선과제 추진 필요성 평가

1)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과 의사소통 지원 분야 정책개선과제 필요성 평가 결과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과 의사소통 지원 분야 개선과제에 대한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에 있어 아래의 〈표 4-30〉과 같이 바우처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지하철 이동권 보장 등이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세부과제로는 바우처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에서 장애인 콜택시이용자 중심 운영체계 개편, 장애인 바우처 택시 지원 비율 상향,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콜밴 리프트 장착 운행 지원 과제가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서는 장애인 학생지원센터 수어통역(강의)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 및 지원의 과제들이 필요한 과제로 제안되었다. 또한 지하철 이동권 보장에서는 엘리베이터 100% 설치 및 1역사 2동선 설치, 지하철 승강장, 열차 간격 및 단차 조절, 휠체어 장애인 전용 탑승 구역 설치 등 안전사고 대책 마련의 과제들이 필요한 과제로 제안되었다.

<표 4-30>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과 의사소통 지원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필요성 평가 결과 (단위:명,점(7점만점))

정책 개선과제	1기 과제 확대 의견(%)	유사 제안 수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
• 바우처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 장애인 콜택시이용자 중심 운영체계 개편 - 장애인 바우처 택시 지원 비율 상향 -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콜밴 리프트 장착 운행 지원	80	16	6.13
•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 장애인 학생지원센터 수어통역(강의)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 및 지원 (국내 미개발, 국외 활발, (추가)대인의사소통 지원방식 고려)	80	2	5.57
• 지하철 이동권 보장 - 엘리베이터 100% 설치 및 1역사 2동선 설치 - 지하철 승강장, 열차 간격 및 단차 조절, 휠체어 장애인 전용 탑승 구역 설치 등 안전사고 대책 마련	신규	9	5.57
• 버스 이용 이동권 보장 - 모든 노선에서의 저상버스 도입 및 확대 - 2025년 저상버스 100% 도입 가속화(마을버스 등)	신규	13	5.43
• 이동권을 위한 콜센터 및 복지콜 확대 - 수도권 권역 장애인 콜택시를 위한 콜센터 운영 - 장애인 복지콜(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확대 필요	신규	2	5.13
• 특별교통수단 확대 - 특별교통수단의 수도권 전역 확대 운행 - 단체이동지원을 위한 '서울장애인버스' 확보 - 감염병 관련 방역차량 지원 확대 - 자치구별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	신규	8	5.09

2) 주거지원 강화 분야 정책개선과제 필요성 평가 결과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거지원 강화 분야 개선과제에 대한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에 있어 아래의 〈표 4-31〉과 같이 장애인 지원주택 관련 서비스 강화,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전세보증금 지원 확대 등이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장애인 지원주택 관련 서비스 강화에서는 장애인 1인가구, 탈시설 장애인, 탈가정 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부부 장애인, 위기가정, 정신장애인 등 지원주택 대상 확대 및 서비스 강화 ,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사업자 선정 강화 과제가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에서는 임대 및 주택 명의 지원 확대 필요, 접근성 확보 주거 지원 확대가 필요한 과제로 제안되었다. 전세보증금 지원 확대에서는 장애인 전세금 지원금액 상향,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조정(직업 및 주거계획 추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확대 등의 과제들이 필요한 과제로 제안되었다.

<표 4-31> **주거지원 강화 분야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정책 필요성 평가 결과** (단위:명,점(7점만점))

정책 개선과제	1기 과제 확대 의견(%)	유사 제안 수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
•장애인 지원주택 관련 서비스 강화 - 장애인 1인가구, 탈시설 장애인, 탈가정 장애인, 부부 장애인, 위기가정, 정신장애인 등 지원주택 대상 확대 및 서비스 강화 -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사업자 선정 강화	96	10	6.0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 임대 및 주택 명의 지원 확대 필요 - 접근성 확보 주거 지원 확대	96	5	5.78
•전세보증금 지원 확대 - 장애인 전세금 지원금액 상향 -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조정(직업 및 주거계획 추가)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확대	92	7	5.52
•지원주택 거주 장애인의 서비스 모니터링 - 최중증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자문 및 지원 확대 - 긴급 돌봄 거주시설 확충 필요 - 인권침해 및 위기피해 장애인 긴급지원 등 안전한 주거 강화	신규	3	5.35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및 지원 확대 - 정신질환(장애인)자 주거지원 및 정착지원사업 확대 및 탈시설 정착금 확대 - 인권침해, 시설비리 발생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 지원 이행 - 비수급 탈시설 장애인 생계비 지원 확대 - 탈시설 후 가족 동반 입주 가능 주거방안 필요	신규	7	5.17
•신주거모형 개발 - 주거선택권 부여 : 시설, 주택 등 생활 선택권 부여 - 자립생활 주택 및 지원주택 정책 구분 필요	96	3	4.91

3.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분야 개선과제 추진 필요성 평가

1) 생활안정 지원 분야 정책개선과제 필요성 평가 결과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생활안정 지원 분야 개선과제에 대한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에 있어 아래의 〈표 4-32〉과 같이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발달장애 당사자의 가족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등이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표 4-32> 생활안정 지원 분야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정책 필요성 평가 결과 (단위:명,점(7점만점))

정책 개선과제	1기 과제 확대 의견(%)	유사 제안 수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 대상범위 및 금액 확대 - 서울형 장애인 생활수당, 보충급여 도입 - 장애인 소득공제율 인상	60	12	5.78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 장애인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프로그램(재산 형성 저축 ,비과세 혹은 매칭펀드 저축 등) - 사각지대 장애인들의 희망이음 통장 대상 확대	60	5	5.39
•발달장애 당사자의 가족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 가족의 경제력에 의해 기초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발달장애 당사자를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	신규	2	5.39

2) 고용 지원 분야 정책개선과제 필요성 평가 결과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고용 지원 분야 개선과제에 대한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에 있어 아래의 〈표 4-33〉과 같이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장애인 대상별, 직종별, 직무별, 업종별 일자리 모델 개발, 발달장애인 현장 중심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장애인 우선고용, 고용유지 방안 모색 순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세부과제로는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장애인 대상별, 직종별, 직무별, 업종별 일자리 모델 개발에서는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 각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개선, 수급자 · 차상위 계층 일자리 진입모델 개발이 필요한 과제로 제안되었으며, 발달장애인 현장 중심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에서는 장애인 훈련수당 지급, 재택가능 업종 취업지원(홈쇼핑 전화상담 ,텔레마케터,

헬스키퍼), 행정 사무보조(공무원, 일반기업) 직군 취업 지원 등이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제안되었다.

또한 장애인 우선고용, 고용유지 방안 모색에서는 시설폐지에 따른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장애인 우선 고용으로 조례 제정,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직업활동 기회 제공, 취업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6개월)가 될 때까지 기초수급권 및 의료수급 유예기간 마련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고용 지원 분야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제1기 과제의 확대 과제 뿐만 아니라 신규 제시된 안도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정책 필요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표 4-33> 고용 지원 분야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정책 필요성 평가 결과 (단위:명,점(7점만점))

정책 개선과제	1기 과제 확대 의견(%)	유사 제안 수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
•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장애인 대상별, 직종별, 직무별, 업종별 일자리 모델 개발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 각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개선 -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자리 진입모델 개발	신규	15	5.27
• 발달장애인 현장 중심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 장애인 훈련수당 지급 - 재택가능 업종 취업지원(홈쇼핑 전화상담 ,텔레마케터, 헬스키퍼) - 행정 사무보조(공무원, 일반기업) 직군 취업 지원	96	6	5.23
• 장애인 우선고용, 고용유지 방안 모색 - 장애인 우선 고용으로 조례 제정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직업활동 기회 제공 -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6개월)가 될 때까지 기초수급권 및 의료수급 유예기간 마련	신규	5	5.23
•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장애인 대상별, 직종별, 직무별, 업종별 일자리 확대 -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위탁기관 전담인력 확대(5명당 전담인력 1명 비율 확대) - 시설보호형 직업재활 정책 축소, 권리형 일자리 및 신규기관 확대 - 발달장애인 뉴딜 일자리사업 참여 확대와 지원	신규	6	5.18
• 중증장애인의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업종 전환지원 - 장애인 창업 지원(가족창업 또는 소집단 창업 지원 등)	96	2	4.91
• '서울시 장애인 통합일자리 지원 센터' 장애인 취업 지원 기능 강화 - '중도 중증장애인 일자리 상담 센터'의 기능 신설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센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경영 지원 센터, 커리어 센터 등 조례를 통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 - 커리어 플러스 센터, 퍼스트잡 확대와 운영 지원	신규	5	4.86

4.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및 가족 지원 분야 개선과제 추진 필요성 평가

1)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등의 지원 분야 정책개선과제 필요성 평가 결과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등의 지원 분야 개선과제에 대한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에 있어 아래의 〈표 4-34〉과 같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실내 체육시설 확보 및 확대,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순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에서는 대상별 맞춤형 주간활동 확대 및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비대면 상황에서 동영상 등 개발 보급), 비장애인 대상의 문화 · 체육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마련 필요, 체육(문화) 바우처 지원체계 마련 및 바우처 확대가 제안되었다. 실내 체육시설 확보 및 확대에서는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실내 체육시설 확보 및 확대 필요, 지역 거점 공간이나 전염병 발생에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의 과제가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제안되었다.

<표 4-34> **문화 · 체육 · 여가생활 지원 분야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정책 필요성 평가 결과** (단위: 명, 점(7점만점))

정책 개선과제	1기 과제 확대 의견(%)	유사 제안 수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 대상별 맞춤형 주간활동 확대 및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비대면 상황에서 동영상 등 개발 보급) - 비장애인 대상의 문화 · 체육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체육(문화) 바우처 지원체계 마련 및 바우처 확대	80	12	6.04
• 실내 체육시설 확보 및 확대 -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실내 체육시설 확보 및 확대 필요 - 지역 거점 공간이나 전염병 발생에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	64	6	5.65
•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문화, 체육,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개발 - 장애인 예술문화인의 활동 지원(전시, 판매, 저작권 관리 등을 서울시 차원 지원) - 서울시 장애인 인권영화제 지원사업 예산 확대 - 팬데믹 사회에 적용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 가족지원 서비스 개발 - 장애인 예술합창단 및 관현악단 설립 및 지원	신규	12	5.65
•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 저상 시티투어 버스 도입 등 무장애 관광 활성화 - 고궁 등 유적지에 장애인을 위한 해설사 배치	88	4	5.52
• 무장애 관광콘텐츠 확충 - 장애인 '추억 찾아주기 테마여행'(고향 만들어주기)사업 추진 - 서울지역의 역사 및 관광지에 QR코드를 활용한 수어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	80	2	5.13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서는 문화, 체육,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개발, 장애인 예술문화인의 활동 지원(전시, 판매, 저작권 관리 등을 서울시 차원 지원), 장애인 문화체육 증진방안 마련 및 체육규정 제정, 서울시 장애인 인권영화제 지원사업 예산 확대, 팬데믹 사회에 적용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 가족지원 서비스 개발, 장애인 예술합창단 및 관현악단 설립 및 지원 등 다양한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로 제안되었다.

2) 장애인 가족 지원 분야 정책개선과제 필요성 평가 결과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장애인 가족 지원 분야 개선과제에 대한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에 있어 아래의 〈표 4-35〉과 같이 가족 돌봄 휴식지원 확대, 발달 · 청각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역할 강화 과제들이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다만, 가족 돌봄 휴식지원 확대를 제외한 다른 과제의 경우 다른 분야의 제안된 과제보다 추진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지는 않았다.

<표 4-35> 장애인 가족 지원 분야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정책 필요성 평가 결과 (단위:명,점(7점만점))

정책 개선과제	1기 과제 확대 의견(%)	유사 제안 수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
• 가족 돌봄 휴식지원 확대 - 대체돌봄 인력 제공, 요양 장기 서비스 대상자 확대 등 돌봄 지원체계 강화 - 서울시 차원에서의 홈헬퍼(가족지원 전담인력 양성, 배치 등)사업홍보 확대(위기가정 사례 발굴 및 지원)	76	6	5.65
• 발달, 청각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발달장애인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 전문상담 확대 -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확대	신규	6	5.0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역할 강화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역할 강화 - 센터 이용 장애 유형 확대 - 초기 부모상담 및 지원 전달체계 강화	44	6	4.78
• 장애인 돌봄 수당 도입 - 발달장애인 또는 뇌병변 장애인을 돌보는 가정의 돌봄 수당 도입	신규	3	4.61

5.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강화 분야 개선과제 추진 필요성 평가

1) 서비스 거점 강화 분야 정책개선과제 필요성 평가 결과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서비스 거점 강화 분야 개선과제에 대한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에 있어 아래의 〈표 4-36〉과 같이 장애인 건강지원 서비스 강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IL) 지원 강화, 지역 밀착형 서비스 거점장소 확대 과제 순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과제들은 다른 각 분야 서비스 과제 대비 추진 필요성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 주간활동 서비스센터의 전담인력 처우 개선은 해당 분야 타 과제보다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36> 서비스 거점 강화 분야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정책 필요성 평가 결과 (단위:명,점(7점만점))

정책 개선과제	1기 과제 확대 의견(%)	유사 제안 수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
•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IL) 지원 강화 - 센터 지침 등 개정을 통해 IL센터 운영 개선 -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정보제공, 동료상담 등의 역할 수행 등 다양한 역할 수행 필요 - 자립지원 서비스 기관 네트워크 구축 - 자립생활센터 법제도화를 통한 안전적 운영 및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급여기준 재활시설 기준 80%))	71	12	5.43
• 지역 밀착형 서비스 거점장소 확대 - 서비스 거점 장소로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기관, 보건소 등 지정 - 감염병 대비 큰 복지관이 아닌 지역사회에 보다 밀착형의 작은 규모의 복지관(분관 형태)이 필요	신규	2	4.78
• 각 자치구별 주간보호 기능 확대 - 정신장애인 통합지원센터 거점별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기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	신규	3	4.57

2) 관련기관 및 인력 지원 분야 정책개선과제 필요성 평가 결과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기관 및 인력 지원 분야 개선과제에 대한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에 있어 아래의 〈표 4-37〉과 같이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센터 전담인력 수가 · 처우 개선, 활동지원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통해 인력 양성,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과제 순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센터 전담인력 수가 · 처우 개선의 경우 특화서비스(도전적 행동 지닌 발달장애당사자 지원)에 종사하는 직원에겐 인센티브 지급방안,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활동지원 서비스별 차등 행위별 수가제 강화 과제가 활동지원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통해 인력 양성의 경우 적절한 활동지원사 배치 필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관리 필요, 전문분야별 활동지원사 육성 필요,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에서는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감수성 교육 등 강화, 장애인 고용사업장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과제들이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표 4-37> 기관 및 인력 지원 분야 정책개선과제 제안 수와 정책 필요성 평가 결과 (단위: 명, 점(7점만점))

정책 개선과제	1기 과제 확대 의견(%)	유사 제안 수	정책 추진 필요성 평가
•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센터 전담인력 수가, 처우 개선 - 특화서비스(도전적 행동 지닌 발달장애당사자 지원)에 종사하는 직원에겐 인센티브 지급 방안 -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활동지원서비스별 차등 행위별 수가제 강화	신규	8	5.35
• 활동지원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통해 인력 양성 - 적절한 활동지원사 배치 필요 -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관리 필요 - 전문분야별 활동지원사 육성 필요	68	2	5.17
•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감수성 교육 등 강화 - 장애인 고용사업장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신규	2	5.14
• 장애인 분야별 전문서비스 상담인력 확대 - 장애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등 전문상담 기능의 강화 및 상담사 배치	신규	7	4.96
• 실습기관 지정 및 교육기관 확대 - 복지일자리, 공공일자리, 권리형 일자리 등 위탁기관 확대	72	2	4.87

제4절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FGI) 결과

1. 조사목적 및 대상

1) 조사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사항과 정책대상자 관점의 정책수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대상자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수혜자 집단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방법은 연구자의 연구대상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질문과 응답의 과정을 거쳐 참여자들의 관점을 조사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질적 조사방법이다. 특히,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는 표적이 되는 집단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질문에 맞추어 집중적인 대화를 통해 단기간에 많은 양의 의견을 이끌어 내는데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견해와 관점, 경험 등을 연구 질문에 맞추어 조사할 수 있다.

이는 정책연구에 있어서도 유용한 방법으로 정책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책 수혜 경험과 그에 기반을 둔 정책 의견, 대상자 실수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요한 방법이다. 또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2018.9.26. 일부개정)는 장애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바, 제2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주요 단체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으로서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자의 주요 집단을 표적집단으로 하여 서울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이동권 및 의사소통 지원 등 사회활동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문화 · 체육 · 여가생활 지원, 주거 및 장애인 가족 지원과 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대상자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상자 관점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정책 수요가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구분하여 대상자 관점에서의 정책 실수요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향과 세부 실행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적인 지원서비스 대상자를 인터뷰 대상으로서 설계하지 않고, 대상자 집단을 대변할 수 있으면서 개별 대상자의 복지지원과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단체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참여자로 조사대상을 구성하였다. 이는 서울시의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5개년 계획이 일상생활 지원, 이동권 및 의사소통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주거 및 장애인 가족 지원 등 개별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서비스 거점 강화와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의 전달 체계에 관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기에 서울시 전반의 장애인 지원에 대한 내용과 전달체계 관련 정책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단체에 소속된 주요 이해관계자들 스스로가 직접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는 정책대상자이거나 정책대상자의 권리와 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에 정책을 건의하거나 정책의 전달체계에서 대상자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므로 개별 장애인보다 서울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정책을 보기에 보다 적절한 인터뷰 대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터뷰 대상이 되는 단체의 선정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애유형에 따라 관심이 있는 정책과 정책의 수요가 다를 수 있는 점에 신체적 장애에 중점을 둔 단체와 정신 · 발달 장애에 중점을 둔 단체의 안배를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5개년 계획은 장애유형을 모두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으로 특정 장애유형 분야의 견해에 지나친 쏠림이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선정하여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38>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명단

장애유형	인터뷰 대상 (소속단체)
신체장애	유OO (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
	임OO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협회)
	황OO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OO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은OO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신 · 발달장애	김OO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이OO (서울발달장애인센터)
	김OO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주OO (서울시장애인부모회)
	허OO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2.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 질문 및 분석 개요

본 조사는 서울시 제2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의 과제 도출을 위해 서울시의 장애인 대상 복지정책의 개선사항과 복지 대상자 관점에서의 정책 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인터뷰 진행을 위한 설문지는 정책 분야별 단순 기대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주요 이슈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드러난 지난 1기 과제에 대한 견해와 대상자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 응답이 가능하도록 〈표 4-39〉와 같이 분야별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구조화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4-39>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FGI) 질문지

분야	질문 내용	
제2기 계획 방향성	제1기 정책과제	- 제1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의 5대 핵심과제 구성에 대한 의견
	제2기 중점 개선 방향	- 제2기 계획 수립에 있어 서울시가 중점 지원해야 하는 분야
일상생활 지원	정책 개선 방향	-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에 있어 지원 확대로 우선 고려되야 할 대상 -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의 필요성과 확대의 방향 - 제2기 건강관리 지원 과제의 개선 방향
	활동지원 서비스	-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 -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건강관리 지원	-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 -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중요 과제 - 장애 친화 검진기관과 병원의 확대 방향 및 병원 이동권 강화를 위한 필요 과제
주거 및 가족 지원	정책 개선 방향	- 제1기 주거지원은 장애인지원 주택, 임대주택 공급등 양적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과제로 추진되었는데, 제2기의 주거서비스의 강화 방향 - 장애인 가족 지원의 방향
	주거지원 양적 확대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지원 확대에 필요한 과제 - 부동산 가격 증가 이슈에 따른 대응 과제
	주거지원 질적 확대	- 장애 당사자 맞춤 주거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 주거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타 과제
	장애인 가족 지원	-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항 - 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 과제

분야	질문 내용	
문화 · 체육 · 여가생활 지원	정책 개선 방향	- 문화 · 관광 · 여가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제2기 방향성 - 생활체육 지원 강화를 위한 주요 고려 사항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지원	- 문화 · 관광 ·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개선 과제 -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문화 콘텐츠, 관광 프로그램의 개선 과제
	생활체육 지원	- 체육 생활 지원을 위해 인프라 조성이 시급한 과제 -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체육 프로그램 개선 과제 - 기타 체육 분야 장애인 지원 개선과제
경제적 자립 지원	정책 개선 방향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 - 제2기 일자리 지원 정책의 방향성
	급여 지원	- 장애인 급여 지원 강화 방안
	일자리 지원	- 공공일자리 확대의 개선 방향 - 장애인 취업확대 및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 - 기타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
사회활동 지원	이동권의 증진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재 서비스의 개선 방안
	의사소통 지원	-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추진 필요 과제 -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해 지원 확대가 필요한 대상 - 제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보조기구의 지원 필요성 및 지원 방향
전달체계 강화	기관 및 인력 지원	- 장애인 서비스 기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과제 - 서비스 기관의 역량 및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강화 방안 - 기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
	서비스 거점 강화	- 서비스 거점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

3.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 내용

1) 일상생활 지원

(1)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①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의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강화에 있어서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제기된 문제는 노인 장기요양 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차이로 인해 장기요양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급여의 부족분 문제와 서비스의 중단 등의 문제였다. 이는 결국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양적인 문제로 노령으로 인해 더욱 지원이 되어야 할 대상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됨에 오히려 감소되는 문제로 발생하는 당사자들의 불만인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복지와 의료에 중점을 둔 제도이며, 활동지원급여는 사회생활 참여를 보장하는 별개의 제도라는 행정기관의 과거 견해도 있지만, 지원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 노령으로 인한 지원 필요의 증가 등의 이유로 최소한 이전 지원의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로부터 첫째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사이의 급여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게 보조급여 형식으로 급여의 부족분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둘째로 지원 시간의 감소에 따라 당사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65세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보상에 대한 안내 서비스가 필요하며 지원서비스 시간 감소를 어느 정도 보완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의 강화 - 장기요양급여 전환에 따른 금여 감소 문제 해소]

"장애인이다가 노인으로 되신 분들이 기존에 있는 서비스의 중단에 대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고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 장기 요양 급여와 활동지원 급여 사이에 차이 간격을 좁혀나가는 것을 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인데 …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핵심이어서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시비 같은 거 그대로 받고 국비에서 아직 법 개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보조급여 형식으로 일부만 받는 급여에 대해서 부족분을 서울시가 채워주면 제일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65세가 되었을 때 요양시간이 적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65세 도래했을 때는 걱정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 실제로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상이 약간 늦어진다거나 … 몇 달 걸쳐서 지원이 되는 현상이 벌어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던 거지 … "

"65세에 도래했을 때 거기에 따른 특별한 안내가 많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주는 거에 대한 걱정에 대한 안심시킬

수 있는 안내가 없다보니까 복지관이나 아니면 자유 지원 센터나 아니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기관에 전화하면서 걱정거리만 늘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안내만 제대로 해도 사실 안내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간 떨어진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보완책만 있다고 하면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특화서비스에 있어서는 특정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보다는 지금까지 고령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반 연구나 기초연구가 있지 않은 점에 체계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고령장애인 욕구조사 또는 각종 자료들의 분석 등을 통해서 고령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즉, 고령장애인들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며 급여가 감소될 수 있지만, 고령장애인에 맞는 특화서비스가 그동안 없었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를 위한 분석 조사부터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주간 활동에 있어서 고령 장애인들과 20~30대 장애인들의 지원 욕구가 다르기에 액티비티 중심의 20~30대 장애인 주간활동 지원과는 차별화된 고령인의 욕구에 맞춘 사회모임, 건강관리 등의 특화 주간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의 강화 - 고령장애인 특화서비스 개발]

"사실 이런 개선과 관련해서 뭔가 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실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들에 대한 욕구 조사라든지 ...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 연령대에 맞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되는 것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특화된 서비스가 고령 장애인과 관련해서 특별한 게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 구체적인 활동 지원이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 개발 자체가 사실은 안 되어 있었던 거라서.."

"20~30대는 정말 액티비티가 많거든요. 40대 이후부터는 액티비티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친구 관계 네 사회성을 만드는 모임 아니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다른 거죠."

②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고도화 방안

활동지원 서비스의 고도화 방향에 있어 인터뷰 대상자들이 제시한 문제는 첫째로 24시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의 현실화와 지원 대상자의 확대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원확대의 문제는 24시간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중증도에 따라 차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첫째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정신 및 발달장애인 분야 인터뷰 대상자들이 제기한 문제로 24시간 지원의 대상이 사지마비 장애인이면서 독거장애인으로 되어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지마비 진단을 받지 못하여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X1점수가 360점 이상이면 최중증 장애인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X1점수가 360점 이상인 전국에도 몇 되지 않는 기준으로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선정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었다. 결국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애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국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시비를 추가한 서비스로 월 350시간 받지 않더라도 그 중 일부만 지원 받아도 자립생활 또는 가족의 부양 부담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최중증이라는 최고 구간만 설정하지 않고 중증도에 따라 여러 단계의 차등적 서비스 구간을 만들 경우 지금보다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최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우 국비 평균 120시간에 200시간만 시비로 추가되어도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에 중증도에 따라 300, 200, 100시간의 여러 단계의 차등 구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 고도화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의 확대]

"저희가 발달장애인 중에 사지마비 진단서를 끊지 못하더라도 24시간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X1 값을 360점 이상인 발달장애인으로 했는데 X1 값이 360점 이상 나오는 발달장애인은 정말 전국에 탑...거의 없어요."

"월 200시간 이 정도만이라도 추가로 받으면 발달장애인 국비 평균이 120시간이기 때문에 서울 시비로 예를 들어 2~300시간만이라도 보존을 해주면 자립 생활이라든지 가족의 부양 부담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최고 구간 하나만 만들어 놓지 말고 발달장애인 중증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여러 단계의 포지션들을 만들어 줘야지 더 많은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다..."

③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고도화

정신 및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문제로 도전행동에 대한 치유와 낮활동지원의 전문 인력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치유하거나 낮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의 양과 관련된 문제로 노령 · 중년 여성이 많은 활동지원사의 현재 현황 상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사 매칭이 되지 않는 문제와 행동중재를 위한 전문가 부족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주간에 1:1 서비스가 가능한 인력

의 지원 및 행동준비 전문가의 권역별 배치 방안이 제시되었고 현재 2개소만 지정된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최소 5개소로 확대되어도 도전행동은 현재보다 많이 커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전행동 전문가의 양성 및 단계적 확대와 도전행동 치유 및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고도화 – 주간 활동 지원 강화 및 중장기적 계획 마련]

"지금 낮 서비스에서 관통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도전 행동 있는 부분에 대한 치유 문제예요. 서울시에 저희가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크다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라도 해달라고.. 챌린지도 지금 최대 7년까지인데 이분들의 행동들이 현격하게 준다든지 이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이동할 곳을 찾아서...챌린지보다 조건이 못하는 지금 다른 기관으로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노령, 중년층 여성들이 많은 활동 지원사 현황 상 발달장애인들이 실제 매칭이 안 되거든요."

"재가 지원 등 발달 지원센터에서 개인 지원을 계획해서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 지금 그 역할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시설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계획안을 내줘야죠..."

"인구 수에 따라 행동 중재자는 이 인구를 고려하고 인구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몇 명 정도가 앞으로 5년 안에 양성이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양성할 것이고 ... 권역별로 배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처음에 권역별 그 다음에는 구별로 어떻게 배치할 것이고 이런 식의 조금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계획들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서울에 도전 행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대하고 한양대 2개만 지정돼 있거든요.... 차라리 광역권으로 하든 25개 자치구니까 하다 못해 구별로 하든 5개 단위로 묶어서 하든 그래도 5개가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런 형태로 서울형 행동 발단 증진센터가 지정만 된다 하더라도 여기를 통해서 필요하시면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의료와 보건이 좀 협업할 수 있는 세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도전 행동은 좀 그렇게 많이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④ 당사자 중심의 신규 활동지원서비스의 도입

인터뷰에서 제기된 현재의 활동지원 서비스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제공자의 선택권이 강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선택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당사자의 필요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부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되어 오히려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받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에 대한 고민에 앞서 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가 서비스를 선택하여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되는 선택형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즉 특정서비스가 필요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의견이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선택권과 당사자 중심으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강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자신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알고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기반으로 필요한 것을 넘어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자립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편의 앱의 개발과 보급이 제시되었다.

[당사자 중심의 신규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대상 위주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당사자들한테 좀 더 선택권이 강화되고 복지 서비스라든지 좋아지지 않을까... 본인이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자격이 유지가 되잖아요... 누구한테 해당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쓴단 말이죠... 이용자가 본인이 복지 바우처 획득한 다음에 자격 요건 되는 활동 지원사를 선택해서 다이렉트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본인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또 수행센터에서도 기피의 대상이 누구냐면 장애가 심한 장애인 와상 장애인 사지마비 장애인 언어가 심한 그런 장애인 그런 장애인들은 활동 지원 매칭을 대기 대기하다가 다른 센터 세 군데 네 군데 걸려놔도 매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보접근에 대한 것들이 강화될 필요 ...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고 문화를 누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자립 가능한..."

⑤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의 확대

제1기의 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최중증, 중고령 장애인 등 장애의 중증도와 사회활동의 어려움 등 지원이 없는 경우 활동이 어려운 최우선 필요 대상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조금의 지원으로도 사회활동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전문가 델파이 조사뿐만 아니라 인터뷰 참여자 일부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경증장애인에 대한 보조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지원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조금의 지원으로 사회활동이 가능한 지원 대상자로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 경증장애인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부분들이 ... 사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이 그 개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져보거든요. .. 조금만 도와주면 일을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 경증장애인들이 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를 하지 않고 경증이니까 배제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조금 필요하다..."

⑥ 여성 장애인 홈헬퍼 지원

제1기의 활동지원서비스의 과제 중 인터뷰 이전 실시된 델파이 조사에 있어 활동지원서비스의 개선 방안이나 확대 필요 서비스로 가장 언급되지 않은 서비스가 여성 장애인 홈헬퍼 지원 과제로 해당 과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 시 확인한 결과 장애 여선의 모성권과 관련된 내용은 수요가 많지 않은 소수 대상의 과제로 설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계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제로 확인되었다. 즉 대상자의 양적 측면에서는 많지 않도라도 사회적인 지원과 장애인의 권리 등을 고려했을 때 종합계획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제로 1기에 이어서 지속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조사되었다.

[여성 장애인 홈헬퍼 지원]

"장애 여성의 모성권 관련한 계획이 들어가 있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이게 좀 구성상 아마 이제 막 되게 수요가 높은 게 아니고 소수여도 지원이 꼭 필요한 영역이라서 아마 이렇게 양적으로는 아마 많지는 않지만 빼기는 어려운..."

(2) 건강관리 지원 강화

① 장애인 의료접근성의 확대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의료기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향이 제시되었는데, 첫째는 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둘째는 의료기관 이동 편의성 증진이 의료접근성 방안으로서 제시되었다.

의료기관의 확대에 있어서는 후술할 서울형 장애인 주치의 제도 외에 장애 특성과 관계없이 첨단 장비를 통한 진료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친화 상급병원의 확대가 인터뷰에서는 제기되었

다. 인터뷰 이전에 실시된 델파이 조사에 있어서는 권역별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추가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추가도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 장애인이 종합적으로 진료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상급 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제시되었으며, 발달장애인 또한 이런 측면의 거점병원의 확대 방안이 유사하게 제시되었다. 즉, 고도화된 진단 장비와 검진의 역량 등이 충분한 상급병원의 수요에 있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모두에게 현재 상급병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의료적 진단과 치료에 있어 상급 병원 또는 거점병원에 대한 필요가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제시되었다.

[장애인 친화 상급 병원의 확대]

"장애 특성과 관계없이 검진도 받고 진료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첨단화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거점 병원들이 좀 더 많아지면 CT를 찍든 MRI를 찍든 건강검진을 하든 이런 할 수 있는 관리 이 총량이 많아지니까 이런 점에서도 사전 예방의 건강 관리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발달장애 거점병원의 행동발달증진센터 조금 유사한 형태로 서울형 그런 게 만들어진다라면 건강 관리를 관리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둘째로 의료기관으로의 이동 편의성 문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외에도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갖추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일부 의견으로 장애인 접근성을 위하여 개인병원이라도 일부는 필수 편의시설이 갖춰진 건물에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특히 동네 의원급 기관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편의시설의 문제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문제와도 관계된 문제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장애인 친화 상급 병원의 확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라는 게 되게 제한 되어 있긴 한데 의료기관 동행 서비스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

"일단 아프면 병원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가장 낫지만,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한다거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네 의원에 가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중대형 병원을 가거나 감기가 걸려도 사실 큰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에 대한 접근성 ... 동네 의원들 가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해소되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개인 병원이라도 어떤 건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들에다가 일부는 병원들은 그런 건물들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접근성이 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② 서울형 장애인 주치의 제도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주기적으로 장애인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주치의를 통해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개별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수요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었다. 특히 고령 장애인의 경우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의료적인 서비스로 반드시 방문이 아니더라도 주기적 대화와 통화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매칭해줄 수 있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과 확대 · 강화가 제기되었다. 다만 주치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치의를 신청하는 의사와 주치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주치의를 신청하는 의원이 없어 주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치의 참여 인센티브의 제공과 주치의 양성을 위하여 의과 교육부터 장애 이해를 위한 커리큘럼의 제공 및 가이드라인 제작 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형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확대

"노령층에 가면 약한 것이 이제 의료거든요. ...장애를 가진 노인들은 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치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통화하고 내가 아픈 거 ... 주치의가 노인 장애인들한테는 더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걸 시스템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사가 신청도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는 사람은 조금 있는데 이제 지금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그런데 실제로 이 주치의 제도를 활성화시켜 놓으면은 훨씬 더 발달장애인분들의 자립도 가능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삶의 질도 좋아지고..."

③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의 구강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제도는 현재 관심과 도입이 필요한 제도로서 인터뷰 참여 대상으로부터 공감을 받은 방안으로 특히 올바른 양치질과 치과 치료에 있어 비장애인과 같은 치료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반 치과의자에 누울 수 없는 장애인이 많아 발달장애인 치료가 가능한 치과를 방문하기 위해서 현재 1년 이상의 대기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스켈링을 위해서도 전신마취가 필요해 진료를 위한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구강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한 제도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치과를 확대하고 활동 보조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양치질과 구강관리를 위한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지원 – 장애인 대상 치과의 확대와 활동보조인 교육 제공

"대기를 1년 이상 해야 되고 일반 치과 갈 수 없고 일반 치과 그 의자에 누울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치과 대기를 너무 오래 해야 돼고…"

"전신마취해서 진료를 해야 하는데 비용도 엄청나죠… 스켈링도 전신마취가 필요한 분들도 많으니까"

"활동 보조인들을 교육시켰어요. 발달장애인은 칫솔질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잇몸 마사지를 해줘야 되고를 다 실습하고… 구강 마사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구강 건강을 한다고 해서 활동 지원자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 치위생사가 주기적으로 와서 교육을 해 주기도 하고… 치과가 급성기로 가기 전에 관리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지원하는 사람들 부모도 마찬가지인데요. … 구강 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가지고 주기적으로.."

2) 주거 및 가족지원

(1) 주거지원 강화

① 신주거모형의 개발과 지원 대상의 확대

주거는 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최근 주거환경의 양극화,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 등 사회적 이슈가 불거진 분야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도 주거지원 비용의 현실화, 주거 환경의 개선 등 양과 질적 측면 동시에 중요하게 제기되는 분야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와 함께 자립생활 관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이 인터뷰에서 제시되었다. 이는 결국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정책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면, 주거 생활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필요에 따라 주거모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선택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옵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옵션에는 비장애인과 함께 살 수 있는 옵션의 포함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 주거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신주거모형의 개발]

"요즘에 서울에서 제일 잘한다고 칭찬받는 게 지원 주택 사업 이어가지고 지원 주택이 이제 주택 플러스 서비스가 같이 공급되는 형태인데 그 형태가 우리는 지금 레벨이랄 것도 없고 딱 한 가지 형태밖에 없거든요. 해외에서는… 잠만 같이 자주는 룸메이트 서비스도 있고 … 다층적으로 서비스가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한 그런 주거 옵션들이 있어요."

"장애인 지원주택으로 자립 지원 환경 모델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주거 지원 강화 부분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

② 장애 당사자 맞춤형 지원주택 서비스 고도화

신주거모형에서는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장애인 주거서비스 선택권을 강화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 신주거 모형이 제시되었다면, 같은 맥락에서 장애에 따라 지원하는 서비스의 다양화, 장애정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예로 24시간 계속 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와 간헐적 서비스만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경증을 포괄할 수 있는 장애 당사자에게 맞춘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지원주택 운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학대 피해 장애인의 경우 가족으로 복귀가 어렵기 때문에 쉼터가 아닌 생활여건 마련은 위해 주거지원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 당사자 맞춤형 지원주택 서비스 고도화]

"어떤 분은 24시간 필요하면 24시간 어떤 분은 간헐적 지원만 필요하면 간헐적 지원 이렇게 지원주택 서비스 자체가 이렇게 최중증과 경증 모든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장애 당사자에게 맞춘 어떤 지원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인구 대비로 (운영사업자에게) 주고 있어요. .. 운영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사자 가족들하고 상담하면서도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믿고 이렇게 입주를 권하기가 어려운..."

"학대 피해 장애인들한테도 이런 이제 주거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주택이든 .. 학대피해를 당했는데 온 가족으로 다시 복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쉼터에 계속 사실 수는 없는 거고 쉼터에서 언젠가는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주 여건과 환경적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좀 반영될 필요가.."

③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장애인 편의 강화와 전세자금 지원 현실화

서울시는 거주를 위해 주거에 필요한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역시로 장애인의 주거비용 측면의 지원 방법으로서 주로 제시된 접근 방법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확대와 전세자금 지원의 상향이 제시되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첫째로 양적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또는 분양 지원이 제시되었다. 특히 전세자금 지원 방안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 필요해 보증금을 돌려봤을 때 지원이 중단되기에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둘째로 질적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최소한 S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기초적 유지 설계를 갖춰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전세가격 상승으로 현재 지원해주는 1.8~1.9억원 지원금의 규모로는 부족하여 전세자금 상승에 맞춰 2.5억~3억 수준으로 지원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및 전세자금 지원 현실화]

"공공임대주택들이 다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 않고 … 매입형은 기준도 없고 … 주거약자용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있는 향후에 고령화되는 사회를 고려했을 때 … SH가 공급 … 건설형과 매입형의 기초적인 유지 설계를 갖춰가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

"전세 보증금이라는 건 내가 필요하면 또 다른 데 빼서 나가야 되잖아요….그걸 빼면 이미 지원이 중단이 되거든요… 주택 임대주택을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분양을 빨리 준다거나 …"

"주택을 들어가고자 한다면 이게 1억 8~9천은 참 애매한 가격이에요. 요즘 전세 가격으로 생각하면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

④ 부동산 임차 · 매매 지원을 위한 행정안내 및 지원체계 구축

주택서비스의 확대와 주택서비스 질의 개선 외에 장애인의 주택 임차 또는 매매에 있어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요가 인터뷰를 통해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수요는 첫째로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주택 임차와 거래에 있어 중개인의 도움을 받는 현실에서 장애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개인을 장애인이 만날 수 있기도 어려운 측면에서 장애인의 주택 임차와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또는 장애인의 부동산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개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둘째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때문에 장애인이 직접 집을 구하거나 임차하기가 어려운 점에 이들을 대리해서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장애인의 부동산 거래를 위한 행정적인 안내와 거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차 · 매매 지원을 위한 행정안내 및 지원체계 구축]

"좋은 중개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은 말도 할 수 없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서 집을 구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행정적인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잡아주는 것이 어떤가…"

⑤ 재가 돌봄주거서비스 지원 확대

주거선택의 권리와 자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된 방안으로 재가 돌봄주거서비스 지원대상의 확대가 제시되었다. 현재 재가 돌봄주거서비스가 매우 소수에게만 제공되고 있어 전체

발달장애인의 수와 대비하였을 때에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돌봄주거서비스가 확대되어야 장애인의 주거 위치 선택에 있어서도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 지원보다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재가 돌봄주거서비스 확대]

"자기가 구한 주택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지원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을 서울시가 돌봄 주거 서비스라고 명명하고, 지금 60명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2025년까지 140명 한다고 … 발달장애인들의 숫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너무 너무 미비 …. 발달장애인의 3만 명 그리고 그들의 평균 나이, 고령화 추세,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나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돌봄 주거 서비스가 이제 공공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자가주택에 있을 수도 있고 … 거기에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게끔 돌봄 주거 서비스가 어쩌면 지원 주택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가던가 … 왜냐하면 지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물량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공공주택 물량의 숫자에 제약이 따르고 위치적인 제약이 따라요. 위치가 서울 외곽이라든지 그러니까 서울의 끝자락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조금 주거 서비스가 강화가 되면 예를 들어 주거지의 선택권이 좀 더 폭넓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가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죠."

(2) 장애인 가족 지원

인터뷰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 방안과 장애인 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측면의 지원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경제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장애인 가정이 일반적으로 겪게되는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 가족들에 대한 취업 또는 고용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심리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상담으로 가족 구성원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재 장애인 가족의 상담 역할을 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상담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요 역할로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시되었다.

[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거의 좀 어려움이 겪는 것이 큰 부자들은 아니면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고용 쪽의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가족 지원에 가장 중요한 게 상담 … (가족지원센터 역할에 포함되어 있으나) 문제는 그걸 중요시 안 한다는 거…"

3) 문화·체육·여가 생활 지원

(1) 문화·관광·여가생활 지원 강화

인터뷰에서는 장애유형에 따라 문화·관광·여가에 대한 정책 수요가 다를 수 있음이 나타났다. 정신 및 발달장애의 경우 이동의 제약이 신체장애보다는 적기 때문에 문화·관광에 대한 정책지원의 수요가 다를 수 있음이 제기되었다. 다만, 가족이 함께 문화·관광의 콘텐츠를 향유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① 관광 편의시설의 접근성 개선

인터뷰에서는 장애인의 관광·여행 욕구를 위해서 장애인 관점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접근성 관점의 무장애 지역의 확대가 제시되었다. 이는 현재 장애인을 위한 코스 개발에 있어도 비장애인이 개발하는 부분이 장애인 중심적이기보다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가 지적된 측면과 '무장애'라는 개념의 접근이 신체적 측면에서 접근되어 정신 및 발달장애인의 장애가 반영되지 못한 측면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관점에서 '무장애' 관광시설과 관광편의 확대가 제시되었으며, 발달장애인 관점에서도 무장애 시설의 확대, 즉 정보의 접근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시설의 접근성 개선]

"여행 여가를 즐기려면 일단 무장애 지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 코스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코스를 누가 개발하냐면 비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하고 동행해서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비장애인 중심으로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분들은 발달장애인들끼리 고궁도 가고 싶고 그런 것들 다 하고 싶은데 발달장애인들끼리 갔을 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 예를 들어 경복궁에 들어가면 출입구 들어가는데 안에서 헤매다가 못 나올까 봐 걱정하고 이런 게 있으신 거예요... 무장애라고 하면은 바닥이 휠체어로 다닐 수 있는 바닥만 생각하지 말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출구 표시라든지..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을 때 핸드폰을 갖고 계시니까 어디로 연락하면 된다라고 쉽게 안내드린다든지... 발달장애인에 포커스를 두면 정보 접근권으로 좀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② 다양한 장애 관점의 관광콘텐츠 확충

관광시설의 물리적 접근 또는 관광 시설 이용의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관광시설 접근성이 논의되었다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장애인의 관광 지원을 위한 콘텐츠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특히 장애의 유형이 다양한 현실에서 비장애인도 미술, 음악과 같은 문화콘텐츠를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 도슨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작품의 설명, 도슨트 등의 지원이 장애인의 관점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즉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의 감상할 수 있는 점이 다른 것을 인식하고 장애인의 관점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여행을 가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시설의 접근성 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맞는 여행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다양한 장애 관점의 관광콘텐츠 확충]

"시각장애인이 보는 감상하고 청각장애인은 감수하고 다르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림에 대한 설명,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리시버를 끼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뭐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뭐가 나오냐 이거죠....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이 자유 높아진다면 제일 먼저 접근될 수 있는 것이 여행이거든요... 장애인들도 여행을 가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여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다 장애 유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각장애가 되면서 가서도 잘 못 보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들이 여행 지원 사업들이 우리한테는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발달장애인 친구들도 가보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③ 장애인 가족 관광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을 위한 관광 · 문화시설의 접근성 개선과 콘텐츠 확충 · 지원 외에도 가족과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도 많이 제기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는 앞서 야기된 접근성 측면에서 장애인과 함께 여행을 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한 관광 프로그램의 지원에 대한 제안도 있지만, 이와 다르게 비장애인 가족의 관광 프로그램과는 다른 구성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제시도 있었다. 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 뿐만 아니라 가족이 휴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된 가족 프로그램의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 가족 관광 프로그램 지원]

"가족 중심으로 같이 가서 현지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발달장애인이라면 부모님 가족 여행 갈 때 저도 같이 가고 싶을 것 같고 추억 등을 공유하고 싶은 거죠...."

"가족이 모두 같이 가서 발달장애인은 전문가 작업 치료사들과 (가족) 이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발달장애인이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서... 가족들은 또 가족들끼리 정말 쉼을 충분히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하고 저녁에 또 같이 만나서 가족이 여행하고 이런 캠프도 굉장히 선호도 굉장히 높아요."

④ 장애인 문화예술인 양성 지원

앞서 야기된 지원 방안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관광, 문화 등을 향유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의 모색이었다면, 장애인 스스로 문화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직업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모색되었다. 현재 복지관에서 예술합창단, 관현악단 등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이 협연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제기되었고 최근 전반적으로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있지만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해서는 서울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장애인 문화예술인 양성]

"장애인이면서 문화예술인이 많이 지원받고 양성되고 이래야지 이제 좀 사실은..."

"최근 1~2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난 게 뭐냐면 발달장애인과 같이 뭔가를 하는 기관, 단체한테도 서비스 제공해 주고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마련되는 콘텐츠인 경우도 지원을 해주고 발달장애인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유형별로 예술 활동의 지원들은 폭이 넓어져가지고 ... 전반적으로.. 오히려 서울만의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

(2) 생활체육 지원 강화

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체육시설에의 접근과 체육프로그램 제공 등 신체적 활동을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법적인 제도 마련으로 장애인들의 물리적 접근권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부족한 실정으로 장애인 맞춤 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몸의 기능을 향상시

키거나 유지할 수 있는 체육에 대한 수요가 많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수요는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인식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 필요에 따라 몸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의 건강에 필수적인 생활체육을 위해서 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비장애인과 같이 수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관점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보급과 함께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후술할 장애인 체육시설 자도자의 증원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 맞춤 체육프로그램의 지원]

"발달장애인도 오히려 몸을 기능을 계속 이렇게 향상시키거나 유지할 수 있는 체육에 대해서 좀 더 집중되는 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콘텐츠 자체가 없는 거죠....편의 증진법 때문에 물리적인 접근권은 어느 정도 약간씩은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접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드민턴 ... 비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지 발달장애인이 그 프로그램을 끼워서 하기가 ... 배드민턴 나 하고 싶어도 발달장애인이 배드민턴팀에 들어가서 같이 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 자체가 없다."

② 장애인 체육시설 지도자 증원 및 운영비 지원 확대

장애인의 생활체육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확대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체육지도자의 확충 문제와 장애인 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는 서울시의 현재 장애인 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 현황과도 결부된 문제로 중앙의 보건복지부는 체육시설의 인건비 지원 지침이 있지만 서울시가 이보다 미치지 못한 지원을 하는 결과로 장애인 프로그램만 제공할 수 없고 운영 유지를 위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 소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만 하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대비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장애인 프로그램이 더욱 수익성이 높기에 장애인 체육시설이라고 하여도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에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맞춤 체육프로그램의 지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곳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80%를 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서울시는 거꾸로 20%로 책정이 돼 있어요. … 장애인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비용이 수익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장애인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③ 장애인 생활체육인 대회 지원 및 전문체육인 지원 강화

장애인의 체육생활 지원 확대를 위해 인터뷰에서 제시된 방안으로 국내 최대의 광역시로서 보다 장애인 전문체육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장애인 체육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알릴 수 있음과 동시에 생활체육을 통해 체육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직업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전문체육인인 실업팀 창단의 확대가 제시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장려하기 위해 서울시장배 장애인 체육팀 대회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장애인 생활 체육 장려 및 전문체육인 지원 강화]

"서울시에 장애인 실업팀이 있긴 있는데 몇 개 없긴 합니다… 5년 안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장애인 스포츠 종목을 실업팀으로 창단했으면 좋지 않을까.."

"서울시장배 장애인 무슨무슨 체육대회를 서울시장배로 해가지고 타이틀 걸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장애인 체육팀이 서울시장 타이틀을 걸고 대회를 하면…"

4) 경제적 자립 지원

(1) 일자리 지원

① 장애인 맞춤 직무 개발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의 공공일자리 지원에 있어 제1기의 공공일자리 지원과는 다른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터뷰를 통해 제기되었다. 과거의 공공일자리는 기존의 직업 또는 직무 중 중증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해 장애인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장애인 채용과 직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 필요성 등으로 야기되는 장애인 채용에 대한 비선호 문제 등이 야기되었된 반면 최근에 요구되는 공공일자리 지원 방향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앞서 제기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 대상 직무가 개발되면 만약 해당 직무가 최중증 장애인의 직무라면, 최중증 누구라도 일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한 것으로 업무의 내용과 방식이 현재와는 매우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는 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장애인 채용의 비선호 문제가 앞선 방식보다 경감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경증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비장애 청년들과 경쟁하는 측면이 높아 경증의 장애인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장애인 맞춤 직무 개발 및 공공일자리 개발·확대]

"과거의 (공공일자리) 직업은 기존에 있는 직업군을 중증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걸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자리를 주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공공일자리 자리에 최중증 누구라도 일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해 내서 하는 방식이니까 지금 2기에 담은 공공 일자리는 같은 용어인데 대상도 업무 내용도 진행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다고..."

"청년들과 비장애 청년들이 경쟁하는 측면이 많은데... 장애인들이 중증이든 경증이건 기업에 많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이 중증에 맞춰 있다고 보는데 사실 경증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

② 선배치 후훈련 방식을 통한 현장 중심 취업 지원과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취업 확대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있어 문제로 제기된 사항 중 하나는 훈련 후 배치를 하는 방식이 인터뷰에서 제기되었다. 직업 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을 훈련시켜 더욱 높은 수준의 시설로 전위시켜줘야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거의 없는 현실과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득과 사회활동을 통해 근로의욕이 고취되어야 하지만 보호작업장 중심의 일자리 지원 정책은 이런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하여 장애인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하기 싫어하는 장애인의 경우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훈련보다는 실제 직업활동 속에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배치 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권역별 확대·배정 방안이 제시되었다.

[선배치 후훈련 방식을 위한 예산의 확대와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취업 확대]

"서울시는 시대에 정말 뒤떨어진 직업 재활 시설 보호 작업장에 자꾸 예산을 늘리려고 하시지 말고 ... 선배치 후 훈련 여기에도 예산이 지금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권역별로 좀 확대해 달라

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저는 일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성상 오랫동안 앉아서 뭔가 하는 분들도 있어요. … 그런데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 앉아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싫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잠깐은 하지만 지속을 못하니까..”

“소득이 생기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소득이 생기는 것이 바로 동기부여… 일 정말 싫어하던 앤데 일해서 돈 벌어 보니까 돈 쓰는 맛을 알고 그래서 일을 하거든요… 돈 쓰는 것을 통해서 사회화가 되고 … 사회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③ 장애인 고용유지 방안 마련

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장애인으로서 취업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 사이의 차이가 상당하지 않기에 일하기 보다는 급여수급자 신분을 유지하려 한다는 문제가 인터뷰에서 제기되었다. 즉 힘들게 일을 하여도 경제적으로 크게 나아지는 생활을 기대할 수 없기에 근로의욕이나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보다는 수급자로서 남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없거나 직업을 가지지 못할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남을 수 있기에 차상위 계층의 고용 진입 유도가 필요하며, 그들이 직업에서 오는 사회참여 욕구의 충족과 근로의욕이 고취되는 기간 동안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초수급권과 의료수급권, 임대주택 자격의 유지 등 급여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차상위 계층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동안 급여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고용상태를 유지할 동기를 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상위 계층 장애인의 고용유지 방안 - 수급권 유예기간의 마련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이분들은 차상위 수급자보다 일자리 쪽으로 이분들은 대부분 고용이 되어있어요. 어떤 식이든지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차상위 수급자 이분들 중에 고용 쪽으로 관심있고 일하고 싶은 분 굉장히 많은데…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180만 원이 안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루 8시간 나와서 근무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 절대로 고용 근무 안 하려고 그래요… 물리적으로 175만 원 받고 출퇴근 해가면서 그거 하느니 … 다 해제되니까 … 그래서 이것은 6개월 유예가 아니고 2~3년 유예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급여, 주거, 생계 급여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여가면서 나중에 한 3년 정도 가면 의료 생계 급여하고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한 20% 10% 정도, 대신 주거 급여 영구 임대주택을 살 경우에는 그것은 취업을 하더라도 그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적어도 1~2년 정도는 목돈을 모아야 뭔가를 해야하는데… 장애인들에게 인식이 고착화되어서 정말 일할만한 사람들도 일하는 마음을 안하고… 일하다 보면 손가락질 당해요.”

④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 연계성 강화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있어 제기된 문제는 서울시의 일자리지원 정책과 자치구 일자리 사업, 공공기관의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별도로 이루어지면서 일자리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각 지원사업의 기간동안만 일하고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등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지원한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근로지원인 매칭하면 장애인 고용의 이점이 생기며, 통합지원한다면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별도 일자리 사업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이 직업이 계속 변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에 지원되는 다른 지원제도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연계하여 진행하면 일자리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 연계성 강화]

"제가 계속 단독으로 계속 하니까 좀 다른 쪽하고 같이 공유해가지고 … 장애인 고용공단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연계해가지고 대표적으로 활동 지원 제도 대표적으로 이건 일상생활이지만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 유지에 있어서는 활동 지원 서비스 제도 연결 꼭 시켜서 진행하면 이 당사자도 조금 일자리 꼭 하는 데도 수월하고… 고용주 입장에서 그리고 직장 동료하고 관계에 있어서 … 당사자만 가면 굉장히 왕따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같이 생산성 발휘하고 같이 일하는 느낌 보여주는 장애인하고 … 한 70% 정도 따라와줘야지만 6개월 후에 1년에 동료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혼자만 보내버리면 3개월 안에 대부분 50%는 이직해요. 현실적으로 못 버텨요 "

5) 사회활동 지원

(1) 이동권 보장

① 장애인 교통 수단 지원의 확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문제 해소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넓히기 위하여 바우처 택시 이용을 확대하고 민간 택시 옵션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 택시의 장애인 지원 장치 부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선택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콜택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콜택시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한 대기시간이 길게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대기시간 예

측이 어려운 점에 공급과 예산을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만 하는 장애인이 필요한 때 이용하기 어려운 공급 불충분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 혹은 민간 택시를 이용해도 되는 장애인은 다른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바우처 택시의 양을 늘림과 동시에 바우처 택시 기사의 경우 장애인의 탑승을 보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하는 방안, 그리고 민간 택시의 경우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이동 수단의 확대로 장애인 콜택시 공급 부족과 수요의 집중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장애인 교통수단(택시) 지원의 확대]

"100kg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일반 택시, 바우처 택시에 탑승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행동이 크기 때문에 바우처 택시 기사에게 위협을 강화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고요."

"장애인 콜택시 늘리고 장애인 콜택시 예산 늘려봤자 그거는 지난 5년간 계속 그 얘기 계속했는데 똑같아요. 대기 시간 1시간 미만, 40분 미만이라고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얘기하지만 실제 사용자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 아직도 2시간씩 기다려요. 많게는 2시간 40분까지 기다리고, 그것도 앱이 있는데 앱이 옛날부터 더 짜증 나는 게 대기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8분 했다가 40분으로 늘어나고... 수동 휠체어 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택시 자격 있다면 바우처 택시 탈 거예요."

"보호자들의 주로 의견을 전달하자면 바우처 택시의 양을 좀 늘려달라."

"민간 택시에다가 옵션 넣어 장애인들 이용률을 확대하여 현재 장애인 콜택시 대기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현재 바우처 택시를 타려면 휠체어를 접아가지고 트렁크 또는 뒷좌석에 탑승하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거를 기사님이 아직까지는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제한적 요소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개의 콜택시, 바우처 택시 하나만 볼 게 아니고, 바우처 택시하고 장콜도 연결해서 시스템 한번 봐줘서 바우스 택시 가동률이라든지 ... 개인 택시 또는 법인 택시에서 운영을 할 텐데 분명히 수익하고 연결이 돼야지만 그게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된단 말이죠."

"카카오를 예를 들면 일반 택시 있고 고급 택시 있고 블랙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 장애인 분들을 위한 장치를 단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그런 장치를 단 특수 장치를 단 그 택시도 하나 추가해서 부를 수 있으면 그러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카카오 측에서는 사회공헌 사업하는 명분이 있고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의 수단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②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의 버스 이용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저상버스의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인식과 서비스,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확대된다 하여도 장애인을 탑승시킬 수 있는 종사자의 역량에 따라 승객이 감내해야 할 시간이 달라지며, 승객들이 장애인 탑승을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환경적 요건의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시민 공감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한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하철을 이용함에 있어도 물리적인 편의시설 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각화된 표시 문구의 개선이 필요한 점이 지적되었다.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

"저상 버스에 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일본만 같은 경우도 기사들이 장애인들이 내려서 리프트를 쭉 빼서 올려드리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한번 탄다는 게 저도 진짜 큰 용기를 내서 타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 도입되지 않으면 버스 기사님들도 장애인에 대해서 접하신 분도 안 계시고 또 그걸 리프 타고 내리려면 최소 1분 많게는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 승객들이 감내를 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 사회적 시민 의식이 아직까지는 조성이 좀 힘들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 시스템을 늘린다고 해서 이동권이 강화된다는 것보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든 잘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

"발달장인 당사자들이 지하철 환승 내지는 출구 표시 이런 것들에 너무 발달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시각화를 시켜서 있으면 자기네들 헷갈리지 않겠다고.."

③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인터뷰에서 제기된 문제로 발달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종사고의 신고와 보호자 알림서비스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발달 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많아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실종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알림체계가 현실의 문제와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중교통의 경우 특정 장소에서 실종자가 빠르게 벗어남에도 불구 신고체계가 통합적이지 않아 경찰과 지하철 등 신고 가능한 곳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지의 경우에도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탈시설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므

로 이를 위해 통합 신고체계 및 여러 권역에 동시 공지, 알림이 될 수 있는 통합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터뷰에서 제기된 방안이었다.

[발달장애인 통합신고 및 공지 체계의 개선]

"실종 사건 정말 많거든요. …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고 지하철 공사 매트로 등 다 따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공지가 … 그 사람이 종로구에서 없어지면 종로구만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다른 구로 갔을 것 같은데… 몇 개 구를 다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이미 지하철 타고 이미 다 가셨는데 … 활동성이 있잖아요… 서울에 배회 장애인들도 찾기가 어려운 게 지하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탈시설 탈 가정이 많아질수록 실종될 수 있는 확률도 좀 높아질 수…"

(2) 4차 산업기술 활용 이동권 및 의사소통 지원

FGI에서는 최근 AI, 로봇, 정보통신 기술 등 4차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이동권 보조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 중 이동권 보장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수요와 모바일 장치를 활용한 이동보조 인프라 지원, AI 기술과 모바일 장치를 활용한 의사소통 지원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 중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 현재 상용화된 이동보조 기구의 보급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서울시가 미래 첨단기술을 활용한 이동보조 기구 개발을 위한 R&D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시각 장애인의 이동보조를 위해 모바일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방안이 논의 되었다. 그리고 의사소통 지원에 있어서는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STT(Speech-to-text) 기술과 TTS(Text-to-speech) 기술을 활용한 AI융합 의사소통 보조기구의 보급이 제시되었다.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이동권 및 의사소통 지원]

"주민센터에서 어느 정도 용품을 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서울시가 만약에 개발은 사실 정부가 해야 되는데 서울 지자체에서 만약에 그런 보조장구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러면은 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용품들을 서울시에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개발을 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게 보급이 안 됐다라고 하면 보조 센터에서 수시로 대여할 수 있을 정도의 물품을 구비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적으로 … "

"블루투스를 통한 지팡이에다가 넣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갖다대면 여기는 지금 광화문이다. 여기는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블루투스 칩을 어디다 꺼냐 하면 보도 번호 밑에다 깔거든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의사소통) 보조 기기는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개발들

이 조금 돼야지만 그러니까 전체 융합이나 AI 과학기술 안에서…”

“우리가 언어로 얘기하면 문자가 뜨지 않습니까? 거꾸로 적거나 하면 음성이 나오게 하고 이것도 웨어러블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방안 외에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을 실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횟수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6) 전달체계 강화

(1) 기관 및 인력지원

① 활동지원 등 전문서비스 인력 양성

서비스의 양적인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수와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 분야의 낮은 급여체계 문제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전문 인력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공공영역에서 전문 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가 많은 서비스 영역에 실무자가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제1기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야할 과제로 제기되었다.

[전문서비스 인력 양성

“사실은 제일 절박한 데가 챌린지 하는 기관에 실무자가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도 안 되는데 … 평교에도 굉장히 도전 행동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적어도 발달 쪽은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 인력들을 양성해내야 되고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② 전담인력 소진예방을 위한 처우 및 재충전 보장

앞서 인력 양성 문제와 더불어 인력의 이탈 문제를 경감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 서비스 인력의 쉼과 재충전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비스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은 교육과 관리를 통해 제고되는 측면이 있지만, 인력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쉼과 재충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인력의 쉼과 재충전 보장]

"관리라는 게 평가 시스템만으로는 안 되고 돌봄 노동자들의 어떤 쉼과 재충전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 적어도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질 이란 것이) 한편으로는 질 관리와 교육일 거고 평가나 교육일 거고 또 한편으로는 쉼과 재충전과 인성 교육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약간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

③ 기관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 제고

서비스 기관의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평가로, 기관은 서울시의 평가 지표와 평가 방향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서비스의 질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 유형에 맞는 타당한 평가지표의 수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가 수립되어 기관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가의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특히 인터뷰에서는 서비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투명한 결과의 공개에 따라 장애인 선택을 통해 도태되거나 정리될 수 있도록 평가의 투명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평가 투명성 제고]

"서비스의 질 관리라고 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평가한 게 공개돼야 되고 소비자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지금 시스템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매우 취약하고..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운영 사업자를 좀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또 소비자가 소비자의 선택으로나 아니면 평가가 공개됨으로써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④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전담 부서 설립

장애인 지원 정책은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요와 장애에 대한 지식 등 전문성과 지원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임에 불구, 발달장애 분야의 경우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서울시 정책 담당자의 전문성 문제와 발달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문제, 그리고 연속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담부서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전담부서를 통한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제시되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전담 부서 설립]

"팀장님만 그나마 2~3년씩 있는 거고, 밑에 주무관들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 돌겠어요. 가서 설명하다가 목 아파서.."

(2) 서비스 거점 강화

① 발달 · 정신장애인 IL센터 운영 고도화

신체적 장애인에 비해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IL센터의 부족 문제가 인터뷰에서 제기되었다. 자치구별로 있는 신체 장애인의 IL센터에 비해 발달 장애인의 IL센터는 서울 전역에 3개소만 존재하고 정신장애인 IL센터는 1개소만 존재하여 자치구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원을 위한 인력 확충과, IL센터의 운영이 발달장애 유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도 기존 IL 기준이 아닌 발달 장애에 맞는 지침과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발달 · 정신장애인 IL센터 운영 고도화]

"신체장애인 IL 센터는 구마다 다 몇 개씩... 발달장애인 센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3개 밖에 없고 정신장애인 IL 센터는 하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이게 좀 강화가 필요하고 똑같은 인력 배분이 아니라 인력 배분을 더 해줘야지 사실은 운영이 된다."

"발달의 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 인력 구조도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실무를 잘하시지는 못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그러면 더 직원을 배치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고 ... 평가 방식도 기존의 IL 기준에 그대로 맞춰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② 체계적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권역별 확대

현재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경우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기에 발달장애 지원센터의 인력 규모와 역량 상 무리인 실정으로 특히 급여체계가 굉장히 낮은 현실에서 직원의 이탈도 많아 대부분 신입 직원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발달 사업을 컨트롤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 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첫째로는 권역별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 수를 확대하는 것과 인력의 전문성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발달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확대]

"발달 사업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센터도 많고 여러 군데서도 하고 그러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데는 좀 취약하긴 한 것 같아요. ... 발달장애 지원센터를 그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기 했는데 현재 권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상황이라든가 규모에서는 굉장히 무리고요.. 3분의 2가 이제 1년 미만의 신입이라거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직원들은 더 좋은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급여 체계가 굉장히 낮으니까 .."

제5절 정책개선과제 도출 및 과제 우선순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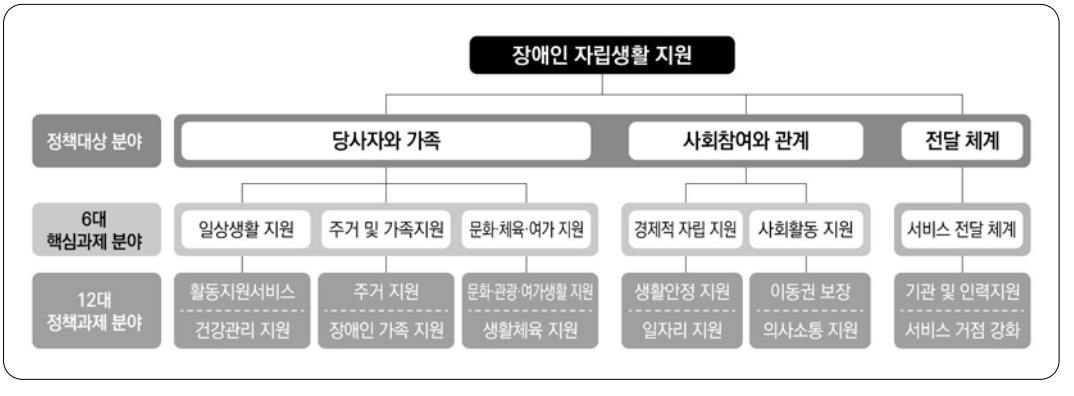
1. 정책개선과제의 도출

본 절에서는 서울시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운영 현황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1,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장애인 단체 주요 관계자 FGI를 통하여 도출된 과제 Pool과 제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평가된 과제 우선순위 결과를 제시한다.

과제 도출 과정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1차로 제1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의 이행성과와 제1기에 추진된 과제 중 제2기에도 지속 혹은 확대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평가하고 2차로 제1차 조사에서 제시된 제안들을 전문가들에게 공유하고 과제들의 추진 필요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후 장애인 단체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과제들의 확인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델파이 조사와 FGI에서 도출된 추진 과제들을 다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전문가 다수의 제안을 거쳐 도출된 과제들을 정책 대상자 집단으로부터 확인하고 추가 제안을 거쳐 다시 전문가 다수에게 평가를 받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과제의 타당성과 추진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였다.

정책분야는 제1기의 경우 5개 핵심과제 하위로 10개 정책과제가 구성되었지만, 제안된 안들의 분야와 과제의 내용, 사회 현황 및 환경 요인 등을 고려하여 본 조사의 결과로 도출된 개선과제 정책분야는 6개 핵심과제 하위로 12개 정책과제를 구성하였다. 개선과제의 정책분야의 구성은 아래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개선과제의 정책 분야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①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만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축소되는 지원급여 차이에 대해 급여 부족분을 보조급여 형식으로 지급, 현재 월 100~320시간을 시비로 보전급여를 받는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시간 감소에 따라 당사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해소를 위하여 65세 이후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보상에 대한 체계적 안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② 고령장애인 욕구조사 기반 특화서비스 개발

제1기 과제로 이행성과가 낮게 평가된 중고령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지금까지 고령장애인 욕구조사 기반 체계적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고령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20~30대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욕구와 다른 고령인의 욕구에 맞춘 특화 주간활동 지원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야 함이 제기되었다.

③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고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 중증도에 따라 지원 시간을 300, 200, 100 시간 등 차등적 지원 단계를 마련하여 많은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며 가족의 부양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고도화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의 24시간 지원 현실화를 위해 종합조사표 X1점수 360점 이상의 기준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④ 대상 맞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최근 탈시설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으로 다른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탈시설 장애인의 안착이 어려워졌음에 기존 시비추가(120시간, 3년, '22년 기준) 확대가 필요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판정도구 개발을 통한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의 확대 등 장애 특성과 장애인 상황에 맞는 활동지원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⑤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고도화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의 치유와 낮활동 지원을 위한 과제로 활동지원사 부족에 따른 비매칭 문제 해소를 위한 인력 양성과 행동준비 전문가의 권역별 배치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 도전행동 전문가 양성과 단계적 인력확대,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⑥ 사용자 중심의 신규 활동지원 서비스 도입

현재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장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장애의 정도가 심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선택되는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가 정해지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는 사용자 중심의 선택형 바우처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가족들의 긴급 돌봄서비스 상황 발생 시(ex. 가족 사망, 입원 등) 일시 추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의 확충, 그리고 장애인이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편의 앱의 개발과 보급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⑦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제1기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가 최중증, 중고령 장애인 등 지원이 없는 경우 활동이 어려운 대상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자립생활 지원의 취지 상 조금의 지원으로도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이 가능한 경증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 개발과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⑧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추가 확대

현재 2개소만 지정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권역별 지정을 통한 최소 5개소 이상 확보로 도전행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⑨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를 위한 지원은 비록 지원 대상이 소수이지만 종합계획에는 반드시 있어야할 과제로 평가된 과제이다. 해당 과제는 제1기 과제 이행성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이며,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평가되어 제1기보다 지원의 확대와 대상의 확대 등 확대된 과제로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40>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정책 이슈	실태 조사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1.1.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	●	●	●	●	■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 만65세 고령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축소되는 지원급여 차이에 대해 급여 부족분을 보조급여 형식으로 지급 ➲ 지원 시간 감소로 당사자들이 느끼는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65세 이후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보상에 대한 체계적 안내 서비스 제공
		●				●	■ **고령장애인 욕구조사 기반 특화서비스 개발** ➲ 고령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 실시 ➲ 욕구조사 기반 고령인 맞춤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 개발 · 제공
		●	●	●	●	●	■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고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의 확대 ➲ 중증도에 따른 차등적 활동지원서비스 단계를 수립하여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제공 고도화 ➲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지원서비스 제공 현실화를 위하여 현재 360점인 종합조사 X1 점수 기준의 완화
			●	●	●	●	■ **대상 맞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 인구의 고령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증가 및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탈시설 장애인 안착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부족 해소를 위한 기존 시비(120시간)의 추가 및 지원 기간의 확대 ➲ 시각장애인 판정도구 개발을 통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	●		●	●	■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고도화** ➲ 주간 활동보조사 부족에 따른 비매칭 문제 해소를 위한 낮활동 지원인력 확대 ➲ 행동준비 전문가 양성 및 권역별 배치 후 단계적 확대 ➲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중장기적 지원 종합계획 수립
					●	●	■ **사용자 중심의 신규 활동지원 서비스 도입** ➲ 사용자 필요에 따라 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는 선택형 바우처 도입 ➲ 긴급상황(ex. 가족사망, 입원 등) 대처 일시적으로 추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서비스 지원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 편의 앱개발 · 보급
					●	●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 조금의 지원으로도 자립생활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 대상 지원 서비스 개발 · 지원
					●	●	■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추가 확대** ➲ 현재 2개소 지정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권역별 지정을 통한 추가 확대
		●		●		●	■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제1기 과제의 확대)** ➲ 여성장애인의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파견 시간 확대 ➲ 만 4세미만의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파견 지원 ➲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

(2) 건강관리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① 장애인 진료기관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의료서비스의 접근선 개선을 위해 장애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우선 현재 남부와 북부 2개소에 있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동부, 서부의 2개소 추가 신설이 필요하며, 장애인 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의원급 규모의 시립의료기관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의원의 설립·운영이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장애인 유형에 관계없이 첨단 검진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장애친화 상급병원의 확보가 첨단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기되었다.

②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강화

장애인의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로서 건강검진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실제 운영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고 13개의 시립병원 중 서울의료원만이 지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수검률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확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전반적 유병률이 높음에도 불구 비장애인 대비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점에 건강검진 수검 제고를 위한 검진 의료비 바우처 제공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③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권 보장

의료서비스의 접근선 개선을 위한 과제로 병·의원의 확대 외에 의료기관 이동권 보장 과제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이동권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는 병원에 가고 싶을 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이동의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가능한 장애 맞춤형 응급차를 확보하고 장애인이 구급차를 이용할 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지역의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의원급 기관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확대, 의료기관 방문 동행서비스와 방문 간호사, 물리치료사, 재활운동사 등의 장애인 가정방문 의료 서비스를 위한 예산확보 및 서비스 제공·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④ 서울형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주기적으로 장애인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주치의를 통해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개별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고령 장애인의 경우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제기되었다. 주치의 제도의 의료적 서비스는 반드시 방문이 아니더라도

주기적 대화와 통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매칭해주는 서비스로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주치의 제도 강화를 위해 주치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장애인 주치의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장애 이해를 위한 커리큘럼 제공 및 주치의 가이드라인 제작 등의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은 장애유형에 따라 칫솔질과 같은 구강위생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치과 치료 시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 일반 치과의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확대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권역센터인 서울장애인구강진료센터 외 지역 필수 구강진료 공급을 위한 지역구강진료센터의 4개소 설치 및 일상의 칫솔질 관리와 잇몸마사지 등 구강관리를 위한 활동보조인과 보호자 대상 구강관리 교육의 지속적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견으로 제기되었다.

⑥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들은 조기노화의 가능성이 높으며 기능의 급격한 감소와 다양한 노인성 질환과 합병증을 앓게 될 위험이 높아 이들의 일상 건강관리와 의료적 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이 제기되었다. 일상 건강관리 방안으로는 약물치료, 운동치료, 식품 영양관리 등의 지원 프로그램 등 조기노화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의 마련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할 때 진단 ·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총량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 거점병원의 지정 ·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⑦ 장애인 감염병 대응 핫라인 구축

감염병 발생 시 장애인 대상 방역대책을 위하여 서울시-보건소-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장애인을 집중관리군에 준하여 관리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또한 감염병 상황에서 PCR, 예방접종 등에 있어 최중증 · 와상 · 호흡기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특수 이동수단의 제공과 방문 예방접종 및 PCR체계의 수립, 중증장애인 대상 자가진단키트의 지원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표 4-41> **건강관리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정책 이슈	실태 조사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1.2. 건강관리 지원 강화	●	●	●	●	●	**■ 장애인 진료기관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추가 2개소(동부, 서부) 신설 ➲ 장애친화 상급병원 및 첨단 검진시설을 갖춘 병원 확보 ➲ 조례 개정을 통한 의원급 시립 의료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후 공공의원 설립
		●	●	●	●		**■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강화** ➲ 장애 친화 의료 검진기관 현 4개소에서 권역별 지정 확대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한 검진 의료비 바우처의 제공
					●	●	**■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권 보장** ➲ 휠체어 탑승 가능한 장애 맞춤형 응급차 확보 및 장애인 구급차 이용비용 지원 ➲ 의료기관 방문 동행서비스와 가정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서비스 제공·확대 ➲ 지역 의원급 기관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대
			●	●	●	●	**■ 서울형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 ➲ 정기적 건강관리 지원 및 진료·처방을 위한 주치의 제도의 확대 ➲ 주치의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및 주치의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커리큘럼 제공 지원 및 주치의 가이드라인 제작
					●	●	**■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지원**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외 지역구강진료센터 4개소 설치로 필수 구강진료 공급 확대 ➲ 장애인 구강관리를 위한 활동보조인·보호자 대상 양치질, 잇몸마사지 교육 지속 제공
			●	●	●	●	**■ 발달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일상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 프로그램(약물·운동치료·영양관리 등) 지원으로 조기노화·성인병 대응 강화 ➲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의 지정·확대
			●		●		**■ 장애인 감염병 대응 핫라인 구축** ➲ 서울시-보건소-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간 핫라인 구축을 통한 집중관리군에 준한 관리와 환자 중증도에 따른 즉각 대응 가능한 대응체계 마련 ➲ 최중증·와상·호흡기 장애인의 PCR·예방접종 등을 위한 이동 시 특수 이동수단의 지원 및 예방접종·PCR 체계 수립과 중증장애인 대상 자가진단키트의 제공 ➲ 장애인 확진 시 긴급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24시간 활동지원 제공

2) 주거 및 가족지원 강화

(1) 주거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① 신주거모형의 개발·고도화로 장애인 주거 선택권 강화

제1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결합·지원한

신거주모형의 개발과 제공이 있었다. 이러한 신주거모형 공급의 확대가 필요함이 제기되었으며, 주택과 서비스가 같이 결합되어 제공되는 형태에 있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자신의 필요에 따라 주거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 옵션들이 제공되는 고도화 과제가 제시되었다.

② 장애 당사자 맞춤형 지원주택 서비스 고도화

지원주택의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중증 · 경증 장애인을 포괄할 수 있는 당사자 맞춤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현재 일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지원주택 서비스의 현실과 운영 사업자의 제공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운영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다양한 당사자의 필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거, 건강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의 고려가 필요하며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와 간헐적 서비스만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는 당사자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중증 장애인도 입주할 수 있도록 의료특화주거서비스 모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③ 장애인 지원주택 제공 확대

지원주택 공급의 양적인 측면에서 서울시가 목표한 탈시설 목표인원에 맞는 물량 공급이 필요하여 약 500호의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부부, 학대 피해 장애인 등 지원주택 대상을 확대하여 공급이 필요하며, 접근성이 확보된 지원주택 공급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④ 임대주택 확대 및 분양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서울시는 전국에서 주거 비용이 가장 높은 광역시로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확대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더불어 SH임대주택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⑤ 전세자금 지원 비용 현실화 및 지원 강화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전세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현재의 1.8~1.9억원 지원규모로는 부족하여 이에 맞는 전세자금 지원 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의 강화 및 일자리 마련에 따른 주거 안정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선정 기준 중 소득기준에 대한 완화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⑥ 장애인 부동산 임차 및 매매를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의 주택 임차 또는 매매에 있어 행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주택 임차와 거래 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장애인 부동산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개인을 확보하고 장애인이 직접 집을 구하거나 임차하기가 어려운 점에 이들을 대리해서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⑦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및 주거지원 확대

탈시설 정착금은 시설거주장애인의 탈시설 후 지역사회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타 광역단체와 같이 현재 수급자 ·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정착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야 하며, 정신질환 장애인의 탈원화를 위하여 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전체 발달장애인 중 소수에게만 제공되는 재가 돌봄주거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42> 주거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정책 이슈	실태 조사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2. 주거 및 가족 지원 강화	2.1. 주거 지원	●	●	●	●	●	■ **신주거모형 개발 및 장애인 주거 선택권 강화** ➲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신주거모형 제공 확대 및 이용자 필요에 따라 주거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옵션을 제공
			●	●	●	●	■ **장애 당사자 맞춤형 지원주택 서비스 고도화** ➲ 일괄적 서비스 지원 탈피하여 최중증부터 경증 장애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당사자의 다양한 필요가 반영될 수 있는 맞춤 지원서비스 제공 ➲ 당사자 맞춤 서비스를 위하여 운영사업자 선정과정부터 주거 · 건강서비스 ·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고려하고 최중증 장애인 입주 가능한 의료특화 서비스 마련
		●	●		●		■ **장애인 지원주택 제공 확대** ➲ 서울시 탈시설 목표인원에 맞는 지원주택 공급 추가 확대(약 500호)와 접근성이 확보된 지원주택 수량 확보 및 장애인부부, 학대 피해 장애인 등 지원주택 대상의 확대
		●		●	●	●	■ **임대주택 확대 및 분양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 확대 및 SH임대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 설계 방안 수립
		●		●	●	●	■ **전세자금 지원 비용 현실화 및 지원 강화** ➲ 전세보증금 상승에 맞춰 장애인 전세금 지원 금액 상향 ➲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전세주택 제공사업 강화 및 일자리 마련 시 소득기준의 완화
						●	■ **장애인 부동산 임차 및 매매를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주택 거래 · 임차 시 행정적 지원 제공 또는 장애인 부동산 거래 지원 중개인 확보 및 장애인을 대리해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지원 체계의 마련
				●	●		■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및 주거지원 확대** ➲ 탈시설 후 지역사회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타 광역단체와 같이 탈시설 정착금 지원 대상 기준에서 소득기준을 폐지 ➲ 정신질환 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정착지원사업의 확대와 발달장애인 재가 돌봄주거서비스 대상 확대

(2) 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① 가족 돌봄 휴식지원 확대

장애인 가족이 돌봄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족 대상 휴가제도를 조례로 제정하고, 실질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휴식 지원 대상의 확대와 지원기간의 확대 및 장애아동의 경우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②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역할 강화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가족 대상 상담 등 심리치료 등은 전 장애유형 가족에게도 필요한 서비스로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역할에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고 상담에 있어서도 역할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③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발달장애인 가족의 소진, 자살 등의 예방을 위하여 위기가정 사례 발굴 ·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④ 장애인 돌봄 수당 도입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과 생활하는 가족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돌보며 생활하는 가구 대상 사회적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돌봄 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돌봄 부담의 경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견으로 제기되었다.

⑤ 장애인 가족의 취업지원

장애인 가족이 일반적으로 겪게되는 경제적 문제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가족 대상 취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표 4-43> **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정책 이슈	실태 조사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2. 주거 및 가족 지원 강화	2.2. 장애인 가족 지원	●			●		**■ 가족 돌봄 휴식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 돌봄 휴가제도의 조례 제정 ➲ 장애아동의 교육서비스를 통한 가족 돌봄 시간 경감
		●			●	●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역할 강화** ➲ 다양한 장애유형의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확대 ➲ 사례관리사 배치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현장 중심 지원 및 전문 상담 서비스 강화
					●	●	**■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발달장애인 가족의 소진, 자살 등의 예방을 위한 위기가정 사례 발굴 · 지원
			●		●		**■ 장애인 돌봄 수당 도입** ➲ 발달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가구 대상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수당 제도 도입
			●			●	**■ 장애인 가족의 취업지원** ➲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을 위한 가족의 취업 지원

3)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지원 강화

(1)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①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장애인의 관광 · 여행 욕구 해소를 위한 과제로서 장애인 관점의 무장애 관광지역 확대가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관점의 관광 코스 개발 및 '무장애' 개념에 있어 신체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신 · 발달 장애를 반영 · 확장하여 이동 접근성 측면의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정보 접근성 측면의 편의시설 안내 강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동 접근성 지원을 위하여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 확대 및 저상 시티투어 버스의 도입을 통한 무장애 관광 활성화 의견이 제기되었다.

② 다양한 장애 관점의 무장애 관광콘텐츠 확충

관광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장애인 관광 지원을 위한 콘텐츠 확충 방안으로 장애의 다양한 유형을 반영한 도슨트의 다양한 형태 지원 및 시각 · 청각 ·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맞는 여행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서울지역의 역사 및 관광지에 QR코드를 활용한 수어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③ 장애인 가족 관광 프로그램 지원

가족과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원이 필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가족 관광 지원 및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현지 관광프로그램과 발달장애인 가족 맞춤 프로그램(ex, 함께하는 시간과 장애인 가족만의 프로그램이 함께 구성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과제로서 제기되었다.

④ 주체적 문화콘텐츠 제작 활동을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예술 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재능과 취미를 직업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예술문화인의 전시 · 판매, 저작권 관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합창단, 관현악단 등의 협연 지원 및 서울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표 4-44>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정책 이슈	실태 조사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3. 문화 · 체육 · 여가생활 지원 강화	3.1.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지원	●	●		●	●	**■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 장애인 관점의 무장애 관광 코스의 개발 ➲ 신체 · 정신을 포괄하는 '무장애' 개념으로 확장, 이동접근성 강화를 위한 편의시설과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편의시설 안내표시 확대 ➲ 이동 접근성 지원을 위한 저상 시티투어 버스 도입 및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 확대
		●	●		●	●	**■ 다양한 장애 관점의 무장애 관광콘텐츠 확충** ➲ 장애의 다양한 유형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도슨트 제공 지원 및 서울지역의 역사 · 관광지에 QR코드를 활용한 수어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 ➲ 시각 · 청각 · 발달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여행 프로그램 지원
						●	**■ 장애인 가족 관광 프로그램 지원** ➲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현지 관광 지원 프로그램 마련 및 가족 관광 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 맞춤 프로그램의 개발 · 지원
			●	●	●	●	**■ 주체적 문화콘텐츠 제작 활동을 위한 지원 강화** ➲ 장애인 예술문화인의 활동 지원(전시, 판매, 저작권 관리 등) ➲ 장애인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서울시 특화 양성 프로그램 개발

(2) 생활체육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① 실내 체육시설 확보 및 확대

제1기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에 확대되어 장애인이 생활체육 활동 및 신체활동을 할 수 있

는 실내 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고령 발달장애인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의 확충이 제기되었으며 실내 체육시설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체육시설의 확대 및 비장애인 대상 체육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공간 마련, 일반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지원이 제시되었다.

②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 체육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 필요에 따라 몸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문제로 장애인 맞춤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중장년 대상 특화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개발, 체육바우처 지원 체계 마련, 장애인 맞춤 생활체육 동영상 프로그램 개발 · 보급이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③ 장애인 체육시설 지도자 증원 및 인건비 지원 확대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체육지도자의 확충을 위하여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지도사 인건비 지원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체육시설의 장애인 대상 체육지도가 가능한 지도자를 증원하는 방안이 의견으로 제기되었다.

④ 장애인 전문체육인 · 생활체육인 대회 지원 확대

장애인 당사자의 체육 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재능을 직업화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장애인 실업팀을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하여 창단하고, 생활체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장애인 체육회의 활성화 지원과 서울시장배 장애인 체육대회의 확대가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표 4-45> 생활체육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정책 이슈	실태 조사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3. 문화 · 체육 · 여가생활 지원 강화	3.2. 생활체육 지원	●			●		■ **실내 체육시설 확보 및 확대** ➲ 전염병 발생에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생활체육 공간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 비장애인 대상 체육시설에 장애인 공간 마련, 일반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지원
		●		●	●	●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 체육 프로그램 확대** ➲ 중장년 대상 특화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 맞춤 생활체육 동영상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및 체육 바우처 지원체계 마련
				●		●	■ **장애인 체육시설 지도자 증원 및 인건비 지원 확대**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시설 지도사 인건비 지원 상향 (20~30% → 50% 이상) ➲ 체육시설의 장애인 대상 체육지도 가능한 지도자 증원
					●	●	■ **장애인 전문체육인 · 생활체육인 대회 지원 확대** ➲ 서울시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의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 · 창단 ➲ 서울시장배 장애인 체육대회 확대 및 기초자치단체 장애인 체육회 지원 · 활성화

4)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1) 생활안정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①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부가급여 대상범위 확대 및 금액 확대를 통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의 강화 및 중증장애인 대상 서울형 장애인 수당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장애인의 자립과 자금형성 지원을 위하여 이룸통장의 대상 확대와 목돈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비과세 또는 매칭펀드 저축 확대가 과제로서 제시되었으며, 자금형성 과정에서 금융 및 경제 교육 제공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③ 가족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서울의 부동산 시세로 인해 많은 재가장애인 가족이 부양의무를 지게 되며, 가족의 경제력에 의해 기초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등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양의무제의 전면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4-46> **생활안정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정책 이슈	실태 조사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4.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4.1. 생활안정 지원	●	●	●	●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범위의 확대 및 금액 확대를 통한 부가급여 지원 강화 및 중증장애인 대상 서울형 장애인 수당의 도입
		●			●		**■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 장애인 자금형성 지원을 위한 이룸통장 대상 확대 및 비과세 통장 · 매칭펀드 저축 프로그램 확대 및 금융 및 경제 교육의 제공
		●			●	●	**■ 가족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 서울시 부동산 시세에 비추어 저소득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2) 일자리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① 장애인 맞춤 직무 개발을 통한 공공일자리 개발 · 확대

기존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일부의 직무에 대해 장애인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형태였다면, 최근에 요구되는 공공일자리 지원 방향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서울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직무 개발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장애인 대상별 · 직종별 · 직무별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여 재택가능 업종의 취업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 위탁기관과 전담인력 확대(최중증 5명당 전담인력 1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선 배치 후 훈련 방식을 통한 현장 중심 취업 지원 확대

보호작업장 중심의 일자리 지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및 사회활동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직업교육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선배치 후훈련을 받을 수 있는 현장 중심 취업지원 예산의 확대와 권역별 커리어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한 사업 확대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장애 특성에 따라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을 연계한 현장 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권역별 현장 중심 직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을 지원하는 커리어플러스센터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③ 중증장애인의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업종 지원

가족창업 또는 소집단 창업 등 장애인 창업을 지원하고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애인자립기반 확대에 적합하며 중증장애인의 직업만족도가 높은 유망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1기 과제의 확대 추진 필요과제로 평가되었다.

④ 장애인 우선고용 및 고용유지 방안 마련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및 장애인 우선고용 업종을 정하여 우선고용제도를 조례로써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진입과 고용유지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의 기초수급권, 의료수급 유예기간을 확대(2~3년)하고 및 임대주택 자격 유지 제도 마련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⑤ 서울시 장애인 통합일자리 지원센터의 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중증 · 중도 장애인들의 직장 복귀 및 직업 전환을 위한 전문상담센터 기능이 필요하며, 장애인복지법 56조(장애동료간상담)에 근거 장애인 동료상담가들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기되었다.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의 일자리 사업및 고용공단 사업과 연계, 일자리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사업간 연계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고용유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⑥ 장애인 취업지원, 일자리사업 개선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사관학교, 각 자치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연계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일자리의 연속성과 사업 간 연계성 개선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커리어센터 등 장애인의 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는 시설의 경영 관련 지원을 하는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종사자 지위의 안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었다.

⑦ 청년 장애인의 일자리 취업 지원

경증 장애 대학생의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비장애 청년들과 경쟁하고 있어 민간기업 취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취업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기업과의 장애인고용협약, 직무개발 · 취업연계, 고용유지 상담지원 등 선제적 고용시장 확대와 지원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 일자리 사업에 장애 대학생 대상으로 취업 알선 및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제기되었다.

<표 4-47> 일자리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정책 이슈	실태 조사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4.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4.2. 일자리 지원	●	●	●	●	●	**■ 장애인 맞춤 직무 개발을 통한 공공일자리 개발 · 확대** ➲ 서울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직무 개발 및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장애인 대상별 · 직종별 · 직무별 · 업종별 일자리 모델 개발과 재택가능 업종의 취업 지원 강화 ➲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위탁기관 및 전담인력 확대(5명당 전담인력 1명)
		●	●	●	●	●	**■ 선 배치 후 훈련 방식을 통한 현장 중심 취업 지원 확대** ➲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선배치 후훈련 방식의 현장 중심 취업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권역별 커리어플러스센터, 퍼스트잡과 연계하여 사업 확대 ➲ 장애특성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연계한 현장 훈련 지원 강화와 권역별 현장 중심 직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을 지원할 커리어플러스센터의 추가 설치

분야		1기 과제	정책 이슈	실태 조사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	●		●		■ **중증장애인의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업종 지원** ➲ 장애인 창업지원(가족창업 또는 소집단 창업 지원 등) ➲ 직업재활시설의 중증장애인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전환 지원
					●	●	■ **장애인 우선고용 및 고용유지 방안 마련**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강화 및 장애인 우선고용 업종을 지정하여 우선고용제도를 조례로써 제도 기반 마련 ➲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 진입과 고용유지 동기부여를 위하여 직업을 가진 이후 기초수급권, 의료수급 유예기간 확대(2~3년) 및 임대주택 자격 유지
					●	●	■ **'서울시 장애인 통합일자리 지원센터' 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 중도 · 중증장애인 직장 복귀 및 직업 전환을 위한 전문상담센터 기능 신설 및 장애인 동료상담가 배치 ➲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의 일자리 사업과 고용공단 사업을 연계, 일자리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
					●	●	■ **장애인 취업지원, 일자리사업 개선**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의 기간 확대(2→4년) 및 일자리사관학교, 각 자치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연계하여 장애인 일자리의 연속성과 연계성 개선 ➲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커리어센터 등 장애인의 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종사자의 안정적 지위 기반 마련
				●		●	■ **청년 장애인의 일자리 취업 지원**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협약, 직무개발 · 취업연계, 고용유지 상담 지원 등 경증 장애 대학생의 민간기업 취업 지원 ➲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에 장애 대학생 대상 취업 알선 및 연계 추진

5) 사회활동 지원 강화(이동권 및 의사소통)

(1) 이동권 보장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①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문제 해소를 위해 장애인 선택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콜택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공급 불충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확대(장애인 콜택시 870대, 임차택시 240대 증차) 및 바우처(일반 택시요금의 총 결재액 150% 지원, 한도액 지정) 택시의 지원 확대,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② 민간 택시의 장애인 이동권 지원 보조

이동수단 확대를 위한 민간 택시 옵션도 선택할 수 있도록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콜밴 리프트 장착 운행을 지원과 민간 택시의 장애인 지원 장치 부착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택시기

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인식개선 및 리프트 장착 · 운행 교육 등의 프로그램 마련 · 운영이 민간택시 이용 확대를 위해 필요 과제로 제기되었다.

③ 버스 이용 이동권 보장 강화

장애인의 버스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2025년까지 전 노선 시내 저상버스 및 마을저상버스 100% 도입 및 저상버스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저상버스의 양적 확대 측면과 동시에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인식과 서비스,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공감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의 제기되었다.

④ 지하철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중 지하철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수도권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통한 1역사 2동선을 통해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 및 단차 조절, 장애인 전용 탑승 구역 설치 등 안전사고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 친화적인 시각화된 표시(출구, 환승번호, 역이름 등)를 설치하여 지하철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⑤ 특별 교통수단 및 서비스 확대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을 위한 '서울장애인버스' 5대를 증차하여 10대 확보 및 수도권 자치 사정에 맞는 노약자 무료서틀 버스 지원, 감염병 상황 대비 방역차량 지원 체계 등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의료기관 방문, 낯선 장소 방문 등에 필요한 이동(동행)지원서비스가 필요하며 서비스 지원을 위해 동행자 수당 및 교통비 지원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기되었다.

⑥ 이동권 지원을 위한 콜센터 확대

수도권 권역 장애인 콜택시 운행과 택시 이용 장애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콜센터를 확대 운영 방안이 이동권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⑦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많아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실종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알림체계가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고 광역알림이 어려운 현실의 문제에 대응하여 관계기

관 통합 신고체계 및 여러 권역에 동시 공지, 알림이 될 수 있는 통합체계가 필요하다고 제기되었다.

<표 4-48>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정책 이슈	실태 조사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5. 사회활동 지원 강화 (이동권 및 의사소통)	5.1. 이동권 보장	●		●	●	●	■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 선택권 부여 등 이용자 중심 운영체계 개편과 장애인 콜택시(장애인 콜택시 870대, 임차택시 240대 증차) 및 바우처 택시 지원 확대 ➲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콜 확대
				●		●	■ **민간 택시의 장애인 이동권 지원 보조** ➲ 민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콜밴 리프트 장착 운행 지원 및 민간택시 장애인 장치 설치비 지원 ➲ 택시기사의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버스 이용 이동권 보장 강화** ➲ 2025년까지 전노선 저상버스 및 마을저상버스 100%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저상버스 확대 ➲ 저상버스 이용을 위한 대중교통 종사자 및 시민인식 개선 사업 추진
			●		●	●	■ **지하철 이동권 보장** ➲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통한 1역사 2동선 마련 ➲ 지하철 승강장, 열차 간격 및 단차 조절, 휠체어 장애인 전용 탑승 구역 설치 등 안전사고 대책 마련 ➲ 발달장애인 친화 시각화된 표시 설치(출구, 환승번호, 역이름 등)
					●		■ **특별 교통수단 및 서비스 확대** ➲ 단체이동지원을 위한 '서울장애인버스' 5대 증차하여 10대 확보 ➲ 감염병 관련 방역차량, 노약자 셔틀버스 등 지원서비스 확대 ➲ 이동(동행)지원서비스 확대 및 예산 확보
					●		■ **이동권 지원을 위한 콜센터 확대** ➲ 수도권역 장애인 콜택시 운행 및 장애인 이용 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
						●	■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시 실종 지역 이탈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신고 협력 체계 구축 및 신속한 광역 알림 연계 체계 구축

(2) 4차 산업기술 활용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권 보장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① 이동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보조기구 개발 · 보급 지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용화된 이동보조 기구의 보급 및 서울시가 미래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이동보조 기구 개발을 위하여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② 모바일 장치 활용 시각장애인 이동보조 인프라 구축

모바일 장치를 활용한 시각장애인의 이동보조 수단으로서 음성 앱과 네비게이션, 센서가 연계된 모바일 장치를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안내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방안이 제기되었다.

③ AI 융합 의사소통 보조기기 보급 지원

발달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STT(Speech-to-text) 기술과 TTS(Text-to-speech) 기술을 활용한 AI 융합 의사소통 보조기구와 음성지원 웨어러블 보조기기의 보급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④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술적인 방안 외에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을 실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횟수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AI 발전으로 인해 음성 중심의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표 4-49> **4차 산업기술 활용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권 보장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정책 이슈	실태 조사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5. 사회활동 지원 강화 (이동권 및 의사소통)	5.1. 이동권 보장				●	●	■ **이동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보조구 개발、보급 지원** ➲ 상용화된 이동보조 기구의 보급 및 미래 첨단기술을 활용한 이동보조 기구 개발을 위한 R&D 지원
				●		●	■ **모바일 장치 활용 시각장애인 이동보조 인프라 구축** ➲ 시각장애인 등 이동보조를 위하여 음성 앱과 네비게이션, 센서 등 모바일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		●	■ **AI 융합 의사소통 보조기기 보급 지원** ➲ TTS(Text-to-Speech) 기술을 활용한 음성지원 웨어러블 보조기기 개발 · 보급 지원 ➲ 시각장애인 대상 STT(Speech-to-Text) 기술을 활용한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 · 보급 지원
		●	●		●	●	■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지원 횟수 확대 · 현실화 ➲ 청각장애인 대상 문자 및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

6)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1) 기관 및 인력지원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①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지원을 통한 인력 양성 지원

활동지원사는 단기간 교육으로 그 자격이 주어지나, 활동지원을 받는 대상(장애인)은 다양화되어 있어 활동지원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수교육을 받는 시간만큼 보수교육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되었다. 또한 전문분야별 활동지원사 육성을 위하여 교육기관 확대 및 교육 실습기관을 지정 ·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되었다.

② 장애인 분야별 전문서비스 상담인력 확대

장애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일자리 · 학습 · 건강 · 문화예술 · 심리 등 분야 장애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만족도,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사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③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장애감수성(장애특성 및 당사자 입장 이해 등) 부족으로 나타나는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여 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감수성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인권교육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소진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처우 개선 및 현장 돌봄 노동자들의 쉼과 재충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④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투명성 확대

서울시의 평가지표와 평가 방향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서비스의 질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 유형에 맞는 타당한 평가지표의 수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가 수립되어 기관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가의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서비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투명한 결과의 공개에 따라 장애인 선택을 통해 도태되거나 정리될 수 있도록 평가의 투명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⑤ 발달장애인 위한 서울시 전담 부서 설립

장애인 지원 정책은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요와 장애에 대한 지식 등 전문성과 지원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임에 불구, 발달장애 분야의 경우 서울시 정책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서울시 정책 담당자의 전문성 문제와 발달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문제, 그리고 연속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전담부서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전담부서를 통한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제기되었다.

<표 4-50> **기관 및 인력 지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정책 이슈	실태 조사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6.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6.1. 기관 및 인력지원	●			●	●	■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지원을 통한 인력 양성 지원** ➲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의무화 및 보수교육 수당 지급 ➲ 전문분야별 활동지원사 육성을 위한 교육 실습기관 지정 및 교육기관 확대
					●		■ **장애인 분야별 전문서비스 상담인력 확대** ➲ 장애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다양한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상담사 배치
		●			●	●	■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 전담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감수성 교육 및 장애인 고용사업장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 전담인력 소진 예방을 위한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센터 전담인력 처우 개선 및 현장 돌봄 노동자들의 쉼과 재충전 보장
						●	■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투명성 확대** ➲ 장애유형에 맞는 평가지표 설계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투명성 제고
						●	■ **발달장애인 위한 서울시 전담 부서 설립** ➲ 정책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한 서울시에 발달장애인 전담부서 신설

(2) 서비스 거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① 발달 · 정신장애인 IL센터 운영 고도화

발달 및 정신장애인 IL센터의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사용 등 늘어나는 실무행정 수요를 중증의 장애인 활동가들이 감당해 내기 어려우므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센터 직원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IL센터의 운영이 발달장애 유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 방식도 기존 IL 기준이 아닌 발달 장애에 맞는 지침과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개선과제로 제기되었다.

② 지역 밀착형 서비스 거점장소 확대

현재 장애인 서비스 거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명료화 할 필요가 있어 서비스 거점 장소로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관, 복지기관, 보건소 등으로 지정하여 역할과

기능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재난 및 응급 대비 등 지역사회에 보다 밀착한 형태의 작은 규모 복지관(분관 형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③ 각 자치구별 · 권역별 거점 서비스 기능 · 역량 확대

정신장애인 통합지원센터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좀 더 확장하여 서울 4개 권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주간활동을 지원 기능 확대를 위하여 정신장애인 통합지원센터의 거점별 확대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기관의 기능 ·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발달장애 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 및 권역별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 수를 확대하는 것과 인력의 전문성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표 4-51> 서비스 거점 강화 정책과제 분야 개선과제(안)

분야		1기 과제	정책 이슈	실태 조사	델파이	FGI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선과제
6.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6.2. 서비스 거점 강화	●			●	●	■ **발달 · 정신장애인 IL센터 운영 고도화** ➲ 발달 · 정신장애인 IL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및 종사자 처우개선 ➲ 장애 유형에 맞는 지침 및 IL 평가 기준의 마련
					●		■ **지역 밀착형 서비스 거점장소 확대** ➲ 서비스 거점 장소로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기관, 보건소 등 지정 ➲ 지역사회에 보다 밀착형의 작은 규모 복지관(분관형태) 확대
			●		●	●	■ **각 자치구별 · 권역별 거점 서비스 기능 · 역량 확대** ➲ 정신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서울 4개 권역 운영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기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발달장애 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 지원

2. 개선과제별 정책우선순위 평가결과

1) 분석개요

전술한 것과 같이 제1, 2차 델파이 조사 및 표적집단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 강화', '주거 및 가족 지원 강화 분야', '문화·체육·여가생활 지원 강화',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사회활동 지원 강화(이동권 및 의사소통)',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의 6개 분야 에서 총 65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제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24명을 대상으로 상기와 같이 도출된 65개의 개선과제별 정책 중요도와 추진 시급성을 평가하여 과제별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야별 정책 중요도와 추진 시급성 지표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AHP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AHP 분석 과정에서 사람의 평가나 판단이 완벽할 수 없어 일관성 지수를 통하여 평가자의 쌍대비교 일관성을 검증하여야 하는데 일관성 지수인 CI(Consistency Index) 값이 0.1 이하일 경우 대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별 CI값을 계산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응답을 배제하고 CI값이 0.1이하인 결과만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결과

(1) 정책중요도-추진시급성 지표간 가중치 평가

개별 정책과제들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서 평가된 정책중요도와 추진시급성 지표 간 가중치 비교를 위해 실시된 AHP 조사 결과 정책중요도는 58%, 추진시급성은 42%의 가중치로 평가되었다. 해당 지표들의 가중치는 과제의 우선순위 비교를 위하여 하나의 척도로 통합함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 점수로 통합하는 데 활용된다.

<표 4-52> **개선과제 평가지표(정책중요도 및 추진시급성)의 가중치 평가 결과**

구분	가중치 평균	CI	순위
정책중요도	0.58	0	1
추진시급성	0.42		2

(2) 정책과제 분야별 개별과제 우선순위 평가 결과

① [핵심과제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가. [정책과제 1.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영역의 9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 평가의 결과는 〈표 4-53〉와 같이 나타났으며, 고령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및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고도화,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고도화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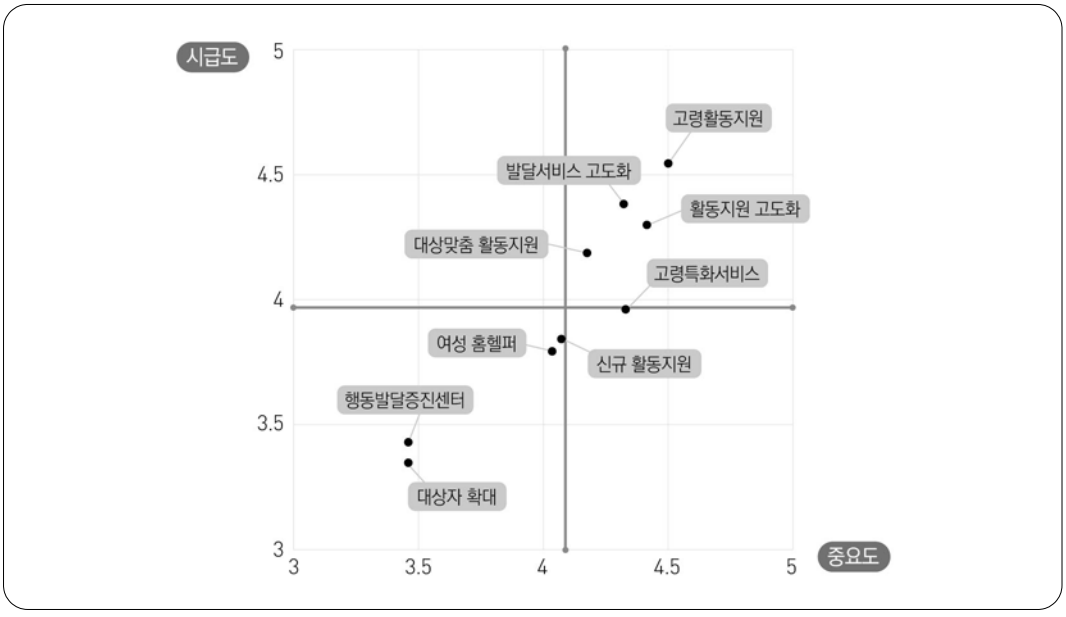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장애인의 고령화에 대비한 돌봄서비스와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가 중요하고도 시급한 개선과제라고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책환경 이슈에 있어 발달장애인 단체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체계의 부족함을 비판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와 국가책임제를 요구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 인력 확대, 행동준비 전문가 양성, 발달장애인 중장기 종합계획 등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고도화 개선과제를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표 4-53>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단위: 점(5점 만점))

정책과제	개선과제	중요도	순위	시급성	순위	총합	순위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4.50	1	4.54	1	**4.52**	**1**
	고령장애인 욕구조사 기반 특화서비스 개발	4.33	3	3.96	5	**4.17**	**4**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고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4.42	2	4.29	3	**4.37**	**2**
	대상 맞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4.17	5	4.17	4	**4.17**	**5**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고도화	4.33	3	4.38	2	**4.35**	**3**
	사용자 중심의 신규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4.08	6	3.83	6	**3.98**	**6**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3.46	8	3.33	9	**3.41**	**9**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추가 확대	3.46	8	3.42	8	**3.44**	**8**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4.04	7	3.79	7	**3.94**	**7**
평균		4.09		3.97		4.04	

<그림 4-2>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나. [정책과제 1.2] 건강관리 지원 강화

건강관리 지원 강화 영역의 7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표 4-54〉와 같이 나타났으며, 진료기관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장애인 감염병 대응 핫라인 구축,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강화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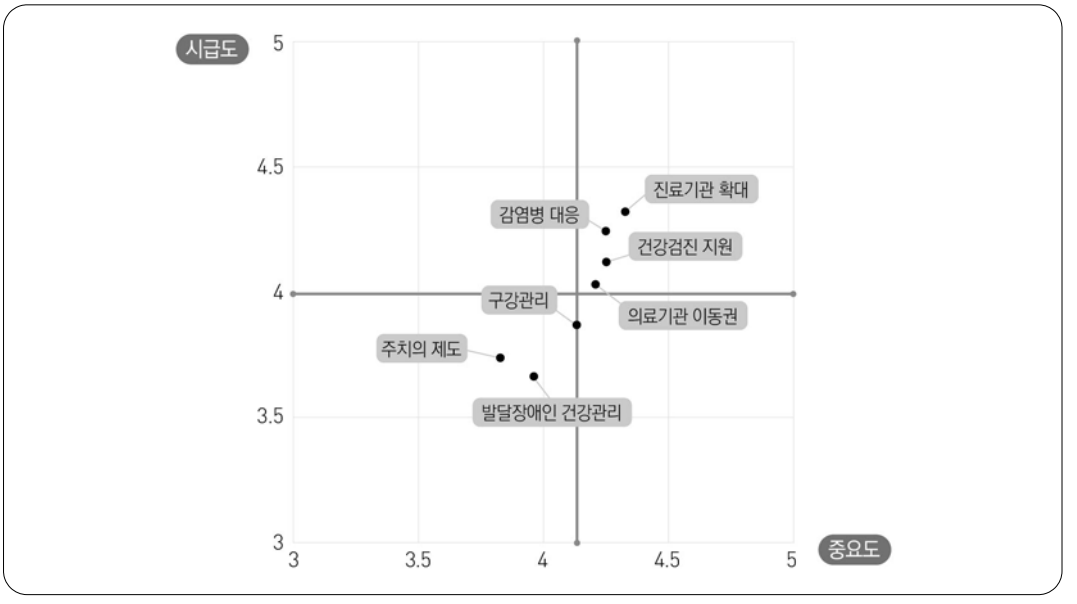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에서 첫 번째 주요사항으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을 고려하여 볼 때, 권역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신설, 장애친화 상급병원 및 공공의원을 확대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개선하고 건강검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과제들이 각각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책환경 이슈에 있어 재난상황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과 긴급돌봄서비스 보안·강화에 있어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중관리군 관리 및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감염병 관련 접종 및 이동지원 강화의 내용의 장애인 감염병 대응 핫라인 구축 개선과제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표 4-54> **건강관리 지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단위: 점(5점만점))

정책과제	개선과제	중요도	순위	시급성	순위	총합	순위
건강관리 지원 강화	장애인 진료기관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4.33	1	4.33	1	**4.33**	**1**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강화	4.25	2	4.13	3	**4.20**	**3**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권 보장	4.21	4	4.04	4	**4.14**	**4**
	서울형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	3.83	7	3.75	6	**3.80**	**7**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지원	4.13	5	3.88	5	**4.03**	**5**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강화	3.96	6	3.67	7	**3.84**	**6**
	장애인 감염병 대응 핫라인 구축	4.25	2	4.25	2	**4.25**	**2**
평균		4.14		4.01		4.08	

<그림 4-3> **건강관리 지원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② [핵심과제 2] 주거 및 가족 지원 강화

가. [정책과제 2.1] 주거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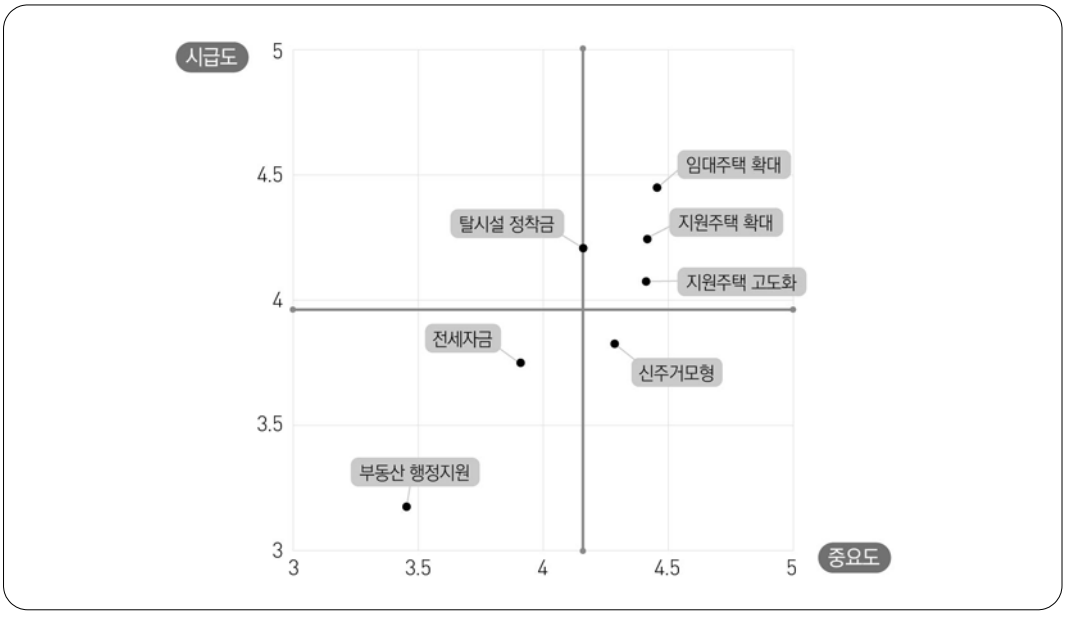
주거 지원 강화 영역의 7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표 4-55〉와 같이 나타났으며, 임대주택 확대 및 분양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및 장애 당사자 맞춤형 지원주택 서비스 고도화가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정책환경 이슈와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문제 제기 및 증장애인의 주거안정성에 대한 높은 욕구와 주거환경 편리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발견된 것을 고려해 볼 때, SH 임대주택 확대, 특별공급, 우선 분양 등 주택 마련 지원이 중요하고 시급한 개선과제라고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접근성을 고려한 주거 지원 및 탈가정 장애인 등 지원주택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며, 일괄적 서비스를 지양하고 장애 당사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가 중요하고 시급한 개선과제라고 평가되었다.

<표 4-55> **주거 지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단위: 점(5점 만점))

정책과제	개선과제	중요도	순위	시급성	순위	총합	순위
주거 지원 강화	신주거모형 개발 및 장애인 주거 선택권 강화	4.29	4	3.83	5	**4.10**	**5**
	장애 당사자 맞춤형 지원주택 서비스 고도화	4.42	2	4.08	4	**4.28**	**3**
	장애인 지원주택 제공 확대	4.42	2	4.25	2	**4.35**	**2**
	임대주택 확대 및 분양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4.46	1	4.46	1	**4.46**	**1**
	전세자금 지원 비용 현실화 및 지원 강화	3.92	6	3.75	6	**3.85**	**6**
	장애인 부동산 임차·매매를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3.46	7	3.17	7	**3.34**	**7**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및 주거지원 확대	4.17	5	4.21	3	**4.19**	**4**
평균		4.16		3.96		4.08	

<그림 4-4> **주거 지원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나. [정책과제 2.2] 장애인 가족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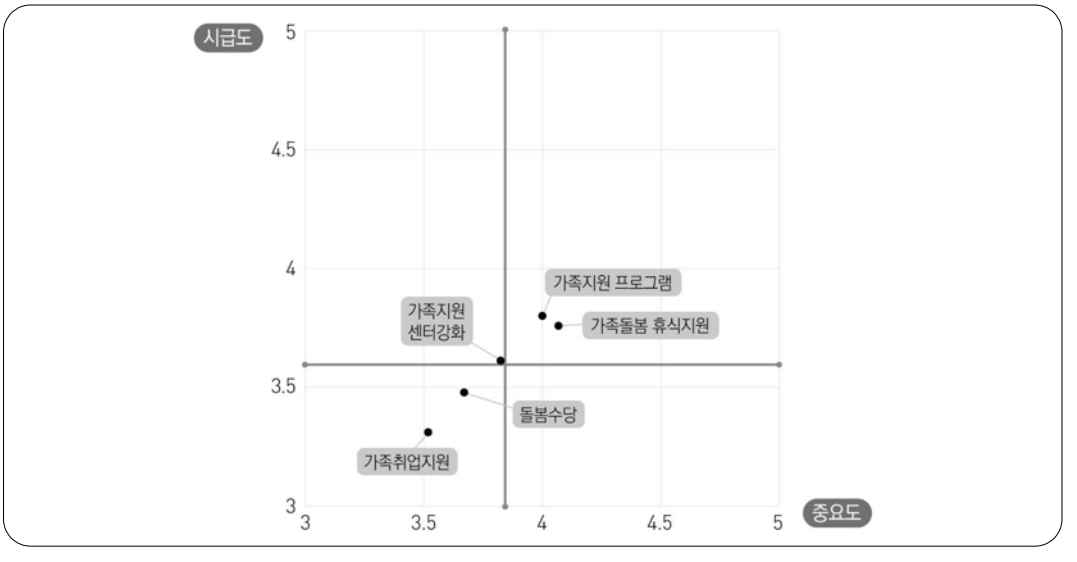
장애인 가족지원 영역의 5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표 4-56〉과 같이 나타났으며, 발달, 청각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확대, 가족 돌봄 휴식 지원 확대가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정책환경 이슈와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가족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범위 및 시간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을 고려해 볼 때, 발달 · 청각장애인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족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해 대체 돌봄 인력 제공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홈헬퍼 인력 양성 및 사업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가족 돌봄 휴식 지원 확대 개선과제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했다.

<표 4-56> 장애인 가족지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단위: 점(5점 만점))

정책과제	개선과제	중요도	순위	시급성	순위	총합	순위
장애인 가족지원 강화	가족 돌봄 휴식지원 확대	4.08	1	3.75	2	**3.94**	**1**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역할 강화	3.79	3	3.63	3	**3.72**	**3**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4.00	2	3.79	1	**3.91**	**2**
	장애인 돌봄 수당 도입	3.67	4	3.46	4	**3.58**	**4**
	장애인 가족의 취업지원	3.54	5	3.33	5	**3.45**	**5**
평균		3.82		3.59		3.72	

<그림 4-5>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③ [핵심과제 3]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지원 강화

가. [정책과제 3.1]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지원 강화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지원 영역 4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표 4-57〉과 같이 나타났으며,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주체적 문화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과제가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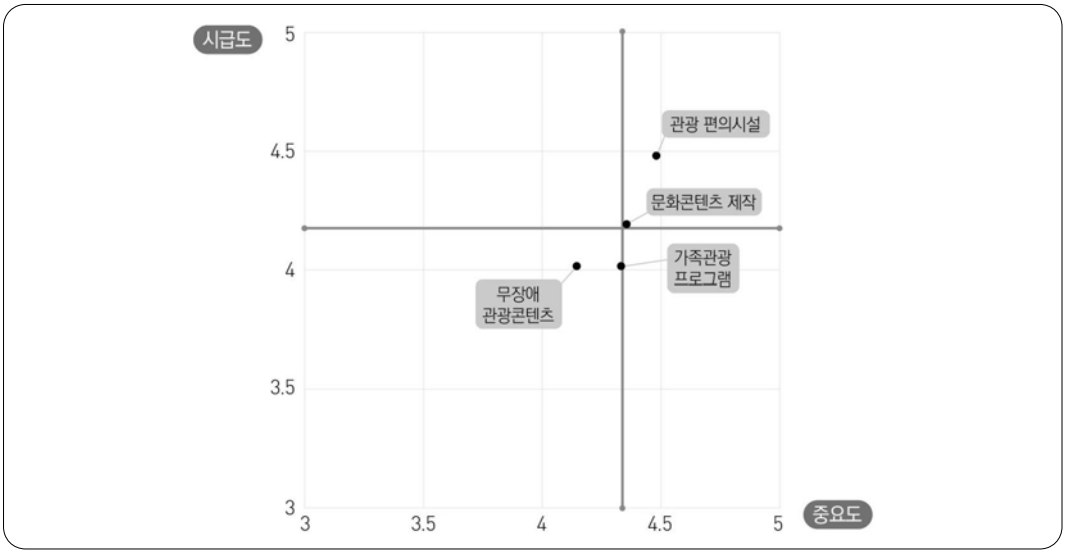
정책환경 이슈에서는 중앙정부의 문화시설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밝혔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무장애 관광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상 시티투어 버스 도입 등 무장애 관광 활성화, 고궁 등 주요 관광지 장애인을 위한 해설사 배치 등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는 무장애 개념의 확장으로 장애유형별 이동성 또는 정보 접근성 개선의 내용으로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과제가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서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에서 주요사항으로 중증장애인의 문화 · 여가활동 지원과 여행 및 관광 관련 서비스 강화에 대한 욕구가 확인된 것을 고려해 볼 때,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개발, 장애인 예술문화인 활동 지원, 문화예술인 양성 지원 등의 주체적 문화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개선과제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표 4-57〉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지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단위: 점(5점 만점))

정책과제	개선과제	중요도	순위	시급성	순위	총합	순위
문화 · 관광 · 여가 생활 지원 강화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4.46	1	4.46	1	**4.46**	**1**
	다양한 장애 관점의 무장애 관광콘텐츠 확충	4.13	4	4.04	3	**4.09**	**4**
	장애인 가족 관광 프로그램 지원	4.29	3	4.04	3	**4.19**	**3**
	주체적 문화콘텐츠 제작 활동을 위한 지원 강화	4.33	2	4.21	2	**4.28**	**2**
평균		4.30		4.19		4.25	

<그림 4-6> **문화·관광·여가생활 지원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나. [정책과제 3.2] 생활체육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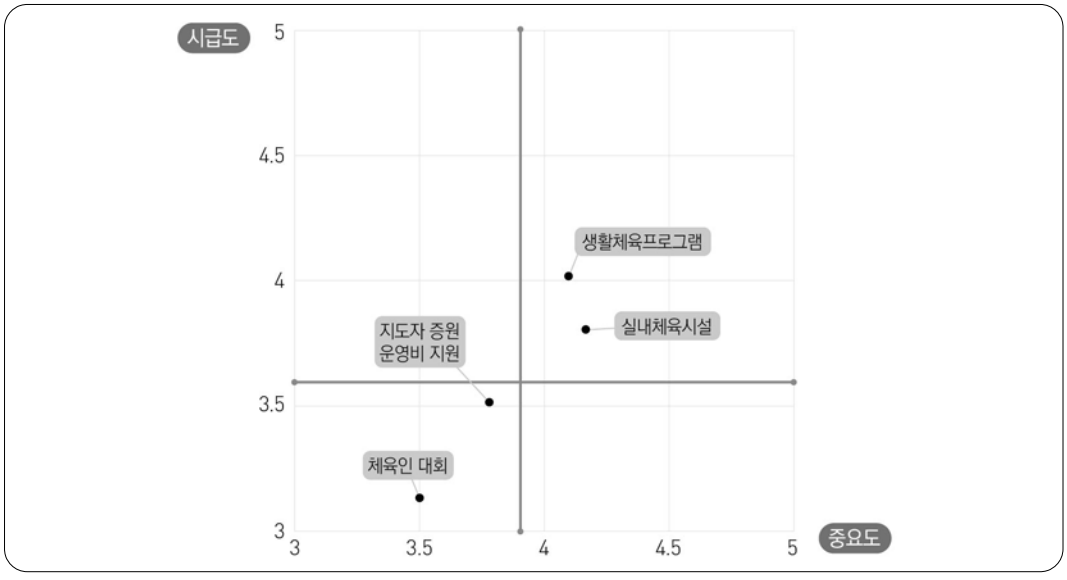
생활체육 지원 영역의 4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표 4-58〉과 같이 나타났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실내 체육시설 확보 및 확대 과제가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대상별 맞춤형 주간활동을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육(문화) 바우처 지원체계 마련·확대, 비장애인 대상 문화·체육시설에 장애인 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개선과제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또한,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실내 체육시설 확대 및 전염병 발생에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 마련 내용의 실내 체육시설 확보 및 확대 개선과제가 다음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표 4-58> **생활체육 지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단위: 점(5점 만점))

정책과제	개선과제	중요도	순위	시급성	순위	총합	순위
생활체육 지원 강화	실내 체육시설 확보 및 확대	4.17	1	3.83	2	**4.03**	**2**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 체육 프로그램 확대	4.13	2	4.04	1	**4.09**	**1**
	장애인 체육시설 지도자 증원 및 인건비 지원 확대	3.75	3	3.54	3	**3.66**	**3**
	장애인 전문체육인·생활체육인 대회 지원 확대	3.50	4	3.13	4	**3.34**	**4**
평균		3.89		3.64		3.78	

<그림 4-7> 생활체육 지원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④ [핵심과제 4]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가. [정책과제 4.1] 생활안정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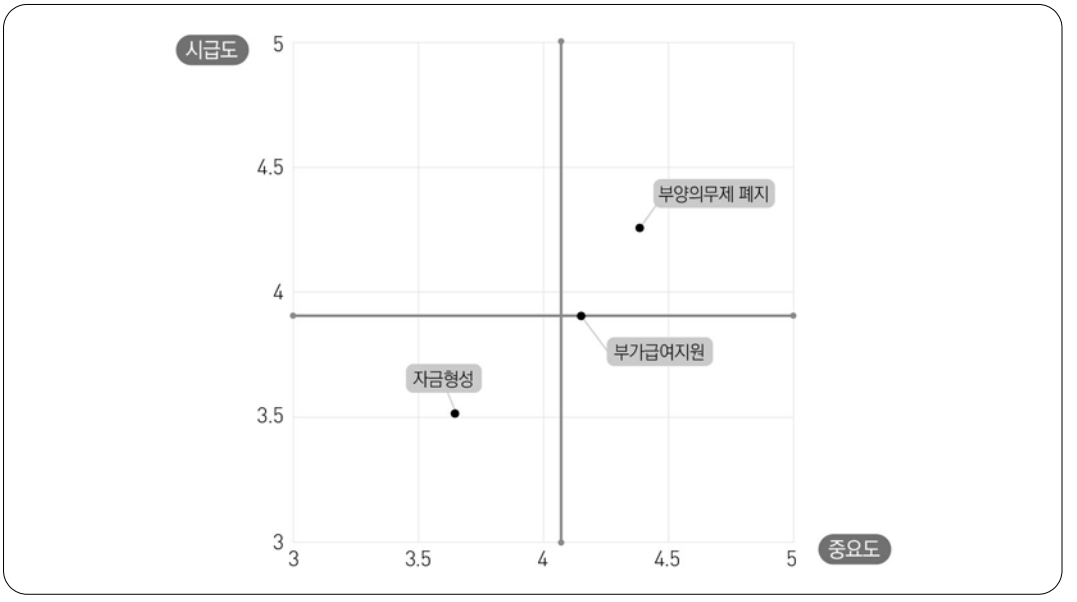
생활안정 지원 영역 3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표 4-59〉와 같이 나타났으며, 가족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개선과제가 중요하고 시급하게 평가되었다.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에 서울시는 2021년 5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과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하였지만, 가족의 경제력에 의해 기초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을 위해 부양의무제 전면 폐기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장애인의 자금에 기반한 자금형성 지원보다는 시로부터 급여를 받는 제도로서 부가급여의 지원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표 4-59> 생활안정 지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단위: 점(5점 만점))

정책과제	개선과제	중요도	순위	시급성	순위	총합	순위
생활안정 지원 강화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4.17	2	3.88	2	**4.05**	**2**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3.67	3	3.54	3	**3.62**	**3**
	가족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4.38	1	4.25	1	**4.33**	**1**
평균		4.07		3.89		4.00	

<그림 4-8> **생활안정 지원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나. [정책과제 4.2] 일자리 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강화 영역의 7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표 4-60〉와 같이 나타났으며, 장애인 맞춤 직무개발을 통한 공공일자리 개발 · 확대, 장애인 우선 고용 및 고용유지 방안 마련, 선 배치 후 훈련 방식을 통한 현장 중심 취업 지원 확대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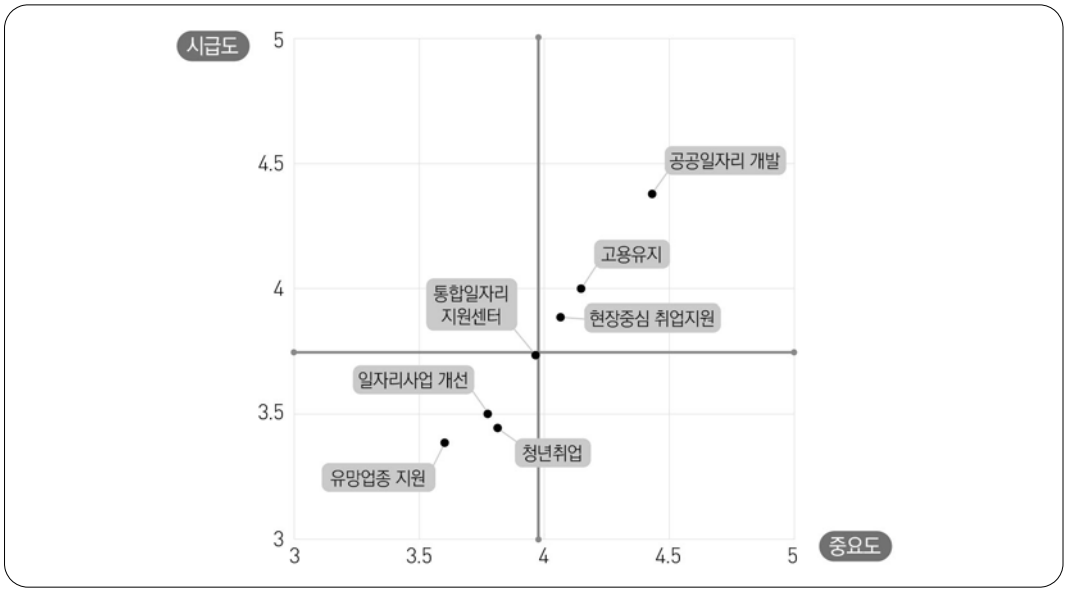
정책환경 이슈에 있어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사업은 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장애인 직무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공공일자리 확대와 ICT기술을 결합한 직무가 논의되는 등 공공일자리 개발을 위한 시도들을 고려하여 볼 때, 장애인 맞춤 직무 개발을 통한 공공일자리 개발 · 확대가 중요하고 시급한 개선과제라고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에서 주요사항으로 안정적인 고용환경 개선,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고용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고용 유지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개선과제들이 각각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 훈련, 훈련수당 지원, 취업 연계 등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0> **일자리 지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단위: 점(5점 만점))

정책과제	개선과제	중요도	순위	시급성	순위	총합	순위
일자리 지원 강화	장애인 맞춤 직무 개발을 통한 공공일자리 개발 · 확대	4.42	1	4.29	1	**4.37**	**1**
	선배치 후훈련 방식을 통한 현장 중심 취업 지원 확대	4.08	3	3.88	3	**4.00**	**3**
	중증장애인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 높은 유망업종 지원	3.63	7	3.38	7	**3.53**	**7**
	장애인 우선 고용 및 고용유지 방안 마련	4.17	2	4.00	2	**4.10**	**2**
	'장애인 통합일자리 지원센터' 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3.96	4	3.71	4	**3.86**	**4**
	장애인 취업지원, 일자리사업 개선	3.75	6	3.50	5	**3.65**	**5**
	청년 장애인의 일자리 취업 지원	3.79	5	3.42	6	**3.63**	**6**
평균		3.97		3.74		3.87	

<그림 4-9> **일자리 지원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④ [핵심과제 5] 사회활동 지원 강화

가. [정책과제 5.1] 이동권 보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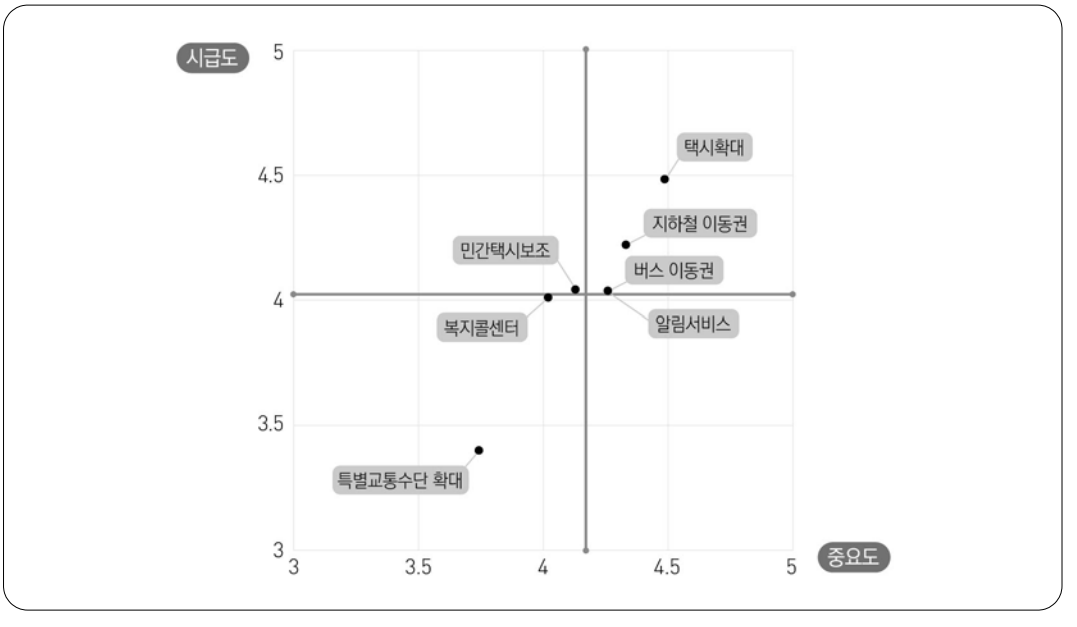
이동권 보장 영역 7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표 4-61〉과 같이 나타났으며,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지하철 이동권 보장, 버스 이용 이동권 보장 강화,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정책환경 이슈에 있어 첫번째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주요사항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바우처 택시 지원 확대, 장애인 콜택시 운영체계 개편,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콜밴 리스트 장착,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열차 간격 및 단차 조절, 휠체어 장애인 전용 탑승 구역 설치, 저상버스 확대 등의 개선과제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 장애인이 실종되었을 때 장애인의 실종 지역 이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 협력의 신고 체계 구축과 신속한 광역 알림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등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개선과제가 중요하고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평가받았다.

<표 4-61> 이동권 보장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단위: 점(5점 만점))

정책과제	개선과제	중요도	순위	시급성	순위	총합	순위
이동권 보장 강화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4.46	1	4.46	1	**4.46**	**1**
	민간 택시의 장애인 이동권 지원 보조	4.13	5	4.04	3	**4.09**	**5**
	버스 이용 이동권 보장 강화	4.29	3	4.04	3	**4.19**	**3**
	지하철 이동권 보장	4.33	2	4.21	2	**4.28**	**2**
	특별 교통수단 및 서비스 확대	3.75	7	3.38	7	**3.59**	**7**
	이동권 지원을 위한 콜센터 확대	4.04	6	4.00	6	**4.02**	**6**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4.29	3	4.04	3	**4.19**	**3**
평균		4.18		4.02		4.12	

<그림 4-10> 이동권 보장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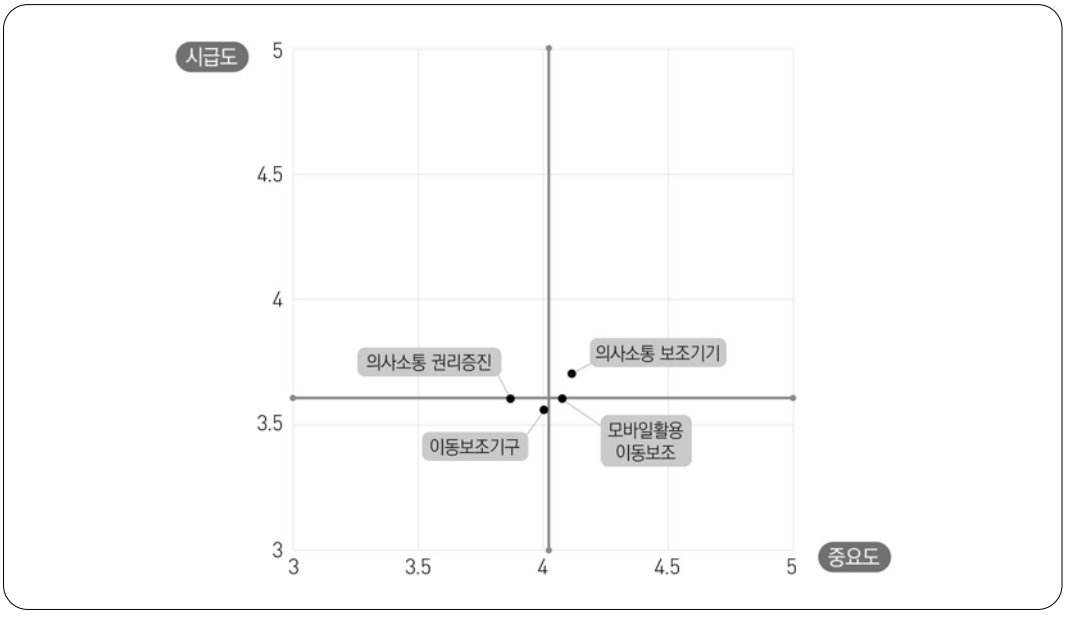
나. [정책과제 5.2] 4차 산업기술 활용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권 보장

의사소통 지원 및 4차 산업기술 활용 이동권 보장 강화 영역 4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표 4-62〉와 같이 나타났으며, AI 융합 의사소통 보조기기 보급 지원 과제가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정책환경 이슈에 있어 중증장애인 의사소통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ACC)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TTS(Text-to-Speech) 기술을 활용한 음성지원 웨어러블 보조기기 개발 · 보급 지원, 시각장애인 대상 STT(Speech-to-Text) 기술을 활용한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 · 보급 지원 및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 · 지원 등의 개선과제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표 4-62> 4차 산업기술 활용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권 보장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단위: 점(5점 만점))

정책과제	개선과제	중요도	순위	시급성	순위	총합	순위
4차 산업기술 활용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권 보장	이동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보조기구 개발 · 보급 지원	4.00	3	3.58	4	**3.82**	**3**
	모바일 장치 활용 시각장애인 이동보조 인프라 구축	4.08	2	3.63	2	**3.89**	**2**
	AI 융합 의사소통 보조기기 보급 지원	4.13	1	3.75	1	**3.97**	**1**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3.88	4	3.63	2	**3.78**	**4**
평균		4.02		3.65		3.87	

<그림 4-11> 4차 산업기술 활용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권 보장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⑥ [핵심과제 6]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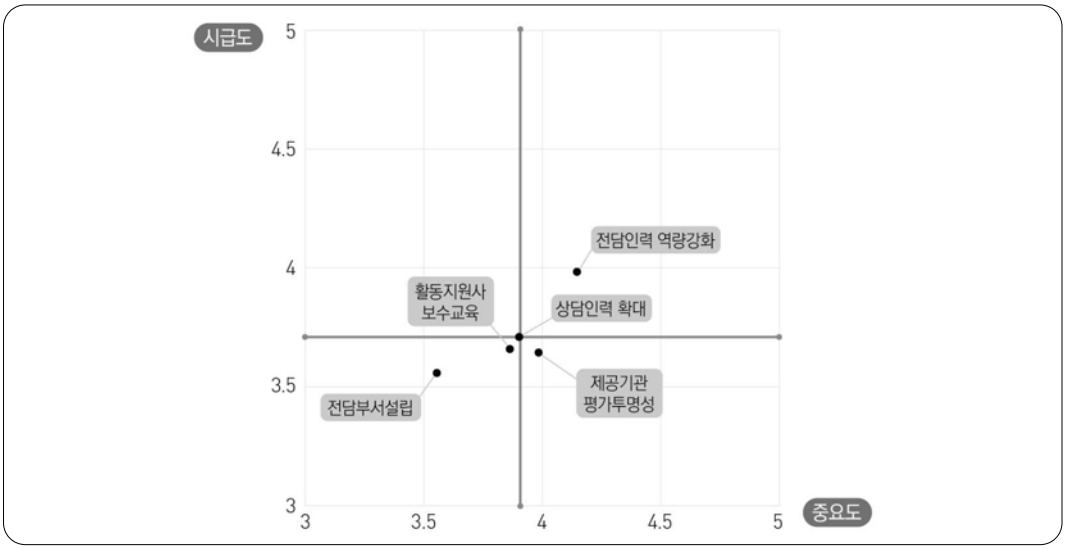
가. [정책과제 6.1] 기관 및 인력지원 강화

기관 및 인력지원 영역 5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표 4-63〉과 같이 나타났으며, 전담인력 역량 강화 및 소진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과제가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에서 주요사항으로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성인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감수성 교육 등 강화,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센터 전담인력과 현장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전담인력 역량 강화 및 소진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개선과제가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표 4-63> **기관 및 인력지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단위: 점(5점 만점))

정책과제	개선과제	중요도	순위	시급성	순위	총합	순위
기관 및 인력지원 강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지원을 통한 인력 양성 지원	3.83	4	3.63	3	**3.75**	**4**
	장애인 분야별 전문서비스 상담인력 확대	3.88	3	3.71	2	**3.81**	**3**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4.17	1	3.96	1	**4.08**	**1**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투명성 확대	3.96	2	3.63	3	**3.82**	**2**
	발달장애인 위한 서울시 전담 부서 설립	3.58	5	3.58	5	**3.58**	**5**
평균		3.88		3.70		3.81	

<그림 4-12> **기관 및 인력지원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나. [정책과제 6.2] 서비스 거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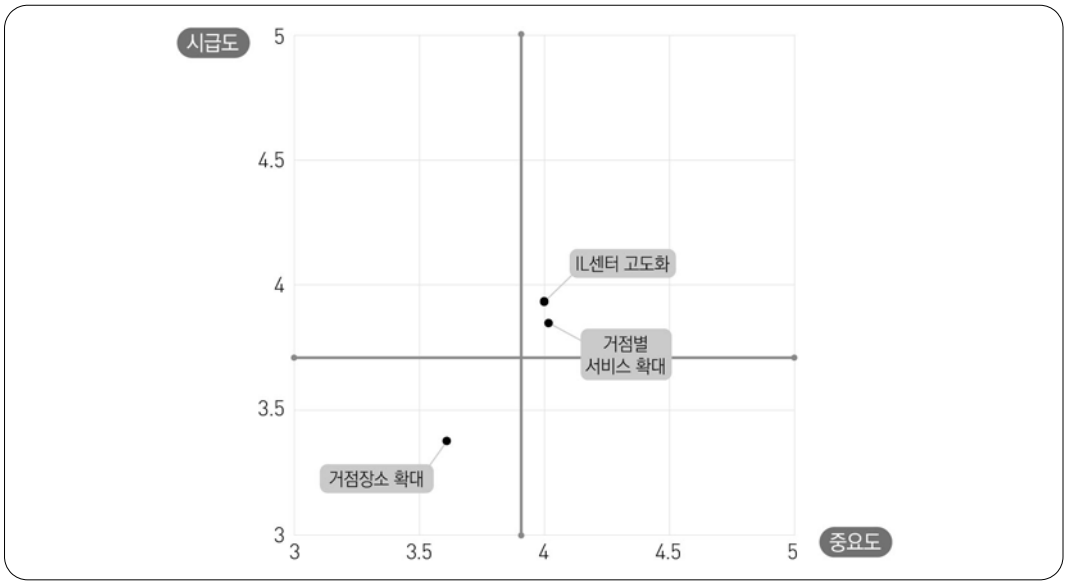
서비스 거점 강화 영역 3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표 4-64〉와 같이 나타났으며, 발달 · 정신장애인 IL센터 운영 고도화, 각 자치구별 · 권역별 거점 서비스 기능 · 역량 확대 과제가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현재도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지원 확대 및 강화'는 보조금 지원센터를 22년까지 58개소로 확대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목표치를 이행했으며 센터 당 종사인력을 확대하는 사업을 이행 중이나, 운영 고도화를 위해 추가로 장애 유형에 맞는 지침 및 IL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정신장애인 통합지원센터 거점별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컨트롤 타워 등 역할 강화 지원하는 등 각 자치구별 · 권역별 거점 서비스의 기능 및 역량을 확대하는 개선과제가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표 4-64> **서비스 거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단위: 점(5점 만점))

정책과제	개선과제	중요도	순위	시급성	순위	총합	순위
서비스 거점 강화	발달 · 정신장애인 IL센터 운영 고도화	4.00	2	3.92	1	**3.97**	**1**
	지역 밀착형 서비스 거점장소 확대	3.63	3	3.33	3	**3.50**	**3**
	각 자치구별 · 권역별 거점 서비스 기능 · 역량 확대	4.04	1	3.83	2	**3.95**	**2**
평균		3.89		3.69		3.81	

<그림 4-13> **서비스 거점 강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분포**



(3) 정책과제 우선순위 평가 결과(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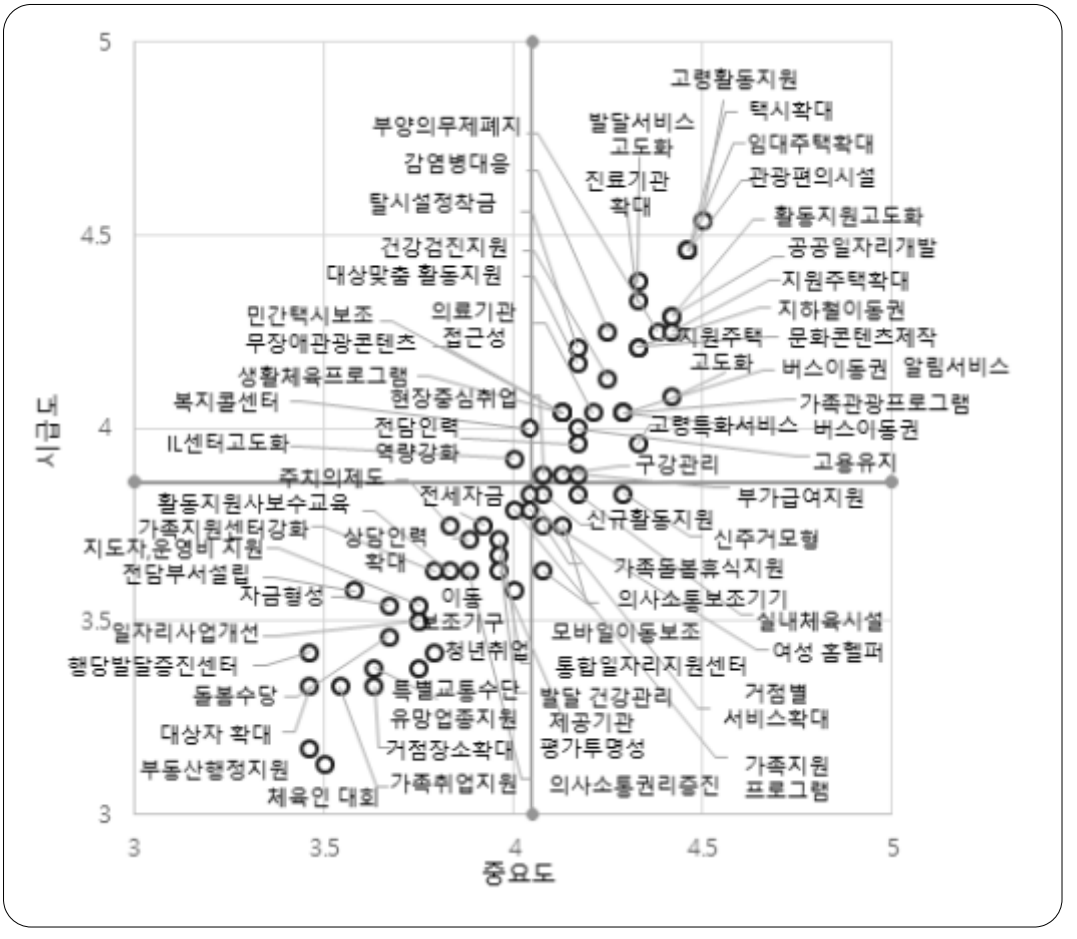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65개 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단순 종합하면 〈표 4-65〉와 같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과제 중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이동권 보장 과제 중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주거 지원 과제 중 임대주택 확대 및 분양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등이 정책과제 영역별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5〉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개선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종합) (단위: 점(5점 만점))

정책과제	개선과제	중요도	시급성	가중평균	순위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4.50	4.54	**4.52**	**1**
	고령장애인 욕구조사 기반 특화서비스 개발	4.33	3.96	**4.17**	**20**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고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4.42	4.29	**4.37**	**5**
	대상 맞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4.17	4.17	**4.17**	**21**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고도화	4.33	4.38	**4.35**	**7**
	사용자 중심의 신규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4.08	3.83	**3.98**	**34**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3.46	3.33	**3.41**	**63**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추가 확대	3.46	3.42	**3.44**	**62**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4.04	3.79	**3.94**	**39**
건강관리 지원 강화	장애인 진료기관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4.33	4.33	**4.33**	**9**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강화	4.25	4.13	**4.20**	**15**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권 보장	4.21	4.04	**4.14**	**22**
	서울형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	3.83	3.75	**3.80**	**48**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지원	4.13	3.88	**4.03**	**31**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강화	3.96	3.67	**3.84**	**44**
	장애인 감염병 대응 핫라인 구축	4.25	4.25	**4.25**	**14**
주거 지원 강화	신주거모형 개발 및 장애인 주거 선택권 강화	4.29	3.83	**4.10**	**24**
	장애 당사자 맞춤형 지원주택 서비스 고도화	4.42	4.08	**4.28**	**13**
	장애인 지원주택 제공 확대	4.42	4.25	**4.35**	**8**
	임대주택 확대 및 분양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4.46	4.46	**4.46**	**2**
	전세자금 지원 비용 현실화 및 지원 강화	3.92	3.75	**3.85**	**43**
	장애인 부동산 임차 · 매매를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3.46	3.17	**3.34**	**65**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및 주거지원 확대	4.17	4.21	**4.19**	**16**
장애인 가족지원 강화	가족 돌봄 휴식지원 확대	4.08	3.75	**3.94**	**38**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역할 강화	3.79	3.63	**3.72**	**51**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4.00	3.79	**3.91**	**40**
	장애인 돌봄 수당 도입	3.67	3.46	**3.58**	**57**
	장애인 가족의 취업지원	3.54	3.33	**3.45**	**61**

정책과제	개선과제	중요도	시급성	가중평균	순위
문화·관광·여가생활 지원 강화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4.46	4.46	**4.46**	**2**
	다양한 장애 관점의 무장애 관광콘텐츠 확충	4.13	4.04	**4.09**	**25**
	장애인 가족 관광 프로그램 지원	4.29	4.04	**4.19**	**17**
	주체적 문화콘텐츠 제작 활동을 위한 지원 강화	4.33	4.21	**4.28**	**11**
생활체육 지원 강화	실내 체육시설 확보 및 확대	4.17	3.83	**4.03**	**30**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 체육 프로그램 확대	4.13	4.04	**4.09**	**25**
	장애인 체육시설 지도자 증원 및 인건비 지원 확대	3.75	3.54	**3.66**	**52**
	장애인 전문체육인·생활체육인 대회 지원 확대	3.50	3.13	**3.34**	**64**
생활안정 지원 강화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4.17	3.88	**4.05**	**29**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3.67	3.54	**3.62**	**55**
	가족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4.38	4.25	**4.33**	**10**
일자리 지원 강화	장애인 맞춤 직무 개발을 통한 공공일자리 개발·확대	4.42	4.29	**4.37**	**5**
	선배치 후훈련 방식을 통한 현장 중심 취업 지원 확대	4.08	3.88	**4.00**	**33**
	중증장애인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 높은 유망업종 지원	3.63	3.38	**3.53**	**59**
	장애인 우선 고용 및 고용유지 방안 마련	4.17	4.00	**4.10**	**23**
	'장애인 통합일자리 지원센터' 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3.96	3.71	**3.86**	**42**
	장애인 취업지원, 일자리사업 개선	3.75	3.50	**3.65**	**53**
	청년 장애인의 일자리 취업 지원	3.79	3.42	**3.63**	**54**
이동권 보장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4.46	4.46	**4.46**	**2**
	민간 택시의 장애인 이동권 지원 보조	4.13	4.04	**4.09**	**25**
	버스 이용 이동권 보장 강화	4.29	4.04	**4.19**	**17**
	지하철 이동권 보장	4.33	4.21	**4.28**	**11**
	특별 교통수단 및 서비스 확대	3.75	3.38	**3.59**	**56**
	이동권 지원을 위한 콜센터 확대	4.04	4.00	**4.02**	**32**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4.29	4.04	**4.19**	**17**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권 보장	이동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보조기구 개발·보급 지원	4.00	3.58	**3.82**	**45**
	모바일 장치 활용 시각장애인 이동보조 인프라 구축	4.08	3.63	**3.89**	**41**
	AI 융합 의사소통 보조기기 보급 지원	4.13	3.75	**3.97**	**35**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3.88	3.63	**3.78**	**49**
기관 및 인력지원 강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지원을 통한 인력 양성 지원	3.83	3.63	**3.75**	**50**
	장애인 분야별 전문서비스 상담인력 확대	3.88	3.71	**3.81**	**47**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4.17	3.96	**4.08**	**28**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투명성 확대	3.96	3.63	**3.82**	**46**
	발달장애인 위한 서울시 전담 부서 설립	3.58	3.58	**3.58**	**58**
서비스 거점 강화	발달·정신장애인 IL센터 운영 고도화	4.00	3.92	**3.97**	**36**
	지역 밀착형 서비스 거점장소 확대	3.63	3.33	**3.50**	**60**
	각 자치구별·권역별 거점 서비스 기능·역량 확대	4.04	3.83	**3.95**	**37**
평균		4.05	3.86	**3.97**	-

<그림 4-14>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개선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종합**



제6절 소결

본 장에서는 지난 제1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의 이행성과와 주요 정책적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제2기에 추진이 필요한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추진된 3차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장애인 단체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FGI 조사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델파이 조사에 있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사 시마다 앞장에서 도출된 정책분야별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FGI 조사 시에도 2차에 걸쳐 다수에 의해 제안된 과제들을 확인하며 진행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시 과정의 결과로 총 65개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65개 과제는 유사 제안의 통합 혹은 과제 수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과제 통합 등을 거쳐 도출된 과제 수이다.

각 정책 영역별 도출 과제를 보면 활동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과제로 총 9개의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해당 과제들은 고령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시급히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 외에도 대상 맞춤 활동지원서비스, 사용자 중심 신규 활동지원서비스 도입의 요구 등 장애인 욕구와 장애 유형에 맞는 적합한 활동지원서비스가 다수 제안되어 수요에 맞는 활동지원이 필요함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 차등적 지원 시간 등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인터뷰에서 아직 수요에 비해 다수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건강관리 지원에 있어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었으며, 접근권 강화 방안으로 장애 친화 병원 또는 검진기관의 확대, 의료기관까지 이동권의 보장, 주치의 제도 등 물리적인 접근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함이 확인되었으며, 진료과로는 치과 치료와 구강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인 팬데믹과 관련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이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은 현실에 장애인의 감염병 대응 핫라인의 중요성이 설문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주거 생활에 있어서 서울의 주거문제와 맞물려 양적인 문제와 주거서비스의 맞춤화가 함께 강조되었다. 즉 비장애인에게도 부담이 되는 서울의 주거비용과 주거 환경의 양극화 문제에 있어 장애인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더욱 열위에 있기에 장애유형에 맞는 주거 서비스가 생존권을 위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해결 방안으로 임대주택 등이 양적 확대와 장애맞춤 지원주택 서비스의 고도화가 함께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지원에 있어서는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수요가 높아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체돌봄,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문화 · 체육 · 여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의 무장애화가 기본적으로 요구되었으며, 무장애 시설의 정의가 신체적 장애인의 접근권으로 협소하게 접근되기 보다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정보의 접근성까지 포함된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문화 · 관광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무장애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이동권 · 의사소통 지원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위한 급여 관련 정책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는 보호작업장과 비장애인의 직무를 나누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에 맞는 직무개발,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이 요구되어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접근이 달라져야 함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지원 기관간 사업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근로소득만 볼 것이 아닌 사회급여와 함께 소득 증가를 경험하게 하여야 근로 의욕과 고용유지가 가능함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교통수단의 양적확대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과 대중교통 종사자의 인식과 서비스 역량 개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소통 지원에 있어서는 최근의 AI 기술 등 첨단화된 기술을 활용한 의사소통 보조기기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는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거점이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양적 확대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서비스 거점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거점 기관의 부족으로 현재 있는 기관의 종사자의 업무 가중과 그로 인한 서비스 품질의 저하라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거점기관의 확대, 종사자 처우와 역량의 개선 등이 서로 연계되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이 나타났으며, 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업무 대비 낮은 소득, 전문역량을 지닌 인력의 부족 등으로 소진, 잦은 인력의 교체 문제들이 발생하는 바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 소진 예방을 위한 처우 개선 등이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제5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과제 선정 및 체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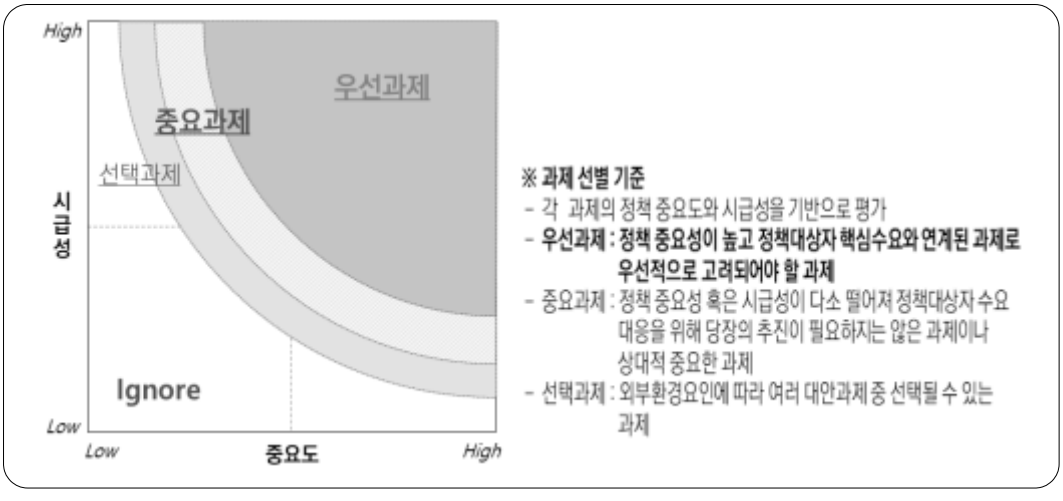
제5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과제 선정 및 체계 수립

1. 과제 선정 개요

본 장은 제4장에서 도출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과제와 정책과제별 우선 고려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여 제2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참조할 과제체계를 수립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와 FGI에서 드러난 핵심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뿐만 아니라 핵심과제 영역과 정책과제 영역 자체의 정책적 의미를 고려하여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자 단순 우선순위에 따른 과제 선정이 아닌 정책 중요도와 시급성, 정책 실현 가능성 등 후술할 3단계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여 제2기 종합계획에 반영할 정책을 제언한다.

1단계는 제4장에서 전술한 전문가 평가 결과로 도출된 정책 중요도와 추진 시급성에 따라 다른 과제보다 추진 타당성이 높은 우선과제를 선정한다. 우선 과제는 정책 중요도가 높으며, 추진이 시급하다 평가된 과제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림 5-1> **정책중요도와 추진시급성에 따른 과제 선정(예시)**



2단계는 각 핵심과제 및 정책과제 영역의 중요도에 따라 과제를 추가 선정하는 과정으로 타 영역보다 중요하다 평가된 영역에 대해서 〈그림 5-1〉의 중요과제를 추가적으로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과제와 정책과제의 중요도는 전문가 대상 AHP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2단계의 목적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통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영역별로 제시된 과제의 수가 달라 대상자 관점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정책과제 영역임에도 다른 영역 대비 과제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생활안정 지원 정책영역이 중요한 정책영역이라 평가되었어도 1~2개의 핵심적인 과제를 다수가 제안하여 정책영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제가 적게 선정될 수 있다. 물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관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과제를 제안했음에 중요하다 생각되는 영역에서 많은 과제의 제안이 이루어지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1단계에서 선정되겠지만, 앞선 예시와 같이 중복·유사 과제를 다수가 제안하는 등의 이유로 소수의 과제만 선정될 수 있어 정책영역 중요성에 맞추어 차순위로 중요하다 평가된 〈그림 5-1〉의 중요과제로 보완하고자 한다.

3단계는 정책적인 고려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추진이 상당히 어렵거나, 과제의 구체성이 낮아 즉시 도입이 어렵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고려하여 정책 제언을 함으로써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과제 선정에 앞서 과제 도출 과정에서 이루어진 FGI 시 정책영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논의 시 제시된 정책과제 전 영역에 대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 영역에 대한 과제 pool 도출이 1~2단계의 목적이라면 도출된 과제의 적용 가능성,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여 선정하여 제언함이 제3단계의 목적이다.

<표 5-1> 과제 선정 단계별 고려사항

선정 단계	목적	고려 사항
1단계	추진 타당성이 높은 **우선과제의 선정**	• 정책중요도와 추진시급성이 높은 과제의 선정 • 정책중요도 0.58, 추진시급성 0.42를 반영한 가중평균의 순위에 따른 우선과제의 선정
2단계	정책과제 영역 중요도에 따른 **선정과제 보완**	• 핵심과제 간, 정책과제 간 쌍대비교를 통해 도출된 정책과제 영역 가중치에 따라 중요한 정책영역이지만 과제 선정이 부족한 영역의 중요과제를 선정하여 선정과제 보완
3단계	정책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 선정**	• 1~2단계 선정된 과제의 정책 실현 가능성 판단 • 권한 상 중앙정부 사무이거나, 과제의 구체성이 낮거나 즉시 시행이 어렵고 선행 사업이 필요한 사업의 배제를 통한 정책 실현 가능성 제고

2. 과제 선정

1)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른 과제 선정

전술한 바와 같이 제4장에서 도출된 우선순위에 따라 과제를 나열하면 〈표 5-2〉와 같다. 이들 중 과제의 정책 중요도와 추진 시급성 모두가 타 과제 대비 상대적으로 높거나 평가지표 가중치(중요도 58%, 시급성 42%)를 반영하여 가중평균한 점수가 타 과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33개의 과제는 "우선추진"이 필요한 우선과제로서 선정하였다. 그리고 우선과제보다는 가중평균 점수가 낮지만 차순위 과제 중 7개 과제(전체과제의 약 10%)를 중요과제로 선정하고 그 외 후순위 과제 중 순위가 높은 8개 과제를 선택과제로 선정하였다.

<표 5-2>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개선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종합)** (단위: 점(5점 만점))

정책과제	개선과제	중요도	시급성	가중평균	선정
활동지원서비스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4.50	4.54	**4.52**	**우선**
주거지원	임대주택 확대 및 분양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4.46	4.46	**4.46**	**우선**
문화·관광·여가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4.46	4.46	**4.46**	**우선**
이동권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4.46	4.46	**4.46**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고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4.42	4.29	**4.37**	**우선**
일자리	장애인 맞춤 직무 개발을 통한 공공일자리 개발·확대	4.42	4.29	**4.37**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고도화	4.33	4.38	**4.35**	**우선**
주거지원	장애인 지원주택 제공 확대	4.42	4.25	**4.35**	**우선**
건강관리	장애인 진료기관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4.33	4.33	**4.33**	**우선**
생활안정	가족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4.38	4.25	**4.33**	**우선**
주거지원	장애 당사자 맞춤형 지원주택 서비스 고도화	4.42	4.08	**4.28**	**우선**
문화·관광·여가	주체적 문화콘텐츠 제작 활동을 위한 지원 강화	4.33	4.21	**4.28**	**우선**
이동권	지하철 이동권 보장	4.33	4.21	**4.28**	**우선**
건강관리	장애인 감염병 대응 핫라인 구축	4.25	4.25	**4.25**	**우선**
건강관리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강화	4.25	4.13	**4.20**	**우선**
주거지원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및 주거지원 확대	4.17	4.21	**4.19**	**우선**
문화·관광·여가	장애인 가족 관광 프로그램 지원	4.29	4.04	**4.19**	**우선**
이동권	버스 이용 이동권 보장 강화	4.29	4.04	**4.19**	**우선**
이동권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4.29	4.04	**4.19**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고령장애인 욕구조사 기반 특화서비스 개발	4.33	3.96	**4.17**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맞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4.17	4.17	**4.17**	**우선**
건강관리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권 보장	4.21	4.04	**4.14**	**우선**
주거관리	신주거모형 개발 및 장애인 주거 선택권 강화	4.29	3.83	**4.10**	**우선**
일자리	장애인 우선 고용 및 고용유지 방안 마련	4.17	4.00	**4.10**	**우선**
문화·관광·여가	다양한 장애 관점의 무장애 관광콘텐츠 확충	4.13	4.04	**4.09**	**우선**

정책과제	개선과제	중요도	시급성	가중평균	선정
생활체육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 체육 프로그램 확대	4.13	4.04	**4.09**	**우선**
이동권	민간 택시의 장애인 이동권 지원 보조	4.13	4.04	**4.09**	**우선**
기관 및 인력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4.17	3.96	**4.08**	**우선**
생활안정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4.17	3.88	**4.05**	**우선**
건강관리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지원	4.13	3.88	**4.03**	**우선**
생활체육	실내 체육시설 확보 및 확대	4.17	3.83	**4.03**	**우선**
이동권	이동권 지원을 위한 콜센터 확대	4.04	4.00	**4.02**	**우선**
일자리	선배치 후훈련 방식을 통한 현장 중심 취업 지원 확대	4.08	3.88	**4.00**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사용자 중심의 신규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4.08	3.83	**3.98**	**중요**
의사소통	AI 융합 의사소통 보조기기 보급 지원	4.13	3.75	**3.97**	**중요**
서비스 거점	발달 · 정신장애인 IL센터 운영 고도화	4.00	3.92	**3.97**	**중요**
서비스 거점	각 자치구별 · 권역별 거점 서비스 기능 · 역량 확대	4.04	3.83	**3.95**	**중요**
활동지원서비스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4.04	3.79	**3.94**	**중요**
가족 지원	가족 돌봄 휴식지원 확대	4.08	3.75	**3.94**	**중요**
가족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4.00	3.79	**3.91**	**중요**
의사소통	모바일 장치 활용 시각장애인 이동보조 인프라 구축	4.08	3.63	**3.89**	**선택**
일자리	'장애인 통합일자리 지원센터' 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3.96	3.71	**3.86**	**선택**
주거지원	전세자금 지원 비용 현실화 및 지원 강화	3.92	3.75	**3.85**	**선택**
건강관리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강화	3.96	3.67	**3.84**	**선택**
의사소통	이동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보조기구 개발 · 보급 지원	4.00	3.58	**3.82**	**선택**
기관 및 인력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투명성 확대	3.96	3.63	**3.82**	**선택**
기관 및 인력	장애인 분야별 전문서비스 상담인력 확대	3.88	3.71	**3.81**	**선택**
건강관리	서울형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	3.83	3.75	**3.80**	**선택**
의사소통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3.88	3.63	**3.78**	-
기관 및 인력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지원을 통한 인력 양성 지원	3.83	3.63	**3.75**	-
가족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역할 강화	3.79	3.63	**3.72**	-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시설 지도자 증원 및 인건비 지원 확대	3.75	3.54	**3.66**	-
일자리	장애인 취업지원, 일자리사업 개선	3.75	3.50	**3.65**	-
일자리	청년 장애인의 일자리 취업 지원	3.79	3.42	**3.63**	-
생활안정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3.67	3.54	**3.62**	-
이동권	특별 교통수단 및 서비스 확대	3.75	3.38	**3.59**	-
가족 지원	장애인 돌봄 수당 도입	3.67	3.46	**3.58**	-
기관 및 인력	발달장애인 위한 서울시 전담 부서 설립	3.58	3.58	**3.58**	-
일자리	중증장애인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 높은 유망업종 지원	3.63	3.38	**3.53**	-
서비스 거점	지역 밀착형 서비스 거점장소 확대	3.63	3.33	**3.50**	-
가족 지원	장애인 가족의 취업지원	3.54	3.33	**3.45**	-
활동지원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추가 확대	3.46	3.42	**3.44**	-
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3.46	3.33	**3.41**	-
주거지원	장애인 부동산 임차 · 매매를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3.46	3.17	**3.34**	-
생활체육	장애인 전문체육인 · 생활체육인 대회 지원 확대	3.50	3.13	**3.34**	-

〈표 5-2〉와 같이 선정된 과제를 정책 영역별로 살펴보면, 우선과제로 선정된 33개 과제 중 10개는 일상생활 지원 강화의 2개 정책과제에서 선정되었으며, 이동권 보장 영역에서 6개 과제가 주거지원 영역에서 5개 과제가 선정되어 많은 과제가 선정된 정책 영역이었다. 그 외에는 문화·관광·여가생활 지원 영역에서 4개, 일자리 지원 3개, 생활체육 2개, 생활안정 2개, 기관 및 인력 지원 영역에서 1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장애인 가족지원,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거점 강화에서는 선정되지 않았다.

<표 5-3> 정책과제 영역별 선정과제 목록 (단위: 점(5점 만점))

핵심과제	정책과제	선정구분	신규·개선과제	가중평균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1.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우선**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4.52**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고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4.37**
		우선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고도화	**4.35**
		우선	고령장애인 욕구조사 기반 특화서비스 개발	**4.17**
		우선	대상 맞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4.17**
		중요	사용자 중심의 신규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3.98**
		중요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3.94**
	1.2. 건강관리 지원 강화	**우선**	장애인 진료기관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4.33**
		우선	장애인 감염병 대응 핫라인 구축	**4.25**
		우선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강화	**4.20**
		우선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권 보장	**4.14**
		우선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지원	**4.03**
		선택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강화	**3.84**
		선택	서울형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	**3.80**
2. 주거 및 가족 지원 강화	2.1. 주거 지원 강화	**우선**	임대주택 확대 및 분양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4.46**
		우선	장애인 지원주택 제공 확대	**4.35**
		우선	장애 당사자 맞춤형 지원주택 서비스 고도화	**4.28**
		우선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및 주거지원 확대	**4.19**
		우선	신주거모형 개발 및 장애인 주거 선택권 강화	**4.10**
		선택	전세자금 지원 비용 현실화 및 지원 강화	**3.85**
	2.2. 장애인 가족 지원	**중요**	가족 돌봄 휴식지원 확대	**3.94**
		중요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3.91**
3. 문화·체육·여가생활 지원 강화	3.1. 문화·관광·여가 생활 지원	**우선**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4.46**
		우선	주체적 문화콘텐츠 제작 활동을 위한 지원 강화	**4.28**
		우선	장애인 가족 관광 프로그램 지원	**4.19**
		우선	다양한 장애 관점의 무장애 관광콘텐츠 확충	**4.09**
	3.2. 생활체육 지원	**우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 체육 프로그램 확대	**4.09**
		우선	실내 체육시설 확보 및 확대	**4.03**

핵심과제	정책과제	선정구분	신규 · 개선과제	가중평균
4.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4.1. 생활안정 지원	**우선**	가족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4.33**
		우선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4.05**
	4.2. 일자리 지원	**우선**	장애인 맞춤 직무 개발을 통한 공공일자리 개발 · 확대	**4.37**
		우선	장애인 우선 고용 및 고용유지 방안 마련	**4.10**
		우선	선배치 후훈련 방식을 통한 현장 중심 취업 지원 확대	**4.00**
		선택	'장애인 통합일자리 지원센터' 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3.86**
5. 사회활동 지원 강화	5.1. 이동권 보장	**우선**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4.46**
		우선	지하철 이동권 보장	**4.28**
		우선	버스 이용 이동권 보장 강화	**4.19**
		우선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4.19**
		우선	민간 택시의 장애인 이동권 지원 보조	**4.09**
		우선	이동권 지원을 위한 콜센터 확대	**4.02**
	5.2. 4차 산업기술 활용	**중요**	AI 융합 의사소통 보조기기 보급 지원	**3.97**
		선택	모바일 장치 활용 시각장애인 이동보조 인프라 구축	**3.89**
		선택	이동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보조기구 개발 · 보급 지원	**3.82**
6.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6.1. 기관 및 인력지원	**우선**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4.08**
		선택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투명성 확대	**3.82**
		선택	장애인 분야별 전문서비스 상담인력 확대	**3.81**
	6.2. 서비스 거점	**중요**	발달 · 정신장애인 IL센터 운영 고도화	**3.97**
		중요	각 자치구별 · 권역별 거점 서비스 기능 · 역량 확대	**3.95**

※ 음영이 1단계 선정된 우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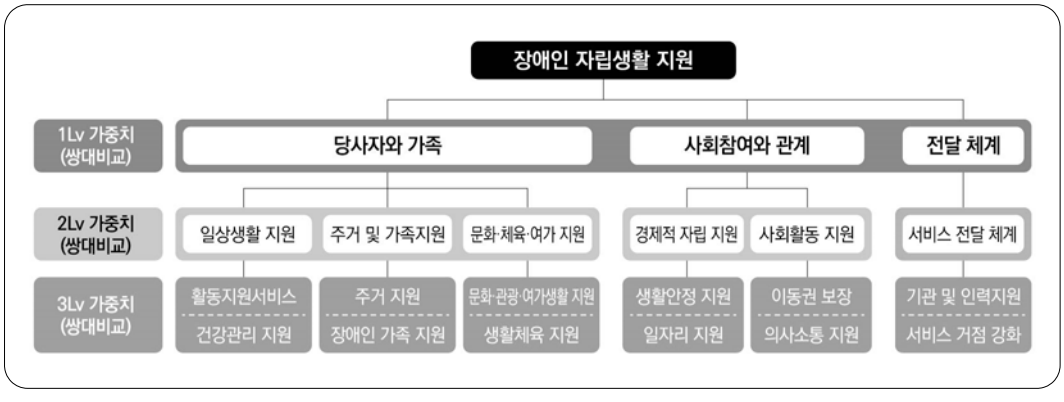
2) 정책영역 중요도를 고려한 선정과제 보완

(1) 정책영역 간 가중치도출 방법

핵심과제 영역 간, 정책과제 영역간 가중치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대상 제3차 델파이 조사 시 정책영역 간 쌍대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는 AHP 분석방법을 통해 도출하였다. AHP는 과제 간 그리고 차원 간 2개의 대상 사이의 쌍대비교를 통하여 가중치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요인별 중요도를 Likert 척도로 측정할 때 개인간 서로 다른 척도를 통합하여야 하는 한계(A라는 평가자의 5점과 B라는 평가자의 5점이 다른 척도이지만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통합하여야 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상대적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람의 평가나 판단이 완벽할 수 없어 일관성 지수를 통하여 평가자의 쌍대비교 일관성을 검증하여야 하는데 일관성 지수인 CI (Consistency Index) 값이 0.1 이하일 경우 대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별 CI값을 계산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응답을 배제하고 CI값이 0.1이하인 결과만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는 제1, 2차 델파이와 동일한 전문가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1,2차 델파이 조사 및 FGI 조사를 통해 도출된 세부과제의 상위 정책영역을 3개의 가치레벨, 6개의 핵심과제 영역, 12개의 정책과제 영역을 〈그림 5-2〉와 같이 계층화 · 구조화하여 계층구조에 따라 하위수준요인 간 쌍대비교로 이루어졌다. 다만, AHP 적용 상 각 상위수준요인의 하위요인들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종가중치가 바르게 나타나지만 〈그림 5-2〉의 2레벨과 같이 하위 항목들의 개수가 다른 경우 오류가 발생하여 수정가중치 모형을 적용하여 해당 오류를 해결하여 도출하였다.

〈그림 5-2〉 AHP 적용 정책영역 간 가중치 평가를 위한 영역 계층화



(2) 정책영역 간 가중치도출 결과

① 가치영역(Lv1) 간 가중치 도출

정책영역 간 가중치 도출을 위한 AHP 분석을 위해 영역 계층화를 함에 있어서 핵심과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장애인 당사자의 활동보조, 건강, 문화·여가 생활 등 당사자 본인 중심의 지원, 그리고 가족 지원 등 본인 사생활 영역에 가까운 가치를 지향하는 '당사자와 가족', 경제적 활동 혹은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이동권,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관계를 지향하는 '사회참여와 관계', 서비스 전달 체계 등 지원체계에 대한 가치인 '전달체계' 등 3개 지향가치로 분류하여 가치 간 가중치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표 5-4〉와 같이 '당사자와 가족', '사회참여와 관계', '전달체계' 순으로 중요도 가중치가 평가되었다.

<표 5-4> **지향가치 간 가중치 평가** (단위: 점(5점 만점))

구분	가중치 평균	CI	순위
당사자와 가족	0.38	0.04	1
사회참여와 관계	0.34		2
전달체계	0.28		3

② 핵심과제 영역(Lv2) 간 가중치 도출

전술한 바와 같이 핵심과제 영역은 상위수준요인의 하위요인들의 개수가 같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 '당사자와 가족'은 3개의 핵심과제 영역, '사회참여와 관계'는 2개의 핵심과제 영역, '전달체계'는 1개의 하위영역으로 서로 영역의 개수가 달라 최민철(2020)[11]에 따르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하위항목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필연적으로 가중치가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는데서 기인한 오류로 분석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 이런 문제로 하위항목의 개수를 같게 구성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상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구성하는 하위항목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인위적으로 개수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질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위항목의 개수가 다를 때 수정을 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민철(2020)의 개발 방법에 따라 하위항목의 개수가 다름을 보정하는 1단계와 개선을 거친 가중치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것을 개선하는 2단계를 거쳐 최종 수정가중치를 도출하였다.

11) 최민철. "AHP 분석의 문제점과 수정가중치모형의 개발", 경영과 정보연구 39(2), pp.145-162, 2022.6

핵심과제 영역간 가중치 비교 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중치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가치 영역상 가장 중요 가중치가 높은 '당사자와 가족'보다 '전달체계'의 하위영역인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가중치가 높으며, '사회참여와 관계'의 2개 핵심과제 가중치가 '당사자와 가족'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오류 개선을 거친 수정가중치는 〈표 5-5〉와 같이 '당사자와 가족'의 핵심과제인 일상생활 지원이 가장 중요한 과제영역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자립 지원, 주거 및 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사회활동 지원, 문화·체육·여가생활 지원 순으로 중요 가중치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활동에 대한 보조, 경제적인 지원, 주거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지원을 위한 인력과 지원기관 역량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 핵심과제 영역 간 가중치 평가

(단위: 점(5점만점))

핵심과제 영역		가치영역(Lv1) 가중치		핵심과제(Lv2) 가중치		최종 가중치		
가치 영역 (Lv. 1)	핵심과제 (Lv. 2)	가중치 평균 (A)	CI	가중치 평균 (B)	CI	가중치 (AXB)	수정가중치	순위
당사자와 가족	일상생활 지원	0.38	0.04	0.45	0.04	0.17	**0.24**	**1**
	주거 및 가족 지원	0.38	0.04	0.34	0.04	0.13	**0.18**	**3**
	문화·체육·여가생활 지원	0.38	0.04	0.22	0.04	0.08	**0.12**	**6**
사회참여와 관계	경제적 자립 지원	0.34	0.04	0.59	0.00	0.20	**0.19**	**2**
	사회활동 지원	0.34	0.04	0.41	0.00	0.14	**0.13**	**5**
전달 체계	서비스 전달 체계	0.28	0.04	1	0.00	0.28	**0.13**	**4**

③ 정책과제 영역(Lv3) 간 가중치 도출

마지막으로 가장 하위레벨인 정책과제 영역은 하위 영역의 과제 수가 같아 별도의 보정 없이 계산하여 각 정책과제 영역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가중치 평가 결과 활동서비스 지원 정책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원, 생활안정 지원, 일자리 지원, 이동권 보장, 건강관리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달체계 영역의 정책과제 영역과 문화·체육·여가생활 정책과제 영역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자립생활에 있어서는 개인의 활동과 경제적인 자립, 주거 안정, 이동권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이며, 여가생활,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의사소통 및 이동권 지원 등은 우선 순위가 낮은 정책영역으로 조사되었다.

<표 5-6> 정책과제 영역 간 가중치 평가

(단위: 점(5점 만점), 개)

정책과제 영역		가치영역(Lv2) 가중치	정책과제(Lv3) 가중치		최종 가중치	
핵심과제 (Lv. 2)	정책과제 (Lv. 3)	수정가중치 (A)	가중치 평균 (B)	CI	최종가중치 (AXB)	순위
일상생활 지원	활동서비스 지원	0.24	0.65	0.00	**0.158**	**1**
	건강관리 지원	0.24	0.35	0.00	**0.085**	**6**
주거 및 가족 지원	주거 지원	0.18	0.66	0.00	**0.121**	**2**
	장애인 가족지원	0.18	0.34	0.00	**0.062**	**9**
문화·체육·여가 생활 지원	문화·관광·여가생활 지원	0.12	0.54	0.00	**0.064**	**8**
	생활체육 지원	0.12	0.46	0.00	**0.055**	**11**
경제적 자립 지원	생활안정 지원	0.19	0.52	0.00	**0.099**	**3**
	일자리 지원	0.19	0.48	0.00	**0.091**	**4**
사회활동 지원	이동권 보장	0.13	0.65	0.00	**0.086**	**5**
	4차 산업기술 활용	0.13	0.35	0.00	**0.046**	**12**
서비스 전달 체계	기관 및 인력지원	0.13	0.58	0.00	**0.077**	**7**
	서비스 거점 강화	0.13	0.42	0.00	**0.056**	**10**

(3) 가중치 결과에 따른 선정과제 보완

각 정책영역에 대한 가중치 평가 결과와 앞선 1단계 과제선정 과정을 거쳐 선정된 과제 수를 비교해보면,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에서 많은 과제들이 선정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생활안정 지원 영역의 경우 높은 가중치 대비 선정된 과제수가 적지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통해 도출된 과제 pool이 적은 점(3개)을 고려할 때 도출된 과제 대부분이 선정되어 높은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 판단된다.

높은 우선순위와 선정된 과제수가 어느 정도 유사 경향을 보이는 점은 본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평가참여자들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으며, 참여자의 일관성 맥락에서 과제 도출 과정에서 중요한 영역에 많은 과제를 제안하여 과제수가 많은 점에서도 기인하였다 판단된다. 그러나 FGI에 있어서 모든 정책영역이 필요하다고 한 점, 그리고 정책의 연속성 상에서 제1기에 다루어진 영역의 고려가 필요하여 2단계 과제 보완 과정은 정책영역 중 과소하게 선정된 5개 영역에 추가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들의 우선순위에 비해 너무 많은 과제가 선정된 1개 영역의 과제가 축소되었다.

<표 5-7> 정책과제 영역의 과제추가 여부

(단위: 점(5점 만점), 개)

핵심과제 (Lv. 2)	정책과제 (Lv. 3)	최종가중치 (AXB)	순위	제1기 세부과제수	1단계 우선과제 수	과제추가 여부
일상생활 지원	활동서비스 지원	0.158	1	4	5	
	건강관리 지원	0.085	6	2	5	
주거 및 가족 지원	주거 지원	0.121	2	3	5	
	장애인 가족지원	0.062	9	2	0	**추가**
문화 · 체육 · 여가 생활 지원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지원	0.064	8	2	4	
	생활체육 지원	0.055	11	1	2	
경제적 자립 지원	생활안정 지원	0.099	3	3	2	
	일자리 지원	0.091	4	3	3	**추가**
사회활동 지원	이동권 보장	0.086	5	1	6	**축소**
	4차 산업기술 활용	0.046	12	2	0	**추가**
서비스 전달 체계	기관 및 인력지원	0.077	7	2	1	**추가**
	서비스 거점 강화	0.056	10	1	0	**추가**

보완이 필요한 정책 영역에 과제 추가를 통해 정책 중요도-추진 시급성 평가 상 '중요'과제로 평가된 5개 과제와 '선택'과제로 평가된 2개 과제가 추가되어 〈표 5-8〉과 같이 총 40개의 과제가 선정되었다.

<표 5-8> **정책과제 영역별 선정과제(2단계) 목록** (단위: 점(5점 만점))

핵심과제	정책과제	선정 구분	신규 · 개선과제	가중평균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1.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우선**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4.52**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고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4.37**
		우선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고도화	**4.35**
		우선	고령장애인 욕구조사 기반 특화서비스 개발	**4.17**
		우선	대상 맞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4.17**
	1.2. 건강관리 지원 강화	**우선**	장애인 진료기관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4.33**
		우선	장애인 감염병 대응 핫라인 구축	**4.25**
		우선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강화	**4.20**
		우선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권 보장	**4.14**
		우선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지원	**4.03**
2. 주거 및 가족 지원 강화	2.1. 주거 지원 강화	**우선**	임대주택 확대 및 분양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4.46**
		우선	장애인 지원주택 제공 확대	**4.35**
		우선	장애 당사자 맞춤형 지원주택 서비스 고도화	**4.28**
		우선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및 주거지원 확대	**4.19**
		우선	신주거모형 개발 및 장애인 주거 선택권 강화	**4.10**
	2.2. 장애인 가족 지원	**중요**	가족 돌봄 휴식지원 확대	**3.94**
		중요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3.91**
3. 문화 · 체육 · 여가생활 지원 강화	3.1.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지원	**우선**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4.46**
		우선	주체적 문화콘텐츠 제작 활동을 위한 지원 강화	**4.28**
		우선	장애인 가족 관광 프로그램 지원	**4.19**
		우선	다양한 장애 관점의 무장애 관광콘텐츠 확충	**4.09**
	3.2. 생활체육 지원	**우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 체육 프로그램 확대	**4.09**
		우선	실내 체육시설 확보 및 확대	**4.03**
4.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4.1. 생활안정 지원	**우선**	가족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4.33**
		우선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4.05**
	4.2. 일자리 지원	**우선**	장애인 맞춤 직무 개발을 통한 공공일자리 개발 · 확대	**4.37**
		우선	장애인 우선 고용 및 고용유지 방안 마련	**4.10**
		우선	선배치 후훈련 방식을 통한 현장 중심 취업 지원 확대	**4.00**
		선택	'장애인 통합일자리 지원센터' 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3.86**
5. 사회활동 지원 강화	5.1. 이동권 보장	**우선**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4.46**
		우선	지하철 이동권 보장	**4.28**
		우선	버스 이용 이동권 보장 강화	**4.19**
		우선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4.19**
		우선	민간 택시의 장애인 이동권 지원 보조	**4.09**
	5.2. 4차 산업기술 활용	**중요**	AI 융합 의사소통 보조기기 보급 지원	**3.97**
		선택	모바일 장치 활용 시각장애인 이동보조 인프라 구축	**3.89**
6.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6.1. 기관 및 인력지원	**우선**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4.08**
		선택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투명성 확대	**3.82**
	6.2. 서비스 거점	**중요**	발달 · 정신장애인 IL센터 운영 고도화	**3.97**
		중요	각 자치구별 · 권역별 거점 서비스 기능 · 역량 확대	**3.95**

3) 정책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최종과제 선정

마지막으로 정책을 제언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정책의 적용 가능성 혹은 정책으로서 실현가능성이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필요한 과제라 할지라도 권한의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없거나, 중앙정부의 사무인 경우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의 정책제언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 혹은 이해관계자가 필요하다 제기하였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선행 사업 또는 실행과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선행 사업을 세부 실행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규모의 사업인지 판단하여 과제가 실제 정책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정책 실현가능성 판단은 보수적이며 최대한 객관적인 정책환경을 판단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42개의 과제가 일부는 〈표 5-10〉과 같이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표 5-11〉과 같이 선정되었다.

일상생활 지원 강화 관련 과제는 제1기 과제의 고도화, 대상 맞춤 서비스 고도화 등 고도화 과제가 많아 정책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경우 도전 행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 개념이 없어 행동준비 전문가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기에 낮활동 지원사업의 평가와 지원 인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하여 비록 2단계 선정과정에서 누락되었지만, 정책적 실현가능성과 시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 현 지원정책의 현실성 제고를 위하여 FGI 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과제와 전세자금 지원 비용 현실화 과제는 제1기 과제의 연속성과 정책목표 실현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추가되었다.

주거지원 강화 영역은 SH공사와의 협의 필요, 변동성이 강한 주택시장의 현실 반영, 상위법령의 검토 등 사전검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과제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도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한 조례 제정은 이미 상위 법령 상 근거가 있어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과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립 지원은 예산 지원을 동반한 영역으로 예산을 고려해야 하므로 적용 가능성의 많은 부분이 예산 확대의 당위성, 예산 확보 등의 실현가능성의 문제로 적용 가능성이 낮은 부분이 존재하여 과제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수당의 경우 장애인연금의 매년 인상과 부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적 수당을 위한 예산 부담 불구 당위성이 낮은 측면이 있어 세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며, 일자리 지원 과제 일부 내용은 중앙부처 소관으로 세부 내용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 체육 · 여가생활 지원 강화 영역과 사회활동 지원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 과제는 프로그램 개선, 컨텐츠 강화, 시설 확보, 인력강화 등의 과제로 실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과제 세부내용 중 정책 실현가능성 이슈 사항

정책과제	신규 · 개선과제	정책 실현가능성 이슈 사항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고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고도화	• 도전행동의 정의와 행동준비 전문가 범위 특정 필요하나, 민간영역 활성화로 낮활동 지원 인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현 가능
	고령장애인 욕구조사 기반 특화서비스 개발	-
	대상 맞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출산 지원 정책의 연속성 필요
건강관리 지원 강화	장애인 진료기관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
	장애인 감염병 대응 핫라인 구축	-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강화	-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권 보장	-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지원	-
주거 지원 강화	임대주택 확대 및 분양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
	장애인 지원주택 제공 확대	• 지원주택 공급가능 주택수, 지원대상은 SH공사와 협의 후 구체화 가능
	장애 당사자 맞춤형 지원주택 서비스 고도화	• 의료특화 서비스는 주택내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성 등 법적 검토와 장애유형별 서비스 범위, 인력 등 사전검토, 연구 필요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및 주거지원 확대	• 정착금 확대 세부내용 중 수급자 기준 완화는 예산 문제로 실현 가능성 낮을 것으로 판단
	신주거모형 개발 및 장애인 주거 선택권 강화	-
	전세자금 지원 비용 현실화 및 지원 강화	• 서울의 주택시장 현실을 반영한 지원정책 현실화
장애인 가족 지원	가족 돌봄 휴식지원 확대	• 법령 상 가족 휴식지원 근거 존재, 조례제정 불필요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지원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
	주체적 문화콘텐츠 제작 활동을 위한 지원 강화	-
	장애인 가족 관광 프로그램 지원	-
	다양한 장애 관점의 무장애 관광콘텐츠 확충	-
생활체육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 체육 프로그램 확대	-
	실내 체육시설 확보 및 확대	-
생활안정 지원	가족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이 노인기초연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부가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수당 세부내용은 예산 부담에 불구 당위성 낮음
일자리 지원	장애인 맞춤 직무 개발을 통한 공공일자리 개발 · 확대	• 전담인력 확대는 사업성과 및 직무 분석 후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일부 사항은 제2기 적용 어려움
	장애인 우선 고용 및 고용유지 방안 마련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세부과제는 법령 및 조례로 기제정 되었으며, 우선고용 업종 지정은 중앙부처 소관으로 적용 불가
	선배치 후훈련 방식을 통한 현장 중심 취업 지원 확대	-
	'장애인 통합일자리 지원센터' 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
이동권 보장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
	지하철 이동권 보장	-
	버스 이용 이동권 보장 강화	-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
	민간 택시의 장애인 이동권 지원 보조	-
4차 산업기술 활용	AI 융합 의사소통 보조기기 보급 지원	-
	모바일 장치 활용 시각장애인 이동보조 인프라 구축	-
기관 및 인력지원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투명성 확대	-
서비스 거점	발달 · 정신장애인 IL센터 운영 고도화	-
	각 자치구별 · 권역별 거점 서비스 기능 · 역량 확대	-

<표 5-10> **정책 실현가능성을 위한 과제 세부내용 수정사항 (실현가능성 없는 세부 내용 일부 삭제)**

정책과제	신규 · 개선과제명	과제 수정 사항	
		수정 전	수정 후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고도화	➲ 주간 활동보조사 부족에 따른 비매칭 문제 해소를 위한 낮활동 지원인력 확대 ➲ 행동준비 전문가 양성 및 권역별 배치 후 단계적 확대 ➲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중장기적 지원 종합계획 수립	➲ 주간 활동보조사 부족 조사 후 수요 비매칭 해소 낮활동 지원인력 확대 ➲ 행동준비 전문가 범위 및 필요성 조사 후 단계적 확대 ➲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중장기적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거 지원 강화	장애인 지원주택 제공 확대	➲ 서울시 탈시설 목표인원에 맞는 지원주택 공급 추가 확대(약 500호)와 접근성이 확보된 지원주택 수량 확보 및 장애인부부, 학대 피해 장애인 등 지원주택 대상의 확대	➲ SH공사와 협의하여 서울시 탈시설 목표인원에 맞는 지원주택 공급 추가 확대 및 지원대상 확대
	장애 당사자 맞춤형 지원주택 서비스 고도화	➲ 일괄적 서비스 지원 탈피하여 최중증부터 경증 장애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당사자의 다양한 필요가 반영될 수 있는 맞춤 지원서비스 제공 ➲ 당사자 맞춤 서비스를 위하여 운영사업자 선정과정부터 주거 · 건강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고려하고 최중증 장애인 입주 가능한 의료특화 서비스 마련	➲ 일괄적 서비스 지원 탈피하여 최중증부터 경증 장애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당사자의 다양한 필요가 반영될 수 있는 맞춤 지원서비스 제공 ➲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주택에서 지원 가능한 의료적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마련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및 주거지원 확대	➲ 탈시설 후 지역사회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타 광역단체와 같이 탈시설 정착금 지원 대상 기준에서 소득기준을 폐지 ➲ 정신질환 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정착지원 사업의 확대와 발달장애인 재가 돌봄주거 서비스 대상 확대	➲ 정신질환 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정착지원사업의 확대와 발달장애인 재가 돌봄 주거 서비스 대상 확대
장애인 가족 지원	가족 돌봄 휴식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 돌봄 휴가제도의 조례 제정 ➲ 장애아동의 교육서비스를 통한 가족 돌봄 시간 경감	➲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의 확대 ➲ 장애아동의 교육서비스를 통한 가족 돌봄 시간 경감
생활안정 지원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범위의 확대 및 금액 확대를 통한 부가급여 지원 강화 및 중증장애인 대상 서울형 장애인 수당의 도입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범위의 확대 및 금액 확대를 통한 부가급여 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장애인 맞춤 직무 개발을 통한 공공일자리 개발 · 확대	➲ 서울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직무 개발 및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장애인 대상별 · 직종별 · 직무별 · 업종별 일자리 모델 개발과 재택가능 업종의 취업 지원 강화 ➲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위탁기관 및 전담인력 확대(5명당 전담인력 1명)	➲ 서울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직무 개발 및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장애인 대상별 · 직종별 · 직무별 · 업종별 일자리 모델 개발과 재택가능 업종의 취업 지원 강화
	장애인 우선 고용 및 고용유지 방안 마련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강화 및 장애인 우선고용 업종을 지정하여 우선고용제도를 조례로써 제도 기반 마련 ➲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 진입과 고용유지 동기부여를 위하여 직업을 가진 이후 기초수급권, 의료수급 유예기간 확대(2~3년) 및 임대주택 자격 유지	➲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 진입과 고용유지 동기부여를 위하여 직업을 가진 이후 기초수급권, 의료수급 유예기간 확대(2~3년) 및 임대주택 자격 유지

<표 5-11> 정책과제 영역별 최종선정과제 목록 (단위: 점(5점 만점))

핵심과제	정책과제	선정 구분	신규 · 개선과제	가중평균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1.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우선**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4.52**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고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4.37**
		우선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고도화	**4.35**
		우선	고령장애인 욕구조사 기반 특화서비스 개발	**4.17**
		우선	대상 맞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4.17**
		중요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	**3.94**
	1.2. 건강관리 지원 강화	**우선**	장애인 진료기관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4.33**
		우선	장애인 감염병 대응 핫라인 구축	**4.25**
		우선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강화	**4.20**
		우선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권 보장	**4.14**
		우선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지원	**4.03**
2. 주거 및 가족 지원 강화	2.1. 주거 지원 강화	**우선**	임대주택 확대 및 분양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4.46**
		우선	장애인 지원주택 제공 확대	**4.35**
		우선	장애 당사자 맞춤형 지원주택 서비스 고도화	**4.28**
		우선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및 주거지원 확대	**4.19**
		우선	신주거모형 개발 및 장애인 주거 선택권 강화	**4.10**
		선택	전세자금 지원 비용 현실화 및 지원 강화	**3.85**
	2.2. 장애인 가족 지원	**중요**	가족 돌봄 휴식지원 확대	**3.94**
		중요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3.91**
3. 문화 · 체육 · 여가생활 지원 강화	3.1. 문화 · 관광 · 여가생활 지원	**우선**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4.46**
		우선	주체적 문화콘텐츠 제작 활동을 위한 지원 강화	**4.28**
		우선	장애인 가족 관광 프로그램 지원	**4.19**
		우선	다양한 장애 관점의 무장애 관광콘텐츠 확충	**4.09**
	3.2. 생활체육 지원	**우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 체육 프로그램 확대	**4.09**
		우선	실내 체육시설 확보 및 확대	**4.03**
4.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4.1. 생활안정 지원	**우선**	가족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4.33**
		우선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4.05**
	4.2. 일자리 지원	**우선**	장애인 맞춤 직무 개발을 통한 공공일자리 개발 · 확대	**4.37**
		우선	장애인 우선 고용 및 고용유지 방안 마련	**4.10**
		우선	선배치 후훈련 방식을 통한 현장 중심 취업 지원 확대	**4.00**
		선택	'장애인 통합일자리 지원센터' 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3.86**
5. 사회활동 지원 강화	5.1. 이동권 보장	**우선**	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4.46**
		우선	지하철 이동권 보장	**4.28**
		우선	버스 이용 이동권 보장 강화	**4.19**
		우선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4.19**
		우선	민간 택시의 장애인 이동권 지원 보조	**4.09**
	5.2. 4차 산업기술 활용	**중요**	AI 융합 의사소통 보조기기 보급 지원	**3.97**
		선택	모바일 장치 활용 시각장애인 이동보조 인프라 구축	**3.89**
6.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6.1. 기관 및 인력지원	**우선**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4.08**
		선택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투명성 확대	**3.82**
	6.2. 서비스 거점	**중요**	발달 · 정신장애인 IL센터 운영 고도화	**3.97**
		중요	각 자치구별 · 권역별 거점 서비스 기능 · 역량 확대	**3.95**

제6장

결론





제6장
결론

이 연구는 제2기(2023년~2027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에 반영이 가능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리구조와 추진과정을 거쳤다.

이 연구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정책의 현황, 장애인자립생활지원정책 관련 주요 환경변화 이슈, 제1기(2018년~2022년) 지원정책의 이행성과, 서울지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실태와 주요 이슈 등을 조사·분석하였고, 표적집단면접조사(FGI), 델파이(Delphi) 조사 등을 활용하여 제1기(2018년~2022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제2기(2023년~2027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인 수요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활용하여 본 연구는 제2기(2023년~2027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고 정책우선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제2기(2023년~2027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6개의 핵심과제별로 총 12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2개의 신규·개선과제들이 최종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신규·개선과제들은 단순하게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것이 아니라, 세 단계(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른 과제 선정-정책영역 중요도를 고려한 선정과제 보완-정책 실현가능성 판단)를 거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선정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위와 같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도출된 핵심과제-정책과제-신규·개선과제들을 제2기(2023년~2027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계획의 이행에 집중하기 보다는 시스템적인 운영과 매뉴얼의 구축을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담당부서 주도로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는 무엇보다 전사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일로 효과 (silo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과제에 대한 관리체계(예: 연도별 성과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가동함으로써, 이행수준을 파악하고 이행이 되지 않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예: 패널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동욱, 윤상용, 김원호, 정솔, 박봉선. (2021). 한국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진단 및 향후 과제. 일자리기획단.

곽정란. (2017). 일본의 ICT를 활용한 장애인고용 지원. 세계장애동향, (6), 15-17.

권오정, 이용민, 김은지, 양건희. (2020). 재가 장애인의 주거생활서비스 요구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1(2), 87-98.

김경양. (2021). 의사소통 지원 방안 수립에 관한 질적 연구 성인 뇌병변장애인을 중심으로. 특수교육논총, 37(2), 1-29.

김동호. (2002). 자립생활패러다임에서 본 한국장애인복지관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 91-117.

김득연, 박종균. (2020), 중도 척수장애인의 사회참여 과정에서 이동성의 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0(50), 143-168.

김성희. (2014).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17(0), 7-17.

김성희, 이민경, 오욱찬, 오다은, 황주희, 오미애, 김지민, 이연희, 강동욱, 권선진, 백은령, 윤상용, 이선우, (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진, 조원일.(2018).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의 장애인 자립관에 대한 실체와 체화 경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2(2), 127-153.

김용탁. (2021). 장애인 완충형 일자리 모델 도입 방안 연구. 수시과제보고서, 1-29.

김인제, 민소영.(2020).혼합방법론을 활용한 지원주택 거주 경험 연구 서울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7(1), 249-283.

김지해, 안광옥, 노은래, 권효순, 은선덕.(2022). 보조기기 열린페이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 디자인 연구. 한국HCI학회 논문지, 17(1), 25-36.

김항구, 나운환, 정지은. (2017). 장애인 근로자의 좋은 일자리 진입 요인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6(2), 263-292.

김현승, 이의정. (2021). 고령장애인 지역사회 대응과제 서울시 고령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215-244.

나영희, 조추용, 윤상용, 김인춘, 김현정. (2014).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비교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남세현, 박은혜, 김경양,김영태. (2015). AAC중재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1), 29-55.
노법래, 문영민. (2021). 장애인의 노동 시장 진입과 일자리 질의 변화 궤적에 관한 연구 - 잠재 마르코프 모형(Hidden Markov Model)을 활용한 고용 궤적 유형화와 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3(3), 61-89.
박가영, 조연정, 신주희. (2020).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 성과분석 연구.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 성과 분석 연구, 0(0), 1-72.
박선아, 김성한. (2009).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사회과학연구, 20(3), 107-128.
배영현. (2021).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뉴노멀 시대의 재가 복지기술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내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 사례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24, 109-134.
변민수, 이계승.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 전망과 과제. 기본과제보고서, 1-149.
부경희, 이성규, 박선혜.(2021).장애인 노동시장 진입 영향요인 연구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장애와 고용,31(3),83-109.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2018).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 2022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시행계획.
서지혜, 이수용. (2018). 좋은 일자리 서열화를 통한 장애인근로자 고용의 질 변화유형과 예측요인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2), 321-356.
신숙경. (2019). 기술과 복지의 융합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 장애인 근무환경과 직무배치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7), 417-422.
안예지, 김라경. (2020).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장애인 고용 플랫폼 개발 무인 비즈니스 유지관리 기업 에스에스모빌리티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3(11), 1985-2011.
오문준, 조광래.(2021).장애인 서비스 품질 수준과 삶의 질의 관계 서비스 만족도와 일상생활 편의성의 다중 매개효과. 장애와 고용, 31(3), 31-55.
오승하, 조성제. (2014).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의 실태 분석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5(11), 6659-6668.
오욱찬, 김수완. (2021). 장애인 고용의 직무 불일치와 노동시장 성과. 장애와 고용, 31(1), 245-270.
오현성. (2019). 탈시설화 시대의 치료 연속성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의 핵심 원리: 미국 애리조나주의 경험. 국제사회보장리뷰, 9(0), 34-47.
유은주. (2021). 장애인 근로자 재택근무 지원방안. 기본과제보고서, 1-142.
이근민, 임성빈, 나대영. (2017). 미국과 한국의 AAC 서비스 전달체계 비교 분석.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11(2), 99-105.
이민경. (2015).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여가 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26(0), 61-73.
이송희. (2012).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88(0), 25-33.
이송희, 조재환. (2020). 20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서울시복지재단.
이수용, 차정훈. (2021).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 연구. 기본과제보고서, 1-108.

이호영. (2017).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추진계획의 성과와 한계. 법학논집, 22(1), 57-89.
임동진, 문상호. (2016). 한국 장애인 고용정책의 효과성 평가 -위계선형모형(HLM)을 적용한 횡단면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5(1), 1-33.
임예직, 문영민. (2020). 장애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장애인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1(3), 147-176.
전근혜, 조인영, 유정은, 박재현, 강미화, 최용준, 김성희, 박종은, 박종혁, 김소영, 신동욱. (202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 연구.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11(2), 147-150.
전동일, 이광원, 임재현, 김종배. 장경배, 공진용, 남세현, 고아라, 박소영. (2014).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개편방안 보고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전지혜. (2015). 한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2, 255-278.
정광진. (201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변화와 대응방안. 기본과제보고서, 1-109.
정승민.(2020).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현황 및 서비스 단계별 만족도 분석.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14(2), 92-101.
조아라, 안혜신, 박은혜. (2021).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 중도 뇌병변장애인의 AAC 사용 및 자기결정에 대한 경험 및 지원 요구. 보완대체의사소통연구, 9(1), 27-58.
채성현, 강태인, 김미영, 권영지, 박형빈. (2017). 발달장애인 부모가 인지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주거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1, 103-129.
최선경. (2015).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지역사회통합 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2(2), 171-192.
최용길, 김유정. (2019).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인터넷 기사 및 홈페이지]

서울신문 (2022.07.11.) “이대남 절반 “시위 불편 못 참아”… 전장연 저격한 이준석에 동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1200900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서울시복지재단 2022-22

장애인 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발 행 일 2022년 11월 30일
발 행 처 서울시복지재단
발 행 인 김 상 철
편 집 인 류 명 석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전 화 1670-5755
팩 스 02-6353-0221
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인쇄업체 MK커뮤니케이션
I S B N 978-89-6298-757-7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2022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우 04147)
TEL 02-1670-5755 FAX 02-6353-0221
www.welfare.seoul.kr

비매품/무료

93330

9 788962 987577

ISBN 978-89-6298-757-7